외교

제102호
2012.7

차 례

□ 논문

1. 한 · 중 수교 20년, 중국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김석우 5
2. 보시라이 사건이 중국정치에 미칠 영향 황용식 15
3. 세계경제의 리스크와 향후 전망 박현수 25
4. 미얀마의 정치적 변화와 동아시아 국제관계에 대한 함의 이재현 37
5. 도약하는 한 · 중남미 협력 관계 장근호 49
6. 유엔 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리우+20 정상회의) 결과 한동만 61
7. 재외동포 현황과 미래발전 구상 김경근 69

□ 협회활동

1. 제2회 정책대토론회(5.4)
   - 미 · 중 패권 경쟁과 한국의 선택 이춘근 85
   - 중 · 미 관계의 변화와 한국외교에 대한 함의 이정남 104
2. 일본외교협회 방문(5.24~27) 결과 보고 서대원 121
   - 한 · 일 공동세미나 한국측 기조연설 박수길 126
     North Korea and the Region:
     Prospects for the Kim Jong Un Regime

□ 회원칼럼

1. 時局隨想 - 어떤 憂慮 윤하정 135
2. '조선'의 몰락에 대한 반성 공로명 142
3. 중남미 소고 조환복 148

□ 회원신간

1. 조약의 국가승계(이순천 저) 황용식 157
2. 나의 이야기(송영식 저) 박창일 159

제자:원곡 김기승 선생 휘호

본 『**외교**』지에 게재된 글은 어디까지나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한국외교협회의 견해를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러스트 편집

한·중 수교 20년, 중국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 1985년 중국어뢰정 사건의 교훈을 재확인하면서 -

김 석 우*

Ⅰ. 서 론

이 글은 어뢰정 사건을 계기로 한·중 관계가 발전한 경과를 살펴보고, 거기에서 교훈을 찾아내려고 하는데 있다.

중국의 덩샤오핑 주석이 외교관계가 없는 대한민국의 전두환 대통령에게 1985년 봄 특사를 파견하였다. 허화평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확인한 사실이다. 덩샤오핑 주석의 특사는 안나 셰놀트(Anna Chen Chennault) 플라잉 타이거 부회장이었다. 바로 한 달 전 한국에 표류한 중국 어뢰정을 중국으로 송환시킨데 대한 감사를 표하기 위한 것이었다.

1985년 3월21일 중국 해군 북해함대 소속 고속어뢰정 3213호에서 선상반란이 일어나서 6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이 어뢰정은 연료 고갈로 흑산군도 근해로 표류하였고, 22일에는 군산 근처의 하왕등도로 예인되었다.[1] 3월23일 새벽 6시50분 경에는 중국 해군 군함 3척이 하왕등도 영해 12해리 안으로 무단 진입하여 우리 함정들과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러한 대치 상황에서 23일 새벽 노신영 총리서리 주재로 긴급 관계장관회의가 국방부에서 개최되었다. 이원경 외무부장관은 즉각 무력을 행사하기보다는 평화적 방법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외교적 노력을 위한 24시간의 말미를 얻어 내었다.

외무부는 즉각 미국과 일본의 외교채널을 통해 중국군함 3척이 즉각 한국 영해 밖으로 퇴각하라는 요구를 중국 외교부에 전달하였고, 중국 외교부측도 한국의 영해 밖으로 군함이 철수하도록 하였다고 답하였다. 실제 3월23일 오전 9시 38분에 중국군함들은 우리의 영해 밖으로 퇴각하기 시작하였다.

한국정부는 검토 끝에 중국어뢰정과 병사들을 중국으로 송환시키기로 결정하였다. 본래 외무부 안에서도 대만으로 보내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필자는 반대

* 전 통일원 차관,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 원장

되는 법적 의견을 제시하였다. 국제법 교과서, 특히 미 국무성에서 발간한 국제법 다이제스트(Digest of International Law)의 해양법 편의 이론과 선례를 기초로 한 것이다. 해양법 형성 초기 5대양을 지배하던 영국이 그 기본 틀을 주도했던 결과, 군함 안에서 선상반란(mutiny)이 일어난 경우 기국(旗國)의 강한 관할권을 인정하고 있다.

문제는 우리와 외교관계가 없는 중국의 관할권을 인정해주느냐에 달려 있다.

필자가 당시 이원경 장관에게 제출한 의견은 "중국 군함 안에서의 선상반란사건이므로, 해양법 원칙에 따라 군함의 기국인 중국으로 군함과 승무원을 송환해야 한다. 이미 1983년 5월 5일 중국 민항기 사건 후 우리의 대공산권 외교정책인 '북방정책'을 공식적으로 천명하였고, 그 정책을 계속 추구해 왔으므로, 그러하다."는 요지였다. 한국 정부는 이 의견을 채택하여 사건을 마무리하였다.

한편, 중국군함의 한국영해 침범에 대하여는 그냥 넘길 사안이 아니었다. 초기단계에서 외무부 김홍수 대변인을 통하여 엄중한 항의성명을 발표하였다. 같은 날 홍콩 주재 한국 총영사가 신화사 홍콩지사에 한국정부의 항의각서를 전달하였으며, 중국은 '부주의'로 중국 군함이 한국영해로 진입한 것이라고 해명하였다. 한국의 전투기가 출동할 정도로 진행된 경위에 비추어 단순한 부주의였었다고 받아들일 사안은 아니었다.

따라서 주 홍콩 한국총영사관과 신화사 홍콩지사 채널을 통해 어뢰정 및 승무원의 송환문제와 아울러, 중국 군함의 한국영해 침범에 대한 중국정부의 사과에 관한 교섭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3월 26일 중국 측의 공식사과 각서가 우리 정부에 전달되었다. 장기호 중국과장 팀이 중심이 되어 침착하고도 일사불란하게 사건처리를 하였다.

우리 정부가 이 사과를 받아들이고 3월 28일 11시 양국의 중간지점인 공해상(위도 36N, 경도124E)에서 어뢰정과 그 승무원 전원을 중국에 인계함으로서 일주일 동안 세계의 관심을 모았던 '중국 어뢰정 사건'은 일단락되었다.

1985년 3월 중국 어뢰정을 대만으로 보냈다면, 아마도 1986년 아시안 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에 중국선수단의 참가는 어려웠을 것이다.

덩샤오핑이 1978년 12월 중국공산당 제11기 3중전회에서 '개혁 · 개방 정책'을 추진했던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결단이었는가는 이제 충분히 증명되었다. 집단농장인 인민공사를 해체한지 2년 만에 식량 문제를 해결하고 매년 10퍼센트 가까운 고도성장을 이루었으나, 1985년 당시의 경제규모나 수준은 미미한 단계였고, 개혁 · 개방 정책으로 야기되는 사회기강의 이완은 여차하면 등소평의 실권을 무너뜨릴 위험성마저도 있었다. 실제 사회기강 이완현상으로 볼 수 있는 중국 공군조종사들의 한국으로의 귀순사건들이 1980년대 초에 심심치 않게 일어났다.

한 · 중 수교 당시 중국 외교의 사령탑이던 첸치천(錢其琛) 외교부장은 퇴임 후 비망록인 「열가지 외교이야기」에서 1985년 4월 덩샤오핑 동지는 중 · 한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중국 입장에선 필요한 것이라고 말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첫째, 장사를 할 수 있다. 이는 경제에 좋

은 것이다. 둘째는 한국과 대만과의 관계를 단절시킬 수 있다."고 한다.[2] 덩샤오핑의 이 지침은 중국 어뢰정 사건 처리 후 한 달 만에 내려진 것이다.

두 가지 이유는 매우 타당하다. 더 핵심적 이유는 개혁·개방 추진으로 사회기강이 이완되려는 시기에 어뢰정 송환이 정권안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점이다. 덩샤오핑은 한국이 중국과 체제는 다르지만 신뢰할 만한 상대라는 인식을 굳힌 것이다.

실제로 어뢰정 사건 이후 전투기나 민간항공기의 한국으로의 귀순이나 납치사건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기에 덩샤오핑은 바로 외교책임자들에게 한·중 수교에 관한 기본지침을 주었고, 전두환 대통령에게는 비밀특사를 보내어 감사의 뜻을 전한 것이다.

작년 11월 작고한 박태준 전 포철회장은 생전에 포스코를 비롯한 한국의 성공한 경제가 중국에게는 매우 매력적이었다고 밝힌 적이 있다. 1980년대 중반 중국정부가 UNDP 사업으로 철강기술자 1명과 경제전문가 1명을 파견해서 포스코를 견학하고 싶다고 요청해 왔고, 박태준 회장은 이를 흔쾌히 받아들인 적이 있었다. 박 회장은 컴퓨터기술을 도입해서 세계 최첨단으로 건설 중이던 광양 제2공장 현장까지 그들이 제한 없이 견학하도록 배려했다. 그들 전문가는 중국 철강 산업의 현대화를 위해서는 포스코로부터 기술협력을 받아야 한다고 덩샤오핑 주석에게 건의하였다. 이와 같이 한 발 앞서 근대화를 성공시킨 한국의 경제, 그리고 신뢰할 만한 나라라는 인식이 덩샤오핑이 결단내리는 데 작용한 것이다.

중국 최고지도자의 대한민국에 대한 기본인식이 변하였으나, 그것이 바로 수교로 이어지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다. 6·25 전쟁에 참전했던 보수파 원로들의 의견도 쉽사리 무시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1986년 아시안게임, 1988년 서울올림픽에 중국선수단의 참가, 이어서 1990년 베이징 아시안게임에의 한국 선수단의 참가와 한국의 대회개최경험 전수와 같은 양국 간 협력이 이루어지고, 양국 간의 인적교류와 직간접적인 교역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물이 흐르면 도랑이 생긴다'는 것이 수교과정에 대한 중국 측 인식이었다고 할 수 있다.

Ⅱ. 냉전체제의 해체가 한·중 관계에 미친 영향

1989년 6월 폴란드의 바웬사가 이끄는 솔리대리티가 선거를 통해 공산정권을 무너뜨린 후 6개월 만에 동유럽 공산정권들은 도미노처럼 모두 무너졌다. 1985년부터 개혁·개방을 추진하던 고르바초프의 소연방체제도 결국 1991년 12월 해체되었다.

도도한 역사의 흐름이었다. 덩샤오핑의 선견지명으로 1978년 말부터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였기에 중국은 공산권 붕괴의 쓰나미에 휩쓸리지 않았지만, 전 세계적 공산권 몰락의 격류를 피할 수는 없었다. 개혁·개방 10주년이 되는 1989년의 6월4일에는 톈안먼(天安門)사건이 일

어났다. 국제사회는 중국에 대해 냉담한 반응을 보였고, 중국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봉쇄정책(containment policy)으로 고립되어 간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게 되었다. 중국내부에서는 개혁개방을 둘러싼 논란이 심화되었고, 몇몇 보수적 그룹은 '싱쯔싱서(姓資姓社,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 논쟁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이에 덩샤오핑은 1992년 1월18일부터 2월22일까지 남순강화(南巡講話)를 행하였다. 강화의 요지는 "자본주의에도 계획이 있고 사회주의에도 시장이 있다"는 것으로, '싱쯔싱서'를 위시한 이념 논쟁을 정면 반박한 것이었다. 톈안먼 사건으로 일시 중단됐던 개혁·개방 정책은 다시 추진되었다.

한편 대만 정부는 축적된 경제력을 활용하여 작은 국가들과의 외교관계를 개척하여 중국의 외교망을 잠식하는 공세를 전개하였다. 이를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대만의 수교국 중 가장 비중이 큰 대한민국과의 수교를 추진하는 것이 매우 파급효과가 큰 선택이었다.

한·중 양국 간에 수교에 관한 전략적 방향이 합치됨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대만의 존재는 수교과정에서 어려운 장애요인일 수밖에 없었다. 중국의 6·25 참전 원로그룹이 북한을 안보상 완충지대로 보는 인식을 바꾸기가 어려웠다.

1989년 초 헝가리를 선두로 구 공산권 국가들은 연달아서 한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하였고, 1990년 9월에는 한·소 수교도 이루어졌다. 1991년 9월에는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1989년 발족한 APEC의 제3차 서울총회에 국가자격의 중국과 경제지역으로서의 차이니즈 타이페이, 홍콩의 3자가 공동으로 참가하게 되었다. 한국 외무부의 이시영 외교정책실장이 수많은 순회방문과 설득노력을 통해 타협안을 도출해낸 결과였다.

노태우 대통령은 1991년 11월 제3차 APEC총회에 참석한 첸치천 외교부장을 별도로 접견한 자리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아태지역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희망하며, 조속히 수교가 실현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표하였다. 다음해 4월17일 베이징에서 첸치천 부장은 ESCAP 제48회 총회에 참석한 이상옥 외무부장관을 댜오위타이(釣魚台) 국빈관에 초청한 자리에서 극비리에 수교교섭을 시작하자고 제의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측 수석대표는 노창희 외무차관이, 중국은 쉬둔신(徐敦信) 외교부 부부장이, 실무팀은 한국의 권병현 대사와 중국의 장루이지에(張瑞杰)대사를 책임자로 하는 6~7명 내외로 구성하여 비밀리에 수교교섭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1992년 8월24일 오전 9시 댜오위타이(釣魚臺)에서 이상옥 외무장관과 첸치천 외교부장 간에 한·중 수교 성명에 정식으로 서명하였다.[3)]

Ⅲ. 한·중 수교 20년의 성과

한·중 수교가 냉전체제의 완전한 해체를 의미하지는 않지만, 지역질서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 지역의 평화구조가 이전보다 강화되었고, 한반도

에서의 대규모 무력충돌을 방지하는데 기여하였다.

경제면에서는 한·중 양국의 경제발전에 막대한 이익을 가져왔다. 양국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모든 분야에서 접촉과 교류가 급속하게 늘어나게 되었다.

한·중 수교는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을 성공시키는데 중요한 한 부분을 담당하였다. 중국에 필요한 값싼 중간재를 공급하고, 한 세대 앞서 성공한 근대화 경험을 전수함으로써, 중국의 고도성장을 지원하였다. 한·중 간 경제관계의 양적 확대 이상으로 매우 중요한 경제적 효과도 있다. 한·중 수교 이전 한국기업의 참여가 봉쇄된 상황에서 중국은 선진 제3국의 기업들에게 높은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었다. 한국기업이 참여하게 됨으로써 제3국의 경쟁자들이 가격을 낮추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또한 중국의 경제발전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한국의 기업들이 제공하였다. 중국이 초기에 절실하게 필요로 한 것은 고도 기술보다는 한 세대 앞선 한국 수준의 것이었다.

한국은 일본과의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경제협력자금을 활용하여 경제발전의 기초를 닦았다. 아시아의 다른 개도국이 배상금을 낭비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박정희 정부는 산업건설에 집중하였다. 그러나 일본사회는 부메랑 효과가 우려되는 분야에서의 기술이전에는 매우 인색하였다. 이에 비하면, 한국사회는 중국의 기업에 우호적이어서 박태준 전 포스코 회장의 예처럼 압축성장 과정에서 얻은 노하우를 쉽게 전수하였다.

물론 중국의 지도부가 개혁·개방정책을 바르게 주도하면서, 중국의 큰 시장을 지렛대로 대외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었고, 해외 화교들이 초기 투자와 기술이전에 첨병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노동집약적인 산업에서 시작해야 했고, 여기에는 한국의 압축 성장경험이 절실하게 필요하였다. 민간기업차원에서는 직접투자를 통해 기술이전을 촉진하였다. 따라서 한·중 수교는 중국의 개혁·개방에 뒷바람 역할을 하였고, 30년 이상 연간 고도성장을 달성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한국에게도 한·중 수교는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1997년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시장은 돌파구 역할을 하였다. 양국 간 교역은 1992년 수교당시 64억 달러에서 2011년 2천70억 달러 규모로 증가하여 한국의 총 교역 1조 달러의 20퍼센트를 차지하게 되었다.

투자 면에서도 중국은 이미 8년 전부터 한국의 최대의 투자대상국이 되었다. 양국 간 인적교류 면에서도 연간 한국인 420만 명이 중국을 방문하고 중국인 220만 명이 한국을 방문하고 있다. 중국에 상주하는 한국인이 100만 명에 달하고, 양국 간에는 각각 6만5천 명 전후의 학생이 상대국에서 유학하고 있다. 양국 간 항공편도 주간 837편 왕복 운항하고 있어 일본과 중국 간의 운항편수보다도 많다.

한·중 수교는 정치적으로도 한국의 독립변수로서의 입지를 강화하였다. 수교 전에는 한국은 중·소와의 직접 채널이 없어, 미국과 일본 등의 도움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제는 남북한의

현격한 경제격차 때문에, 남한 만의 경제적 비중 만으로서도 독자적 영향력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중국에게 북한은 부담요소가 크지만, 한국은 무시할 수 없는 협력 상대다.

아미티지 보고서의 저자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은 십여 년 전의 부정적 입장을 수정하여 한국이 중국에 예속되는 상황은 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이 중국에 크게 의존하지만, 중국도 한국에 의존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한·중 수교 후 20년간 문제점도 또한 일어났다. 동북공정을 둘러싼 역사적 갈등, 마늘분쟁, 올림픽 성화 봉송사건, 문화유산 유네스코 등재에 대한 시비, 재중 탈북자의 강제 북송,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과 폭력사태 등 크고 작은 문제들이 그치지 않았다. 인접 국가 간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럽기도 하다.

매우 큰 문제점은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과 같은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해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를 무력화하려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의장국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한편에서는 북한이 국제규범을 위반하고 긴장을 조성하는데도 일방적으로 두둔해왔다. 결과적으로 중국의 비논리적 행태에 주변국들이 두려움을 느꼈고, 반 중국 연대를 자초하게 되었다. 화평굴기(和平崛起) 외교목표를 추구하는데 불필요한 장애요인을 만든 셈이다.

이제 한반도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평화적 통일달성을 위한 중국의 협력을 얻는 일이다.

작년 12월 김정일 사망 후 김정은으로의 3대세습이 진행되고 있으나,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혁·개방 외에는 다른 해법이 있을 수 없다. 그래야 남북대화도 이루어지고, 평화적인 통일도 가능하게 된다. 남북 간 합의에 의한 통일에 대해서는 중국도 반대할 명분이 없으므로 통일은 순리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북한정권은 일반주민의 욕구가 분출되는 것이 두려워 개혁·개방을 하지 못하는 딜레마에 빠져버렸다.

북한이 개혁·개방을 끝까지 거부할 경우, 경제가 더욱 악화되어 붕괴 가능성이 커진다. 개혁·개방을 거부하는 공산국가가 붕괴하는 것은 역사의 흐름이었다. 유독 북한 정권만은 가혹한 폭압통치와 철저한 외부정보차단을 통해 붕괴를 면하고 있다. 인접한 중국이 북한의 붕괴를 막아주는 덕이기도 하다. 그러나 북한 정권이 역사의 흐름에서 예외로 남아 언제까지나 버텨나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시대는 변한다. 그래서 한반도 통일의 기회도 열리게 된다. 여기에서 중국의 역할은 절체절명의 중요성을 가지게 된다.

Ⅳ. 한반도 통일과 한·중 관계 발전

지금까지 한국사회에서는 한반도 통일에 대해 중국이 반대할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실제로 중국은 최근까지 한국 주도의 통일에 부정적이었다.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 당시 유엔안보리에서 중국이 북한의 입장을 두둔했던 선례에

서 그러한 추론이 가능하다.

한국 내 종북주의자들은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하면 중국에 흡수될 것이라는 주장을 유포시켜 왔다. 소위 '동북제4성론'이 그것이다. 중국의 동북 3성에 추가하여 북한 영토가 중국에 흡수된다는 말이다. 사악한 북한정권이라 할지라도 중국에 흡수되는 것보다는, 그 정권을 연장시키는 것이 민족적으로 나은 선택이고, 따라서 묻지마식 지원을 해주자는 선동 · 협박 논리였다.

중국으로서는 북한을 위성국화 하는 것은 환영하겠지만, 중국의 일부로 편입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선택이 된다. 남북한 양쪽에서 중국에 대한 거부 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한 사태는 중국의 55개 소수민족들의 동요를 촉발하게 된다. 위그루족이나 티베트인과 같은 소수민족들의 이탈 · 독립 움직임을 격화시키게 되고, 이는 중국 전체의 분열을 유도하게 된다. 중국의 소수민족들을 자극하는 일은 중앙정부로서도 감당하기 어려운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북한이 겉으로는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지만, 김정일은 "20명의 미제 스파이보다 한명의 중국첩자가 더 위험하다"는 식으로 중국의 황색바람에 대한 경계심을 고조시켜 왔다.

중국은 6 · 25 참전이후 줄곧 북한에 대해 완충지대론을 견지하고 있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한반도 통일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통일된 한반도의 압록강, 두만강 국경까지 미군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을 반대한다. 6 · 25 참전세대를 중심으로 하는 중국의 공식적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50대 전후의 현실주의자 그룹은 북한이 개혁 · 개방을 하지 않을 경우, 남한 중심으로 통일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중국이 무작정 북한정권을 지원하기만 하는 것보다는, 통일을 주도할 대한민국과 한반도의 장래를 의논하는 것이 대국적으로 중국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다. 중국사회의 수면하에서는 전통적 견해와 현실주의자들 간의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 통일을 위한 중국의 이해와 협조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 독일통일 당시에는 냉전의 한 축인 소련이 퇴조하는 국면이었던 반면, 한반도 상황은 중국의 힘이 상승국면에 있다. 따라서 독일이 소련을 설득했던 것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다.

우리는 한반도 통일의 구체적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 첫째로, 북한이 개혁 · 개방을 거부하여 스스로 붕괴할 경우, 한국정부가 제1차적인 책임을 질 것이라는 의지를 확실하게 대내외에 천명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주변 4강은 한반도의 통일이라는 현상타파보다는 현상유지에 안주하려 하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호의적인 미국마저도 국방예산의 대폭 절감이라는 현실적 제약 때문에 한반도에서 북한의 대량파괴무기를 제거하기만 하면, 그 다음 통일문제에는 적극적으로 관여할 여력이 없다.

2010년 8월15일 광복절 기념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통일세 문제를 검토할 시기가 되었다고 한 발언은 한국정부의 적극적 통일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이제는 정부와 통일전문가들도 통일비용보다

는 분단비용이 훨씬 크다는데 공감대를 이루었고, 통일에 대한 적극 대응론이 확산되고 있다. 과거 통일비용 과다론도 통일기피심리를 퍼뜨리는 종북주의자들의 선동논리였음이 밝혀졌다.[4)]

통일 20주년을 맞이한 독일이 명실 공히 유럽의 경제중심이 되어 EU전체 GDP의 20퍼센트를 생산하고, EU경비의 25퍼센트를 부담하고 있다. 그리스의 재정파탄을 구제하는데 독일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어느 나라도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 1991년 10월 독일통일 당시 독일경제가 파탄날 것이라는 우려는 한낮 기우에 불과하였다. 한국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의식도 정부의 정책변화에 따라 점차 긍정적으로 변해가고 있다.

둘째로는, 이와 같은 한국정부와 국민의 통일의지를 기반으로 하여 전통우방인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독일통일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독일의 헬무트 콜 총리는 조지 부시(시니어) 대통령과 수시로 통화할 정도로 빈틈없는 유대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미국을 통해 영국과 프랑스의 독일통일 반대 입장을 극복할 수 있었다.

셋째로, 한반도의 분단지속에 대한 대안으로써 남한주도의 통일을 중국이 받아들이고 협력하도록 적극 설득하여야 한다.

(1) 북한을 완충지대로 보는 중국의 보수적 그룹이 정책을 주도해왔으나, 앞으로는 현실주의자들의 입장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완충지대론의 핵심인 통일 후 미군의 휴전선 이북으로의 진입을 삼가하고, 중국의 안보우려를 해소하는 적극적 노력을 해야 한다. 미국과 중국 간에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미·중 경제·전략대화와 같은 장을 통해서 북한의 개혁·개방유도방안과 아울러 북한붕괴 시 협력방안에 관해서도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한국도 중국과의 전략 대화를 발전시키고, Track-2 채널의 안보대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여야 한다.

(2) 이러한 장에서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의 포기를 거부하고,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을 비호하는 것이 중국의 이익을 훼손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천안함, 연평도 사건의 결과로서 반 중국 연대가 급속히 형성되었고, 따라서 가장 손해를 보았다는 인식을 중국도 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한국정부는 1985년 3월 중국 어뢰정 사건에서 보듯이 예측가능성 있는 상대라는 인식을 주었다. 한·중 수교 20년의 역사에서 그러한 신뢰관계는 더욱 강화되어 왔다.

(3) 중국 경제가 2012년에는 7퍼센트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선진국과는 달리 8퍼센트 이하로 떨어질 경우 경제침체로 보고 있다. 중국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2016년 전후부터는 생산노동인구(15세~64세)가 감소하기 시작하고, 1가정 1자녀 정책의 결과로써 급격하게 고령화가 진행될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일본이나 한국과 달리 선진국 단계에 진입하기 전에 그러한 고령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점이다.[5)]

현재의 분단된 한반도에서 동북아 지역협력의 연결고리는 북한에서 단절되어 있다. 남한중심으로 통일이 이루어진다고 할 경우, 주변국도 같이 이익을 공유하게 된다. 동북아의 역내 협력이 활성

화되면 중국도 인구고령화의 난관을 극복할 돌파구를 얻게 된다. 동북아협력구도에 중국의 동북3성을 연결시킴으로써 중국의 내부적 문제를 해소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한반도 통일은 중국의 '블루오션'이 될 것이다.

(4) 중국의 대외정책결정과정은 매우 느리다. 큰 나라이기 때문에 관련되는 이해관계가 복잡다단하고 이를 조정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또한 공산당 1당 체제하에서는 한반도 문제, 통일문제는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써 실무진들은 당의 기본 입장에 배치되지 않으려고 조심한다.

그러한 상황을 감안하면, 한국의 통일이 중국의 이익과 배치되지 않는다는 점, 중국의 제2의 경제 도약을 위해서도 돌파구가 될 것이라는 점을 중국의 모든 분야의 인사들에게 인내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한다. 그래서 당론까지 바꿔야 한다.

V. 결 어

1992년 이루어진 한·중 수교는 동북아의 지각변동을 일으켰다. 지역 내 모든 국가가 함께 발전함으로써 평화와 번영을 확보하기 위한 변화였다. 냉전체제의 해체에 맞추어가는 중요한 과정이었다. 중국은 이제 전 세계 차원에서 미국을 견제할 수 있을 정도로 부상하였다.

되돌아보면 유럽에서 산업혁명으로 근대화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중국은 전 세계 GDP의 25퍼센트를 생산하였다. 지금 중국의 고도성장이 예외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과거 전성기의 중국으로 복귀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중국의 국력이 절대적인 최강국이 된다 하더라도 미국이 존재하지 않던 시기에 중국이 누리던 압도적 지위로 복귀하기는 어렵다. 절대적 강국이 되려면 미국 이상의 기술적 혁신(innovation) 능력과 높은 도덕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인권, 환경, 법치와 같은 보편적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

한국은 중국의 커지는 위상에 맞추어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적극 발전시켜 가야 한다. 한국의 30배의 인구와 6배의 경제력이라는 크기는 중국의 힘을 말한다. 우리는 중국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해서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중국의 힘에만 경도되는 것은 능사가 아니다. 중국의 힘과 아울러 중국이 지킬 원칙과 도덕성에 우리가 동의해야 한다. 그것이 중국 어뢰정 사건, 중국 민항기 사건, 한·중 수교, 재중탈북자 강제송환문제와 같은 중국과의 관계에서 일관되게 지켜온 우리의 자세이다. 장기적으로 한·중 관계를 튼튼하게 하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도 함께 기여하는 길이다.

북한정권이 개혁·개방을 거부할 경우 붕괴하는 수밖에 없다는 가능성에 대해 중국도 냉정하게 판단할 때가 되었다. 개혁·개방을 거부하고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는 북한정권을 계속 지원하려면 정치적, 경제적으로 부담만 커지게 된다.

세계적인 경제침체 분위기 속에서 중

국도 지속성장 문제를 생각해야 한다. 자칫하면 중국이 선진화 단계에 진입하지도 못한 채로 2016년 전후 급속한 고령화 시대를 맞게 된다. 이에 대비하여 중국도 제2의 돌파구를 찾을 필요가 절실하게 된다.

한반도의 통일이 순리대로 이루어질 경우, 중국으로서는 동북아 공동번영의 새로운 계기를 맞이할 수 있다. 비록 체제는 다르더라도 예측 가능성 있는 한국과 동북아의 장래를 협의하는 것이 안전하다.

조선왕조 말기 재정이 쇠락하는 청나라의 100분에 1에 불과했었다는 역사에 비추어 한국의 근대화와 발전은 비약적인 것이다. 한국의 5천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G20 국가가 되었고, 이제 5천만 명 이상 인구 국가 중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능가하는 일곱 번째(소위 20+50) 국가가 되었다. 지난 2세대 동안 중국보다 앞서가는 경제와 사회를 경험하였다. 중국의 힘이 대단하지만, 한국도 중국과 협력할 만한 실체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무시할 수 없다. 이제는 '법의 지배'에 보다 충실하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선도그룹에 들어가고 있다. 이것은 한반도 주변의 환경과 역사적 흐름의 변화, 과학기술의 진보, 그리고 한국민의 근면한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부상하는 중국과 긴밀한 협력이 긴요하다. 그러나 중국 공포증에 함몰되어 '조용한 외교'에 안주하려는 소극적 자세는 능사가 아니다. 바로 중국 어뢰정사건에서 원칙에 충실했던 대응이 앞으로의 대중관계에서도 매우 중요한 지침이 되어야 한다.

한·중 수교 20년을 되짚어보면서 자긍심을 가지고 원칙에 입각해서 한·중 간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발전시켜나갈 필요성을 다시 확인한다. 외교

註

1) 연합뉴스, 외교열전 - 한중수교 기틀 닦은 중국어뢰정 사건 (2012. 2.27) 참조
2) 첸치천, 『열가지외교이야기』 (랜덤하우스중앙, 2004) p. 156.
3) 이상옥, 『전환기의 한국외교』 (삶과꿈, 2002) pp. 115-296. 참조
4) 김석우·홍성국, 『통일은 빠를수록 좋다』 (기파랑, 2010) 참조
5) The Economist, "Demography: China's Achilles heel" (2012. 4.21)

보시라이(薄熙来) 사건이 중국정치에 미칠 영향

황 용 식*

Ⅰ. 머리말

2011년 11월15일 닐 헤이우드(Neil Haywood)라는 한 영국인 사업가가 중국 충칭(重庆)시의 한 호텔에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고 2012년 2월9일,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충칭시 부시장 왕리쥔(王立军)이 2012년 2월6일 청두(成都) 주재 미국 총영사관에 들어가 하루를 체류하고 나온 사건이 발생하여 관계부처에서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라고 발표[1]하였으며 2012년 4월10일 중국 당국이 신화사 통신을 통하여 닐 헤이우드가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차기 상무위원의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던 중국공산당 충칭(重庆)시 위원회 서기(이하 ‘충청시 당서기’로 약칭)인 보시라이(薄熙来)의 현재의 처 구카이라이(谷开来)와 그의 집사인 장샤오쥔(张晓军)에 의하여 살해되었다[2]고 발표하여 이 사건은 세계 각국의 비상한 관심을 받게 되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보시라이(薄熙来)는 2012년 3월15일 공산당 충칭(重庆)시당 서기직에서 해임되었으며, 4월10일에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과 정치국원의 직무를 잠정적으로 정지당하게 되었다.[3]

이러한 과정에서 나타난 보시라이 사건은 중국이 1989년 텐안먼(天安門) 사태 이후 최대의 정치적 혼란에 직면했다[4]는 분석을 유발할 만큼 중국정치가 당면한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사건이 어떠한 정치적 결말로 이어질지는 빨라도 금년 10월에 개최예정인 제18기 중국공산당대회를 거친 후에나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보시라이(薄熙来)사건이 가지는 함의(含意)를 분석하고 이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중국정치의 문제점을 점검하는 것은 중국정치의 앞으로의 향방을 가늠하는 데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전 주 타이베이대표부 대표, 중국문화대학 명예박사

Ⅱ. 언론에 나타난 보시라이(薄熙来) 사건의 개요

2011년 10월, 중국 공산당 중앙 기율검사위원회는 랴오닝(辽宁)성 티에링(铁岭)시의 부패문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동시에 근무하였던 몽골족 출신 왕리쥔(王立军)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되었으며 당시 랴오닝 성의 성장으로 근무하였던 보시라이가 처음에는 왕리쥔을 비호하려 하였으나 나중에는 입장을 바꾸게 되었다.

충칭시의 공안 국장을 겸하고 있던 왕리쥔은 보시라이 서기에게 헤이우드 죽음이 보시라이 서기 가족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한 후 공안국장에서 해임되었다. 왕리쥔은 두 차례에 걸쳐 공산당 중앙기율 검사위에 보사라이의 처가 해외에 거액의 재산을 반출하였고 재산 반출과정에서 영국인 사업가 헤이우드의 도움을 받다가 그를 살해하였으며 보시라이가 중앙당의 권위에 도전하여 도청장치를 설치하였다고 보고하였으나 이러한 보고가 받아들이지 않게 되자 며칠 후 자신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청두 주재 미국 총영사관으로 가서 정치피난신청을 하였다.

미국은 중국 공산당의 차기 총서기로 내정되어 있는 시진핑(习近平)의 2012년 2월 13일로 예정된 방미일정을 앞두고 중국과의 관계악화를 우려하여 동인의 망명을 받아들일 수 없었으며 결국 왕리쥔은 미국 총영사관에서 하루를 체류한 후 중국 공안 당국의 보호를 받으며 나오게 되었다.[5] 왕리쥔은 미국 총영사관에서 헤이우드의 사망원인을 중점적으로 이야기 한 것으로 알려졌다.[6]

중국공산당은 2012년 3월15일 보시라이를 충칭시 서기에서 해임하고 그 후임에 장더쟝(张德江)을 임명한다고 발표하였다.[7] 4월10일에는 보시라이가 공산당 기율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과 정치국 위원의 직무도 정지당하였다.[8]

2012년 3월 영국은 중국에 대하여 헤이우드의 사망사건을 조사하여 줄 것을 공식 요청하였으며 2012년 4월11일 인민일보는 헤이우드 사건을 재조사한 결과 그가 타살되었다는 증거가 드러나 구카이라이와 장샤오쥔을 고의살인혐의로 사법기관에 송치했다라고 보도하였다.[9]

Ⅲ. 보시라이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내용 분석

보시라이 사건의 발단과 중국공산당 지도부가 동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사실에 비추어 보시라이 사건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분석할 수 있다.

1.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보시라이의 보수회귀 지향적 민중 선동정치(demagogism)를 우려하였다

보시라이는 1949년 중국 공산당 혁명원로 8인 중 1인인 보이보(薄一波)(1908~2007)의 아들로 태어나 1979년 북경대학 역사학과를 졸업하고 랴오닝성의 대련시장, 랴오닝성장, 국무원 상무부장을 거쳐 2007년 중국공산당 중앙 정치국원과 공산당 충칭시 서기가 되었다. 그는 충칭시

서기로서 사회 폭력집단을 소탕한다는 구호를 내걸고 폭력사범이라는 혐의가 있는 3,000여 명을 체포하였으며 시민들과 학생들로 하여금 공산당 혁명가를 부르게 하고 모택동 어록을 배포하며 중국 고전 읽기를 강조하는 등 과감한 보수회귀정책을 실천(소위 '唱紅打黑' 运动) 하여 그의 정책에 대한 지지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은 반면 그의 정책을 '우민정책' 또는 '문화혁명 유산'이라고 비판하는 반대자도 생겨나게 되었다.[10)]

보시라이 서기의 무리한 부패 추방운동의 희생이 되었던 하나의 예가 인권변호사 리주앙(李庄)에 대한 부당한 재판으로 알려지고 있다. 리주앙 변호사는 2009년 말 보시라이가 부패혐의로 입건한 자의 변호인이었으나 변호인이 의뢰인에게 허위 증언을 하게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아 30개월 복역 형의 언도를 받고 18개월의 형을 복역한 후 2011년 4월 재심에서 검사가 공소를 취하하여 무혐의처분을 받게 된 사건이다.[11)]

보시라이의 이러한 민중영합 방식의 돌출 행동이 중국공산당 지도부의 우려를 가져오게 되어 2012년 3월14일 전국인민대표대회 폐막일 원자바오(温家宝) 국무원 총리가 기자회견 시 "문화대혁명과 같은 역사적 비극이 다시 발생할 수도 있다"고 언급[12)]하게 한 원인제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중국 공산당 간부의 지도부에 대한 저항은 용납하지 않는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보시라이가 대련시장, 랴오닝성장, 상무부장을 역임하면서 외자유치에 큰 업적을 남겼으며 충칭시 서기에 재직하면서 폭력배를 소탕하는데 공헌을 하였으나 왕리쥔 공안국장을 시켜 충칭시를 방문하는 중국공산당 지도자들의 통화내용을 도청하여 녹음하여 둠으로써 자기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고자 한 것은 오히려 자기의 정치적 생명을 단축시키는 결과가 되었다. 이러한 도청사실이 공산당 지도자들에게 알려짐으로써 공산당 지도자들은 보시라이 주도하의 도청행위를 지도부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보시라이는 처음에는 범죄방지와 정치안정목적으로 국가의 예산 지원사업으로 도청장비를 설치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나 홍콩 언론보도에 의하면 보시라이가 왕리쥔 충칭시 공안국장을 시켜 2010년과 2011년 사이 충칭을 방문한 시진핑(习近平) 국가부주석과 우방구어(吴邦国) 전국인민대표 상무위원, 허구어창(贺国强) 중앙기율 검사 서기, 리위안차오(李源潮) 중앙조직부장 등을 도청하고 중요기밀을 보시라이에게 보고하도록 하였다고[13)] 하였다.

왕리쥔은 이러한 도청시스템을 활용하여 심지어 후진타오(胡锦涛) 공산당 총서기와 충칭시 정법위서기 류광레이(刘光磊) 간의 통화내용도 도청하여 보시라이에게 보고하였을 분만 아니라 보시라이와 그의 처 간의 통화내용도 도청한 것으로 밝혀졌다.[14)] 보시라이는 자신의 통화내용까지 도청당한 사실을 알고 왕리쥔을 충칭

시 공안국장직위에서 해임하였다.

중국공산당 지도층은 보시라이를 충칭시 서기에서 해임하고 공산당 중앙위원직과 정치국위원직을 정지시킨 결정을 함으로써 보시라이가 도청으로 당의 결속을 해치고 지도부의 권위에 도전한 해당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는 단호한 의지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의지는 2012년 3월7일 중국공산당 중앙상임위원회가 보시라이의 충칭시 서기직 해임문제를 토의한 과정에서 상무위원 9명 중 보시라이의 해임에 유보적 의견을 표시한 자는 저우융캉(周永康) 중앙정법위서기 뿐이었다는 사실과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개최 전에 이미 후진타오(胡锦涛), 원자바오(温家宝) 등 중국 공산당 현직지도자들이 주룽지(朱镕基), 리펑(李鹏), 리루이환(李瑞环), 차오쓰(乔石) 등 원로 공산당 지도자들과 보시라이의 해임문제를 협의하였다는 사실에서도 나타난다.[15]

3. 중국공산당 내부 정파 간 권력배분의 변화 양상을 초래하였다

보시라이 사건으로 금년 10월 개최예정인 제18기 중국공산당 대표대회에서 공산당의 사실상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추대될 것이 유력시 되던 보시라이가 정치국원 자격을 상실함으로써 누가 상무위원으로 추대될 것이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중앙 정치국 상무위원은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7년 제16기 공산당 전당대회에서 적용되었던 68세 이상은 정치국원이 될 수 없다는 원칙(소위 七上八下)[16]이 적용되어 현재의 상무위원 9명 중 7명이 은퇴할 예정이며 새로이 영입될 7명 중 1명이 보시라이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으나 보시라이가 실각함으로써 광동성의 서기인 중국 공산주의 청년단 출신 왕양(汪洋)이 유력시되고 있다.

중국의 정치권력은 중국공산당을 중심으로 행사되고 있으며 중국의 14세부터 28세까지의 젊은 엘리트들이 공산당원이 되기 전에 중국공산당 청년단원이 되기 때문에 중국공산주의 청년단('공청단'이라는 약칭으로 불리어 짐) 출신이 중국 공산당 내의 유력한 정치파벌을 형성하고 있다.[17] 공청단은 중국공산당 당장 제10장에 공산당과의 관계가 규정되어 있는 중요한 국가기관인데 이러한 공청단 출신 파벌에 대립하여 정치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파벌이 상하이 출신들로 이루어진 소위 상하이방(上海帮)과 중국 정치원로 자제들로 구성된 태자당(太子党) 세력이다.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구성은 이들 각 파벌 간의 세력을 반영하여 왔는데 제18기 공산당 대회에서 상무위원으로 유력시 되던 태자당의 보시라이 대신에 공청단 출신 왕양이 상무위원이 될 경우 이들 정치 파벌간의 세력 구도에 변화를 초래하지 않을 수 없다.

1989년 6월 천안문 사태의 발생으로 당시 공산당 총서기였던 자오쯔양(赵紫阳)이 물러나고 장쩌민(江泽民)이 당 총서기가 되자 자기의 권력 기반인 상하이 출신 정치인들을 대거 기용하여 소위 상하이방(上海帮)을 형성하였는데 후진타오(胡锦涛)가 장쩌민(江泽民)으로부터 공산당 총서기직을 물려 받은 2002년 16기 중국

공산당대회에서 중앙위 정치국 상무위원 9명 중 우방구어(吴邦国), 자칭린(贾庆林), 쩡칭홍(曾庆红), 황 쥐(黄菊), 우관정(吴官正), 리창춘(李长春) 등 6명이 상하이방에 속하는 인물들이었다. 2007년에 개최된 제17기 공산당 대회에서는 상무위원들의 계파는 후진타오(胡锦涛), 원자바오(温家宝), 리커창(李克强) 등 3명이 공청단 파벌에 속하고[18] 우방구어(吴邦国), 쟈칭린(贾庆林), 리창춘(李长春), 저우융캉(周永康) 4명이 상하이방에 속하며 시진핑(习近平), 허구어창(贺国强) 2명이 태자당으로 분류되는 구성을 이루었다. 2012년 10월에 개최될 제18기 공산당 대회에서 현재 9명인 정치국 상무위원수를 2002년 이전과 같이 7명으로 축소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

미국에서 운영되는 중화권 언론 보도에 의하면 2012년 7월 7일부터 13일 동안 베이징에서 개최된 약 300명으로 구성된 공산당 고급 간부회의에서 정치국 상무위원 후보 10명을 선출하였다고 한다.[19]

상무위원의 결정은 2012년 8월에 여름 휴양지인 베이다이허(北戴河)에서 개최되는 공산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내정한 후 10월 당대회에서 형식적으로 선출될 예정이나 공청단 출신으로 이미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차기 국무원 총리로 내정된 리커창(李克强)과 공청단에 속하는 광동성 서기 왕양(汪洋), 공산당 중앙 조직부장인 리위안차오(李源潮), 공산당 중앙 선전부장 류윈산(刘云山) 등이 상무위원으로 진출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상무위원 구성에서 공청단 출신이 다수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20]

4. 중국공산당 간부 및 그들의 친인척과 경제계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가 나타났다

보시라이 사건이 중국 정부기관에 의하여 조사받게 됨으로써 보시라이가 1985년부터 1995년까지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시장까지 하였던 랴오닝성 다리엔(大连)시의 실업자인 쓰더(实德) 그룹회장 쉬밍(徐明)이 보시라이에게 불법적으로 자금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중앙기율 검사위의 조사를 받고 있으며[21] 보시라이 아들인 보과과(薄瓜瓜)는 자신의 명의로 자본금 32만 달러의 정보기술회사 과과 테크놀로지를 설립하였으며 보시라이의 형 보시융(薄熙永)은 중국 국영회사 광다(光大)그룹의 부회장이고 그의 동생 보시청(薄熙成)은 중국 국영 증권회사 이사이며 그의 처형 구왕장(谷望江)은 동꽁(东港의 광동어 발음) 보안인쇄(security printing) 회사 지분 30% 약 1억 1400만 달러상당을 보유하고 이 회사를 경영하고 있고 다른 처형 구왕닝(谷望宁)은 동꽁(东港) 보안인쇄 회사의 지분 500만 달러상당을 소유하면서 북경의 중자화(钟家华) 정보기술회사의 지분 8.8%를 소유하고 이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2]

보시라이 친인척들의 중국경제계와의 밀접한 관련이 언론을 통하여 밝혀짐에 따라 중국인들은 주요 정치인물들이 정치계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으며 일부 국민들은 그들의 재산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였다.[23]

Ⅳ. 보시라이 사건이 중국 정치에 미칠 영향

1. 보시라이 사건은 형사사건에서 발단하였으나 정치권력 정비 목적에 활용되고 있다

보시라이 사건은 영국인 사업자 헤이우드의 의문의 죽음에서 발단되어 보시라이의 현재의 처 구카이라이(谷开来)가 살인혐의를 받는 형사사건으로 출발하였으나 충칭시의 부시장 겸 공산당 공안국장인 왕리쥔(王立军)이 청두(成都) 주재 미국 총영사관에 들어가 하루를 체류하고 나오면서 보시라이의 정치적 책임문제로 비화되었으며 동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중국공산당내의 권력 정비작업으로 발전하였다.

중국공산당 지도부는 보시라이의 정치적 생명을 단절시키고 보시라이를 지지하는 군내부 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조사를 하는 한편[24] 보시라이가 추진하던 소위 충칭모델(重庆模式)이라고 일컬어지던 마오쩌둥 시대를 찬양하고 범죄를 소탕하며 부의 공유('唱紅打黑' 运动' '共富' 理念 추구) 보수회귀적 정치노선의 흔적을 소탕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25] 현재 중국공산당의 핵심세력에 의한 보수 반동의 대중 정치운동을 펼치고 있는 보시라이 세력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금년 10월 개최될 공산당 전당대회에서 공산당 총서기에 취임할 시진핑(习近平)의 정치권력 인수를 순조롭게 하고 공산당 권력 내부에서 보시라이 세력이 시진핑 세력과 대립할 가능성을 차단하여 시진핑 중심으로 권력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비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은 과거에도 권력의 변동시기에 집권세력에 대항하려고 하는 세력을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약화시킴으로써 집권세력의 정치권력을 용이하게 행사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한 사례가 있다. 장쩌민 총서기의 상하이방이 집권하고 있던 1995년 베이징 당서기 천시퉁(陳希同) 사건을 계기로 베이징세력을 약화시켰으며 2006년 공청단 출신 후진타오 집권시기에 나타난 상하이 당서기 천량위(陳良宇)사건으로 상하이 정치세력을 약화시켰다.

천시퉁(陳希同)은 1992년 이래 베이징 당서기와 중앙정치국 위원이었는데 베이징 부시장 겸 시당위원회 재정국장이었던 왕바오산(王宝森)이 베이징시 부동산 개발프로젝트와 관련한 공금 유용사건에 연관되어 왕바오산은 권총 자살하고 천시퉁(陳希同)이 1995년 공산당적을 박탈당한 후 1998년 16년 형의 언도를 받고 현재에도 복역중이나 말기 암 치료를 받고 있으며 2013년 8월 형기를 마칠 예정이다.[26][27]

상하이시 독직사건은 공청단 출신 후진타오의 집권시절이었던 2006년 상하이시에서 부패사건으로 당시 상하이 서기였던 천량위(陳良宇)가 형사재판에 회부된 사건이다.

천량위(陳良宇) 사건은 2002년 중국 상하이시의 서기가 된 후 같은 해에 공산당 중앙 정치국원이 되었는데 동인의 상하이시 서기취임 후 상하이의 부동산 가격이 배가 상승하는 폭등현상을 보이고 상하이 경제가 급격하게 발전하였는데 2006년

9월 천량위 서기가 사회보장기금 유용과 자기의 비서 친위(秦裕)의 수뢰사건에 관련된 혐의를 받고 상하이시 서기직에서 해임되고 공산당 중앙정치국원의 직무를 정지당하였으며 2007년에는 공산당직을 박탈당하고 2008년에 18년의 형을 선고받고 2009년 6월 보석으로 형의 집행이 정지되었다.[28]

2. 보시라이 사건은 후진타오의 퇴임 후 정치적 영향력 행사를 예고하는 것이다

보시라이 사건이 중국 정치에 미치는 영향은 보시라이의 정치적 배경과 관련하여 이해하여야 한다.

보시라이의 부친인 보이보(薄一波)는 중국공산당 8대 원로의 1인으로서 중국 정치에 깊이 관여하였기 때문에 보시라이 사건의 처리과정은 보시라이 부친의 정치적 행보와 깊은 관련이 있다. 보이보(薄一波)는 중국의 문화대혁명 기간중인 1967년 3월 소위 61명의 집단반란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투옥되었다가 1978년 11월 천윈(陳云)의 제의로 집단반란사건의 재조사가 이루어져 당시 공산당 중앙조직부 부장이었던 후야오방(胡耀邦)의 도움으로 집단 반란의 혐의를 벗고[29] 1979년 출옥하게 되어 공산당 중앙위원과 국무원 부총리가 되었다.

그러나 1986년 말부터 중국에서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 민주화를 요구하는 운동이 점차로 격렬하여지고 당시 공산당 총서기인 후야오방이 이러한 학생운동에 대하여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자 1987년 실권자인 덩샤오핑이 보이보를 포함한 7인 위원회를 구성하여 후야오방의 축출문제를 협의하도록 하였는데 보이보는 후야오방 총서기를 축출하는데 찬성함으로써 후야오방에 대한 은혜를 배신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중국의 현 공산당 총서기인 후진타오는 후야오방의 정치노선을 승계하였으며 후야오방의 아들인 후더핑(胡德平)의 친구이다. 후야오방은 1964년 중국공산주의 청년단이 그 전신인 신민주주의청년단으로부터 이름을 변경한 후 신설된 초대 제1서기이었고 후진타오는 1982년 중국 공산주의 청년단 서기로 발탁되어[30] 후야오방은 후진타오의 정치적 후원자이었으며 후진타오가 정치적 성장을 하는데 후야오방의 지원을 받았다.

1989년 천안문사태로 총서기가 된 장쩌민은 천윈(陳云)과 리셴녠(李先念)에 의해 발탁되었으며 1992년 덩샤오핑은 장쩌민을 실각시키고 자오쯔양을 복귀시키려고 하였을 때 보이보가 덩샤오핑을 설득하여 장쩌민을 유임시키는 데 성공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후진타오와 장쩌민의 이와 같은 정치적 배경의 차이로 2002년 후진타오가 당 총서기가 된 이후에 후진타오를 중심으로 하는 공청단 세력은 장쩌민을 중심으로 하는 상하이방 세력과 대립하여 왔다. 후진타오는 오는 10월 개최될 제18기 공산당 대회에서 시진핑(习近平)에게 중국공산당 총서기직을 물러준 후에도 덩샤오핑과 장쩌민처럼 자기를 지지하는 공청단 출신과 자기의 영향력으로 중앙위 정치국 상무위원이 된 자들[31]의 도움을 받아 중앙 군사위원회 주석의 직위를 당분간 유지하면서 막후에서 정치적 영

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32]

3. 보시라이 사건은 시진핑(习近平)에게 새로운 정치적 부담을 주게 되었다

오는 10월 개최될 제18기 공산당 대회에서 차기 공산당 총서기로 선출될 시진핑(习近平)은 중국공산당의 8대 원로중의 1인인 시중쉰(习仲勋: 1913~2002)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 소위 태자당으로 분류되는 정치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장쩌민이 공산당 총서기시에 상하이방이 태자당과 연합하여 공청단세력을 견제하였으나 보시라이 실각 후 시진핑(习近平)이 당 총서기가 되어 중국정치를 이끌어 나가기 위하여 공청단 세력과 상하이방 세력 간의 균형자역할을 하여야하는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되었다.

4. 보시라이 사건은 중국정치개혁을 촉진하는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 정치는 지도자인 마오쩌둥, 덩샤오핑, 장쩌민, 후진타오로 이어지면서 지도자의 카리스마적 요소가 점차로 약화되고 공산당 내부에서 민주적인 절차를 택하는 경향이 강화되어 왔으며 이러한 경향은 시진핑이 지도자가 될 경우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보시라이 사건은 중국 정치지도자가 가진 약점을 노출시켰으며 정치세력 간의 대립양상을 다시 노출시킨 사건이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중국국민들의 정치개혁 요구는 더욱 강화될 것이다.

시진핑의 학력[33]과 경력에 비추어 볼 때 공산주의 운동을 하면서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하여 온 그 전의 지도자와 달리 중국 공산주의의 전통적 가치관을 추구하려고 하기보다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많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중국은 제18기 공산당 대회 이후 정치적 개혁을 강화하여 민주주의제도를 더욱 폭넓게 수용하고 정치적 대립을 해결하는 더 많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고 할 것이다.[34]

Ⅴ. 결 론

보시라이 사건은 당초 형사사건으로 출발하였으나 그 사건처리과정은 중국정치사에서 중요한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중대사로 발전하였다. 보시라이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되고 그 결과로 중국에 온건한 정치적 개혁이 이루어질 것인지 정치적 혼란을 초래할 것인지 현재로서는 확실하지 않다.

보시라이 사건을 계기로 중국의 정치지도자들과 그들의 가족이 중국의 경제계 및 실업계와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의 일부가 공개되어 후진타오 국가주석의 아들, 원자바오 총리의 부인과 아들, 전 공산당 총서기 장쩌민의 아들과 딸, 전 총리 리펑(李鹏)의 아들과 딸, 우방구어(吴邦国)의 사위 등이 중국의 중요기업체에서 일하고 이들이 경영하거나 근무하는 기업이 국가로부터 특혜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사실들이 나타나고 있다.[35] 중국정치지도자들 친인척들과 중

국 경제계가 어떻게 연결되어있는지에 대하여 그동안 중국당국은 침묵하여 왔는데 보시라이 사건을 계기로 이러한 관련이 인민들에게 알려짐으로써 이제 중국판 판도라의 상자가 열려지게 되었다.

호주언론의 북경주재 기자가 취재한 내용에 따르면 위에서 언급한 중국 공산당 지도자 뿐만 아니라 전 국가부주석 쩡칭홍(曾庆红)의 아들이 90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 국유발전소 주식을 가로챈 혐의가 있으며 리장춘(李长春)의 딸, 정치 협상회의 주석 자칭린(贾庆林)의 아들, 정치국 상무위원 허구어창(贺国强)의 아들, 정치국 상무위원 저우용캉(周永康)의 아들도 가문을 배경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36]

중국당국이 이와 같은 외국 언론 보도의 국내 유포를 저지하려고 노력 한다고 하더라도 중국의 경제 개방정책과 정보기술의 발달로 언젠가 다수 중국인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될 것이며 그 경우 그들은 정치지도자들과 그 가족에 대한 재산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게 될 것이며 이러한 추세를 외면하지 못할 중국 정치 지도자들도 중국정치의 개혁을 주장하는 목소리를 높이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찰해보면 보시라이 사건은 결국 중국 정치에서 기존의 정치파벌 간의 세력을 새로운 방향으로 정비하여 권력구조의 변혁을 초래하는 계기로 작용하게 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중국인민들로 하여금 정치, 경제 전반에 걸쳐 제도보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더욱 중요시하는 중국의 전통적 가치관을 변화시켜 장기적인 사회의 안정과 효과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을 더욱 절실히 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외교

註

1) 维基百科, http://zh.wikipedia.org, 薄熙来
2) 조선일보, 2012. 4.13, A21
3) 维基百科, http://zh.wikipedia.org, 薄熙来
4) 조선일보, 2012. 4.16, A16
5)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2012. 3.31-4.1, p.1, p.3
6)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2012. 4.27, p.1, p.5
7)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2012. 3.16, p.1, p.4
8) 维基百科, http://zh.wikipedia.org, 薄熙来
9) 조선일보, 2012. 4.12, A31
10) 维基百科, http://zh.wikipedia.org, 薄熙来
11) NewYork Times, April 19, 2011, Ian Johnson, "Trial in China Tests Limits of Legal System Reform"
12) 조선일보, 2012. 3.15, A10
13) 조선일보, 2012. 4.14, A14
14)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2012. 4.27, p.1, p.5, 조선일보 2012. 4.27, A16
15) 维基百科, http://zh.wikipedia.org, 薄熙来
16) 이 말의 중국어 원래의 의미는 "안절부절하다"인데

덩샤오핑(邓小平)이 1987년 제 13기 공산당 대회에서 자기의 정적(政敌)이었던 천윈(陈云)을 상무위원에서 물러나게 하기 위하여 그 때까지 정치국원의 연령제한이 없었던 종래의 관행을 폐지하고 상무위원들의 연령을 낮추어야 한다는 명분하에 이 말을 사용하여 자신과 천윈이 상무위원직에서 함께 물러났다. 그러나 그 이후 상무위원 연령 제한 원칙은 잘 지켜지지 않았는데 1997년 제15기 공산당 대회에서 장쩌민(江泽民)이 자기의 정적인 차오쓰(乔石)를 상무위원에서 물러나게 하기 위하여 70세 이상은 상무위원이 될 수 없다는 원칙을 제기하여 차오쓰(乔石)를 상무위원에서 물러나게 하는 데 성공하였으며 2002년 16기 공산당 대회에서는 장쩌민(江泽民)이 자기의 동조세력인 상하이방의 자칭린(贾庆林)을 상무위원에 유임시키고 자기의 정적인 리루이환(李瑞环)을 상무위원에서 물러나게 하기 위하여여 등소평이 주장한 칠상팔하의 원칙을 제기하여 당시 67세의 자칭린(贾庆林)은 상무위원으로 유임되고 68세의 리루이환(李瑞环)은 퇴임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17) http://baike.baidu.com/view/20997.htm, baidu baike, 中国共产主义青年团 2004년 말까지 중국공산주의 청년단원이 7188만 명이었다고 함

18) 조선일보, 2012. 2.15, A16

19) 매일경제, 2012. 5.17, A8, 조선일보, 2012. 5.17, A16

20) 매일경제, 2012. 3.16., A4

21) 维基百科, http://zh.wikipedia.org, 薄熙来, 조선일보, 2012, 4.14, A14

22)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2012. 4.25, p.1, p.3, 조선일보 2012. 4.25, A18

23) 조선일보 2012. 4.6, A18

24) 조선일보 2012. 4.16, A16

25)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2012. 5. 7, p.1, p.3

26) 维基百科, http://zh.wikipedia.org, 王宝森

27) 维基百科, http://zh.wikipedia.org, 陈希同

28) 维基百科, http://zh.wikipedia.org, 陈良宇

29) 张岂之 主编, 中华人民共和国,(2002, 台北 五南图书出版)p.328, p.338 참조

30) 维基百科, http://zh.wikipedia.org, 中国共产主义青年团

31) 2012년 7월3일 베이징시의 당서기로 선출된 궈진룽(郭金龙)은 후진타오의 직계로 분류되는데 베이징시 서기가 중앙상무위원이 되는 관례에 따라 동인이 중앙위상무위원이 될 경우 후진타오의 영향력 강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조선일보 2012. 7. 5. A20. 참조.

32) 덩샤오핑은 1987년 상무위원직에서 물러나면서 공산당 중앙위 군사위원회 주석직을 보유하다가 1989년 장쩌민에게 동 직위를 인계하였으며(상게, 中华人民共和国, p.423. p433) 장쩌민은 2002년 당 총서기직을 후진타오에게 인계하였으나 중앙군사위 직위는 2005년에 인계하였다.(维基百科, http://zh.wikipedia.org, 胡锦涛)

33) 시진핑은 1975~1979년 清华大学化工系基本有机合成을 전공하고 졸업 후 1979년~1982년 총리실과 중앙군사위 비서실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여 계속 관료로 성장하였다. 维基百科, http://zh.wikipedia.org, 시진핑(习近平)

34)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2012. 5.16, p.3

35)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2012. 5.19, p.1, p.4

36) 조선일보, 2012. 6.2, A14

세계경제의 리스크와 향후 전망

박 현 수*

Ⅰ. 서 론

2008년 9월 미국 투자은행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으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는 벌써 4년 가까이 세계경제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초기에 G20 정상회의 등을 통해 국제공조를 약속하면서 주요국들이 막대한 규모의 경기부양정책을 함께 펴고,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을 늘리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결과 세계경제는 한 때 급락세를 멈추고 반등에 성공하는 듯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 후 세계경제의 흐름은 낙관적 기대가 옳지 않았고 글로벌 금융위기의 뿌리는 간단히 제거될 수 없는 것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했다.

대부분의 금융위기가 그렇듯이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도 과도한 부채에서 비롯되었다. 미국에서는 신용도가 낮은 서브프라임 등급의 채무자들이 가격상승을 기대하면서 상환능력을 넘어서는 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에 나섰고, 금융권에서는 주택저당대출을 유동화하면서 주택시장에 자금을 공급했다. 이 과정에서 유럽 등의 글로벌 자금이 미국으로 유입되어 주택관련 금융상품에 투자되었다. 하지만 계속 오를 것 같았던 주택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버블을 형성했던 복잡하고 긴 금융중개의 연결고리를 타고 거꾸로 금융부실이 급격히 확대되었다.

유럽에서도 영국, 스페인 등 주택가격이 급등했던 곳에서 버블이 꺼지면서 부실이 급증했다. 세계적인 대형 금융기관조차 막대한 부실로 인해 파산의 위험을 피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주요 선진국 정부들은 대형 금융기관들을 구제하기 위해 대규모 구제금융을 투입할 수밖에 없었다. 민간부문의 부채가 정부로 이전된 것이다.

또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도 정부의 부담이 되었다. 기업의 이익과 가계의 소득이 줄어 세수가 감소했고, 실업급여 등 복지성 지출은 급증했

* 삼성경제연구소 글로벌연구실 수석연구원

기 때문이다. 지금 세계경제를 뒤흔들고 있는 유로존 위기는 유로존의 특수성도 중요한 원인이지만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다. 민간부문의 부채를 정부가 떠안았다고 해서 부채가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은 평범하고도 자명한 진리이다.

지금 세계경제는 유로존의 위기 고조와 함께 중국의 경착륙과 미국경제의 성장둔화 등으로 리스크가 어느 때보다 높다. 따라서 세계경제가 다시 한 번 더 침체에 빠질 것인지, 아니면 이 위기국면을 봉합하고 회복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또한 유로존 위기로 이어지고 있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이 장기적으로 세계경제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도 중요한 관심대상이 아닐 수 없다.

본고에서는 세계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주요 리스크를 분석하고, 장기적으로 세계 경제질서의 변화를 전망해보고자 한다.

Ⅱ. 세계경제의 리스크

1. 유로존 위기

최근 세계경제는 다시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세계 교역량 증가율은 2011년 1월 11.6%에서 2012년 3월에는 2.0%로 하락했고, 산업생산도 같은 기간에 7.7%에서 1.8%로 감소했다(전년동월대비). 세계 실물경제 부진의 가장 큰 원인은 유로존의 침체이다. 그리스, 포르투갈 외에 스페인, 이탈리아 등까지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지면서 2012년 1/4분기 유로존 경제성장률이 -0.3%를 기록한 것이다. 유로존은 미국에 필적하는 거대 경제권으로, 2008년의 위기 때와는 달리 주요 선진국들의 재정이 크게 악화되어 경기를 부양할 수단도 마땅치 않는 상황에서 유로존이 위기에 빠진다면 세계경제는 큰 충격을 받을 것이다. 따라서 유로존 위기는 지금 세계경제가 당면한 가장 큰 위협이다.

유럽 재정위기는 2010년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등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던 국가들에게 구제금융을 지원하면서 해결되는 듯 했지만 2011년 6월 그리스의 디폴트 우려가 높아지면서 재차 불안이 고조되었고, 이는 그리스에 대한 2차 구제금융과 신재정협약, 유럽중앙은행의 장기대출(LTRO: Long Term Refinancing Operation) 등으로 진정되었다. 하지만 2012년 들어 그리스가 지난 5월 총선 이후 연립내각 구성에 실패하여 긴축합의 이행이 불확실해지고, 유로존에서 네 번째로 경제규모가 큰 스페인마저 금융권 부실로 위기가 고조되면서 유로존 자체가 존립을 위협받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그리스 위기가 재정위기라면 스페인 위기의 현 단계는 은행위기에 가깝다. 2011년 말 기준으로 금융권 부동산 대출의 59.7%, 1,840억 유로가 부실대출로 분류되고 있는데,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은행 부실은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유럽은행감독청이 요구하는 핵심자기자본비율 9%를 6월 말까지 달성하려면 800억 유로 이상의 자본확충이 필요한데, 스페인의 은행 구조조정기금(FROB: Fondo de

Reestructuración Ordenada Bancaria) 잔액은 273억 유로에 불과하고 국채 금리도 6%를 상회하여 국채 발행도 쉽지 않아 결국 6월9일, EU는 스페인 은행의 구조조정을 조건으로 1천억 유로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유로존의 불안이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지만 유로존 위기가 최악의 상황으로 진행될 개연성은 높지 않다. 그리스나 스페인은 유로존에서 탈퇴할 경우 단기적으로 엄청난 경제적 후폭풍을 감수해야 하고, 재정지원을 부담해야 하는 독일도 유로존 붕괴 시 막대한 경제적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즉, 재정부담국이나 재정위기국이나 지금으로서는 유로존 유지가 그나마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유로존 탈퇴나 해체라는 모험을 선택할 가능성은 낮다.

지난 6월28일과 29일 양일간 브뤼셀에서 개최된 EU 정상회의에서 경기진작을 위한 성장협약, 유로존 은행감독체제의 일원화, 그리고 EFSF(European Financial Stability Facility)/ESM(European Stability Mechanism)의 회원국 국채 직접 매입 허용 등의 단기 시장안정화 조치에 합의한 것은 유럽 지도자들이 이 점을 잘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하지만 유로존 위기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다. 경기부양을 위해 향후 3년간 투입하기로 합의한 1,200억 유로는 유로존 GDP의 1%에 불과해 충분치 않다는 비판이 있는데다 단일 은행감독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세부 실행방안 도출도 험난한 여정이 될 것이다.

또 EFSF/ESM가 사용할 수 있는 4천억 유로의 재원이 시장안정을 보장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점과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인 재정통합에 대해서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점 등을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유로존 위기는 당분간 파국을 모면하되 항구적인 안정과도 거리가 먼 상태를 지속할 것이다.

한때 미국을 능가하는 단일 통화권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던 유로존은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으로 내부의 구조적 모순이 터지면서 지금은 존속 가능성까지 의심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유로존의 구조적 모순이란 재정과 경제가 완전히 통합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입된 단일통화 구조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말한다. 단일통화인 유로화의 가치가 독일에게는 저평가된 수준인 반면, 그리스 등에게는 고평가된 수준이 되어 경쟁력의 양극화가 불가피한데, 이를 시정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것이다.

또한 비슷한 위기를 겪으면서도 양적완화정책 등 통화정책 수단을 가진 미국이나 일본과 달리 통화정책 재량권이 없는 유로존 국가들은 위기에 더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당장의 그리스, 스페인 등의 위기가 진정된다고 하더라도 유로존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신뢰할 수 있는 단일통화권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다.

2. 미국 경기급락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진원지인 미국은 초기에 대규모 공적자금을 투입해 금융기관들에게 구제금융을 제공하고

2009년부터 경기부양정책으로 재정지출을 늘렸다. 또한 정책금리인 연방기금금리 목표치를 0~0.25%로 인하하여 사실상 제로금리정책을 펼치는 한편 두 차례에 걸친 양적완화정책으로 2.3조 달러어치의 국채와 모기지 증권 등을 매입했다. 이러한 적극적인 노력에 힘입어 미국경제는 짧은 침체기간을 거쳐 확장국면에 진입함으로써 1930년대 대공황과 같은 파국을 막는 데는 성공했다. 2009년 하반기부터 침체국면에서 벗어난 미국경제는 성장률이 등락을 보이긴 했지만 2011년 말부터는 일자리가 증가하는 등 고용시장이 호전되어 불안한 세계경제의 버팀목이 되어줄 것이라는 기대를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2012년 들어 경기지표의 개선속도가 둔화되면서 그런 기대는 단기에 그치고 말았다. 2011년 4/4분기에 3.0%였던 경제성장률은 2012년 1/4분기에 1.9%로 떨어졌고, 2011년 12월부터 3개월 연속으로 20만 개를 넘었던 비농업부문 일자리 수 증가는 2012년 들어 계속 감소해 5월에는 6만 9천개에 그쳤다. 그 결과 2011년 하반기부터 꾸준히 하락하던 실업률은 2012년 5월 10개월 만에 다시 상승했다.

이처럼 경기회복 속도가 완연히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다시 고조되고 있는 유로존 위기는 미국경제에도 큰 위협이다. 전통적으로 미국은 유럽과 경제적 연계가 강해 유로존 위기의 파급효과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금융위기 이후 미국은 경기회복과 일자리 창출의 열쇠를 제조업 부활에서 찾고 있는데, 2011년 기준으로 유럽은 미국 수출의 26.8%를 차지하고 있어 유로존 위기로 유럽 경제가 침체에 빠지면 미국 수출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1)]

또 금융부문에서는 해외 포트폴리오의 42.2%(2조 8천억 원, 2010년 기준)[2)], 은행 해외자산의 58.2%(3조 5천억 달러, 2011년 기준)[3)]가 유럽에 집중되어 있어서, 유로존 위기로 유럽 내 자산가격이 하락하거나 유럽 은행의 파산이 발생할 경우 손실이 불가피하여 연쇄적으로 미국 내에서도 신용경색이 발생할 수 있다.

한편 미국 정부가 경기하락에 대응할 만한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점도 문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는 정부가 재정지출을 크게 늘려서 경기급락을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재정상태는 크게 악화되었다. 2000년대 들어 악화된 재정이 경기침체로 세수가 줄고 실업급여 등 복지성 지출이 크게 늘어난데다 경기부양을 위한 재량적 지출까지 더해져 더욱 나빠진 것이다. 또한 경기회복은 예상보다 지지부진해서 재정적자의 감축이 쉽지 않다. 백악관 예산국이 2012년 재정수지 전망을 당초 9,600억 달러에서 1조3천억 달러로 늘려 잡은 것도 경기회복이 예상보다 부진한 탓이다.[4)]

따라서 재정건전화는 미국 정치권에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문제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구체적 수단에 대해 이견을 보이면서 첨예하고 대립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1년에는 연방정부 채무한도 증액 협상을 원만히 타결하지 못해 국가신용등급이 강등된 데 이어, 예산통제법에 따라 구성된 초당적 위원회도 시한 내에 재정건전화 방안을 마련

하지 못해 결국 2013년부터는 강제적 재정적자 삭감에 돌입하게 되는 등 재정문제에 대해서는 정치 리더십이 거의 실종된 상태이다.

더욱이 부시행정부의 감세조치와 경기부양정책에 따른 한시적 세제 혜택이 2012년 말로 종료될 예정인데, 미 의회 예산국은 감세종료과 지출삭감이 현재의 법 규정대로 이루어질 경우 2013년 상반기에는 미국경제가 더블딥에 빠져 성장률이 -1.3%로 급락할 것이라고 예상했다.[5] 이런 사태를 피하려면 정치권이 합의하여 일부 세금감면 조치를 연장하고 경제적 충격을 줄일 수 있는 재정지출 삭감 방안에 합의해야 하는데, 올해 말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대립이 더욱 격화될 개연성이 높아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3. 중국 경착륙

신흥국들은 선진국에 비해 금융위기의 충격을 비교적 잘 극복해 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고, 특히 중국은 대규모 재정정책과 금융완화정책으로 2009년에도 9.2%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세계경제의 새로운 성장엔진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다. 중국은 지금까지 수출이 성장을 주도해왔지만 아직 소비와 인프라 건설 등 내수의 성장잠재력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수주도형 성장모형으로의 전환이 미진한 가운데 유로존 위기 확산으로 수출이 급감하면서 2011년 4/4분기 이후 성장률도 크게 낮아졌다. 게다가 내부적 요인으로 인해 유로존 위기가 심화될 경우 중국경제가 경착륙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중국경제의 경착륙 우려는 주로 부동산 버블에 기인한다. 금융위기 이후 미국, 유럽 등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 것과 달리 중국에서는 금융완화 등에 힘입어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다. 2012년 1/4분기 현재 뉴욕과 도쿄의 주택가격이 각각 10.7배, 19배인데 상하이와 베이징의 주택가격은 소득의 30.4배, 28.7배에 달해 주택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다.[6]

이에 따라 2010년 이후 중국 정부는 1가구 2주택 매입에 대한 담보대출 금리 인상, 3주택 대출 금지 등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경기부양정책의 부작용을 억제하기 위해 2010년 10월 이후 금리도 5차례나 인상하면서 금융긴축에 돌입했다. 그 결과 2011년 하반기 이후 전국평균 부동산 판매가격은 하락세로 돌아섰고, 36개 대도시에서도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다.

대체적으로는 중국 정부의 정책 대응으로 중국의 부동산이나 경제가 경착륙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지만, 유로존 위기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경우 그 충격으로 중국 부동산 가격도 급락하면서 연착륙에 실패할 수 있다. 중국경제에서 부동산 가격이 중요한 것은 부동산 개발이나 건설, 철강, 시멘트 등 부동산과 연관된 투자가 GDP의 23%나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면 금융권의 부실이 증가하여 신용경색이 발생하는 한편 부동산 관련 투자가 급감하여 경착륙이 현실화되는 것이다. 또 부동산

가격 급락은 지방정부의 투자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중국 지방정부는 사회간접자본투자를 크게 늘려 경제성장에 기여했는데[7], 주로 토지 매각이나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을 통해 투자재원을 조달했다. 그 결과 지방정부 부채는 2008년 말 4.2조 위안에서 2011년 말에는 12조 위안으로 급증했는데[8], S&P는 2012년 1월에 이미 지방정부 부채의 30%가 부실화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9].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면 지방정부는 더 이상 중국경제의 성장동력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다.

한편 중국경제는 투자 비중이 과도하게 높은 불균형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이다. 중국은 정부가 주도한 산업정책을 집행하는 국유기업에 금융자원을 집중적으로 배분하여 투자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경제성장을 이끌었다. 그 결과 GDP에서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35%에서 2011년에는 45%로 증가했고, 특히 부동산과 관련된 투자의 비중이 높다. 또한 정부 주도 투자가 고용효과가 낮은 자본집약적 산업 위주로 이루어졌다는 점도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요인이다.

반면 정부의 금융자원 배분에서 소외된 민영기업은 제도권 금융보다는 사금융에 자금조달을 의존하면서 성장이 제약받고 있고, 노동소득분배율이 하락하면서 민간소비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사회복지가 취약하여 의료, 교육 등의 지출에 대비한 저축이 필요하다는 점도 소비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중국경제의 불균형 구조가 단기간에 경착륙을 일으킬 개연성은 높지 않다. 하지만 다른 국가의 사례에서도 보듯이 투자 주도의 성장은 언젠가 한계에 이를 수밖에 없고 과잉설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내수보다 수출에 의존하는 경제구조에서 유로존 위기 등 대외 충격이 발생할 경우 신규투자가 급감하여 경착륙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한 경제구조를 만들려면 소비의 비중을 높이고 내수 주도 경제로 전환해야 하지만, 이 역시 쉬운 과제는 아니다.

Ⅲ. 세계 경제질서의 변화[10]

금융위기 또는 선진국, 특히 유로존의 재정위기는 세계경제에 단기적으로 큰 위협이 되고 있지만,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세계 경제질서의 변화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세계경제의 리스크와 경제흐름 변화를 잘 파악하여 대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장기적인 변화의 흐름을 읽고 이에 대비하는 전략도 장기적 성장을 위해 긴요하다.

세계 경제질서의 변화는 위기 이전의 경제질서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초래했다는 반성과 금융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작용이 각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위기의 충격이 선진국과 신흥국 등 국가 그룹에 차별적으로 미치는 영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세계 경제질서는 당위적 목표와 현실의 불가피성,

그리고 힘의 균형의 상호작용에 의해 규정된다고 할 수 있다.

21세기 들어 세계경제는 IT버블 붕괴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구가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전 세계를 휩쓴 금융위기로 골디락스 경제를 이끈 세계경제 패러다임의 구조적 모순이 드러나고 말았다. 미국의 과잉소비와 이에 기댄 신흥국 등의 수출확대는 지속불가능한 수준의 글로벌 불균형을 초래했고, 시장의 자율조정기능에 대한 신뢰에 근거한 금융규제 완화와 정보처리 및 통신기술 발전 등에 힘입은 금융혁신은 금융부문의 과도한 팽창과 자산가격 버블을 야기함으로써 결국 금융위기로 이어진 것이다. 따라서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글로벌 경제구조를 시정해야 한다는 것은 위기 당사국이나 주변국 모두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각국이 처한 상황은 천차만별이다. 위기의 중심인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은 단기적으로 당면한 경기부진과 금융불안 타개와 재정건전성 회복이라는 무거운 짐을 안고 있다.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편이었던 신흥국은 수출주도형 경제구조의 변화와 경제적 위상의 변화 등을 꾀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의 차이가 위기극복을 위한 국제공조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더욱이 신흥국의 부상과 함께 변화압력이 높아져온 글로벌 경제의 역학구도는 금융위기를 계기로 가시적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 즉, 또한 기존 질서구조에서 기득권을 향유하던 선진국 그룹의 질서를 유지하려는 힘이 약화되고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려는 힘이 강화되고 있어 기존 질서가 그대로 지속될 수 없는 것이다.

세계 경제질서는 개별 국가 또는 여러 국가가 당면한 경제문제를 처리하는 방식을 규정하거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힘을 총칭하는 체계로 정의할 수 있다.[11] 이 장에서는 세계 경제질서의 변화를 경제지형, 산업 패러다임, 통상질서, 금융구조, 그리고 글로벌 거버넌스의 다섯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1. 경제지형의 변화

선진국의 저성장과 신흥경제권의 지속성장으로 경제지형이 변할 것이다. 금융위기 이전까지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민간 수요가 세계 경제를 견인했으나, 위기 이후에는 선진경제권과 신흥경제권의 회복 속도와 강도에 격차가 발생하면서 신흥경제권이 세계경제 회복을 견인하는 구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질적 측면에서도 신흥경제권의 역할과 위상이 크게 제고되었다. 앞으로도 선진경제권은 금융위기의 충격이 장기화되면서 일정 기간의 저성장이 불가피할 것이다.

선진국의 성장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은 재정문제이다. 유럽이 재정위기로 진통을 겪고 있지만 미국, 일본 등 다른 선진국도 크게 나은 형편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최소한 수년간 재정긴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가계의 재무건전성 회복, 고령화에 따른 노동투입 감소 등도 성장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인이다.

반면, 신흥경제권은 유로존 위기 등으로 선진국 경제가 침체에 빠지면 충격은 불가피하겠지만 성장모델의 점진적 변화

를 통해 지속성장이 가능할 전망이다. 즉 수요측면에서는 내수의 성장잠재력이 풍부하고 신흥국간 무역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노동, 자본 및 생산성 등도 성장에 기여할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10년간 G20 국가들은 연평균 3.7% 성장하는 데 비해 G20 내 신흥 11개국은 연평균 6.8%의 고성장이 가능하여 2033년에 신흥 11개국이 선진 8개국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중국과 인디아가 신흥경제권의 고성장을 주도하면서 2030년 이후 중국과 인도가 세계 1, 3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전망이다.[12)]

2. 글로벌 불균형과 신(新)통상질서

미국의 대규모 적자와 일부 선진국 및 중국 등의 대규모 흑자가 지속되는 현상, 즉 글로벌 불균형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도 세계경제를 위협하는 가장 큰 리스크로 지적되어져 왔다. 글로벌 불균형이 이번 금융위기의 직접적 원인이 되지는 않았지만 미국과 유럽에서 자산가격 버블을 일으킨 중요한 원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불균형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는 적자국은 물론 흑자국도 동의하고 있다.

글로벌 불균형은 선진국 및 신흥국 등을 망라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불균형의 빠른 해소를 위해서는 선진국과 신흥국, 흑자국과 적자국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불균형의 핵심당사자인 미국의 소비 감소와 중국 등 신흥국의 내수 확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금융위기 이후 조정이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양국의 경제사정으로 인해 빠른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미국이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위안화의 대폭적인 평가절상도 쉽지 않다. 결국 글로벌 불균형 완화 조건들은 대부분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이겠지만 강도와 속도는 불균형을 일시에 해소하기에는 불충분할 전망이다. 환율은 단기적으로 선진국과 신흥국, 흑자국과 적자국 모두에게 민감한 문제로서 급격한 조정이 어려워 갈등의 소지로 작용할 것이다.[13)]

또한, 보호무역이 강화되고[14)] 위기 이후 선진국과 신흥국의 성장 차별화 등은 DDA 등 다자간 협상의 타결을 더욱 어렵게 하여 다자주의 체제가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각 국별 또는 지역별 이해관계에 따라 이합집산이 진행됨에 따라 지역주의 흐름이 강화되면서 역내 교역이 증가할 것이다.

3. 글로벌 금융질서

금융위기 이전의 글로벌 금융질서는 달러화 기축통화체제를 근간으로 한 것이었다.[15)] 위기 이후 달러화 기축통화체제에 대한 비판과 비관적 전망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지만 달러화 기축통화체제는 당분간 유지될 것이다. 우선 달러화의 가장 강력한 경쟁통화로 부상했던 유로화는 유로존이 심각한 위기에 빠지면서 기축통화 경쟁에서 멀어지고 있다. 유로존이 붕괴까지 가지는 않더라도 위기와 침체 국면이 지속되면서 기축통화가 되기에 충분한 경제규모나 금융시장, 통화가치 안정 등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위안과 SDR 등도 상당기간 동안 경제규모와 성숙한 금융시장 등 기축통화로서 갖추어야 할 요건을 구비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미국뿐 아니라 대미수출에 크게 의존해 온 미국 이외의 국가들도 달러화 기축통화체제로부터 향유하는 이익을 쉽게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경제에 대한 불안감에도 불구하고 여타 통화가 조만간 달러화를 대체할 정도로 영향력을 확대하기는 어렵다. 다만, 위안화는 최근 무역결제 통화 사용 등으로 국제화가 크게 진전되고 있는데, 이는 장기적으로 아시아 지역통화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기반이 될 수 있다.

달러화 가치는 양적완화정책에 따른 공급확대, 미국경제의 위상 약화 등으로 2002년 이후의 약세기조를 이어가겠지만 급락은 억제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달러화 우위 속에 기축통화의 다극화가 진전될 것이다. 다만, 달러화는 아직 안전자산으로서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어 이번 유로존 위기에서 보는 것처럼 세계경제에 위기감이 높아질 때 통화가치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세계경제가 당분간은 위기 국면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달러화 가치에 이에 영향을 받으며 움직일 것이다.

한편 금융위기로 인한 부실과 규제강화 등으로 선진국 금융기관의 체력은 약화되는 반면, 중국 등 신흥국 금융기관은 경제의 지속성장을 바탕으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16] 선진국은 금융시스템의 인프라를 기반으로 금융부문에서의 경쟁력 우위를 유지하겠지만, 신흥국과의 격차는 축소될 전망이다.

4. 산업 패러다임 변화

금융위기는 시장, 정부, 산업의 3대 축을 중심으로 산업 패러다임 변화를 가속화하는 촉매로 작용하고 있다. 신흥시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고 주요국 정부는 신산업 육성 등 자국의 미래를 위한 산업정책을 강화하고 있으며, 기업 및 산업의 글로벌 경쟁구도도 변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산업 패러다임 신흥국 중산층의 중간시장이 부상하는 'Middle의 시대', 자국 경제, 산업,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직접적인 무역보호주의 뿐 아니라 기술, 환경, 자원 등 다양한 형태의 보호주의가 등장하는 '新보호주의 시대', 산업과 기술의 영역이 사라지면서 다른 업종간 연합으로 신상품, 신산업이 등장하고 국경을 초월한 협력이 요구되는 '대융합의 시대'로 이행할 것이다.

5. 글로벌 거버넌스의 변화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거버넌스의 변화가 가시화되고 있다. 지금까지 미국 등 선진국이 주요 국제기구를 통해 자국의 이해를 관철해 왔다. 하지만, 지금은 중국 등 신흥경제권이 빠른 성장을 지속하면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데 비해 미국 등 서방 선진국의 경제적·정치적 위상은 약화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군사대국이지만 경제가 취약했던 소련과 경제적 거인이었지만 군사 외교문제에서 방관자였던 일본과 달리 군사적·경제적으로 독립적인 중국의 부상은 새로운 글

로벌 거버넌스의 모색을 불가피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 간 다양한 경제적·정치적 이해관계들은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이므로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관철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며, 이에 따라 다자주의와 정책공조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이다. 다만 중국은 현재 기존의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국제질서의 보완에 협력하고 있기 때문에 다극체제 하에서도 미국의 주도권은 상당 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Ⅳ. 시사점

1. 버팀목이 없는 세계경제

유로존 위기로 유럽이 금융위기 직후의 침체에 이어 재침체에 진입하고 일본은 대지진의 후유증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회복으로 세계경제 버팀목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었던 미국도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고, 중국도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지 못하고 성장률 급락 위험이 커지고 있다. 이처럼 버팀목이 없는 세계경제는 성장세 둔화가 불가피하다. 유럽 실물경제 침체가 대유럽 수출 감소를 초래하고 유럽 은행의 자산감축은 신용경색을 야기할 것이기 때문이다.

최악의 경우 2008년에 버금가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세계경제가 이에 대응할 수단이 부족하다는 것이 문제이다. 2008년 위기 당시에는 G20 정상회의를 출범하는 등 국제공조를 강화하여 위기를 극복했다. 지금은 유로존 내에서의 갈등이나 선진국의 양적완화정책에 대한 신흥국의 반발에서 보듯이 공조보다는 자국의 이해를 앞세우고 있는 형편이다. 또한 개별 국가 차원에서도 정책수단이 마땅치 않다. 재정이 크게 악화된 선진국은 경기부양정책을 사용하기 어려워 추가 양적완화 등 통화정책이 거의 유일한 대안으로 남아 있는데, 신흥국은 자국통화 평가절상 우려로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11년 3.7%의 성장을 보였던 세계경제는 2012년 3% 전후로 성장률이 낮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한국경제도 수출둔화가 불가피하여 성장률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로 지목되는 가계부채 문제로 인해 소비여력이 제약받고 있고 세계경제 부진으로 투자도 활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외부충격이 국내경제로 전이되는 것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정책대응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가계부채 등 한국경제를 위협하는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다.

2. 세계 경제질서의 변화 방향과 대응

위기 이후 세계경제는 헤게모니와 정부역할, 국제협력 양상의 변화와 함께 보다 분산되고 갈등이 증가할 것이다. 통상의 지역주의가 강화되고, 금융은 선진국과 신흥국의 격차가 축소되는 등 미국의 헤게모니가 약화되어 힘의 분포는 일극구조에서 다극구조로 이행하면서 리더십이 분산이 불가피하다. G20 정상회

의 체제의 출범과 G2체제의 부상 등은 세계경제의 헤게모니가 선진국에서 신흥국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다.

리더십의 분산으로 국가 간 관계는 공동의 이익을 위한 협력보다 자국 이익을 앞세운 갈등이 증가할 것이다. 선진국과 신흥국의 세력격차 축소 등으로 패권국가의 압도적 우위가 사라짐에 따라 개별국가 간의 갈등이 표면화될 가능성이 높고, 국내 경제를 중시하는 정부의 역할이 확대되는 것도 국가간 갈등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세계 경제질서의 변화는 위협이 되기도 하지만, 새로운 '기회의 창'을 형성하기도 한다. 따라서 우리는 선진국과 신흥국을 잇는 가교국가(Bridge Country)를 지향하는 한편, 동아시아 국가 간 경제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동아시아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이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을 확대하는 등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또 경제지형의 변화를 반영해 현재의 글로벌생산네트워크(GPN)를 재검토하고 신흥국의 성장을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는 한편, 금융시스템의 선진화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선진국의 일원으로서 국제기구에서 발언권을 강화하고 다양한 국제적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지역 차원의 글로벌 거버넌스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외교

註

1) Bureau of Economic Analysis.
2) IMF, Coordinated Portfolio Investment Survey (CPIS).
3) BIS, Consolidated banking statistics.
4) OMB (2012). Fiscal Year 2013 Budget of the U.S. Government.
5) CBO (2012.5.). Economic Effects of Reducing the Fiscal Restraint That Is Scheduled to Occur in 2013.
6) numbeo.com
7) 2008년 말 중국정부가 발표한 "4조 위안 경기부양 정책" 중 중앙정부 지출은 1.2조 위안이며, 나머지 2.8조 위안의 대부분은 지방정부 지출로 구성
8) 2010년 말 은행감독위원회는 지방정부 부채를 10.7조 위안으로 발표
9) S&P: China Bank Loss Deferral a Step Back (2012.1.11). The Wall Street Journal.
10) 이 장은 '박현수 외 (2010). 위기 이후 세계 경제질서의 변화와 대응. Issue Paper, 삼성경제연구소'를 주로 참고
11) 조찬수 (2008). 『국제경제질서의 사회적 기원』. 경기: 나남; Siebert, H. (2008). The Concept of a World Economic Order. Kiel Institute for the World Economy.
12) 중국의 경제규모가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가 되는 시점을 Goldman Sachs는 2041년, Pricewaterhouse Coopers는 2025년, Carnegie는 2032년 등으로 추정
13) 대공황 시기에 금본위제를 빨리 포기하여 자국 통화의 평가절하 폭이 컸던 국가의 수출 증가와 투자유인 강화 효과가 컸으며(Eichengreen, B. and Sachs, J. (1985). Exchange Rate and Economic Recovery in the 1930's. The Journal of Economic History, 45(4). 925-946.) 은행위기 발생확률도 낮았다는 연구결과(Grossman, R.S. (1994). The Shoe That Didn't Drop: Explaining Banking Stability during the Great Depression. The Journal of Economic History, 54(3). 654-682.)가 있다.
14) 주요국들이 교역부문을 통해 경기부진으로부터의 탈출을 시도하면서 '은밀한 보호무역주의(murky protectionism)'가 빠르게 확산되어 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78건의 '은밀한' 조치가 시행 또는 입안되었고, G20 국가 중 17개국에서 47건의 '은밀한' 조치가 취해졌다. (Baldwin R. & Evenett S. (2009). The Collapse of global trade, murky protectionism, and the crisis: Recommendations for the G20. CEPR.)
15) Eichengreen, B., and Flandreau, M. (2008). The Rise and Fall of the Dollar, or When did the Dollar Replace Sterling as the Leading International Currency? NBER Working Paper No. 14154
16) 선진국에 비해 높은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는 신흥시장에서 금융사업 기회가 보다 풍부하여 글로벌 은행부문의 수익에서 아시아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22.3%에서 2014년에는 26.6%로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Rodeia, P. (2010). Asian Financial Sector - The Changing Landscape. Conference on Asian Banking and Finance. FRB of San Francisco.)

미얀마의 정치적 변화와 동아시아 국제관계에 대한 함의

이 재 현*

Ⅰ. 서 론

2011년 초부터 갑작스럽게 시작된 미얀마의 정치적 변화가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고 있다. 미얀마는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철저하게 배제되어 왔다. 1960년대 집권한 군부통치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면서 많은 인권 문제와 정치적 문제를 낳아왔다. 특히 1990년 민주화 운동에 이어 민주적으로 치러진 선거결과를 무효화 하면서 시작된 제2차 군부통치 이후 국제사회는 다양한 방법으로 미얀마에 대한 제재를 해왔고, 미얀마는 늘 국제사회의 비난의 대상이 되어왔다.

그러나 2011년 초 형식적으로나마 민간인에 의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현 떼인 세인(Thein Sein) 대통령이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극적인 변화가 시작되었다. 2010년 말 아웅산 수지(Aung San Suu Kyi) 여사가 가택연금에서 풀려난 것을 시작으로 양심수 및 정치범 석방, 집회와 언론의 자유, 민주화 세력과의 관계 개선은 물론 소수민족 무장투쟁 세력과의 관계 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런 미얀마의 변화에 따라서 국제사회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특히 풍부한 노동력과 자원을 보유한 미얀마에서 경제적 기회를 선점하기 위한 강대국들과 주변국들의 움직임이 빨라지면서 경쟁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오랫동안 경제제재를 시행해왔던 미국이 먼저 움직이면서 유럽연합, 일본, 호주, 캐나다 등이 적극적으로 미얀마에 접근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미국은 중국과의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경쟁이란 측면에서 미얀마의 지정학적, 지경학적 중요성과 잠재력 때문에 대미얀마 접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미얀마 내부로부터 시작된 국내 정치의 변화, 그리고 이를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대미얀마 접근을 시도하는 강대국

* 국립외교원 객원교수

을 볼 때 한국의 입장에서도 다양한 차원의 국가이익을 고려하여 우리의 미얀마에 대한 입장 정리, 관심 환기 및 이해 제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미얀마는 아세안의 일원이며 최근 한국의 대아세안 정책이 확대일로에 있는 상황에서 미얀마의 정치적 자유화는 우리의 대아세안 정책에 대해서 모종의 함의를 가진다.

또한 미얀마가 지금 당면한 과제가 민주화 혹은 정치적 자유화의 지속 추진과 함께 경제적 안정 및 성장이라는 점을 볼 때 한국의 과거 경험이 미얀마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이런 역할이 한국에게 요구될 것이다. 아울러 미얀마의 정치적 자유화와 경제적 안정 및 성장이 계획된 대로 추진된다면 한국 기업의 진출 등 경제적 차원에서 한국의 이해관계 역시 고민해야 할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미얀마의 정치적 변화가 미얀마 자체의 변화뿐만 아니라 지역의 국제관계, 그리고 한국의 이익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는 전제하에 향후 미얀마의 정치개혁의 방향성, 강대국 경쟁 속에서 미얀마의 변화가 가지는 함의 등에 대해서 분석 한 후 한국의 바람직한 정책 대안을 제시해 볼 것이다.

Ⅱ. 미얀마의 정치적 자유화의 동학

1. 미얀마 군부 통치

1948년 영국의 식민통치로부터 독립한 미얀마(당시 국명 버마)는 독립 초기 의회민주주의를 채택했으나 공산주의 문제, 소수민족의 문제 등과 이에 대한 대응을 놓고 민족주의 엘리트 간 분열이 노정되었다. 이런 정치적 혼란을 틈타 1962년 집권한 네윈(Ne Win) 장군은 미얀마 사회주의 계획당(BSPP: Burma Socialist Programme Party)을 통해 통치하며 버마식 사회주의를 천명했다.

그러나 20년이 넘는 군사통치 기간 동안 경제적 피폐 등으로 인해 버마식 사회주의는 한계를 맞았고, 결국 1988년 민주화 운동이 발생했다. 1988년 버마 군부는 국가법질서회복평의회(SLORC: State Law and Order Restoration Council) 체제로 통치 기구를 개편하고 아웅산 수지 여사가 이끄는 민족민주동맹(NLD: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 등의 요구를 수용, 1990년에 총선을 치렀다.

그러나 총선결과는 군부의 기대와 다르게 NLD의 압승으로 끝났고 이에 군부는 총사령관 소마웅(Saw Maung)이 나서 선거 결과와 헌법을 무효화 하고 제2차 군부통치를 시작했다. 신군부는 이미지 쇄신을 위해 1989년 국호를 버마에서 미얀마로 바꾸고 1997년에는 SLORC를 국가평화발전평의회(SPDC: State Peace and Development Council) 체제로 개편하여 통치를 유지해왔다. 현 군부의 실권자로 알려진 딴쉐(Than Shwe) 장군은 1992년 정치권력의 핵심인 군사평의회를 장악한 이후 2011년 떼인 세인 대통령의 민간정부가 출범할 때 까지 권력을 행사해왔다.[1)]

1960년대 이후 지난 50여 년간의 군부통치는 민주주의의 후퇴, 경제적 낙후,

인권문제와 다양한 사회문제로 점철되어 왔다. 2차 대전 후 동남아 국가 중 발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국가로 평가되었던 미얀마는 군부통치 이후 일인당 국민소득 419달러의 최빈국으로 전락했다. 군부 통치하에서 광범위한 야당 및 민주화 인사에 대한 탄압이 이어졌다. 최근까지 확인된 통계만으로도 약 2,000여 명의 정치범 및 양심수가 투옥중이며 다수가 형기를 마친 후에도 석방되지 않고 옥중사 했다는 보고도 있다.

경제상황의 악화는 전반적 사회 문제로 이어져 보건 지출은 GDP의 0.2%(국방예산은 GDP의 45%)에 불과하고, 5세 이하 영아 사망률도 1천 명당 109명(북한의 두 배 수준)에 달하는 상황이다. 또한 소수민족에 대한 광범위한 탄압도 이어져 현재 소수민족 난민이 버마 내에만 약 300만 명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제사회는 1990년 미얀마 군부가 선거결과를 무효화한 이후 본격적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다. UN 총회,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등은 미얀마의 군부통치와 강제노동을 시정하라는 결의안과 성명을 꾸준히 채택해왔고, UN 인권이사회(UNHRC: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와 UN 난민고등판무관실(UNHCR: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역시 인권문제, 난민문제의 해결을 지속 촉구해왔다.

유럽연합은 1996년부터 유럽연합 국가와 미얀마의 양자관계를 금지하고, 인도적 사업을 제외한 경제적 관계를 금지해왔다. 미국 역시 1988년 민주화 운동에 대한 진압 이후 의회차원의 결의안, 행정부 차원의 경제제재를 실시해왔으며, 2003년부터는 의회입법을 통해 대미얀마 경제 제재를 실시했다.[2)]

2. 최근 정치적 자유화의 진전

미얀마 군부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소위 민주화 로드맵에 따라 2011년 초 형식적 민간정부를 출범시켰다.[3)] 그러나 민주화 로드맵도, 새로 출범한 민간 정부도 애초 국제사회의 신뢰와 지지를 얻지 못했다. 새로 대통령에 취임한 떼인 세인 대통령은 군출신 인사로 군사정부에서 총리를 역임한 인물이었다. 또한 새로 구성된 의회 새 헌법에 따라 전체 의석의 1/4을 군에 자동적으로 배정하는 등 미얀마 군부가 주도한 초기 개혁은 국제사회로부터 전혀 지지를 얻지 못했다. 한편 2010년 총선과 2011년 신 정부 출범 시 과거 군사정부를 주도했던 딴쉐(Than Shwe)를 비롯해서 고위 군 인사들이 대거 은퇴하거나 군복을 벗고 군사정부의 정당인 USDP(Union Solidarity Development Party)에 가담했고 그 대신 군부는 50대의 보다 젊은 장교들로 채워지게 되었다.

미얀마 정부의 민주화 로드맵에 따른 개혁 조치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딴쉐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곧 일단의 개혁조치들이 줄을 이었다. 2010년 11월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미얀마 군부는 아웅산 수지 여사의 가택연금을 해제했다. 또 대통령 취임과 더불어 대규모 사면을 단행했다. 이후 2011년 8월 수지 여사와 대통령이 면담

을 한 후 TV에 같이 등장했고, 수지 여사는 이 면담 이후 지속적으로 현 정부의 개혁조치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다. 또한 같은 해 10월에는 약 200여 명의 정치범들에 대한 석방이 이루어졌고, 2012년 1월에도 8888 민주화운동(1988년 8월8일에 시작됨)의 주역인 민꼬나잉(Min Ko Naing) 등 320명의 정치범을 포함한 약 650명의 대규모 사면이 이뤄졌다.[4)]

뿐만 아니라 소수민족 무장투쟁 세력과의 관계 개선도 추진되었는데, 미얀마 정부는 샨(Shan)족, 카렌(Karen)족 등과 정전협정을 맺었고, 카친(Kachin)족과도 정전협정을 추진하고 있다. 인권문제에도 개선이 있었는데, 2011년 9월에는 양곤 시내에서 거리 시위가 허용되었고, 국가 인권위원회(Myanmar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가 설치되었으며, 10월에는 정부 측에서 언론의 자유를 보다 폭넓게 허용하겠다는 발표가 있었다.

이런 정부 주도의 개혁조치를 바라보는 야당과 민주화 세력은 정부의 전향적 태도에 대해서 조심스럽지만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NLD의 경우 정부가 아웅산 수지 여사와 면담을 하는 등 NLD를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2010년 총선을 보이콧했던 것과 달리 2012년 4월1일 치러졌던 보궐선거에 참여하여 45석 중 43석을 석권하면서 제도권에 진입하였다.[5)]

정부의 개혁 조치에 대해서 NLD가 전향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정부가 개혁적 태도를 보이는 상황을 잘 활용해야 할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화 운동의 상징인 아웅산 수지 여사가 이제 68세가 되어 고령의 나이에 접어들면서 이번에 찾아온 변화의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면 한동안 정치적 자유화의 기회를 찾기 힘들 것이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모든 민주화 운동 세력이 NLD와 같은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8888운동 세대 특히 무장투쟁을 하는 세력들 사이에서는 현 정부에 대한 불신, 그리고 현 정부와 타협하는 자세를 보이는 아웅산 수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있다.

군부 주도의 미얀마 내 정치 개혁이 추진된데에는 군부 쪽의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군부 통치가 오래 지속됨으로 인해서 군부의 장기 통치에 따른 피로감과 최근 중동의 봄과 같은 독재자가 비참한 최후를 맞는 일련의 변화를 보면서 불안감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어느 정도 군부의 기득권이 보장된다는 전제하에 제한적이고 점진적 자유화를 군부 내에서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군부 내의 인적구성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데, 현 대통령인 떼인 세인 역시 군부 출신이기는 하지만, 군사 정부에서 총리를 역임하면서 국제무대를 경험하고 미얀마에 대한 외부의 시각을 정확히 파악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떼인 세인은 이전 군부 고위급, 특히 딴쉐 등 강경파와는 다르게 정규 군사학교를 졸업한 직업군인으로 이전 강경 군부와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 아울러 2010년 총선, 2011년 신정부 출범과 함께 노령의 군부 강경파들이 은퇴하고 50대의 정규 사관학교 교육을 받은 고위 장교들이 군을 장악한 것도 변화의 요인이라 할 수 있다.

Ⅲ. 미얀마의 변화를 둘러싼 동아시아 국제관계

1. 미얀마의 전략적 위치

미얀마 내부의 정치적 변화에 따라서 미국, 중국, 일본, EU, 인도 등 주변 강대국들의 움직임이 빨라지는 것은 미얀마가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지경학적, 전략적 중요성이라는 면이 크게 작용한다. 지정학적으로 미얀마는 서남아와 동남아를 잇는 요충지인 동시에, 동남아 대륙부에서는 보기 드물게 심해항구(deep water port)를 개발할 수 있는 지리적 요건을 갖추고 있다. 이 심해항구는 인도양에서 남중국해로 통하는 해상교통로가 말라카 해협이라는 좁은 지역을 지나고, 영토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남중국해 문제를 안고 있는 반면, 미얀마에 심해항구를 개발하게 되면 이 말라카 해협과 남중국해를 거치지 않고 동남아 대륙부, 그리고 나아가 중국과 인도양이 직접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또한 동아시아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이란 측면을 볼 때 미얀마는 기존 미얀마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국의 영향력 확장이라는 움직임과 이런 중국의 확장을 적극 저지하려는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전략이 충돌하는 지점이 될 수 있다. 또한 중국과 인도라는 지역의 강대국이 전략적으로 충돌하는 지점 역시 미얀마가 될 수 있다.

경제적인 차원에서도 미얀마는 앞서 언급한 지경-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지리적 위치를 가지고 있다는 점 외에도 미얀마의 자체 자원, 경제적 잠재력이란 측면에서 외부 국가들에게 큰 매력이 있다. 목재, 옥, 루비 등 천연자원과 천연가스, 구리, 주석, 금, 석탄, 철광석, 니켈 등의 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어 개발 잠재력이 크다.[6] 또한 오랫동안 서구 국가들의 경제제재로 인해 제조업이 아직 크게 발달하지는 않았으나 낮은 임금의 풍부한 노동력으로 인해 정치적 자유화가 안정적으로 진행된다면 해외투자가 관심을 갖기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미얀마 정부도 이런 입지에 대한 인식 하에 미얀마의 지정학적 장점을 살리기 위해 심해항구 개발, 다웨이(Dawei) 지역에 공단과 항구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2. 중국의 대미얀마 전략

중국은 서방국가들이 본격적으로 대미얀마 경제제재를 시작한 1990년대 이후로 미얀마와의 관계를 본격적으로 확장해왔고, 지금 현재 미얀마의 경제를 비롯해서 군부정권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중국의 경제성장에 주변부의 안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전략아래 중국은 1990년대 이후로 미얀마의 안정을 위해서 국경무역을 통한 경제관계, 그리고 고위인사교류와 군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미얀마에 관여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미얀마의 제3의 수출대상국이며, 제1의 수입 대상국이고, 대중국 무역은 미얀마 전체 무역액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국경 무역은 미얀마 쪽에서는 뮤세(Muse)

105마일 국경 무역지대, 중국 쪽에서는 운남성의 루이리(瑞麗市)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더욱이 중국은 200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전반적인 대동남아 지경학적 관계의 심화라는 전략아래 미얀마에 대규모의 인프라 건설 투자를 단행하고 있다. 중국은 2010년 한해 미얀마에 약 80억 달러의 투자를 했으며, 특히 발전소 건설에 큰돈을 투자하고 있다. 중국은 미얀마에서 약 60여 개의 수력발전소를 이미 건설했거나 건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생산되는 전력은 거의 중국으로 보내지고 있다.

또한 미얀마의 아라칸 주 해안의 쉐(Shwe) 가스전으로부터 운남성까지 약 1,000km에 이르는 가스, 석유 파이프라인을 건설하여 이 가스전으로부터 생산되는 가스와, 중동으로부터 수입하는 원유를 중국으로 수송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또한 도로와 철도 건설에도 큰돈을 쓰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미얀마의 짜윳뿌(Kyaikphyu)에 중국 자본으로 심해항구를 건설하고 있으며, 시트웨(Sittwe), 짜윳뿌를 연결하여 쿤밍에 이르는 약 900km의 도로도 건설하고 있다.[7)]

3. 서방국가들의 최근 대미얀마 관여 정책

이런 중국의 대미얀마 접근과 대조적으로 서방국가들은 경제제재의 명분 속에서 미얀마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못해왔다. 경제적인 이유로, 그리고 중국 견제라는 정치적이고 전략적인 이유로 대미얀마 경제제재 해제 문제가 간헐적으로 논의되기는 했지만, 미국은 2011년 5월에도 대미얀마 경제제재를 갱신하는 등 입장의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2011년 중반 미얀마의 내부적 변화가 감지되면서 미국을 필두로 해서 서방국가들의 대미얀마 정책이 급변하기 시작했다.

가장 선두에 선 것은 미국이다. 미국은 2011년 9월 데렉 미철(Derek Mitchell)을 특사로 미얀마에 파견한 바 있으며, 오바마 대통령이 같은 해 11월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East Asia Summit)에 참석한 직후 힐러리 클린턴 장관이 미국 국무장관으로는 56년 만에 처음으로 미얀마를 방문하고 떼인 세인 대통령, 수지 여사 등과 면담을 하기도 했다. 이어 2012년 초 대규모의 정치범 석방이 있은 후 미국은 미얀마와의 외교관계를 대사급으로 다시 격상할 것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편 경제제재 해제 권한을 가진 의회도 민주당의 크로울리(Joe Crowley)의원, 대미얀마 강경파인 공화당의 미첼 맥코넬(Mitchell McConnell) 의원 등이 잇달아 미얀마를 방문했다.[8)]

여기에 추가적으로 유럽 연합의 국가들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영국은 국제개발장관, 외무장관 그리고 총리 등이 잇달아 미얀마를 방문했고, 프랑스, 일본 역시 외무장관이 미얀마를 방문했다. 이어 유럽연합은 미얀마에 원조사무소를 개설할 것을 결정하고 지금까지의 경제제재를 근본적으로 재검토(substantial review)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12년 4월1일에 치러진 미얀마의 보궐선거는 서방 국가들의 대미얀마 경제제재 완

화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는데, 많은 국가들에서 대미얀마 경제제재를 중단하거나 일부 완화하는 조치들이 뒤를 이었다.[9)]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미얀마의 변화 움직임에 대해서 이렇게 빠른 반응을 보인 것은 중국에 대한 압박과 미얀마 진출을 통한 경제적 이익의 확보라는 두 가지 측면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의 경우 경제적 이익도 이익이지만, 동아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국과의 전략경쟁에서 미얀마가 가진 지정학적 위치를 감안할 때 미얀마에 대한 관여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미국에 의해 2011년 취해졌던 일련의 대중국 압박 조치 즉,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간섭, 호주에 대한 미국 해병의 순환배치, 베트남과의 군사협력 강화 등과 더불어 중국을 압박하는 일련의 정책에서 미얀마는 마지막 남은 퍼즐로서 큰 의미를 갖는다.

4. 미얀마와 아세안 관계

한편 미얀마와 가장 가까이 있는 중요한 행위자로서 아세안에게 미얀마는 오랫동안 큰 부담으로 작용해온 것이 사실이다. 아세안은 1997년 미얀마를 회원국으로 받아들이면서 미국과 유럽으로부터 큰 반대와 비난에 시달린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얀마를 아세안 회원국으로 받아들인 데에는 미얀마가 가진 경제적 기회를 선점하려는 전략적 계산이 있었다고 보인다. 이어 2006년에는 미얀마가 아세안 의장국을 할 차례가 다가오면서 다시 한 번 미얀마의 군부통치와 인권문제로 인해 아세안은 서구 국가들의 비난에 시달려야 했고 이 문제에 대해서 미얀마가 자발적으로 아세안 의장국 수임을 건너뛰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다.[10)]

2011년부터 시작된 미얀마의 내적 정치 개혁은 아세안 입장에서 이전에 가졌던 미얀마의 권위주의, 군부독재, 그리고 인권문제라는 부담을 상당히 떨쳐 버린 상태에서 보다 자유롭게 미얀마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다. 서구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아세안도 미얀마의 변화의 움직임을 포착한 이후 매우 빨리 움직였다. 아세안의원연맹(ASEAN Inter-Parliamentary Assembly)은 특별 옵서버로 참여하던 미얀마 의회(Pytaungsu Hluttaw)를 정회원으로 격상시켰다.

또한 2011년 아세안 의장국을 맡았던 인도네시아는 외무장관을 미얀마에 급파하여 2014년 의장국 수임 여부에 대한 아웅산 수지 여사의 의견을 듣는 등 신속히 움직였고, 이어 2011년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미얀마의 2014년 아세안 의장국 수임에 관한 대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런 아세안의 빠른 움직임을 볼 때 아세안 역시 미얀마의 개혁으로부터 나오는 경제적 기회를 선점하는 동시에 미국과 중국이 미얀마를 놓고 벌이는 경쟁으로부터 이익을 얻기 위해서 행보를 빠르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Ⅳ. 미얀마 정치적 자유화의 향후 전망

1. 미얀마의 정치적 자유화와 민주화 전망

현재까지 미얀마가 보여준 정치적 자유화의 추이는 매우 고무적이며, 현 정부의 의지와 민주화 세력의 호응을 볼 때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현재의 자유화 추세가 필연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정치·경제적 과제들이 있는 바, 그 해결 여부가 장기적 자유화 추세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권위주의 정치의 자유화는 기득권 세력과 민주화 세력의 일정한 타협 하에 일어나는 경우 보다 안정적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 아래로 부터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세력에 의한 일방적인 자유화는 극단적 변화나 대결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차원에서 현재 미얀마의 정치개혁은 기득권 세력을 대표하는 미얀마 정부와 민주화 세력 간의 일정한 타협 속에 진행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예측을 낳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득권 세력 중에서 강경파에 속하는 군부가 여전히 물리적 강제력을 독점하고 있으며 이들을 제어할 세력이 미약하다는 측면에서 군부에 의한 변화에 대한 저항 역시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군부 입장에서는 군부의 기득권에 침해가 가는 급진적 변화가 올 경우 동요할 가능성이 있다. 일차적으로 2012년 4월에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NLD가 참여했고 많은 의석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군부의 큰 움직임은 없었다. 보다 중요한 전환점은 2015년으로 예상되는 차기 총선인데, 이 총선에서 야당들의 참여가 보장되고 야당들이 많은 의석을 얻게 된다면 국제사회로부터 미얀마의 정치개혁에 대한 신뢰는 높아질 것으로 보이나 그에 따른 군부의 동요 가능성도 있는 바, 총선 전후를 기점으로 한 군부의 움직임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정치적인 부분과 함께 중요한 것은 미얀마의 경제개혁 여부이다. 현재 미얀마는 공식 환율과 비공식 환율이 20배 이상 차이가 나는 환율문제, 시장제도 정비, 법제도 정비 과제 등을 안고 있다. 버마식 사회주의와 군부통치 하에서 붕괴된 경제제도를 재건하는 과제가 있는 것이다. 또한 2009년 약 3억 불에 달하던 해외투자가 2010~2011년 기간에는 갑작스럽게 200억 불로 증가하는 등 해외투자가 급속도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투자를 질서있게 유치하고 해외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법제도의 정비가 시급하다.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치적 자유화를 넘어서 미얀마의 민주화를 예측해 보면 보다 구조적인 해결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선적으로 정치적 자유화를 넘어서 민주화를 지향하는 단계로 들어선다면 국민들이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제도와 가치에 익숙하지 못한데서 나오는 혼란과 그에 따른 반동을 극복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

또한 정치적 자유화와 해외투자의 유입에 따른 경제성장이 나타난다면 이에 필연적으로 수반될 수 있는 빈부격차 문제, 인플레이션 문제, 해외투자에 너무

의존한 성장이 가져오는 문제들에 대한 대비도 중요한 과제이다. 장기적으로 미얀마의 군부통치를 불러왔던 원인인 소수민족과의 관계 설정도 중요한 문제이다. 지금 당장은 소수민족과 정전협정 혹은 평화협정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민주화 국면으로 접어들었을 때 소수민족의 자치 혹은 권리보장을 새로운 민주헌법에 어떻게 반영하는가라는 과제가 있을 수 있다. 또한 과거 군부통치하에서 일어났던 인권 침해 문제 등에 대한 청산 역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종합적으로 볼 때, 당분간 미얀마의 정치적 자유화 추세가 지속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비교적 낙관적인 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자유화를 넘어선 민주화의 성공 여부에 대해서는 보다 구조적이고 힘든 개혁과제들이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민주화의 단계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그동안 미얀마의 정치는 완전한 민주주의도 아니고 권위주의도 아닌 동남아식의 모호한 체제 형태를 띠게 될 가능성이 높다.

2. 강대국과 아세안의 미얀마 전략 전망

앞서 언급한 중국, 미국, 유럽, 일본 등의 대미얀마 관여 정책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그에 따라 미얀마를 놓고 강대국이 벌이는 경쟁은 더욱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이런 강대국 경쟁의 속성과 수위를 결정할 수 있는 변수는 외부에 있다기 보다는 미얀마의 내부로부터, 즉 미얀마의 정치적 자유화가 지속될 것인가에 의해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표면적으로 미국 등의 대미얀마 관여에 대해서 큰 반응을 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미국의 대미얀마 관여가 더욱 확대된다면 전략적으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이 남중국해를 통하지 않고 인도양으로 우회하여 자원을 확보하고 대양해군의 진출로를 만드는 전략적 계산은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반면 기존에 중국이 미얀마에 개척한 경제적 이해관계는 미국의 진출로 인해서 크게 희생되지는 않을 것이다.

반대로 미국, 유럽, 일본, 그리고 인도 등은 미얀마의 정치적 자유화가 지속되는 한 정치적·경제적 관여의 수위를 지속적으로 높일 것으로 보인다. 아직 경제적 제재가 해제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 국가들의 대미얀마 관여는 상징적인 정부차원의 조치와 함께 주로 민간 차원의 인도적 지원 확대, 그리고 더 이상의 경제제재를 하지 않는 정도에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얀마의 정치적 자유화가 2012년 4월 보궐선거를 기점으로 지속되고 확대된다면 미얀마에서 원하는 경제제재의 시점 역시 곧 다가올 것이고 경제제재가 해제된다면 서방 국가들의 대미얀마 진출은 급속히 이루어질 것이다. 미얀마를 놓고 벌어지는 이런 강대국 경쟁에 대해서 미얀마 정부도 파악하고 있으며, 지정학적-지경학적으로 미얀마의 가치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충분히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아세안 역시 미얀마의 정치적 변화라는 기회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아세안은 미얀마에 접근하는 서구 국가들과 미얀마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면서 아세안의 대강대국 협상력을 높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얀마의 편에서 대강대국 창구 역할을 통해 미얀마에 대한 선제적 진출의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아세안은 미얀마의 2014년 아세안 의장국 역할에 대한 조언, 2015년 총선에서의 지원 등을 통해 존재감을 높이려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는 개별적으로 구체적 행동을 시작했는데, 인도네시아는 미얀마와 양자협력합동위원회를 재개했으며, 싱가포르도 2012년 1월 떼인 세인 대통령의 싱가포르 방문 시 주로 금융과 법률 분야 개혁에 관한 지원을 약속했다.[11] 이런 양자적 지원과 함께 아세안은 미얀마를 놓고 벌어지는 강대국 경쟁에 개입하여 중재자 역할을 하는 동시에 아세안이 미얀마에 대해서 가지는 영향력을 극대화하여 대강대국 협상 카드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Ⅴ. 결론: 미얀마의 정치적 자유화와 한국의 전략

권위주의 국가 혹은 군사독재에서 민주주의로의 이행은 우선적으로 정치적 자유화를 거치며 이 단계의 완성으로부터 민주화 단계로 나간다. 이런 이행단계에서 미얀마가 2011년 초부터 겪고 있는 변화는 위로부터의 위기의식에서 출발한 변화의 필요성과 국내 민주화 세력 간의 일정한 타협에 의한 정치적 자유화 단계로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정치적 자유화 단계가 지속되는 것에 대한 전망은 긍정적인 편이며, 특히 서방 국가의 관여와 경제 제재의 완화 내지는 해제 등 지원이 지속된다면 이런 정치적 자유화의 진전은 상당히 지속될 것이다.

한국의 입장에서 이런 미얀마의 변화는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한편으로는 미얀마의 긍정적 변화의 지속을 위해서 한국이 해야 하는 역할이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미얀마의 변화가 한반도 문제에 주는 교훈도 있을 수 있다. 우선 한국은 미얀마의 지속적 자유화와 변화를 위해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성장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낸 한국이 가진 경험은 미얀마와 같은 국가들의 향후 발전 경로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며, 이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이 지역 중견국으로서 한국의 바람직한 자세라 할 것이다. 다만 아직은 미얀마의 정치적 자유화 행보가 유동적인 바, 이런 자유화의 역전이 일어나는지 여부를 잘 판단해 가면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한국이 미얀마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지원을 할 때 많이 부족한 미얀마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한국의 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치적 민주주의에 관한 교육, 공무원 및 엘리트 교육 등이 미얀마가 한국에게 요구하는 지원 사항이기도 하다.

특히 정치적 자유화와 경제 개혁의 과정에서 미얀마는 혼란을 피하고 안정적 개혁을 이루어 내기 위해서 사회 지도층, 엘리트, 그리고 관료 집단의 높은 역

량을 필요로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이 과거의 경험을 동원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오랜 군사독재 기간 중에서 기본적인 보건-의료에 관한 부분이 매우 취약하고 더불어 마약문제, 인신매매, HIV/AIDS 문제 등도 심각한 바, 한국의 대미얀마 지원은 특히 다양한 차원의 인간안보 문제 해결에 관한 지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원을 위해서는 2011년 재개된 미얀마에 대한 유상원조뿐만 아니라 경제 제재의 시점에 맞추어 무상원조를 통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경제협력의 차원에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많은 국가들이 미얀마의 경제적 잠재력에 주목하고 미얀마 진출을 노리고 있다. 한국도 예외일수는 없다. 다만 그동안 한국 기업들이 동남아에 진출하면서 현지 문화와 관습 등에 대한 철저한 사전 조사 없이 진출하여 많은 물의를 일으킨 점을 상기하면서 철저한 사전 준비하에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미얀마에 대한 한국 기업 혹은 정부의 경제적 진출은 이제 막 다시 경제적 도약을 준비하는 미얀마와의 상호 호혜적인 경제 관계라는데 특히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며, 한국의 이익을 너무 강조하는 식의 경제적 진출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1년부터 시작된 한-메콩 외교장관회의 등 메콩지역 국가와의 협력이란 틀을 잘 활용하여 대미얀마 지원과 한국의 메콩지역에 대한 지원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얀마의 정치적 변화가 한반도에 시사하는 점도 있다. 미얀마는 북한과 더불어 가장 폐쇄적인 정치체제로 꼽혀왔었는데, 미얀마의 정치적 자유화와 대외개방을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데 있어 하나의 모범 사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한국이 미얀마의 정치적 변화와 대외적 개방의 단계에서 이를 지원하는 경험을 쌓고 그것이 성공적으로 판명 날 경우 향후 북한의 변화과정에서 한국이 어떤 정책과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중요한 암시를 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미얀마의 변화과정에서 한국의 적극적 지원 및 역할은 향후 북한의 변화과정에 대처하는 우리의 노하우를 축적하는 좋은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외교

註

1) 미얀마의 군부통치의 등장과 변화, 그리고 민주화 운동에까지 이르는 일련의 정치사는 다음 책 3, 4, 5장을 참고할 것. 양길현. 2009.『버마 그리고 미얀마: 네윈과 아웅산 수지』오름.

2) 미국의 대미얀마 경제 제재의 구체적인 내용과 법적 성격에 관해서는 Michael F. Martin. 2011. "U.S. Sanctions on Burma" CRS Report No. R41336을 볼 것.

3) 미얀마 군부가 제시한 민주화 로드맵은 (1) 1996년 이후 중단된 국민회의(National Convention) 소집, (2) 국민회의 소집 후 민주화를 위한 조치, (3) 국민회의의 결정에 따른 헌법 초안 마련, (4) 국민투표를 통한 헌법 제정, (5) 새 헌법에 따른 의회 선거 실시, (6) 의회 소집, (7) 의회에서 선출한 새 대통령에 의한 민주정부 구성이다.

4) Channel News Asia. 2012. "Myanmar Pardons Political Prisoners, ex-PM" Channel News Asia. 13 January. (http://www.channelnewsasia.com/stories/afp_asiapacific/view/1176524/1/.html)

5) 2012년 4월1일 보궐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Steve Finch and William Wan. 2012. "Burmese Government Says It Was Surprised by Scale of Suu Kyi Victory" Washington Post. 3 April.을 볼 것.

6) 천연가스(매장량 23조 입방피트), 구리(2100만톤), 주석(100만톤), 금(1만8천kg), 석탄(2억톤), 철광석(3억톤), 니켈(400만톤) 등이 많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현재 생산되는 양은 극히 적어 개발 가능성이 크다.

7) 중국의 대미얀마 관여와 경제 관계에 대해서는 이선진. 2010. "중국의 대미얀마 전략" JPI 정책포럼 No. 2010-26과 최명해. 2012. "글로벌 자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미얀마" SERI 경제포커스. No. 379를 참고할 것.

8) 클린턴 장관 등 미국 인사들을 미얀마 방문에 대해서는 Kim Ghattas. 2011. "Hillary Clinton in Burma: Turning Point in Relations?" BBC News. 20 November. (http://www.bbc.co.uk/news/world-asia-15968610)와 International Crisis Group. 2011. "Myanmar: Major Reform Underway" Asia Briefing No. 127. p. 6 등을 참고할 것.

9) 대표적으로 일본은 미얀마의 부채를 점진적으로 탕감해줄 것을 약속했으며, 호주는 미얀마에 대한 경제제재를 가장 일찍 잠정 중단했다. 이어 EU 역시 1년 동안 대미얀마 경제제재를 잠정 중단할 것을 결정한 바 있다. 미국 내에서도 의회와 전문가를 중심으로 대미얀마 경제 제재의 해제, 중단 혹은 완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0) 이 논란에 관해서는 이재현. 2009. "정치적 자유와 동아시아공동체: 미얀마 문제를 중심으로" 박사명 외.『동아시아공동체의 동향과 과제: 협력에서 공동체로』이매진을 볼 것.

11) Mustaqim Adamrah. 2011. "RI Helps Myanmar Stay on Course Ahead of ASEAN Community" Jakarta Post. 30 December. (http://www.thejakartapost. com/news/2011/12/29/ri-helps-myanmar-stay-course-ahead-asean-community.html)를 볼 것.

도약하는 한·중남미 협력관계

장 근 호*

I. 서 론

2010년 9월 영국 이코노미스트지는 중남미 대부분 국가들의 독립 200주년을 맞아 특집 기사를 내며 중남미를 'nobody's backyard'라고 지칭했다. "과거 오랜 기간 동안 정치·경제적으로 미국의 '뒷마당'으로 평가되었던 중남미 지역이 독자적 행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바야흐로 진정한 독립을 맞이하고 있다"는 요지의 분석이다.

우리나라에서 중남미는 통상 북미에 속하는 멕시코와 중미, 그리고 남미 대륙과 카리브 지역을 합한 지역을 일컫는다. 반면 중남미 국가들은 문화적, 지리적 개념을 혼합하여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을 사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동질성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는 라틴아메리카, 이베로아메리카 그리고 카리브 등 다양한 명칭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인종, 언어, 문화 등 면에서 국가별로 매우 다른 특성도 갖고 있다.

20세기 냉전시기를 거치면서 미국과 관계가 긴밀해짐에 따라 '미국의 뒷마당'이라는 평가를 받고 1980년대 소위 '잃어버린 10년'이라는 경제침체기를 거치면서 국제사회의 주류에서 사라졌던 중남미가 지난 10년간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아시아에 이은 제2의 신흥 경제권으로 부상하면서 새로운 세계 질서 형성 과정에서 주요 역할자 중 하나로 변신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와 중남미와의 관계에도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특히 2012년에 중남미 33개국 중 15개국과 수교 50주년을 맞이하면서 한·중남미 관계는 기존의 정치 중심에서 통상, 투자뿐만 아니라 문화 등 다양한 부문으로 '협력의 확산기'를 맞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중남미의 최근 공통적 현상인 고성장 기조, 국가주도 개

* 외교통상부 중남미국장

발 패러다임, 역내통합, 역외 주요 블록과의 연대 및 신흥 아시아 지역과의 협력 확대 등 주요 특징을 고찰하고 이러한 새로운 흐름이 한·중남미 협력관계에 어떠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미래 유망 협력분야는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협력을 촉진키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제언으로 마무리하고자 한다.

Ⅱ. 최근 중남미의 주요 동향 및 특징

1. 고성장 기조 유지

중남미는 1980년대 초 외채상환 불능을 경험하며 소위 '잃어버린 10년'을 거치면서 국제 자본시장에서 소외된 지역으로 분류되었으나 1990년 아르헨티나의 Cavallo Plan 이후 각국이 개방경제 중심의 과감한 개혁정책을 추진하여 성장기조를 회복하고 2000년대 들어 중국 등 신흥경제권의 부상으로 곡물 및 에너지·자원 가격이 급등하면서 경제상황이 호전되어 아시아에 이은 제2의 고성장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중남미 지역은 연평균 6.2%로 성장했으며, 1인당 평균 GDP도 2011년 1만 불을 돌파하였다.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중남미 지역은 매년 거의 5% 성장하였고, 4천만에 달하는 빈곤층이 중산층으로 진입하였다. 2009년 중남미 지역의 총 GDP는 2% 감소하였지만, 글로벌 금융위기와 최근 유로존의 위기 상황으로 다소 위축은 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견실한 기조를 유지하여 2010년 평균 6%로 양호한 성장률을 기록했다.

특히 중남미 면적과 인구의 약 1/3을 차지하고 중남미 GDP의 약 43% 비중을 차지하는 브라질은 2011년 GDP 2.48조로 영국을 추월하며 세계 6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하였다. 이러한 중남미 국가들의 양호한 경제 지표는 2000년대 이후 각국이 재정 건전성 개선, 외환보유고 확대, 외채 감소, 중앙은행의 독립성 제고 등 국가경제시스템의 질적 개선에 노력하는 한편, 재정지출과 금리 인하의 균형 등 반경기순환적(counter-cyclical) 정책을 효과적으로 취한 데 있다.

미주개발은행(IDB)의 모레노(Moreno) 총재는 2010년대가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 지역의 10년(The Decade of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이 될 것"이라 선언, 중남미의 성장 잠재력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2. 풍부한 지하 자원을 기반으로 한 경제 성장

중남미 지역은 세계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자원의 보고이다. 리튬(세계 매장량의 65%), 은(49%), 구리(44%), 주석(33%), 몰리브덴(32%), 보크사이트(26%), 니켈(26%), 철(22%), 아연(22%) 등 주요 광물자원을 다량 보유하고 있으며, 주요 에너지자원인 에탄올(33%), 바이오연료(25%), 원유(13%)의 주요 생산 지역이다. 그 뿐 아니라 향후 희소성이 높아지고 있는 환경 관련 자원 역시 풍부하다. 중남

미 지역은 세계 담수자원 33%, 산림자원의 21%를 보유하고 있고 대두 생산 역시 세계 생산량의 48%를 담당하는 등 에너지 광물자원과 식량자원의 주요 생산지이다.

향후 미국, EU와 일본 등 전통적인 경제 강국이 위기상황에서 회복하고 중국, 인도 등 신흥 시장이 지속 확대될 것이며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터키 등 소위 CIVETS국가들도 성장이 상승세에 접어듦에 따라 에너지 · 자원과 원자재를 수요가 지속 증가할 전망으로서 이들 자원을 보유한 중남미의 중장기 경제 전망에 대해 낙관적인 견해가 많다.

3. 국가주도 개발 패러다임 강화

중남미 경제호전은 정치적 변화도 가져오고 있다. 소위 '분홍 물결(pink tide)'의 결과 2000년 쿠바와 베네수엘라 등 2개에 불과했던 좌파 국가 수가 2011년 11개국으로 늘어나면서 중남미의 정치지형을 변화시키고 있다. 콜롬비아와 칠레를 제외한 모든 남미 국가에서 좌파 정당이 집권하였다.

중남미 신좌파 정부의 특징은 심각한 빈부 격차에 문제를 제기하며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적극적으로 국민의 복지 향상과 사회적 참여(social inclusion) 확대를 모색하는데 있다. 이처럼 국가주도 발전을 강조하는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는 국가발전전략이 부재했던 중남미 국가들의 향후 발전에 있어 매우 주목할 만한 변화이다.

또한 이들 신좌파 정부들은 그동안 다국적 기업들이 지배하며 시장기능에 맡겨 왔던 에너지 · 광물 및 기간 산업의 재국유화 내지는 국가의 적극적인 통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베네수엘라는 많은 석유, 전력 분야 기간 산업을 국유화 했다. 아르헨티나는 최근 스페인계 석유회사인 YPF의 재국유화 조치를 단행했으며, 볼리비아도 스페인 전력회사 소유의 송전업체를 국유화했다.

신좌파 정부들은 중앙정부의 강화된 통제력을 바탕으로 새로 확보한 수입을 빈곤층 감소를 위한 다양한 재분배 정책과 국가 인프라 개발 분야에 할당하고 있다. 국유화 정책이 외국인투자 감소를 초래하고 과도한 재정 투자가 재정건전성 문제를 야기하여 베네수엘라와 아르헨티나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높은 인플레를 가져오는 부작용이 있으나 거시적으로 볼 때 중남미 지역에서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부각되고 있다.

4. 역내 통합 심화

중남미 국가들의 안정적인 성장기조는 역내 국가들로 하여금 대내외 정책 추진에 있어 자신감을 갖게 하였으며 새로운 역내 통합의 동력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새로운 통합 노력은 역내 국가간 결속을 강화하는 데서 나아가 미국과 유럽 등의 영향력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노력과도 연결되어 있다.

2000년대 들어 브라질이 주도하는 남미국가들의 통합기구인 '남미국가연합(UNASUR)'과 베네수엘라가 주도하여 설립된 '미주 국민을 위한 볼리바르 동맹

(ALBA)' 그리고 가장 최근인 2011년 12월 '라틴아메리카카리브 국가공동체(CELAC)'가 출범하였다. 경제적으로는 태평양 연안에 위치하여 개방적인 경제·통상정책을 추진하는 멕시코, 콜롬비아, 페루, 칠레가 2012년 6월 출범시킨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이 있다.

이중 CELAC은 미국 및 캐나다가 참여하고 있는 기존의 미주기구(OAS)와 차별화되어 중남미 33개국 모두가 참여하는 다자협의체로 과거 역내 분쟁 해결 및 민주주의 증진에 중점을 둔 리오 그룹(Rio Group)과 중남미 통합개발정상회의(CALC)를 통합하여 중남미 지역의 독자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시도로 주목된다. 이와 더불어 남미지역 국가간 인프라 통합을 추진하는 남미인프라통합구상(IIRSA)도 역내 국가들의 재정투입 능력 확대로 가시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통합노력에도 불구하고 브라질 중심의 UNASUR와 베네수엘라 주도의 ALBA, 그리고 태평양 동맹(Pacific Alliance)이 상이한 지향점을 갖고 분열되어 서로 경쟁하는 양상도 노정하고 있다.

5. 아시아, 아중동 등 역외 주요 블록과 연대 및 경제협력 확대

유엔중남미·카리브경제위원회(ECLAC)는 2011년 세계경제성장률(4.4%) 중 아시아, 중남미 등 신흥 시장의 기여분이 3.18%이고 미국, 유럽 등 선진국 경제의 기여분은 1.22%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또한 스페인 BBVA 은행은 향후 10년간 아시아와 중남미 지역이 세계경제성장의 65.7%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세계 경제 흐름의 변화를 반영하여 중남미 국가들도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 신흥 시장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브라질은 BRICS외에 IBSA(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중남미·아랍 정상회의(ASPA), 포어권공동체 정상회의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태평양 연안 4개국은 태평양 동맹(PA)를 출범시켰다.

이러한 중남미의 역외 협력 확대 노력과 함께 역외국가의 대중남미 관계 강화 움직임도 주목된다. 대남미 직접투자(FDI)에 있어 중국(1%)이 아직은 화란(21%), 미국(19%), 스페인(14%), 중남미국가(9%), 일본(9%), 캐나다(9%), 영국(4%) 등 전통적인 주요 투자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나 2011년 중남미지역에서 에너지·자원 분야를 중심으로 약 100억불의 기업인수합병(M&A)를 성사시켜 EU와 일본 다음으로 부상하면서 광의의 직접투자(FDI + M&A)에서는 EU, 미국, 일본, 중국 순으로 적극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난 10년간 대중남미 교역도 약 4배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중국과 인도는 동기간 중 각각 약 14배, 9배 증가하여 우리를 크게 추월하고 있다. 그 결과 2000년대 초 중남미의 제8위 교역대상국이던 중국은 이제 제2의 교역대상국으로 부상, 이미 브라질과 칠레의 최대 교역대상국이 되었고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중남미의 제5위 교역대상국에서 2010년 제6위로 그 비중이 감소하였다. 인도가 현재 약 100억 불에 불과한 교역액을 2014년까지 500억 불로 확대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우리

나라와 여타 경쟁국 간 대중남미 진출 경쟁이 과거 어느 때보다 치열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Ⅲ. 한·중남미 경제관계 개관

1. 한·중남미 관계의 특징

한국과 중남미 관계는 (1) 20세기 초 한민족의 수난을 반영한 Diaspora기(20세기 초 70년대) (2) 냉전하 남북 경쟁 외교에서의 지지기반 확대기(1960~1970년대) (3) 수출 확대기(1980~1990년대) (4) 투자 및 문화 교류 등 실질협력 확산기(2000년대~현재)로 대별할 수 있다.

한·중남미의 초기 관계는 1905년 1,033명(출발 숫자로 일부는 여행 도중 사망)이 멕시코의 에니껭 농장에 노예와 다름없는 노동자로 진출하여 이중 1921년 약 300명이 쿠바로 재이주하고, 6·25 전쟁의 전쟁포로가 제3국으로 브라질(50명)과 아르헨티나(12명)에 정착하고 1962년부터 시작된 농업이민으로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등에 이주하는 등 고국의 수난과 가난을 벗어나고자 하는 이주민들의 처절한 노력으로 시작되었다.

정치적으로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중남미 국가들이 대한민국을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하면서 관계가 시작되었다. 6·25 전쟁 당시 비상임이사국이었던 에콰도르와 쿠바(공산화 이전)의 UN 안보리 결의안 채택 지지, 콜롬비아의 파병과 여타 다수 중남미국가의 구호품 지원이 있었다. 1959년 브라질을 시작으로 1960년대 들어 중남미 20개국과 수교해 외교적 기반을 확대하였다. 그러나 1990년까지 냉전시대 한·중남미 관계는 남북대결 과정에서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우리 입장에 대한 지지를 확보키 위한 협력 등 정치적인 분야에 집중되었다.

경제적으로 중남미가 1976년 국산 자동차(포니)의 첫 수출, 대우 건설의 첫 해외 수주(이상 에콰도르)와 2004년 최초의 FTA(칠레) 체결 등 우리나라의 통상관계 확대에 상징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있으나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의미 있는 관계로 발전하였다. 1980년대 중반이후 중미내전 종결에 따른 미국의 중미국가에 대한 관세특혜제도로 국내 의류봉제 산업의 중미 진출이 활발해졌으며, 1994년 NAFTA가 출범하면서 전자산업을 중심으로 대미 우회수출을 위한 대멕시코 투자가 크게 늘어났다. 남미지역의 경우에는 '1990년대 들어 브라질 마나우스에 전자제품 조립 공장을 설립하며 본격적인 투자가 시작되었다. 특히 '1990년대 들어 전자제품과 자동차를 중심으로 우리 상품의 국제 경쟁력이 확대되면서 중남미는 미국, EU 우회 진출을 위한 투자대상 지역에서 나아가 새로운 수출 시장으로 부상하였다.

2000년 이후 현재까지는 실질협력 확산기로 볼 수 있다. 중남미 3국(칠레, 페루 및 콜롬비아)과 FTA를 체결하였고 브라질, 페루 등을 중심으로 에너지 및 자원 분야에 투자가 이루어졌다. 또한 유무상 공적개발원조(ODA)도 확대되고 발전소, 도로 건설 등 인프라 분야와 통관시스템, 전자정부 등 ICT분야 등으로 까

지 협력이 확대되고 있다. 아울러 고품질의 전자제품과 자동차 수출로 한국상품에 대한 긍정적인 인지도 상승이 대한민국의 국가 Brand 상승으로 이어 지면서 드라마, 영화, K-Pop 등 문화 분야로까지 협력이 확산되고 있다.

2. 무역

한 · 중남미 교역은 2011년 615억 불(수출 416억 불, 수입 198억 불)을 기록했다. 이는 최근 5년간 평균 12.6%, 2010년 대비로는 18.5% 증가한 수치이다. 국가별로는 2011년 기준 중남미 33개국 중 교역 상위 5개국(브라질(30%), 멕시코(20%), 칠레(12%), 파나마(7%), 페루(5.6%))이 전체 교역의 75%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여타 중견국들의 경우에도 최근 5년간 평균 교역이 크게 증가하여 파라과이(38%), 우루과이(26%), 에콰도르(19%) 볼리비아(27%)를 포함하여 중남미 많은 국가와 전반적으로 교역이 지속 증가되고 있다.

교역수지를 보면 한국은 2011년 기준 총 218억 불의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경제위기 이전인 2008년(210억 불)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한국의 총 흑자의 약 40%에 해당한다. 국가별로 보면 우리의 주요 광물 수입원인 볼리비아, 페루, 칠레와 적자를 기록하였고, 여타 국가와는 흑자를 기록하였다. 한국의 대중남미 흑자의 60%가 멕시코 및 브라질과 교역에서 비롯되는 등 국가별로 편중된 경향을 보인다. 브라질은 2011년 128.5억 불에서 2012년 186.5억 불로 약 50%가량 교역량이 증가하여 대중남미 교역의 약 1/3을 차지하는 핵심 교역대상국으로 부상하였다.

2011년 상품 성질별 교역을 보면, 수출의 경우 수송장비 및 전자제품에, 수입의 경우 원자재 및 에너지자원에 편중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수출되는 공업제품 중 수송장비(54%)와 전기전자제품(24%)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수송 장비 수출은 최근 5년간 연평균 21% 증가하였다. 수입의 경우 원자재 수입이 160억 불로 전체 수입의 38.4%를 차지하였으며, 이 중 연료(10%) 및 광물(52%) 수입 비중이 두드러지며, 각각의 수입액이 전년 대비 141% 및 57%나 증가하였다.

3. 투자

중남미는 2000년대 중반 이후에 들어서야 주요 투자 대상지역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대중남미 투자누적액은 2000년에 처음으로 10억 불을 넘겼고, 최근 5년간은 연평균 25% 증가하여 2011년 69억 불을 기록했다. 교역관계와 유사하게 주요 투자국은 브라질(55%), 멕시코(16.4%), 페루(11.9%)로 이들 3국이 전체 투자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업종별로 분류하면 2011년 기준 전자통신장비 투자가 7.5억 불로 가장 많고 대부분 브라질과 멕시코에 이루어졌으며, 1차금속이 5.6억 불로 2위를 기록하였다. 그 외에 자동차(4.5억 불), 금속가공제품(2.2억 불)이 새로운 주요 투자 업종으로 기록되었다. 중남미 진출 기업 수(투자 신고 기준)

는 1980년 7개에 불과했으나 2000년 280개, 2011년 683개를 기록하였다.

대중남미 건설 수주는 더욱 괄목할 만한 성장을 기록했다. 2002년에는 수주액이 3백만 불로 한국의 전체 수주액(61억 불)의 0.01%에 불과했으나, 2010년 20.6억 불로 증가하였고, 2011년에는 전년대비 3.2배 증가해 사상 최대인 66억 불을 달성하였다. 이는 전체 수주액의 11.2%에 해당한다. 국가별 수주비중은 브라질(32%), 멕시코(27%), 칠레(20%), 에콰도르(6%) 순이다. 특히 브라질은 최근 5년간 건설 수주액이 연평균 74% 증가하였다. 중남미 수주를 건축, 산업설비, 전기통신 등 공종별로 분류하면 산업설비 분야가 가장 많은 수주액을 기록했으며 특히 이 중 발전소와 정유공장 건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4. 개발협력

1990년 대중남미 유·무상 ODA 총액은 7만 불로 전체 ODA의 0.6%에 불과했으나 2000년대 들어 지속적으로 비중이 증가해 2011년 6,800만 불(전체의 6.7%)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우리의 OECD DAC 가입 후 카리브 지역의 경우에는 적지 않은 국가가 중고소득국으로 분류되어 한국의 ODA는 감소 추세에 있다. 따라서 기존 ODA의 틀을 넘어서는 카리브 지역 개발협력을 위한 협력사업의 확충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은 2005년 중남미 지역 개발은행인 IDB에 가입하였고, 3개 분야 신탁기금(지식공유, 빈곤감소, 중소기업협력) 및 다자투자기금(MIF)에 총 220백만 불을 출자하였다. 앞으로 경제기발과 재정정책 분야 협력을 위해 4천만 불을 향후 5년에 걸쳐 추가 출연할 계획이다.

5. 제도적 협력 기반 확대

최근 한·중남미 관계가 다방면에서 지속 확대되면서 이러한 관계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발전,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메커니즘이 실현되고 있다.

우선 양자 및 다자 정상외교를 활발히 추진하여 2008~2012년간 브라질, 멕시코, 콜롬비아, 칠레, 페루 및 파나마를 방문하고 여타 주요국의 정상이 방한하여 페루, 콜롬비아, 멕시코와는 '전략적 협력관계'를,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와는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오고 있다. 또한 G20(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APEC(멕시코, 페루, 칠레), 중미통합체제(파나마 등 중미 8국) 등 다자회의를 활용하여 중남미 국가들과 정상급 협의를 강화해오고 있다.

경제 분야에서는 칠레, 페루 및 콜롬비아(협상타결)와 FTA를 통해 통상·투자 관계를 격상하고 이중과세방지협정(6개국), 양자 간 투자보장협정(BIT, 18개국)과 사증면제협정(28개국)을 체결하여 기업 진출 지원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확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08년 이래 외교통상부 산하에 중남미 자원·인프라협력센터를 설립하여 '중남미 에너지·자원 웹진'과 '주요 뉴스' 등을 발간하고 있다. 중남미와 동아시아 36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동아

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의 사이버사무국(Cyber Secretariat)을 2011년 유치하여 매월 주 2회 '중남미 뉴스·정보'를 발간하고 있으며, 2012년 중미통합체제(SICA) 역외 옵서버국 가입, UN중남미경제위원회(ECLAC)와 공동연구 등 협력을 확대해오면서 2008년 이래 대학생·대학원생의 중남미 연구 지원을 위한 중남미지역기구 인턴파견 사업 등도 진행 중이다.

Ⅳ. 향후 협력 유망 분야

중남미의 성장기조에 따라 최근 한·중남미 관계가 확산기에 접어들고 있어 이러한 추세를 중장기적으로 지속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중남미 국가들에 한국이 '호혜적'이고 '동반자적'인 협력을 추구하고 있다는 인식을 줄 수 있도록 중남미 국가들의 수요를 고려하면서 협력방향을 설정하고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중남미 지역의 발전 방향에 대한 역내 논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유엔중남미·카리브경제위원회(ECLAC)는 중남미 지역이 현재의 '원자재 붐'을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전환하기 위한 여섯 가지 중점 분야를 제시한 바 있다. 이는 (1) 여전히 높은 수준인 빈부격차 완화, (2) 원자재 위주의 수출을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수출구조로 개선, (3) 생산성 제고, (4) 조세 수입 증대를 위한 조세 개혁, (5) 현재 GDP 대비 23%에 불과한 투자 확충, (6) 더욱 지속가능한 생산 및 소비 패턴으로의 전환을 통한 지속가능 발전 모델 수립이다.

이에 더해 치안 강화 역시 중남미 지역의 장기적 핵심 현안이다. 2011년 유엔 마약범죄국(UNODC)의 연구보고서가 세계 범죄사망률 상위 10개국 중 중남미 국가가 9개국, 중미국가가 4개국으로 평가한 데서 나타난 바와 같이 오늘날 조직범죄, 마약 산업 등 치안 악화는 중남미 지역에서 경제·사회 발전의 주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세계은행도 '중미 지역의 범죄와 폭력' 연구 보고서에서 중미 지역의 치안 악화는 연평균 65억 불의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이는 동 지역 총 GDP의 8.8%의 손실을 초래한다고 분석한 바 있다.

지난 10년간 중남미에서 지속된 경제발전은 고질적인 사회문제인 빈부격차 감소와 중산층의 확대 그리고 구매력 증대로 이어지고 있다. 오늘날 세계 인구 70억의 약 8%를 점유하는 중남미 6억 인구가 1인당 GDP 평균 1만 불의 소비층으로 전환되고 있다. 또한 중남미에서 국가주도 발전전략이 핵심 국가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상하면서 한국의 경제사회발전 경험을 공유하는 데 많은 관심을 갖고 경제발전에 필수적인 도로, 항만, 교량, ICT(정보통신기술) 등 열악한 인프라 환경 개선 분야에서 협력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

또한 경제발전에 필수적인 산업시설 확충과 민간의 에너지 수요 확대로 정유공장 등 석유화학 플랜트와 전력부문의 신규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례로 브라질,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등은 대규모 정유공장과 연계한 석유화학 단지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며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35년까지 중남미의 전력생산 분야에 4040억 불, 배전망구축 분야에 3130억 불의 신규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또한 중남미 좌파 정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의료 등 국민 복지, 교육 및 과학기술 발전, 그리고 환경 분야에서의 대대적인 투자가 예상된다. 각국에서는 새로운 의료시설 설립과 병행하여 기존 병원이나 공공 의료기관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큰 관심을 갖고 있어 우리의 첨단 ICT 기술을 활용한 병원운용 시스템의 진출에 유리한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또한 브라질의 '국경없는 과학(Science without Borders)'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칠레, 페루, 콜롬비아, 에콰도르 등은 국내 교육기관과의 학생 교류와 공동 연구 협력을 적극 희망하고 있으며 아마존, 안데스 산악지역이나 오지의 열악한 교육 여건으로 E-learning 분야 협력도 적극 희망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함께 물산업, 환경 산업, 전자정부 등 대국민서비스 시스템에 대한 협력 수요가 증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V. 기업의 진출 확대를 위한 제언

이러한 중남미의 변화된 환경, 그리고 우리의 신장된 국력이나 민간 기업의 국제화 진전은 우리에게 대중남미 협력에 있어 무한한 가능성과 함께 도전요인으로도 대두되고 있다. 2000년 우리의 전체 수출의 약 3.5%, 투자와 수주의 1%도 미치지 못하던 중남미가 2011년에는 전체 수출과 투자의 약 8%, 해외 수주의 약 11%에 달하는 규모로 커졌으며 지금의 한·중남미 관계 확대추세를 감안시 지금보다 약 2배까지 확대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목표는 아니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와 기업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기고자의 그간의 중남미에서의 경험과 최근 중남미의 변화를 기초로 소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정부 차원의 대중남미 협력 확대

중남미에서 발주되는 주요 프로젝트가 정부나 공기업이 추진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진출대상국 정부의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우리 기업의 사업 진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관계로 중남미 진출에 있어 민관 간 긴밀한 협조는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차원에서도 양자관계 증진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첫째, 양국 정부간 다양한 협의 채널을 활성화하여 협력 확대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정상 회담이나 장관급 접촉 외에 고위정책협의회, 에너지·자원 또는 산업협력위원회, 무역위원회(FTA 체결국), 경제공동위 등을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유망한 협력 의제를 공식화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참여를 위한 우호적인 여건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야 한다. 또한 태평양동맹과 같이 중남미의 정세 변화에 대응하여 장기적인 협력의 기본

틀로서 중미, 멕시코 그리고 에콰도르 등 우선 태평양 연안국과의 FTA망을 조기에 완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대서양 연안인 남미공동시장(MERCOSUR)으로 확산키 위한 전략을 범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등 거대영토를 가진 국가와 작지만 풍부하고 에너지,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 그리고 중미국가와 카리브 국가 등 국가별 특성을 감안한 차별화된 협력 전략도 필요하다.

둘째, 중남미의 주요 프로젝트 추진을 지원하는 다자금융기구와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2004년 가입한 미주개발은행(IDB)과 협력을 강화해 가면서 현재 협의중인 중미통합개발은행(CABEI) 가입을 조기에 실현하고 최근 IDB보다 역내 인프라 프로젝트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중남미개발은행(CAF)에도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

셋째, 치안문제 등 중남미의 주요 현안 해결과정에 우리나라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 중남미 국가들은 수출 흑자 등을 통해 중남미에서 많은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협력에도 인색하다는 인식을 갖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부정적 인식은 우리 기업 진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ODA 규모 확대 뿐만 아니라 지난 7월 초 개최된 중미 6국의 치안기관장 초청 세미나나 포럼 및 이에 기초한 협력기금 마련 등 협력수단을 지속 확대하고 다양화해야 한다.

넷째, 중남미 국가들의 국가개발 경험 공유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2000년대 들어 중남미국가들은 국가 발전을 모색하면서 룰라 모델, 중국 모델 등에도 관심을 보이나 에콰도르, 페루 및 과테말라 등 여러 나라가 한국의 국가개발경험 공유에 큰 관심을 표시하고 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의 국가개발비전공유사업 등의 예와 같이 중남미 국가들의 미래 발전전략에 대해 같이 고민하고 우리의 실패한 경험까지 공유하면서 동반자로서 공동번영을 위해 관심을 갖고 협력할 의지를 전달하고 실천하는 것이 여타 분야에서의 협력 창출에 매우 유효한 기반이 될 수 있다.

다섯째, 중남미 국가 주요 프로젝트 추진 인사들과 우리 민관 대표가 함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장관급 한·중남미 고위급 포럼이나 여타 각 부처가 운영하는 포럼 및 한·중남미 카라반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상대국의 책임 있는 담당 각료나 공기업 대표가 자국의 핵심 사업을 우리 기업에 소개하고 개별 협의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여섯째, 기업 진출 지원 정보를 정부가 효과적으로 관리, 전파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외교통상부 중남미국 산하에 운영중인 '중남미 에너지·자원 센터'와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협력포럼(FEALAC) 사이버사무국을 통해 제공하는 중남미의 에너지·자원·인프라 및 주요 정치, 경제 뉴스·정보와 월간 에너지·자원 웹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가고 있으며 주요한 프로젝트 정보는 해외건설협회 등 민간단체와 공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국가 이미지 제고가 긴요하다. 최근 20년간 전자제품과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인 이미지가 형성되었으며 최근에는 영화, 드라마 그리고 K-pop을 중심으로 문화로까지 확산되는 한국에 대한 관심을 효과적으로 관리, 촉진할 필요가 있다. 주요국에 한국 문화원을 조기 개설하고 문화·홍보 전문인력을 추가로 배치하여 한국 기업의 진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한 인사 그룹이 지속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2. 기업의 진출 전략

이러한 정부 차원의 노력에 더하여 실제 중남미에 진출하는 기업 차원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선 중남미의 특성을 이해하는 자체 전문 인력 양성이다. 국내 15개 스페인어 및 2개 포르투갈어 관련 대학의 배출 인력과 전국적으로 20~30명 불과한 중남미 전문 인력으로는 기업 수요에 부응키가 어렵다. 중남미의 독특한 사회적, 경영 문화에 적응할 수 있고 경영학, 법학, 토목, 기계 등 기업이 필요한 다양한 전공분야에서 중남미를 이해하는 인력을 양성하는 데 기업 스스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둘째, 호혜적인 협력 의지를 갖고 중남미와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중남미 국가들은 기존 선진국의 다국적 기업들에 대해 애증의 복잡한 감정을 갖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협력 동반자로 보는 시각이 많다. 각국 정부가 한국 기업의 진출시 기술 전수에 대한 강한 희망을 갖고 있는 것은 후발주자로서 우리에게 큰 장점이자 잘못 대응하면 부담요인이 될 수 있다. 정부차원의 기술협력에 못지않게 기업차원에서도 현지 기술인력 훈련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민관 간 긴밀한 협력은 기업의 진출 과정을 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다. 중앙정부나 국영기업이 추진하는 사업에서 상황에 따라 우리 대사관을 포함한 정부기관의 역할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적지 않아 사업 발굴이나 사업 참여 모색 초기 단계부터 대사관과 긴밀한 협의체제를 유지할 것을 권유한다.

넷째, 금융조달 분야에서 다자 금융기구를 활용하는 방안이다. 세계은행(IBRD)이나 미주개발은행(IDB), 중남미개발은행(CAF: 안데안개발공사) 그리고/또는 중미통합은행(CABEI)의 금융지원을 위해서는 엄격한 심사가 필수적이며 이는 사업이 추진과정에서 중단되거나 대금 지급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가능성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

다섯째,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포럼과 대표단 파견시 적극 참여하는 것이 큰 도움을 준다. 중남미의 경우 기업이 접근시에는 어려운 고위인사나 주요 정보가 민관 합동으로 추진시에는 쉽게 접근되는 경우가 많고, 민관 대표단을 통한 주재국 인사에 대한 접근은 신뢰할 만한 창구와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에 도움을 준다.

Ⅵ. 맺음말

한·중남미 관계는 2000년대 들어 새로운 변환기에 들어서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역할 확대와 중남미의 경제

적 부상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면서 협력관계가 다양화되고 그 규모도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최일선에서 정부와 민간기업은 긴밀히 협력하면서 한·중남미 관계 발전에 대해 보다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함께 정책적인 고민을 할 때가 되었다.

중남미국장으로서 지난 6월 이명박 대통령의 중남미 방문시 멕시코와 FTA협상 재개에 합의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콜롬비아를 방문하여 FTA협상 타결 선언 서명식이 진행 되는 것을 보면서 중미국가를 포함한 모든 태평양 연안의 중남미 국가들과 FTA를 체결하여 우리의 경제영토가 태평양 반대편까지 확대되는 상상을 해보았다.

지난 6월 초 멕시코와 콜롬비아, 페루 및 칠레 정상이 소위 태평양 동맹(Pacific Alliance) 출범 협정에 서명을 하고 회원국 간의 통합과 아·태 지역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을 때 이제 아시아와 중남미 간 협력이 한 차원 높은 단계로 발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FTA를 기반으로 새로운 태평양 시대의 중심에 들어서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중남미는 브라질의 경제력만 해도 ASEAN을 능가하는 매우 유망한 시장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나 기업들이 아직은 중남미의 관습과 문화에 익숙치 않아 많은 도전 요인도 있다. 이러한 가능성을 향해 도전 요인을 극복하여 호혜적으로 협력하고 동반 발전하는 바람직한 한·중남미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통상·투자 관계를 지속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정부나 개별 민간 기업이 각개전투를 할 것이 아니라 함께 고민하고 협조해야 한다. 아직은 우리 정부 기관이나 기업이 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하는 것이 불가피한 협력 확산의 초기 단계에 있지만 이를 줄이고 진출의 효율성을 확보하면서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우선 인력 양성을 통해 중남미를 보다 잘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부처, 민관간에 정보 공유화 협조가 긴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외교

참고문헌

- Economist, "Nobody's Backyard", 2010.9.10
- ECLAC, KIEP, 한-ECLAC 경제협력 심층세미나 결과보고서(2012)
- ECLAC, "FEALAC : New Biregional trade and investment relations in a changing world economic environment"(2011)
- ECLAC,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2011(2012)
- ECLAC,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in the World Economy 2011(2012)
- Barcéna Alicia,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and the Republic of Korea: Partners towards sustainable development", 2012 한-중남미 고위급포럼 발표자료
- IDB-ADB, Shaping the Future of the Asia-Latin America and Caribbean Relationship" (2012)
- 외교통상부, 외교백서(2008, 2009, 2010)
- 외교통상부 중남미국, 중남미 주요 통계(2012)
- 외교통상부, 한국외교 60년사(2009)
- 외교통상부, 중남미 지역기구 개황(2010)
- KDI, 한국경제발전 60년사, 2012
- KIEP, 한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성과와 과제(2009)

유엔 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 (리우+20 정상회의) 결과

한 동 만*

Ⅰ. 194개국 대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해법 논의

2012년 6월20일부터 22일까지 브라질의 대표적인 휴양도시인 리우 데 자네이로에서 122개국의 정상을 포함하여 194개 유엔회원국 정부대표를 비롯하여 유엔 전문기구와 국제기구 대표, 그리고 시민사회 참석자 등 약 5만 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서 전 인류가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협력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이념적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1992년 리우에서 개최된 지구정상회의[1] 20주년을 맞이하여 개최된 일명 '리우+20 정상회의'의 큰 주제는 "우리가 원하는 미래(The Future We Want)"이다. 세계 각국대표들은 지속가능발전[2]과 빈곤퇴치를 위한 녹색경제(Green economy in the context of sustainable development and poverty eradication)를 실현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제도적 틀(Institutional framework for sustainable development) 마련을 위해 지난 2년간 심도 깊은 토론을 하였으며, 특히 인류가 직면한 경제위기 극복과 사회적 약자 보호, 기후변화와 물, 에너지, 여성의 지위 등 공통의 과제를 해결하여 미래 세대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물려주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각국대표들은 2011년 5월 유엔에서 이번 리우+20 정상회의의 결과문서에 어떠한 내용을 담을 지에 대해 일주일간 회의를 하였고 이어서 금년에도 유엔에서 두 차례에 걸쳐 야간회의까지 하면서 회의 결과문서초안을 토론하였다. 유엔 회원국으로부터 접수한 총 6천장의 방대한 분량을 줄여나가는 작업을 거쳐 유엔 사무국이 대폭 축약한 20여 페이지의 결과문서 초안은 각국의 제안이 다시 강조되면서 200여 페이지로 늘어나고 주요 사

* 외교통상부 국제경제국장

안마다 선진국과 개도국 간 입장대립으로 합의가 쉽지 않았다.

지속가능발전의 3대 축인 경제개발(Economic development), 사회통합(Social inclusion), 환경보호(Environmental protection) 중에서 선진국은 환경보호와 녹색경제로의 이행을 통한 경제발전을 주장한 반면, 개발도상국, 특히 77그룹과 중국은 빈곤퇴치와 경제·사회 평등, 그리고 녹색경제로 이행을 위한 선진국의 재정 및 기술 지원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각국대표들은 2012년 5월 뉴욕에서 일주일간 문안협의를 하였고 6월12일부터 15일까지 리우에서 다시 분야별 논의를 하였지만 의견이 좁아지지 않아 결국 브라질 정부가 개도국의 입장을 많이 반영한 초안을 만들어 주요 국가들과 논의 끝에 힘들게 타협안을 만들 수 있었다. 우리나라는 김숙 주 유엔대사가 이번 리우+20 정상회의 준비위 공동의장으로서 문안협상을 주재하고 중재안을 제시하여 문안타결에 적극적으로 기여하였다.

Ⅱ. 녹색경제[3]가 지속가능발전 실현의 중요한 수단임을 확인

참가자들은 회의 합의문인 "우리가 원하는 미래(The Future We Want)"를 통해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정치적인 의지를 재확인하고 녹색경제가 지속가능발전 실현의 중요한 수단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녹색경제 이행은 녹색경제를 지향하는 국가의 공동목표(common undertaking)이며, 녹색경제에 대한 환경기구와 개별국가 그리고 시민사회의 공동 지지가 필요하며, 녹색경제를 위한 이행주체의 참여와 파트너십, 네트워킹 및 경험공유의 중요성을 인정하였다. 아울러 개도국들이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유엔 지역위원회, 유엔기구 및 기관, 여타 정부 간 지역기구, 국제금융기구의 지지가 필요하며, 재계 및 산업계가 녹색경제를 포괄하는 지속가능 전략 개발에 기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회의 합의문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녹색경제의 역할을 명시한 최초의 유엔 문서이며, 세계 경제패러다임을 녹색경제로 전환하는 방향성을 제시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이번 회의의 최종합의문서는 녹색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적인 틀 강화를 위해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제시하여 2015년까지 달성하기 위한 새천년 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를 뛰어 넘는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 설정을 위한 범국가적 논의체계를 구축하여 금년 67차 유엔총회 개시 전까지 작업반(Working Group)을 구성하기로 하였다. 또한 유엔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대체할 고위급 정치포럼(High level Political Forum)을 설치하여 2013년 68차 유엔총회 계기에 1차 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금년 67차 유엔총회에서는 유엔환경계획(UNEP)의 역할 강화를 위해 집행이사회내의 보편적 회원제와 재정관련 유엔 정규예산 및 자발적 기여금을 통한 증가된 재원확보, 국제 환경분야의 역할 강화에 대한 결정을 채택하도록 촉구하였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유엔 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개도국에 대한 재정지원과 기술이전, 능력배양 등 이행수단에 대한 유엔총회산하 정부 간 협의체제 수립에 합의함으로써 앞으로 유엔차원에서 지속가능발전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다만, 유럽연합과 아프리카 그룹은 유엔환경계획(UNEP)을 환경관련 유엔전문기구로 만들 것을 희망하였으나 미국이 이에 반대하여 향후에도 쟁점으로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회의의 의장국인 브라질은 개도국 지원을 위해 유엔환경계획(UNEP)에 60억 달러, 아프리카 개발을 위해 100억 달러를 지원할 예정임을 밝혔다.

결과문서 채택이후 볼리비아와 니카라과 등 중남미 내 반미성향국가들은 녹색경제가 각국의 개발정책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녹색정책을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발언하였지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회의 결과문서가 향후 지속가능발전 방향을 잘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금번 회의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새로운 도약을 시작해야 할 때라고 하면서 모든 회원국의 통합된 노력을 촉구하였다.[4)]

Ⅲ. 주요 정상들,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강한 지지 입장 표명

이번 회의에 참석한 122개국 정상들은 3일동안 약 5분씩 기조발언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이 경제위기, 사회적 불안정, 기후변화, 빈곤퇴치 등 범지구적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임을 재확인하고 각국의 행동을 촉구하였다.

브라질 지우마 호우세피 대통령을 비롯한 많은 정상들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여성과 아동, 그리고 원주민 등 사회적 약자의 능력 배양을 강조하고 민-관 파트너십 강화를 통한 포용적인 지속가능발전을 촉구하였다. 77그룹의 대표인 알제리 대통령을 비롯한 많은 개발도상국 정상들은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을 강조하며 선진국들의 선도적인 노력을 촉구하고 녹색경제는 하나의 정책 옵션이며 선진국들이 개도국에 대한 기술과 재정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공평하고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접근법을 바탕으로 각국의 다양성에 기반한 실현가능한 방법으로 녹색경제를 추구해야 하며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에 개도국의 입장이 더 잘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개도국의 입장을 두둔하였다.

선진국 정상들은 신기술 개발과 일자리 창출 기능 등 녹색경제의 역할을 인정하고 모든 참가국의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촉구하였다. 올랑드(Francois Hollande) 프랑스 대통령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을 강조하며 금융과 사회, 생태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전 세계의 공동노력을 촉구하였으며,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기후변화의 주 요인인 단기 대기오염물질 제거를 위해 미국이 제안한 '기후 및 청정 대기 협력체'의 참여를 촉구하고 여성이 지속가능발전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여 여성참석

자를 포함한 많은 참석자들의 갈채를 받았다.

일본의 겜바 외무대신은 인간안보에 기반하여 미래도시 협의체, 녹색협력 봉사자(volunteers), 재난대응 협의체 등 '녹색미래'를 위한 이니셔티브를 제안하였으며, 이태리 환경장관은 2016년 밀라노 엑스포가 식량 및 영양을 주제로 할 것임을 소개하였고, 유럽공동체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4억 유로 상당의 자금조성을 약속하기도 하였다.

Ⅳ. 500여 건이 넘는 부대행사 개최

이번 회의에는 정상들을 포함하여 각국 대표뿐만 아니라 국제기구 대표, 그리고 많은 시민단체들이 참여하여 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와 별도로 500여 건이 넘는 부대행사를 개최하였고 많은 나라와 기업들이 홍보관을 설치하여 녹색경제정책을 참석자들에게 홍보하는 기회를 가졌다. 우리나라도 환경부 산하 환경공단이 주관하여 2012년 6월16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간 한국 홍보관을 통해 '모두를 위한 녹색성장(Green Growth for All)'에 대한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노력을 적극 홍보하였다.

우리나라(이명박 대통령)는 덴마크, 멕시코, 유엔, OECD와 같이 글로벌 녹색성장 포럼을 개최하여 녹색 및 포용성장 강화방안을 모색하고 녹색성장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역할과 기여가 필수적이라는데 동의하였다. 이 포럼에서 구리아(Angel Gurria) OECD 사무총장은 경제의 녹색화는 1조 달러규모의 가치가 있다고 하였으며, 이 대통령은 글로벌 녹색성장포럼이 민관협력의 소중한 장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녹색성장 동맹국인 덴마크와 녹색성장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글로벌 녹색성장포럼 폐회사를 통해 이번 리우+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녹색경제가 국제사회의 주요 원칙(guiding principle)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유엔이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 에너지(Sustainable energy for all)"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에너지 효율성을 2배로 늘리고 전체 에너지 대비 신재생에너지 활용비율을 2배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현재 50개국 이상이 동참의사를 표명하여 100억 달러 규모의 기금이 마련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우리나라(유영숙 환경부장관)는 이와 별도로 6월21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가별 녹색성장 전략수립에 관한 포럼'을, 그리고 유엔 아태지역경제사회위원회(ESCAP)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녹색경제발전을 위한 고위급 포럼'을 각각 개최하였으며, 권재진 법무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유엔환경계획(UNEP)과 함께 '환경지속성을 위한 정의와 거버넌스, 법에 관한 World Congress'를 개최하였다.

또한 민동필 과학기술 대사를 비롯하여 전 세계 과학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

데 '과학, 기술, 혁신 포럼'이 별도로 개최되었다. 이외에도 최태원 SK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리우+20 기업 지속가능성 포럼'을 개최하여 지속가능발전 달성을 위한 새롭고 혁신적인 민관 파트너십 구축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Ⅴ. 녹색성장 확산을 통한 외교적인 위상 제고

녹색경제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인정받음에 따라 우리나라가 주도하고 있는 녹색성장의 확산을 통하여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적인 논의를 주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회의에서 녹색경제 전략 수립과 이행을 위한 모범사례, 경험공유 플랫폼 활용 필요성 문안이 포함되어 앞으로 녹색성장 선도국으로서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 중요한 교량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개도국의 녹색경제 전략을 지원하여 개도국과의 신뢰구축 강화에 기여함은 물론 우리의 국제적인 위상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세계 최초로 녹색성장을 국가발전 전략으로 천명한 이명박 대통령은 6월20일 '리우+20 정상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구현할 포용적 실천전략(inclusive action strategy)으로 녹색성장을 제시하고 녹색성장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와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자체를 새로운 성장 동력과 삶의 방식으로 삼는 역발상의 정책임을 설명하였으며, 내년부터 2020년까지 녹색 해외개발원조(ODA) 총액을 50억 달러 이상으로 확대하고 이를 토대로 올해로 종료되는 동아시아 기후 파트너십[5]에 이어 글로벌 녹색성장 파트너십[6]을 적극 전개할 계획임을 천명하였다. 또한 이 대통령은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GGGI)가 유엔환경계획(UNEP),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은행과 함께 창설한 녹색성장 지식플랫폼(Green Growth Knowledge Platform: GGKP)을 통해 녹색성장의 국제적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제17차 기후변화당사국 회의에서 녹색기후기금(GCF: Green Climate Fund) 설립합의를 환영하고, 녹색성장전략(Green Growth Strategy)과 녹색기술센터(Green Technology Center), 그리고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사무국 유치를 통해 전략-기술-재원의 '그린 트라이앵글(Green Triangle)'이 유기적으로 작동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혀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공감을 얻었다.

Ⅵ.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 국제기구로 전환

이번 리우+20 정상회의의 가장 큰 외교적인 성과는 우리나라가 2010년 창설한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16개국[7]이 서명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국제기구가 된 것이다. 6월20일 브라질 리우 데 자네이루 회의장에서 이명박 대통령, 슈미트 덴마크 총리,

길라드 호주총리, 멜레스 이디오피아 총리, 라모타 가이아나 대통령, 통 키리바시 대통령, 클레그 영국 부총리, 알 아티야 카타르 부총리 겸 제18차 유엔기후변화 당사국총회 의장, 그리고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을 비롯하여 약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의 국제기구화에 대한 서명식이 개최되었다.

2008년 녹색성장을 국가발전의 기본정책으로 천명함에 따라 2010년 11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제16차 유엔기후변화 당사국총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를 설치하고 2012년까지 국제기구로 만들겠다고 천명한지 2년이 되지 않아 우리의 주도로 국제기구가 탄생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이번에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 설립협정 서명식을 통해 국제법적인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는 국제사회의 녹색성장발전에 기여하는 명실상부한 항구적인 자산으로 기능하는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

우리나라에 사무국을 두게 되는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는 유엔 등 국제기구의 지원없이 우리나라 스스로 주도하여 설립되는 최초의 국제기구로써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정책의 진정한 글로벌화를 도모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반을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 또한,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가 국제기구로 전환함으로써 녹색성장에 대한 전 세계적인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녹색성장관련 새로운 거버넌스 구축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가 전 지구적 문제를 해결하는 행동지향적 기구(action-oriented organization)로서 창의와 혁신을 통해 민-관 파트너십을 지향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항구적인 자산으로서 인류의 지구 책임적 문명을 위한 공동유산으로 발전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의 국제기구화는 세계가 새로운 모범으로 삼을만한 선례로 기록될 것이며 국제기구로써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유엔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 나갈 것임을 약속하였다. 호주와 덴마크, 이디오피아 총리와 키리바시, 가이아나 대통령도 축사를 통해 이 대통령이 높은 비전을 가지고 글로벌 녹색성장 이니셔티브를 제시한 지도력과 경륜을 높이 평가하고 개도국의 녹색경제전환을 지원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이번 서명식을 계기로 확인된 녹색성장에 대한 국제적인 지지확산을 바탕으로 앞으로 새로 탄생하는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가 진정한 의미에서 개도국의 녹색성장을 지원하고 선진국과 개도국,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국제적인 귀중한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합쳐야 이번 리우정상회의의 주제인 “우리가 원하는 미래(The Future We Want)”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는 오는 10월 22일부터 23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는 기후변화 각료급회의(Pre-COP)를 계기로 첫 번째 총회와 이사회를 열고 국제기구로서의 여정을 시작할 예정이다. 2010년 6월부터 지난 2년간 국제기로의 태동

을 준비해 온 한승수 전 국무총리의 뒤를 이어 라스문센 전 덴마크 총리가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 이사회 이사장을 맡을 예정이다.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는 지난 2년 동안 국가별 또는 지역별 차원에서 개도국에 대한 녹색성장 계획을 수립하였고, 현재 브라질, 캄보디아, 이디오피아,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몽골, 필리핀 등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중에 있다. 특히 민간부문의 모범사례(best practice)를 전파하고, 효율적인 자원투자와 혁신을 강화하기 위한 민관 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녹색성장 추진을 위해 필요한 재원, 기술, 전문지식 등을 필요로 하는 개도국 정부를 민간기업과 연결시켜 주고 있다.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가 국제기구화 되기 위해서는 우리 국회의 비준이 필요하다. 앞으로 국회비준 등 남은 과정들이 원만히 진행되어 우리의 미래 세대들이 녹색성장의 귀중한 열매를 향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외교

註

1) 1992년 리우회의(지구정상회의)는 100여 개국 정상을 포함한 180여 개국이 한 데 모인 당시 최대 규모의 국제환경회의로써, 리우선언을 통해 지속가능개발이념이 천명되고,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생물다양성협약(CBD)을 채택하는 등 환경분야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원칙을 마련하였다. 그 후로 10년이 지난 2002년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회의가 개최되어 빈곤퇴치, 소비생산패턴, 자연자원 기반 보호 및 관리, 세계화, 보건, 아프리카의 지속가능발전등에 대한 이행계획을 담은 요하네스버그 이행계획을 채택하였다.

2) 지속가능발전의 용어는 1987년 브룬트란트 보고서에서 처음 명시된 것으로 “미래세대가 그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현 세대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을 의미한다.

3) 녹색경제란 환경적 위험과 생태자원의 고갈을 최소화하면서 인간복지와 사회적 형평성은 향상시키는 저탄소, 자원효율적, 사회포용적 경제를 의미한다.

4)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리우+20 정상회의가 끝난 후 2012년 6월28일 유엔본부에서 가진 리우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리우+20 정상회의가 성공적인 회의였으며, 중요한 합의사항으로 아래 7개 사항을 제시한 후, 리우+20회의는 마지막이 아니라 모두를 위해 지속가능한 세계를 만들기 위한 긴 여정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하였다.

(1)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 의지 재확인 (2) 지속가능발전목표 설정합의 (3) 양성평등 및 여성권한 강화의 중요성 (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부, 시민사회, 민간부분 간 파트너십 강조 (5) 고위급 정치포럼 신설, 유엔환경계획 강화 등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구조강화 (6) 지속가능한 생산, 소비 10개년 계획 채택, GDP를 넘어서는 발전측정지표의 필요성, 빈곤퇴치, 경제성장, 환경보호에 있어 녹색경제의 역할 인정 (7) 식량에 대한 권리 및 모두를 위한 식량과 영양안보 중요성 인식

5) 동아시아 기후파트너십은 2008년 일본 도야코 G8 확대정상회의 계기에 발표한 것으로 동아시아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지원을 위해 2009~2012년간 2억 달러를 조성하여 지원한 사업을 말한다.

6) 글로벌 녹색성장 파트너십은 양자와 다자적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개도국의 에너지 효율적 발전과 전력망 구축, 에너지 저장 시스템, 재생에너지, 녹색교통과 건물, 수자원 인프라 구축 등을 집중 지원하는 동시에 한국 녹색기술센터(Green Technology Center: 2012년 3월 발족)를 국제적 기술협력 및 인재양성의 가교로 활용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다.

7) 서명국: 아시아 및 대양주 7개국(한국, 호주, 캄보디아, 필리핀, 베트남, 파푸아뉴기니아, 키리바시), 유럽 3개국(영국, 덴마크, 노르웨이), 중동 2개국(카타르, UAE), 중남미 3개국(파라과이, 코스타리카, 가이아나), 아프리카 1개국(이디오피아). 멕시코와 카자흐스탄은 가서명은 하였으나 전권위임장을 받지 못해 이번회의에서는 참관만 하고 추후 서명할 예정이다.

재외동포 현황과 미래발전 구상

김 경 근*

Ⅰ. 재외동포가 중요하다

21세기는 세계화 · 정보화 · 네트워크화의 시대다. 또한 정보와 사람의 이동이 날로 가속화되고 있고, 지역통합(EU) · 경제통합(FTA)의 진전으로 국가 간 경계도 점점 더 모호해지고 있다. UN인구국(Population Division) 통계에 따르면 2010년 현재, 자신이 태어난 곳을 떠나 현재 다른 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국제이주자가 무려 2억1400만 명(현재 세계인구의 3%)에 달한다.[1)]

이런 상황에서 세계 각국은 해외 거주 재외동포를 모국과 동포 거주국을 매개하는 주요 행위자로서, 국력의 외연을 확장하는 소중한 자산으로서, 그리고 국가의 품격과 대외이미지를 높이는 민간 외교관으로서 재인식하고 재외동포의 정체성 유지 · 발전과 모국과 재외동포사회 간 연계체제 구축에 적극 나서고 있다.

175개 국가에 720만 명 이상의 재외동포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 정부 역시 정치 · 경제 · 문화 · 사회 각 방면에서 재외동포사회에 거는 기대가 특별하며,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국력이 신장되고 국가이미지가 제고될수록 한반도 밖에 거주하는 재외국민과 혈통후예(血統後裔)들과의 유대관계를 어떻게 유지 · 발전시키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 정부가 반드시 풀어나가야 할 새로운 국정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최근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한류(韓流) 바람이나 날로 성장하는 한상(韓商)에 대한 기대 못지않게 '2012년 재외선거'가 우리 정부의 재외동포정책 개선은 물론 재외동포사회 질적 성숙의 견인차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Ⅱ. 재외동포의 현황

1. 공식 호칭문제

일반적으로는 재외동포란 '해외 거주 우리 민족'을 통칭(統稱)하는 용어다. 그에 따라 현행 초등학교 5학년「도덕」교과서에서는 "우리와 뿌리가 같은 사람들. 다른 나라에 살면서도 우리의 전통과 문화를 보존하고 있는 사람들. 우리는 한 가족. 해외에서 우리나라를 빛내고 명예롭게 하는 데 크게 기여하는 사람들. 우리 민족이지만 외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로 설명하고 있다.[2)]

물론 우리 정부의 공식입장은 '재외동포=재외국민+외국국적동포'이다. 즉 김영삼 정부(1993년 2월~1998년 2월)는 세계화의 진전과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사업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재외동포가 거주국 안에서 한민족으로서 일체감을 가지고 모범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1997년에 재외동포재단을 설립하였다(1997년 3월27일 재외동포재단법 제정, 1997년 10월30일 재단 설립).

그리고 재단 설립과정에서 그동안 혼용되어왔던 교민(僑民), 교포(僑胞), 한교(韓僑), 해외한민족(海外韓民族), 재외국민(在外國民), 해외동포(海外同胞), 재외한인(在外韓人) 등등의 호칭들을 '재외동포'로 통일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외동포의 범위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또는 국적을 불문하고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생활하는 자"[3)]로 정하여 재외동포사회의 일체감 조성에 노력하였다.

이후 김대중 정부(1998년 2월~2003년 2월)는 외국영주권자나 시민권자들에 대하여 국내 출입국·체류 및 제반 활동상의 편의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재외동포의 법적지위와 출입국에 관한 법률'을 제정(1999년 9월2일)하였다. 이 법에서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장기거주하는 자"는 '재외국민'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써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외국국적동포'로 재외동포를 이원화(二元化) 하였다.[4)]

그러나 이 법의 제정취지가 주로 체류자격·거소신고 등 국내입국 이후의 사항에 국한되며, 특히 재외동포의 거주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입법이었음을 감안한다면 재외동포의 범주나 호칭은 가급적 재외동포재단법이 규정하고 있는 '재외동포'로 통일성 있게 부르는 것이 낫다고 본다.[5)]

2. 이주사와 지원방향

우리 재외동포 이주사는 아래 〈표1〉에서 잘 요약되어 있듯이 다양한 배경과 복잡한 경로를 거치면서 지난 150여 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현재진행형'이다.[6)]

이처럼 다양한 이주배경을 갖고 있는 우리 재외동포사회는 고향을 떠난 시기가 서로 다르고, 최초이주지와 최종정착지 간에도 차이가 있고, 모국과의 시간적·공간적 거리나 이념·체제에 대한

〈표1〉 해외이주 시기별 구분[9)]

구분	연도	이주배경과 주요 이주자	규모	특징
제1시기	조선 · 대한제국기 (19세기 중반 ~1910)	1860년대 대규모 흉년으로 인해 간도 · 연해주 등지로 불법월경한 사람, 미국 하와이 사탕수수농장 등에서 일하기 위해 합법적으로 이민선을 탄 사람 등	10만 여명	생계이민 · 농업이민
제2시기	일제강점기 (1910~1945)	1910년 국권 상실 후 중국만주로의 농업이주, 일본으로 자발적 이주, 정치적 목적의 해외망명, 1937년 스탈린의 중앙아시아 강제이주, 1939년 이후 일제의 강제징용 · 징병자 등	3백만여 명	망명이민 · 강제이민
제3시기	8 · 15해방 이후 (1945~1962)	1945년 해방 이후 극심한 사회혼란 속에서 발생한 밀항자, 6.25한국전쟁 부산물인 국제결혼이민, 전쟁고아 · 혼혈 해외입양 등 특수이주자, 여러 가지 국내외 사정으로 돌아오지 못한 미귀환동포[7)] 등	2백만여 명	특수이민 · 미귀환이민
제4시기	해외이주법 제정 이후 (1962~현재)	1962년 해외이주법 제정 이후 대한민국 국외로 이주한 100만 여 명[8)]과 현지 출생 외국국적 손 · 자녀, 1990년대 초 공산권과의 수교 이후 국내체류동포, 사할린 등지에서 돌아온 영구귀국동포, 해외이민생활을 청산하고 고국으로 되돌아온 역이민 고령자 등	1백만여 명 이상	자유이민 · 글로벌이민 · 귀환이민 · 역이민

체감 정도가 크게 달라 모국과의 동질성 유지나 현지에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매우 정교하면서도 전략적인 지원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각 지역별 특징과 현지 정착수준(〈표2〉 참조)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미국지역은 '주류사회 진출을 위한 한인정치력신장과 차세대동포와 모국 간의 유대강화' 중심으로, 일본지역은 '법적지위 향상과 민족교육 강화' 중심으로, 중국지역은 '경제 · 교육 · 문화 등 비정치분야 교류 증진' 중심으로, 그리고 러시아 · CIS지역은 '안정적 정착 지원과 모국과의 교류 지원' 중심으로 각각 차별화하여 지원하고 있다.[10)]

Ⅲ. 그동안의 성과

1. 역대 정부의 정책 성과

오랫동안 '단일민족의식'이 지배해온 우리 사회가 재외동포에 대한 관심을 본격적으로 갖기 시작한 것은 서울올림픽(1988) 개최가 계기였다. 물론 정부차원에서 재외동포문제를 다룬 것은 이승만 정부가 최초다. 1948년 9월31일 국무총리가 대독한 '대통령시정방침'에서 이승만(李承晩)은 남북분단과 월경금지, 국내정국 불안과 사회 · 경제적 곤란 등으로 미귀환상태에 빠져 있던 "재일(在日)동포와 재만(在滿)동포에 대한 구호 · 귀환 · 처우개선"[12)]을 신생 대한민국이 풀어야 할 최우선 과제라고 천명하였다.

그러나 당시 정부의 재정형편이나 외

〈표2〉 지역별 지원방향[11)]

구분	지역 특징과 정착 수준	지원 방향
미국	-이민역사 110년, 비교적 안정 정착 -이민1.5세, 2세 인구 증가 및 한국문화 이해 부족 -한국인 신규이민자 흡인력 약화	-1.5세~2세 주류사회(특히 정계) 진출 지원, 한·미 관계 발전 기여 -유권자 등록, 현지선거참여 지원 -타 소수민족과의 교류협력 강화
일본	-특별영주권자(총련계 포함)와 뉴커머(新이주자) 간 이질화 심화 -이민2~4세 인구 비율(96%), 재일본정주의식 강화 -국제결혼 증가로 귀화자 급증(누적귀화자 32.6만 추산)	-지방참정권 획득 등 법적·제도적 지위상승 지원 -한국어·한국역사교육, 모국유대감 강화 -새로운 민단 정체성확립 및 역량 변화 -조총련계 동포 포용 등 평화통일기반 조성
중국	-동포 최다 거주(재중조선족 192만, 재중한국인 37만 추산) -개혁개방 후 중국관내 및 해외(한국 포함)이주로 조선족집거지 해체 -중화(中華)중심 조국관·민족관 대두	-한중우호관계 증진으로 재중동포사회 지원 강화 -남북통일 이후 건설적 역할 및 기여 도모 -출입국 편의와 호혜적 고용분위기 조성으로 교류협력 활성화
러시아·CIS	-구소련 붕괴 이후 다양한 고려인사회 형성(1937년 연해주이주, 1937년 중앙아시아강제이주, 1940년대 사할린강제징용, 1990년대 연해주 등 재이주) -현지동화 가속으로 모국과의 유대감 약화	-거주국 안정정착(국적취득, 합법체류)지원 -경제자립 지반 위한 농업 지원 -모국유학 및 장학 기회 확대 -CIS 한글학교 운영 및 한국어교사 연수

교역량으로는 8·15 해방정국과 6·25 한국전쟁이라는 소용돌이 속에서 복잡 미묘하게 전개되고 있던 재외동포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13)] 그리고 1970년대 이후 남북 대치와 체제경쟁이 가속화되면서는 외교·안보적 요인이 상존하는 공산권 거주 재외동포나 북한 지지 재외동포들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88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발판으로 정부는 공산권까지 포함한 재외동포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적 마스터플랜을 구상하게 되었고[14)], 한·소 수교(1990)/구소련 붕괴(1991)/한·중 수교(1992)와 같은 탈냉전(脫冷戰)의 분위기 속에서 민족공동체(民族共同體)차원에서 중국과 구소련지역에 살던 동포들을 재외동포사회의 일원으로 자연스럽게 편입하였다.

그 결과 재외동포문제를 "국가발전과 민족통합에 직결되는 정책과제"로, 그리고 "전문성과 현장성을 요하는 전략과제"로 재인식한 정부는 재외동포재단 설립(1997년 10월) 이후부터는 범정부 차원에서 재외동포사회 발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기 시작하였다.

다음 〈표3〉는 정부수립(1948년 8월15일) 이후 역대 정부가 취한 재외동포 관련 주요 성과들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2. 재외동포재단의 사업 성과

우리 720만 재외동포[15)]들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인접국 3개국과 태평양 건너 우리의 동맹국인

〈표3〉 역대 정부의 정책 성과

시기	주요 성과	비고
이승만 정부	재일거류민단 공인(1948.9.8), 재외국민등록령 시행(1949.8.1)	한국전쟁(1950~1953)
박정희 정부	재외국민보조금 규정 마련(1962.4.14), 해외이주법 제정(1962.8.9), 재일교포법적지위협정 발효(1966.1. 17), 조총련모국방문사업 실시(1975.4), 재일민단 보조금 지원(1977~)	외무부 교민과(1961. 10.2), 영사교민국(1974. 9.19) 설치
전두환 정부	국민해외진출확대방안수립(1981.6.16), 해외이주정책일원화(1984.1.1)	헌법에 재외국민보호 조항(1980.10.27) 신설
노태우 정부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7·7선언, 1988), 서울올림픽 개최 1주년 기념 세계한민족체육대회(1989.8.9)	한소수교(1990.9.30), 구소련붕괴(1991.12.15), 한중수교(1992.8.24)
김영삼 정부	공산권동포 영주귀국 문호개방(1994.8.25), 재외동포의 통일역량결집대책 수립(1995.1), 세계화추진위원회의 재외동포사회활성화방안 대통령 보고(1995.12.18)	재외동포정책위원회(1996.12.4 개최), 재외동포재단(1997. 10.30 출범)
김대중 정부	재외동포 모국투자활성화 도모(1998.3),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정(1999.8.31), 세계한상대회 개최(2002.10.8)	IMF외환위기(1997.12.3~2001.8.23)
노무현 정부	방문취업제 실시(2003.3.4), 재외동포법 개정(2004.2), 세계한인의 날 기념(2007.10.5)	외국인정책위원회(2006.5.26 개최)
이명박 정부	재외동포 통합인물·단체DB 구축 시작(2009.3), 제한적 복수국적 허용(2011.1.1), 재외선거 실시(총선 2012.4.11, 대선 2012.12.20)	미국발 금융위기(2008), 유럽발 재정위기(2011)

미국 등 4개국에 전체 인구의 80% 이상이 집중 거주하고 있지만 분포지역은 무려 175개국에 달하며, 1962년 해외이주법 제정 이후 외국영주(外國永住)를 목적으로 합법적으로 이주한 사람만도 약 100만 명에 달하고 있다.[16] 또한 지역별·국가별 이주역사와 구성원의 성격이 다름에 따라 거주국 내에서의 정착수준과 생활수준도 제각각이다.

이런 상황에서 재외동포사회를 하나의 틀로 묶어 단순 지원하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하였다. 재외동포가 거주국 내에서 민족정체성을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재외동포 스스로가 권익과 지위를 향상시키면서 역량까지 결집하는 일은 더 어려운 일이었다.

따라서 재외동포재단은 이런 애로점들을 해소하고 모국과 재외동포사회를 하나로 연결시키기 위한 통로로서 출범(1997년 10월30일)하였다.[17] 당시 정부는 재외동포사회에 직접 개입하는 방식보다는 반관반민(半官半民) 형태의 재단을 활용하는 간접지원방식을 채택하여 거주국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최소화하는 한편 재단법에 규정된 목적사업과 정부가 위임하는 국정과제들을 중심으로 재외동포의 현지 안정정착과 상호유대감 유지를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였다.

2011년 12월 현재, 재외동포재단은 이사

〈표4〉 2011년도 사업비 현황[19)]

구분	내용	금액(백만원)	비고(%)
교육	재외한글학교지원, 재외한글학교교사육성, 민족학교(중국/러시아 · CIS) 지원, 재외동포장학사업	10,923	28.7
모국문화보급	코리안 페스티벌, 문학육성사업, 재외동포문화예술단체지원사업, 문화용품구입사업	1,197	3.1
차세대육성	세계한인차세대포럼, 세계한인청소년모국연수, 해외한인후손직업연수	2,321	6.1
교류증진, 지위향상	교류증진 및 권익신장활동 지원, 재일민단지원, 한인회관 등 건립지원	10,943	28.7
한인회역량결집	세계한인회장대회, 세계한인의 날	1,129	3.0
한상활성화	세계한상대회 개최, 한상대회 본부사무국 운영, 재외동포 경제인포럼, 한상네트워크활성화지원	1,805	4.7
조사연구	동포사회실태조사사업, 동포사회연구기반 조성	4,675	12.3
민간단체협력	민간단체지원사업	284	0.8
정보화 및 홍보	Korean.net 운영, 홍보 및 대언론지원, 한국어뉴스세계위성방송망 구축, 재외동포통합네트워크 구축	4,790	12.6
계		38,067	100.0

장 1명을 포함한 53명의 임직원과 사업비 380억 원으로 9가지 유형의 사업에 주력하고 있는데, 특히 지원사업의 경우 단위사업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사업추진 주체의 전문성(speciality), 해당 재외동포사회의 책무성(accountability), 그리고 국가이익과 재외동포사회 발전에 미칠 효과성(efficiency) 등을 고려하면서 재외동포 지원사업에 임하고 있다(〈표4〉 참조).[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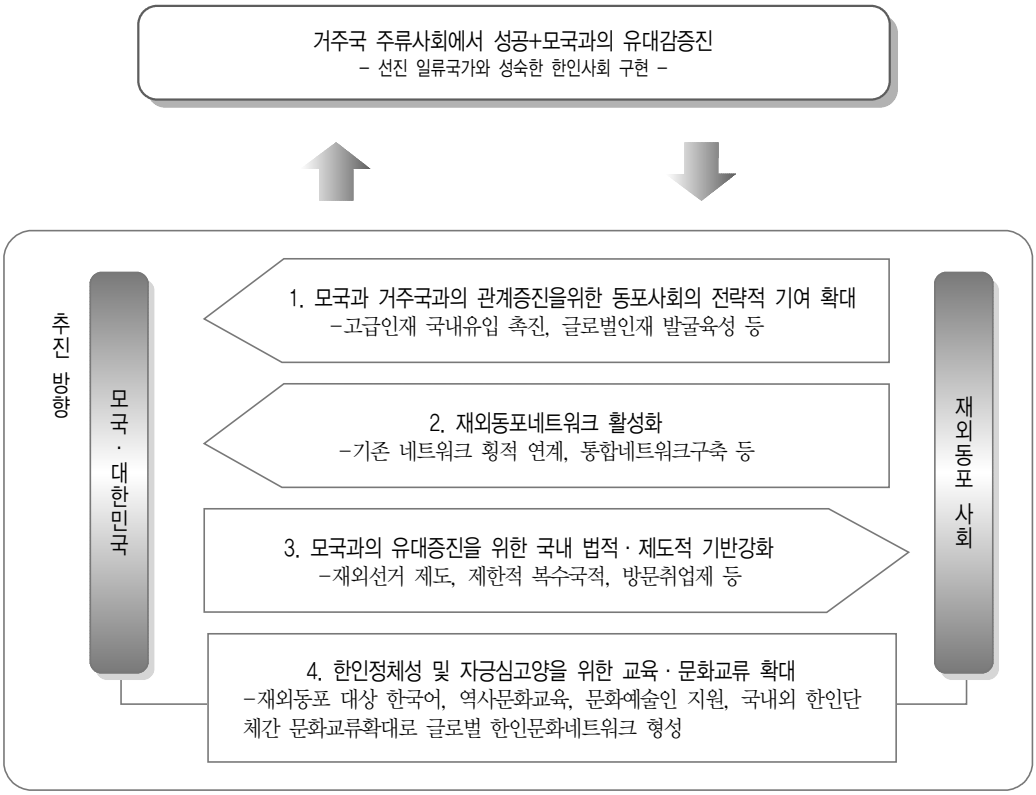
Ⅳ. 환경변화에 따른 지원전략

1. 재외동포네트워크 활성화

이명박 정부(2008년 2월~2013년 2월)는 전문가들과 재외동포사회의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수렴한 끝에 2009년, 제9차 재외동포정책위원회(2.5)에서 '신정부 재외동포정책 추진방향'을 제시하였다. 난산(難産) 끝에 옥동자(玉童子)가 나오듯이 새로운 재외동포정책은 정보소통의 채널이 다변화되고, 온 · 오프라인이 하나로 통합되는 SNS(Social Network Service) 세상의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였다.

〈그림1〉에서 '재외동포 네트워크 활성화' 항목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화살표가 모국과 재외동포사회 양쪽 모두를 향하도록 그려져 있다. 이는 여러 부처 · 기관에 흩어져 있던 기존 네트워크들을 횡적(橫的)으로 연계하는 동시에 정부와 재외동포재단 그리고 재외동포사회를 종적(縱的)으로 통합하여 재외동포사회의 '질적 변화'를 기대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 '선진일류

〈그림1〉 재외동포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0)



국가와 성숙한 한인사회 구현'에 있어 재외동포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전략적 판단이 최대한 반영된 결과였다. 이후 정부가 '재외동포 네트워크 구축'에 얼마나 관심이 많았는지는 지난 4년 동안 한 차례도 빠짐없이 네트워크 관련 의제가 재외동포정책위 또는 실무위에서 심의 · 보고[21]되었다는 사실에서도 가히 짐작할 수 있다.

2. 정책 우선순위와 맞춤식 해법

고차방정식(高次方程式) 해법의 기본은 고차식의 인수분해(因數分解, factorization)에서 출발한다. 지역별 상황과 여건에 따라 내용이 다르며, 우선순위도 다를 수밖에 없는 재외동포사회에 대한 지원 역시 공통요소와 개별요소를 최대한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재외동포의 국내법적 지위, 이주배경과 동기, 모국과의 유대관계, 정부의 관심 여부와 지원예산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특히 모국과 거주국 간의 관계나 거주국 내 상황 변화로 인한 재외동포사회의 환경에 민감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2012년 현재, 재외동포정책 추진의 우선순위[22]는 첫째, 재외동포 한인정체성

〈표5〉 지역별 맞춤식 해법[23)]

중국	–통일대비 장기적 측면의 '내실 있는 재중조선족동포지원방안' 조속히 강구 –동북3성 조선족민족학교 경쟁력 강화, 차세대우수인재 주류사회 진출과 정체성함양 지원 –급증하는 중국거주 재외국민 지원 강화 및 재중한국인과 조선족동포 상호발전방안 수립
미국	–동포사회 구심점으로서의 한인회관 기능 정립 –차세대단체활동 지원 및 동포자녀 민족정체성(한글교육) 확대 –현지정착 법률지원 및 시민권취득프로그램 지원 –한인정치력신장 및 현지주류사회 참여활동 확대 지원 –현지정부 및 타커뮤니티 주관행사 참여 독려 –미국체류 조선족동포들과의 교류 · 유대 강화 –한 · 미FTA 관련 업종별 네트워크 정교화
일본	–민단지원은 불가피하나 미래 대비 정체성확립, 자생력 · 통합력 확보 유도 –일본국적취득 귀화동포 포용 및 활동 지원 –일본지방참정권 획득 및 각종 권익옹호운동 지원 –재일3~4세 민족정체성 유지 및 모국방문 · 수학 지원 –재일한국학교, 일본학교내 민족학급 등 민족교육활성화 추진 –뉴커머단체 지원 및 우수인재(유학생) DB확보 –재일동포 민생 · 실태파악, 심층의식조사 실시 –재일동포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중장기발전 방안 마련
러시아 · CIS	–국가 · 지역별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맞춤형 동포지원정책 계속 추진 –현지정치력신장 지원과 산거(散居)지역고려인단체 운영 내실화 강구 –고려인협회와 한인회간 교류협력 및 호혜발전 강구 –고려인사회 미래리더십 변화에 따른 대응전략 수립 –한글교육 확대, 동포언론 및 문화예술단체 육성 –영주귀국사할린동포 정착 및 잔류자 일시모국방문 지원
유럽 · 중남미 · 아중동	–현지 한인사회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 및 한인회 · 한글학교 활성화 –한류와 한국문화를 국가이미지 제고에 적극 활용 –인터넷 · 위성방송을 통한 정체성교육 강화 –현지주류사회와 지속적으로 교류협력 추진, 후속이민자 확대방안 강구 –벽 · 오지지역 한인사회를 위한 교육 · 문화시설 건립 지원 및 정치불안지역 체류동포 보호
국내	–사회통합차원에서 국내체류동포 조기적응 지원 –재한조선족동포 지원 확대, 동포유학생3세의 국내정착 성공 사례 홍보 · 관리 –불법체류자 발생 방지, H-2비자 기한 만료자 대책 강구 –국적취득(회복)자 지원방안 강구

제고 및 역량강화 등을 위한 한국어 · 한국문화 · 안보교육 확대, 둘째, 통합네트워크 강화 및 차세대 재외동포 육성 · 활용기반 확대, 셋째, 러시아 · CIS지역 재외동포사회의 정착지원 강화 및 국내체류 · 귀환동포지원프로그램 추진, 넷째, 양대 재외선거(4월 총선 · 12월 대선)의 차질 없는 시행 등이며, 그밖에도 재외동포 복수국적 전면 허용, 방문취업제 대폭 개선, 한인정치력신장 확대 지원, 재외국민보호법 제정, 정부 전담기구(재외동포청) 설치 논란 등이 적절한 해법을 기다리고 있다.

〈표5〉는 200만 명 이상의 재외인구가 살고 있는 미국과 중국지역, 재외동포문제의 출발점인 일본지역, 민족동질성이

가장 희박한 중앙아시아지역,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새롭게 개척된 유럽·아중동·중남미지역, 그리고 한·중 수교 이후 20여 년 동안 서서히 형성된 국내 지역 등 각 지역별 동포사회 상황에 부합하는 맞춤식 해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내용이다.

3. 재외선거 참여 이후가 중요

최근 세인들의 관심이 유학생, 지상사 직원, 해외일시체류자, 해외영주권자 모두에게 허용된 2012년 4월 총선과 2012년 12월 대선의 재외선거에 얼마나 참여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우리 정치사에서 재외선거제도가 도입되기까지의 경과를 살펴보면 우선 제6대 대통령선거 당시(1967년 5월3일) 파월국군장병, 해외파견기술자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해외부재자 우편투표가 처음 실시[24]된 이래 제7대 총선(1967년 6월8일), 3선 개헌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1969년 10월27일), 제7대 대선(1971년 4월27일), 제8대 총선(1971년 5월25일) 등 모두 4차례의 해외부재자 우편투표가 실시되었다. 그러나 법정기한 내 투표지 회송이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자 재외투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1972년 헌법 개정과정에서 해외부재자 투표 자체가 폐지되었다.

그로부터 32년이 지난 2004년 일본, 미국, 캐나다 거주 재외국민들이 해외영주권자의 재외선거를 불허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자 2007년 6월28일 당시 헌법재판소는 1999년의 합헌 결정과 달리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려 영주권자를 포함한 모든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도록 관련법을 2008년 12월31일까지 개정할 것을 명령하였고, 2009년 2월5일 개정 공직선거법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19세 이상 모든 재외국민은 재외선거 참여가 가능케 되었다.[25]

물론 현실적으로 재외선거인의 경우, 등록신청시 공관을 직접 방문하여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 투표 당일 재외투표소를 다시 방문하여 투표해야 한다는 점, 재외선거를 통해 해외영주권자들이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이 불분명하다는 점 등이 작용하여 국외부재자 103,635명(남 57,728명/여 45,907명)과 재외선거인 19,936명(남 10,160명/여 9,776명) 등 123,571명(전체 유권자의 5.53%)만이 총선거에 참여할 자격을 얻었고[26], 실제 6일간의 재외선거(3월28일~4월2일)에서 투표권을 행사한 사람도 유권자수의 2.53%(선거인수의 45.7%)인 56,456명[27]에 불과하였다.

그 결과 한쪽에서는 앞으로 다가올 12월 대선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편투표 도입, 재외공관 외 추가투표소 설치, 순회접수 및 등록기간 확대 등 재외선거제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재외선거 비용(향후 1회당 530억 원), 예산투입 대비 낮은 성과 예상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고 있어 재외선거를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2012 재외선거가 재외동포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재외동포의 존재가치를 대내외적으로 인식시키는 좋은 계기가 되겠

지만 참여인수의 규모나 실제 투표에 미칠 영향력(예: 캐스팅 보트) 등 결과 여부에 상관없이 재외동포사회가 자기 역할을 새롭게 정립할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탈북자대표나 국제결혼자대표처럼 재외동포를 국회에 비례대표로 진출시킬 수도 있고, 재외동포출신 각료를 배출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한·미FTA 체결·발효나 일본군위안부결의안 하원통과에서 이미 경험했듯이 현지에서 정치력을 신장하고 자신들의 권익을 보호하며 주류사회에 진출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자각할 필요가 있다. 최근 세계은행(World Bank) 차기 총재로 선출된 김용(미국명 Jim Yong Kim)이나 주한대사로 부임한 성김(Sung Kim, 한국명 김성용) 등 이민 1.5세들의 부상을 예로 들지 않더라도 차세대동포들이 10년 내에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의 선출직 의원이나 장관급 이상 각료로 진출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명확한 일이다.

V. 미래지향적 지원이 필요하다

"재외동포는 누구인가?"(Who) 이 질문 속에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뉘앙스가 담겨 있다. "우리가 왜 재외동포에 대해 관심 가져야 하는가?"(Why), "재외동포사회 발전을 위해 정부나 국민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What), "재외동포는 모국과 거주국 어디에다 기여·충성하고 있는가?"(Where), "재외동포는 어떤 방식으로 모국 발전에 동참하고 있는가?"(How), "재외동포사회가 정체성 유지, 차세대 육성, 모국과의 네트워크 강화를 강조하는 시기는 언제인가?"(When) 등이 그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재외동포사회처럼 서로 다른 이주배경과 동기를 가진 재외동포들이 혼재되어 있는 '복합다층구조(複合多層構造)'의 재외동포문제를 다룰 때 어떤 접근법이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가장 전략적일까?

우선 재외동포의 이주역사와 배경, 이주경로와 정착 및 재이주과정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둘째, 재외동포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역량과 대륙별·국가별·지역별·도시별·세대별·분야별·계층별 요구사항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 셋째, 재외동포사회의 변화 트렌드를 사전에 예측하고, 이에 맞는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넷째, 재외동포와 내국민 간, 재외동포와 재외동포 간 소통·교감·연대가 쌍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다섯째, 거주국 내 주류사회진출과 모국과의 긴밀한 연계를 기반으로 모국과 재외동포사회, 그리고 모국과 거주국 모두가 호혜발전 할 수 있어야 한다. 여섯째, 재외동포사회의 단합과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지원방향이 마련되어야 한다. 일곱째, 글로벌하면서도 지역적, 보편적이면서도 민족적인 특성을 반영한 정체성교육이 강구되어야 한다. 여덟째, 2012년 재외선거 도입 이후 다양한 루트를 통해 전달되고 있는 재외동포사회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며, 이들을 의견을 최대한 전달·반영해야 한다.

〈그림2〉 재외동포사회 미래발전 구상 개념

무엇을?	어떻게?	왜?
재외동포사회 정체성 확립	지원역량강화 및 유연한 대책 강구	시대변화를 선도하는 미래기반 구축
-재외동포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산 -보호 및 권리주체로서의 자각 확대 -재외동포사회 역량에 걸맞은 역할 모색 -거주국발전 및 모국발전 기여방안 확대	-동포지원업무의 질적 수준 및 전문성 향상 -지역간 갈등 및 차별 적극 해소 -새로운 재외동포정책 수립(중요사안별 및 국가전략별 개입에 대한 가이드라인) -내국민 지지층 확대(정책결정자 및 오피니언리더 포함)	-재외동포 관심사 및 우선순위 수시 변화 -재외선거 이후 재외동포 긍정적 이미지 제고 필요 -국가경쟁력확보 및 호혜발전에 필요한 자생력 확보 -차세대동포인재 육성과 현지정치력 신장 요구 급증

아홉째, 차세대들이 모국에서 상시적으로 한국어교육과 한국문화를 습득하고, 정체성 함양과 인적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재외동포교육문화연수원'(가칭)을 건립해야 한다.

언제나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것"이다. 지정학적으로 일본과 중국,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끼여 있는 우리의 미래도 미리미리 준비해야 한다. 그 중 하나가 재외동포사회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지원·활용하며, 효과적으로 보호·육성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재외동포재단은 민족의 정체성과 고유문화를 유지·발전시킴과 동시에 국가이익과 글로벌한인네트워크 발전을 구현하기 위해 미래지향적인 지원전략을 구상 중에 있으며, 모국과 재외동포사회가 상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실천할 계획이다. 외교

註

1) Pew Research Center, Faith on the Move: *The Religious Affiliation of International Migrants* (2012) 보고서 참조. 1960년의 8천만 명(당시 세계인구의 2.6%)과 비교하면 엄청나게 늘어난 수치다.
2) 교육과학기술부, 『도덕 5』(지학사) 186~205쪽 참조.
3) 법률 제5313호(제정 1997.3.27) 참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재외동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한민국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영주권을 취득한 자 2. 국적을 불문하고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생활하는 자.
4) 법무부 공고 제1999-38호(1999.10.12) 참조.
5) 전자(前者)는 '이상론(理想論)-혈통주의(血統主義)-자민족중심주의-원칙론(原則論)'을, 후자(後者)는 '현실론(現實論)-과거국적주의(過去國籍主義)-자국민중심주의-상황론(狀況論)'을 각각 대변. 중간지대에 교육부 소관의 재외국민의교육지원등에관한법률(2007.1.3 제정, 2008.3.21 제2차 일부개정)에 따른 '재외국민'이 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외국민"이라 함은 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말한다.
6) 교육과학기술부, 『생활의 길잡이 5』(지학사, 2012), 168쪽. "10. 우리는 자랑스러운 한인. '재외동포가 세계 여러 나라에 살게 된 까닭을 알아봅시다'" 참조.
7) 조선은행 조사부, 『조선경제연보 1948』(조선은행 1948), 19쪽. 1947년 5월 현재 남조선과도정부 추산 미귀환자는 일본 60만, 남만주 60만, 동만주 50만, 소련 20만, 하와이 1만, 중국본토 2천, 북미 1천5백, 남미 1천 등 1,916,500명이었다.
8) 2010년 현재 938,733명. 외교통상부 홈페이지(http://www.mofat.go.kr/consul/overseascompatriot/index.jsp) 참조.
9) 권희영, 『한국과 러시아: 관계와 변화』(국학자료원, 1999), 김게르만, 『한인이주의 역사』(박영사, 2005), 국사편찬위원회, 『재외동포사 편람』(2005), 이광규, 『못다 이룬 꿈』(집문당, 2006), 최진욱, 『남북한 재외동포정책과 통일정책과정에서 재외동포의 역할』(통일연구원, 2007), 외교통상부, 『한국외교 60년, 1948-2008』(2009) 등을 종합적으로 참조하여 재구성.
10) 외교통상부, 「우리나라의 재외동포정책」(2010.6), 7~10쪽.
11) 김경근, 앞의 자료(2012) 참조.
12) 국회사무처, 『제1회 국회 제78차 국회본회의 속기록』(1948.9.31), 22쪽.
13) 자세한 내용은 김봉섭, 「이승만정부 시기의 재외동포정책」(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10) 참조
14) 외교통상부, 앞의 책(2009), 310쪽.
15) 외교통상부 재외동포과, 「국가별 재외동포 현황」(2010.12 기준). 재외국민 2,796,003명(영주권자 1,148,891. 일반체류자 1,317533. 유학생 329,579), 외국시민권자 4,472,747명. 재외동포 총계 7,268,750명.
16) 외교통상부 홈페이지(http://www.mofat.go.kr/overseascitizen/policy/index.jsp) 참조.
17) 재외동포재단법(제정 1997.3.27, 법률 제5313호) 제1조(목적) 이 법은 재외동포재단을 설립하여 재외동포들이 민족적 유대감을 유지하면서 거주국 안에서 그 사회의 모범적인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외동포재단법(제5차 일부개정 2010.3.17, 법률 제10096호) 제1조(목적) 이 법은 재외동포재단을 설립하여 재외동포들이 민족적 유대감을 유지하면서 거주국에서 그 사회의 모범적인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8) 재외동포재단, 「재외동포재단 2011 연차보고서」 미발간 원고(2012) 참조, 2011년 초청사업의 경우, 미국(802명), 중국(503명), 일본(266명), 캐나다(127명), 러시아(87명), 호주(49명), 독일(52명), 인도네시아(27명), 뉴질랜드(23명) 등 81개국에서 총 2,396명이 참가.
19) 재외동포재단, 위의 글(2012) 참조.
20) 「제10차 재외동포정책위원회 자료」(2009.7.20), 제13차 재외동포정책실무위원회, 「안건3. 재외동포네트워크 활성화 및 활용방안」(외교통상부 재외동포정책과, 2008.5.28) 참조.
21) 재외동포네트워크활성화 및 활용방안(제13차 실무위, 2008.5.30), 700만 재외동포 네트워크 구축(제14차 실무위, 2008.12.3), 700만 재외동포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제9차 정책위, 2009.2.5), 재외동

포 통합네트워크 구축사업추진현황 및 계획(제15차 실무위, 2009.5.27), 재외동포 통합네트워크 구축 추진현황(제17차 실무위, 2010.1.3, 제11차 정책위 2010.1.19), 차세대 재외동포네트워크 구축방안(제19차 실무위, 2011.1.13, 제12차 정책위 2011.1.19), 재외동포 통합네트워크 구축사업(제20차 실무위, 2012.2.1)

22) 제13차 재외동포정책위원회(2012.2.8)

23) 김경근, 앞의 자료(2012) 참조.

24) 당시 해외유권자는 8만5천 명 정도로 추산(파월국군 4.2만, 해외기술자 1.5만, 미국거주자 1.1만, 일본거주자 8백, 영국과 프랑스거주자 각 5백 등)

2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홈페이지(http://ok.nec.go.kr) 참조. 국외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단속이나 처벌이 어렵다는 점, 주재국과의 외교마찰이 우려된다는 점, 미국이나 중국처럼 면적이 넓은 지역의 경우 공관접근성까지 불편하다는 점, 불법적으로 복수국적을 소지한 사람의 투표를 원천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는 점, 재외선거 때문에 지역별·계층별·세대별·국적소지별로 동포사회를 분열시킬 우려가 높다는 점, 재외선거관리를 위한 시설·인프라가 태부족하다는 점 등 외에도 본국의 주권(主權)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사는 해외영주권자들까지 재외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 찬성론(贊成論), 반대론(反對論), 신중론(愼重論), 배제론(排除論) 등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다. 특히 차세대들 사이에서는 현지 주류사회에서의 정치력신장과 한인역량결집이 더욱 시급하다는 의견도 만만찮다.

26) 신청·등록마감(2011.11.13~2012.2.12) 결과 해외유권자 전체의 5.57%에 해당하는 124,350명 신청·신고. 그러나 명부작성기간(2.22~3.2)과 열람·이의신청(3.3~3.7) 절차를 거친 결과 재외선거인 명부에는 123,571명만 등재. 제19대 총선(4.11)에 대한 재외선거가 3월 28일(水)부터 4월 2일(月)까지 107개국 158개 재외투표소에서 일제히 실시(오전 8시~오후 5시)

2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재외투표 마감상황」(2012.4.3) 참조. 〈주요 3개국 투표율〉 일본 52.57%, 미국 44.81%, 중국 32.88%. 〈대륙별 투표율〉 유럽 57.04%, 아프리카 56.79%, 중동 50.85%, 미주 49.07%, 아시아 41.07%.

협회활동 도비라 자리

21세기 국제관계의 최대 관심사는 전 세계, 특히 동북아지역에서 미·중의 역학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 주제와 관련, 앞으로도 미국이 계속 지배적 영향력을 유지할 것이라는 견해와 미국을 대체하여 중국이 지역 패권국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견해가 충돌하고 있다.

한국외교협회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2012년 5월4일(金)「전환기의 미·중 관계와 한국외교, 무엇이 문제인가?」제하의 제2회 정책대토론회를 개최하고 21세기 동북아정세 속에서 한국외교의 과제 및 그 정책방향을 진지하게 모색해 보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 토론회에서 발표된 이춘근 박사의 "미·중 패권 경쟁과 한국의 선택"과 이정남 교수의 "중·미 관계의 변화와 한국외교에 대한 함의" 등 두 편의 논문을 소개한다.

미·중 패권 경쟁과 한국의 선택**

이 춘 근*

Ⅰ. 서 론

한반도와 그 주변은 물론 세계적인 차원에서 불안정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시절이다. 인간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무엇인가 급히 변하는 상황은 불안정을 초래하기 마련이다. 서서히 변하는 경우 안정이 유지되지만 급격한 변화 혹은 구조적인 변화는 안정을 해친다. 국제정치에서의 불안정은 기존의 질서를 깨트리고 기존 질서가 깨져나가는 과정에서 전쟁과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불안상태가 수반된다.

*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본 논문은 필자가 현재 한국경제연구원 2012년 개인 연구 프로젝트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과 한국의 전략적 선택"의 집필을 위해 작성해 둔 글과 그동안 발표했던 관련 논문들을 취합, 정리한 것임.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은 국제정치적 변동이 보다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다. 국제정치의 변동을 불러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인 강대국들의 국력 변화가 눈에 띄는 시절이다. 지난 반세기 동안 소련과 치열한 냉전을 전개했던 미국은 궁극적으로 소련에게 승리, 1990년대 이후 유일 초강대국의 지위를 향유하고 있었다. 미국은 소련을 붕괴시킨 이후 느긋한 마음에서, 혹은 소련과의 45년 전쟁에 지친 나머지, 1990년대 10년 동안 특별한 대 전략이 없는 세월을 보냈다.

미국에 대한 도전자도 보이지 않았고 미국은 외교정책이 없어도 잘 살 수 있었던 기간이 1990년대 10년이었다. 미국의 분석가들은 이 10년을 '역사로 부터의 휴일(Holidays from History)'이라 묘사하고 있을 정도로 미국은 편안한 세월을 보냈다. 1990년대 초반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점령하는 도발이 있었지만 미국은 이라크 군사력을 신속하게 격멸시킨 후 쿠웨이트를 해방시켰다. 쿠웨이트를 점령한 이라크군을 축출하는 전쟁에서 구소련마저도 미국편을 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으며 미국은 이 시기를 새로운 국제질서(New World Order)라고 명명 했었다.

미국은 1990년대 10년 동안 국방비를 거의 1조 달러나 절약할 수 있을 정도였고, 미국의 경제는 세계 선진국 어느 나라보다 양호한 발전을 지속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미국이 역사의 휴일을 즐기는 동안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하게 빠른 속도로 국제구조가 변하고 있었다. 국제구조의 변화요인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미국의 세계 패권 장악을 누구보다도 싫어한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의 적개심이었고, 하나는 중국의 급속한 국력 성장이었다.

먼저 미국을 경악하게 만든 것은 이슬람의 도전이었다. 2001년 9월11일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은 미국의 심장부를 예상치 못한 수단으로 강타했다. 본토에서 미국 국민들이 그렇게 많이 죽은 날은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다. 남북전쟁 당시 앤티에텀(Antietam)에서의 치열한 전투 이후, 단 하루 동안 3,000명 이상의 인명 피해가 발발한 적은 존재하지 않았다. 더구나 사망자의 대부분이 민간인인 경우는 미국 역사 이래 초유의 일이었다.

미국이 즐기던 역사의 휴일은 그렇게 끝났다. 카플란의 말대로 역사가 되돌아온 것이다(Return of History).[1] 이후 지금까지 반테러 전쟁의 시대가 10여 년째 지속되는 중이다. 미국이 반 테러전쟁을 치르며 국력을 허비하고 있는 동안 중국의 경제력은 그야말로 일취월장, 2010년 결국 일본의 GDP를 능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등극하게 되었다. 미국은 테러와의 싸움이라는 비전통적(non-traditional)적 패권 도전에 대응하고 있는 와중에 중국의 도전이라는 전통적인 패권 도전에도 직면하게 된 것이다.

중국의 미국에 대한 도전은 영국에 대한 프랑스의 도전, 영국에 대한 독일의 도전, 미국에 대한 소련의 도전과 유사한 패권 도전이라고 볼 수 있다. 비록 그 노골적인 정도가 아직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국제정치에서 패권 경쟁은 도전국의 의도 보다는 도전국의 능력으로 판단하는 것이 상례다. 구소련(현재의 러시아)이 지금 미국과 경

쟁하지 않게 된 이유는 소련이 미국을 좋아하게 되어서가 아니다. 소련의 힘이 약해져서 미국에 도전 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한때 일본이 미국의 패권에 도전할 나라라고 인식된 시점이 있었다. 일본의 경제력이 미국의 2/3 수준에 육박했을 때 많은 식자들이 일본을 차세대 패권국이라고 인식했었다. 물론 1990년대 이후 지속되고 있는 일본 경제의 침체는 미국에 대한 도전국 명단에서 일본이라는 이름을 삭제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점에서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나라는 중국이다. 중국이 도전장을 낸 것은 아니지만 중국의 국제 행동(international behavior)이 점차 전통적인 강대국의 행동을 닮아가고 있다는 사실, 미국이 중국의 급격한 성장에 관심을 가지고 대응하기 시작했다는 사실, 그리고 주요한 국제문제에서 두 나라가 점점 더 갈등적이 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 패권 경쟁이 이미 전개되고 있다고 말해도 좋을 상황이 되었다.

이제까지 한국은 '미국과는 동맹', '중국과는 전략적 동반자'라는 수사(修辭, rhetoric)를 가지고 미·중 양국의 국제관계 속에서 존재할 수 있었다. 이 같은 정책이 가능했던 이유는 아직 미국과 중국의 경쟁관계가 노골적으로 나타나기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 미국과 중국의 충돌이 보다 구체적으로, 그리고 본격적으로 야기될 경우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은 동맹, 중국은 전략적 동반자'라고 말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게 될 것이다.

앞으로 중국의 국력 성장이 지속된다고 가정 할 때, 미국과 중국이 갈등 관계에 빠져 들어갈 것이라는 사실은 거의 운명적으로 확실하다. 두 나라가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사상이 다르기 때문에 패권 경쟁관계로 빠져드는 것은 아니다. 미국과 소련의 경우 체제와 사상이 달라서 경쟁을 벌였지만 프랑스와 영국, 영국과 독일의 경우 사상과 체제가 유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과 전쟁으로 빠져들어간 적이 여러 차례 있었다. 미·소 관계를 깊이 연구한 브레진스키 박사는 냉전이 한창 진행될 당시 소련이 자본주의 국가가 되어도 혹은 미국이 공산국가가 되어도 미국과 소련은 경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두 나라는 본질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대 제국(colliding empire)이기 때문이라고 본 것이다.[2] 이미 언급했던 것처럼 미·소 패권 경쟁이 종식 된 것은 소련이 더 이상 미국과 경쟁 할 수 없을 정도로 힘이 약해졌기 때문이었다.

중국의 국력이 앞으로도 수십 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강한다면, 중국은 패권국으로서 미국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물론 중국의 경제성장이 앞으로 30년 동안 지속될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 최근 많은 전문가들이 중국 경제의 경착륙을 이야기 하고 있으며 이미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본 에세이는 중국이 과연 미국을 능가하는 패권국으로 성장 할 수 있는가의 문제에 관해서도 논하고자 한다. 중국이 패권국이 될 것인지, 그렇지 못할 것인지에 대한 올바른 판단 역시 대한민국의 대전략을 위해 결정적으로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본 에세이는 오

늘 한국에서 열띠게 논의되고 있는 '중국이냐 미국이냐'라는 논쟁의 한편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작성된 것이다. 필자는 미국이 미·중 패권경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한국의 국가안보를 위해서 앞으로도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본 에세이는 우선 미래의 미국과 중국은 어떤 관계에 놓이게 될 것인가에 관한 기왕의 설명들을 종합하고(제Ⅱ장), 미국이 중국의 도전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항 할 것인지를 분석(Ⅲ장)하며, 대한민국이 앞으로 취해야 할 전략적 선택(Ⅳ장)을 논하고자 한다.

Ⅱ. 미·중 관계의 미래

1. 혼란스런 미래 예측

중국의 국력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 전문가들의 관심거리가 된 것은 이미 20년도 넘는 일이다. 1990년대 초반 이래, 중국의 급속한 국력 성장이 초래할 미래 세계 정치에 대한 충격을 논한 논문과 저서들은 가히 봇물을 이루고 있다고 말해도 될 정도다.

21세기의 두 번째 10년기(decade)를 맞이한 현재, 미·중 관계에 관한 분석은 국제정치학 최대의 연구 주제가 되고 있다. 그런데 국제정치학에 관한 분석들이 대게 그렇듯, 중국의 급성장이 초래할 미래 세계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도 학자들의 견해는 천차만별이다. 중국의 급성장과 미래에 관한 새로운 연구 결과들은 그렇지 않아도 복잡한 이론과 주장들로 이미 혼란스러워진 미·중 관계의 미래, 세계 정치의 미래에 대한 논의에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을 뿐이다.

우선 중국의 급성장이라는 사실(facts)에 대해서부터 전문가들의 견해가 일치하지 않는다. 중국의 급성장을 현실로 받아들이기보다 오히려 중국을 거대한 거짓말로 치부하는 견해조차 존재하고 있다.[3] 사실 세계의 권위 있는 기관들인 미국의 CIA, 세계은행, IMF 등이 매년 발표하는 중국 GDP에 관한 자료들은 그 차이가 10% 이상 나는 경우도 흔하다. 반면 이 기관들이 발표하는 미국, 일본의 GDP는 거의 차이가 없다. 중국이 발표하는 공식적인 자료에 대한 의문은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 저우톈융(周天勇) 교수가 2009년 4월 언론 인터뷰에서 "현재의 실업률 통계는 학자나 해외 연구기관의 연구자는 물론, 일반 군중들도 믿지 않는다. 심지어 통계를 내는 공무원들도 믿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던 사실에서도 보여진다.[4]

그러나 중국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통계 자료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하더라도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중국 경제가 급속하게 발전해 왔다는 사실을 전면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중국의 급속한 경제발전은 자명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다만 중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중국은 급속한 경제 성장의 결과로 미국을 앞서는 세계 패권국으로 군림하게 될 것인지 등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자료가 제시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학자

들은 현실적으로 주어진 자료의 범위 내에서 중국의 미래를 연구하고 중국이 변화시킬 세계의 미래를 추론하고 있을 뿐이다.

전문가들이 중국의 급속한 국력 성장의 현실과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관심은 크게 두 가지 질문 중 하나로 귀결되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당연히 극도로 다양하다. 두 개의 질문은 첫째, 중국의 급속한 국력성장으로 인해 차후 미국과 중국은 심각한 패권 경쟁을 벌이게 될 것인가? 둘째, 중국은 미국을 제체고 세계의 패권국이 될 수 있을 것인가이다.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부상에 관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은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룩했으며 곧 미국을 앞지를 것인가? 중국의 군사력은 미국과 맞먹는 것일까? 우리나라는 중국과 무역이 제일 많으니 미국 보다는 중국과 잘 지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우리는 북한 급변사태에 개입해야 할 것인가? 그러지 않아야 할 것 아닌가 한다. 왜냐하면 중국이 들어올 것이고 그 경우 전쟁이 발발할지도 모를 일 아닌가? 중국은 차세대의 세계 패권국이 될 것이며 미국은 곧 몰락할 것인가 등등.

이상의 질문들에 대해 어떤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나라가 취해야 할 미래 국가전략의 모습은 대폭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미국의 몰락이 분명한데 오로지 미국과의 동맹을 강조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반대로 중국의 부상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는 상황인데 몰락하는 미국보다는 부상하는 중국과 더욱 돈독한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주장도 문제가 있다. 미국과 중국이 갈등을 벌이지 않는데 두 나라가 심각한 경쟁에 빠져 들것이라고 가정하고 정책을 만들어도 안 되며 두 나라가 오랫동안 평화적으로 지낼 것이라고 가정했다가 다른 상황에 직면해도 안 된다. 미국과 중국이 심각한 경쟁에 빠져든다면 미국은 동맹, 중국은 전략적 동반자라는 현재의 정책을 지속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가올 미·중 관계의 미래를 가능한한 객관적, 현실적 시각에서 분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우선 미·중 관계의 미래 전망에 대한 다양한 설명들을 정리해 본다.

2.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 전망(1): 미국과 중국은 경쟁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역사적으로 중국에 대해 우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던 나라다. 19세기 말엽 태평양으로 진출하기 시작했던 미국은 중국의 거대한 시장에 대해 환상을 가지고 있었으며, 당시 급속히 부상하며 군국화 되고 있던 일본과는 달리 중국에 대해서는 대단히 우호적인 인식을 하고 있었다. 사실 근래 미국 대통령들 중에도 중국의 부상이 미국에 오히려 유익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다.

닉슨 대통령은 중국과 국교를 수립, 중국을 사실상의 동맹으로 만듦으로써 소련과의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었고 궁극적으로 냉전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중국경제의 급격한 부상이 그 실체를 완전히 드러낸 1990년대 클린턴 대통령 이래 오바마 대통령에 이를 때

까지 중국에 대해 적대적인 입장과 정책을 취한 미국 대통령은 없었다. 제43대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경우 중국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내기는 했지만 중동에서의 전쟁에 경황이 없었고 중국에 대해 구체적인 전략을 취하지 못했다.[5] 클린턴 대통령은 중국에 너무 우호적이어서 오히려 미국의 국익을 침해 했다고 비난하는 우파 지식인들도 있을 정도다.[6]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을 미국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로 인식, 중국과 미국을 G2라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최근 오바마 대통령의 대중국 및 동아시아 정책은 중국의 부상에 대해 미국이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7] 키신저 박사와 같은 현실주의 정치학자들도 중국의 부상이 반드시 미·중 패권 경쟁을 초래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8]

미국과 중국의 미래를 대단히 낙관적으로 분석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경제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앞으로 세계 패권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이라는 점이 다수의 견해와는 전혀 달리, 미국과 중국은 협력할 것이며, 두 나라가 경쟁과 갈등을 벌이기는커녕 이미 하나의 경제체제로 통합되어가는 중이라는 주장도 있다.

미국과 중국의 경제를 이미 하나의 융합경제가 되었다고 주장하는 재커리 캐러벨(Zachary Karabell)은 현재의 중국을 미국과 융합된 초 경제체제라고 분석한다. 그는 미국과 중국 양국은 지난 30년 동안 경제운명 공동체로 결합되어버렸다고 주장한다. 캐러벨은 중국과 미국사람들이 낡은 사고방식에 빠져 민족주의적 태도를 취하는 경우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두 나라는 상호 호혜적인 경제공동체가 되었다고 본다. 캐러벨은 중국 지도자들이 미국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미국의 공채를 사들이고 있다는 사실, 금융위기를 당한 미국을 사실상 구해줬다는 점 등을 예시하며 결국 미국과 중국은 경제적으로는 하나의 체제 '차이메리카(Chimerica)'가 되었다고 주장한다.[9]경제적으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은 싸울 수도 없고 싸워도 안 된다는 주장이다. 캐러벨의 분석은 마치 1차 대전 이전 노만 엔젤의 미래에 대한 낙관론을 읽은 것과 같은 희망적인 분석을 제시한다.

미국의 월마트(Wal-mart)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중국제 값싼 상품을 보면, 북경의 KFC, McDonald 레스토랑을 꽉꽉 채우고 있는 중국인들을 보면 캐러벨의 주장이 빈말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러벨 류의 주장은 미·중 관계를 경제적인 측면으로만 한정시키고 있다는 편향성을 극복할 수는 없다.

미국과 중국이 심각한 경쟁관계로 빠져들어 갈 경우라도 미국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류의 설명도 존재한다. 예로써 MIT의 중국학 교수인 에드워드 스타인펠드(Edward Steinfeld)는 중국의 부상이 서방을 위협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중국이 벌이고 있는 게임이 바로 서구가 벌여왔던 게임의 룰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중국의 경제 발전이 미국의 몰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중국의 경제발전은 미국의 상업적 패권(commercial

supremacy)을 오히려 강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스타인펠드는 중국이 근대화 하고 경제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서방(미국)이 정한 규칙을 따르고 있으며 그 결과 미국의 경제 및 규제체제는 오히려 더욱 지배력이 강화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10]

스타인펠드와 유사한 입장을 경지하는 중국의 전문가들도 많다. 중국의 독특한 경제발전 모델은 존재하지 않는 다는 주장을 전개하는 중국계 미국 학자 천즈우는, 미국의 경제 원칙을 중국도 성실히 추종해야 하리라고 주장한다.[11] 미·중 경제관계의 미래에 특히 중요한 금융자본 영역에서 종사하는 중국의 경제학자 혹은 관리를 양떼라고 한다면 미국의 월스트리트 법률가들은 늑대에 해당한다고 보는 중국 전문가들도 있다.[12] 이들의 주장 역시 미·중 관계를 너무나도 경제적인 측면에 한정해서 분석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국제정치사를 보면 경제적 상호의존이 반드시 국가 간의 평화 증진에 기여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곧 알 수 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전 약 10년 동안의 유럽은 역사 이래 국가 간의 교역이 가장 활발한 시점이었다. 당시 국가들의 무역거래량은 세계화의 시대라는 오늘보다 오히려 더 그 비중이 높을 정도였다. 지오프리 블레이니 교수의 말대로 그들은 '전쟁을 하지 말고 장사를 합시다.'라는 구호를 외쳤는지 모른다.[13] 그러나 유럽 국가들의 대단한 경제적 상호의존은 1914년의 참혹한 전쟁(제1차 세계대전)을 방지하는데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했다.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 상호 의존의 심화가 미·중 간의 평화를 확실하게 보장할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1차 대전의 전쟁사는 국가들의 경제적 상호의존과 전쟁은 상관관계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3.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 전망(2): 미국과 중국은 필히 패권경쟁을 벌일 것이다

1949년 이후 공산중국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다수설은 한국전쟁에 중국이 참전해서 침략자의 낙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중국을 방어적인 국가로 인식하는 것이었다. 중국이 한국전쟁에 참전한 것도 중국의 침략성이기 보다는 중국의 방어적 태도로 분석하는 것이 유행했다.[14] 중국을 연구하는 학자(주로 미국학자)들 사이에서 이 같은 생각은 1990년대에도 지속되었다. 급속히 성장하는 중국의 국력은 향후 국제체제를 불안전하게 만들 요인이 될 것이라는 경고가 있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방어적인 국가라는 1970년대 이후의 다수설적 견해는1990년대 후반까지도 그 지위를 대체로 유지하고 있었다.

미국의 역사학자와 정치학자들은 냉전종식 이후 중국을 보다 더 폭넓게, 그리고 깊이 있게 연구하기 시작했고 중국에 대한 기존의 생각을 바꾸는데 기여했다. 중국을 방어적인 점잖은 거인이 아니라, 현실적인 국제정치적 감각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보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1990년대 이후 나오기 시작한 미국의 각종 권위 있는 연구서들은 대체로 중국을 현실주의적 전략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

라로 분석하고 있다.

하버드대학교의 정치학 교수인 존스톤(Alastair Ian Johnston)은 중국의 고전 병서 무경칠서(武經七書)를 모두 분석한 후 "중국 명나라의 대외정책은 중국의 병법서에 스며있는 공세적인 군사전략에 기초를 두고 있다"고 주장한다.[15] 미국 부시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에 큰 영향을 미쳤던 펜실베니아 대학의 아더 월드론(Arthur Waldron)의 그의 만리장성에 관한 연구 및 다른 저서들에서 중국의 대외 전략이 공격적인 사상에 근거한 것임을 논하고 있다.[16]

첸 지안(Chen Jian) 교수는 한국전쟁 당시, 기존의 해석(즉 중국은 할 수 없이 방어적인 관점에서 한국전쟁에 개입했다는 설명)과는 달리, 중국은 스스로, 적극적으로 공세적인 역할을 담당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17] 중국이 한국전쟁 당시 주저했다기 보다는 오히려 대단히 공세적이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하버드 대학의 Ross Terrill은 「신 중국제국」이라는 저서에서 중국은 역사적으로, 그리고 오늘날까지 '제국'이었다는 사실을 체계적으로 논증하고 있다.[18] 미국의 학자들은 물론 일본, 중국의 학자들도 중국이 현실에 불만을 품은 강대국이며 궁극적으로 미·중 패권 경쟁이 야기되고 말 것이라는 견해에 동조하고 있다.

이상은 모두 중국을 현실주의적 국제정치 관점에 능숙한 나라로 묘사하고 있는 다양한 학술적 저술들을 일부 소개한 것이다. 이들은 1990년대 유행했던 약간은 덜 학술적이며, 대중의 감성을 자극하는데 치중한 느낌이 드는 '중국위협론'[19]과는 달리 바로 위에서 인용한 저술들은 상당한 학문적 권위를 갖추고 있는 중국위협론 이라는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 특히 Ross Terrill의 저서는 중국을 전통적으로 제국주의적 팽창주의적, 공격적 속성을 가진 나라라고 분석하며 중국의 제국주의적 전통은 오늘의 현대 중국에서도 그대로 남아 있다고 분석한다.

중국과 미국은 운명적으로 경쟁 관계에 빠져들 것이라는 주장은 국제정치의 현실주의이론의 대표적 학자인 존 미어셰이머(John Mearsheimer) 교수에 의해서도 적극적으로 주장 되고 있다. 미어셰이머 교수 역시 중국의 국력 증강을 예사로이 볼 수 없다고 말하며 미국은 향후 중국의 도전에 대해 대응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미어셰이머 교수는 위에서 소개한 학자들과는 달리 중국의 전략 문화를 공격적인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 차이점이 있다.

미어셰이머 교수는 중국이 다른 나라보다 특별히 공격적이거나 팽창적인 것이라기 보다 모든 강대국은 궁극적인 안보를 위해 누구라도 패권적 지위를 추구할 수밖에 없다고 전제한다. 미국에게 있어 패권을 추구하는 중국은 위협이며, 동시에 패권적인 미국은 중국에게 위협인 것이다. 미어셰이머 교수는 자신의 저서 한국어판 서문에서 "특히 그간의 놀라운 경제성장을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지속하게 될 경우 중국은 막강한 군사력을 갖추게 될 것이며, 마치 미국이 서반구를 지배하는 것처럼 아시아 대륙에서 패권적 지위를 추구하게 될 것이다. 중국이 패권(覇權)을 추구하는 것은 중국 문화가 본질적으로 공격적이라든가, 중

국의 지도자들이 잘못된 길로 인도되기 때문이 아니다. 중국이 패권을 추구하는 것은 그것이 국가의 생존을 위해 가장 좋은 보장 장치이기 때문이다." … "물론 미국은 중국이 아시아에서의 패권국이 되는 것을 저지하려 할 것이다. 미국은 세계무대에서 미국에 근접한 도전국의 존재를 용인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중국과 미국 사이에는 냉전 당시 미국과 소련의 관계와 유사한 심각한 안보경쟁이 야기될 것이다."[20]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와 같은 중국의 국력 성장이 지속될 경우 국제정치 체제의 힘의 구조상 미·중 경쟁은 필연적인 것이라는 주장이다.

냉전이 한창인 무렵 브레진스키 교수는 소련이 공산주의를 포기하더라도, 혹은 미국이 공산 국가가 된다 해도 미국과 소련은 갈등관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미국과 소련이 강대국인한 그들은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제국(colliding empire)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국제정치 현실주의적 분석에 의하면 지금 러시아와 미국이 갈등 관계에서 벗어난 것은 러시아의 이데올로기가 바뀌었기 때문이 아니라 러시아의 국력이 미국과 라이벌이 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해야 할 것이다.

국가(주로 강대국들)들로 하여금 갈등관계에 들어가게 하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정치, 경제적 차이라기 보다는 국가들은 궁극적인 안보를 위해 모두 '패권국'이 되려하기 때문이며 이 같은 노력은 궁극적으로 충돌하기 마련이었다. 이 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보다 훨씬 막강해질 중국은 미국과의 충돌은 필연적인 것이다. 힘이 맞먹는 최고로 막강한 국가들이 오랜 기간 동안 사이좋게 지냈다는 사실은 현실의 인류 역사에서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중국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고 이미 전문가들의 압도적인 다수가 결국 미국과 중국은 20세기 전반 독일과 영국이 벌였던 심각한 패권 경쟁을 벌이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저명한 평론가 조지 윌(George Will)은 "중국의 성장은 100년 전 독일의 급속한 성장을 연상케 한다. 독일의 성장 문제는 두 차례의 잔인한 전쟁을 유발했다. 이 같은 일이 없도록 대비해야 할 것이다."[21]라고 말하고 있다. 다수의 전문가들이 이미 미국과 중국 사이에 새로운 냉전 시대가 개막되고 있다고 말하기도 하며 중국과 미국 사이에 전쟁이 다가오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필자는 중국이 점차 강해짐에 따라 중국은 자신이 옳다고 인식하는 국제정치적 관점을 국제정치에 투여하려 할 것이라고 본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유교적 국제질서관(Confucian World Order)'을 가지고 있는 나라다. 서양의 평등개념과 달리 중국은 국가 간의 위계질서가 확립되고 그것이 제도적(조공-책봉관계)으로 받아들여질 때 국제사회에 평화와 질서가 가능하다고 믿는 전통이 있다. 동양 국제체제가 오랫동안 상대적으로 평화로웠던 이유는 중국식 국제질서관이 성공적으로 작동되었기 때문이었다고도 보인다.[22] 그러나 미국이 생각하고 있는 서구적 전통의 국제정치 질서 관점은 중국적 국제질서 관점과 판이하다. 결국 두 가지 상이한 관점이 충돌할 가능성은 적지 않다고 보여지는 것이다.

Ⅲ. 미·중 패권 경쟁의 승자는?

미·중 양국이 패권 경쟁에 빠져 들것이라고 가정한다면 그 다음 관심은 과연 누가 승리할 것이냐에 귀결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미국과 중국이 경쟁을 벌일 경우 누가 궁극적인 승자가 될 것이냐의 분석 역시 극도로 다양하다. 다양한 분석은 크게 세 가지의 상이한 주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미국은 패권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이라는 견해, 둘째, 중국이 미국을 꺾고 궁극적인 패권국으로 부상하게 될 것이라는 견해, 셋째, 미국은 앞으로 지금과 같은 패권을 유지하지 못할 것이지만 중국이 미국을 대체하는 패권국으로 등장하는 것도 불가능할 것이라는 견해 등이다. 필자는 이 세 가지 견해 중에서 첫 번째 견해, 혹은 수정된 세 번째 견해를 가지고 있다. 즉 미국은 패권을 유지할 것, 혹은 패권국의 수준은 아닐지라도 미국은 압도적인 1위의 지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보는 편이다.[23)]

필자가 미·중 패권경쟁의 승자로써 미국을 지목하는 이유는 우선 미국의 국력이 생각하는 것처럼 사양길에 있는 것이 아니며 중국의 국력이 생각하는 것처럼 탄탄대로의 성장가도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유는 미국은 중국의 국력이 더 이상 성장해서 미국이 다루기 어려울 때까지 상황을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 때문이다. 즉 미국은 중국이 미국과 맞먹는 강대국이 되기 이전 중국의 도전을 제압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리라고 보기 때문이다. 2012년 초반인 현재, 미국은 눈에 보일 정도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반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1. 미국과 중국의 국력분석

가. 미국의 국력

특히, 한국 국민의 다수가 미국의 몰락(decline of American power)을 신봉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미국의 국력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 그리고 한 나라의 국력이 단 1~20년 사이에 성장하거나 몰락하는 것은 아니다. 부시의 대외정책을 극렬히 비난했던 민주당 계열의 국제정치학자 브레진스키 박사는 2004년 저서에서 “일본은 미국과의 경쟁에서 탈락했고, 유럽이 미국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으로 통일을 이룩해야 하며 중국이 미국과 대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두 세대 동안 빈곤문제를 해결해야 한다.”[24)] 고 주장했다. 그는 2012년 저서에서도 미국의 몰락은 필연도 아니며 실제적인 현상도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한다.[25)]

국제정치에서 다극체제가 보다 안정적인 것임을 주장하며 미국이 홀로 세계를 이끌어가기보다는 강대국들 여러 나라가 함께 세계를 이끄는 것이 좋다고 주장하는 키신저 박사는 2001년의 저서에서 “21세기를 맞이하는 이 시점, 미국은 과거 어떤 위대한 제국들도 맞먹을 수 없을 정도의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즐기고 있다.”며 미국의 압도적인 지위에 대해 경탄하고 있었다.[26)]

또한, 2000년대 이후 미국의 경제력이 쇠락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견해들이 많지만 미국의 경제력이 1990년대 동안 대

폭 성장했다는 사실은 잘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냉전 직후 기성의 강대국으로서는 놀라운 수준의 경제 발전을 기록, 압도적인 지위를 확립하고 있었다. 레스터 서로우 교수는 "1990년대를 거치는 동안 세계 500대 기업의 숫자는 미국 151에서 238개로 일본은 149개에서 50개로 떨어졌다. 미국과 동등하던 일본 산업 경쟁력은 미국의 1/5이 되었다"며 미국의 경제력 증가를 묘사한다.[27)]

미국의 경제력 증강추세가 2001년 테러공격을 당한 이후 약해진 것은 사실이고 2008년 미국 발 경제위기가 미국의 경제력을 의문스럽게 만든 것은 사실이지만 미국의 경제는 중국에 의해 추월 당했다던가 미국의 종합 국력이 쇄락하고 있다고 말 할 수는 없다. 2012년의 미국은 미국 건국 이후 경제력, 군사력에서 가장 막강한 시점이다. 2011년 미국의 GDP는 미국 사상 최고였고 2011년 미국의 국방비 역시 미국 역사이래 최고였다. 미국이 불필요한 이라크, 아프간 전쟁을 치르느라 국방비를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피폐해지고 있다는 주장 역시 정확한 자료에 의해 증명되지 못하고 있다. 현실은 오히려 그 반대다.

미국이 천문학적인 전쟁비용을 지출하고 있음은 사실이지만 미국이 중동에서 벌이는 두 개의 전쟁을 치르기 위해 지불하는 돈의 비중은 그동안 치른 그 어떤 전쟁보다도 작다. 미국은 2차 대전을 치르는 동안 GDP의 약 40%를 국방비에 투입했고 한국전쟁 당시는 12% 이상, 월남전쟁 당시는 약 9%, 냉전시대는 6%를 국방비로 지출했다. 2001년 이후 현재까지 중동에서 치르고 있는 전쟁 비용을 포함한 미국의 국방비가 미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냉전 시대의 2/3에 불과한 4% 정도에 불과하다.

그리고 미국의 국력은 지금도 지속적으로 강해지고 있다. 경제력과 더불어 국력의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는 군사력의 경우 미국에 도전할 수 있는 나라는 한동안 없을 것이다. 워싱턴 포스트의 군사전문기자인 다나 프리스트(Dana Priest)는 "2002년 당시 미국은 미국 다음으로 강한 나라보다 군사력 측면에서 10배 강하다."고 단언하고 있다. 미국의 군사력은 과학에 의지한 군사력으로써 현재 미국의 국방과학과 맞먹을 수 있는 나라는 없다. 미국의 국방 연구개발비는 세계 제2위의 국방비 지출국의 총 국방비를 능가한다.[28)]

미국의 교육이 피폐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미국의 대학은 세계 최고라고 말하는데 아무런 손색이 없다. 스페인의 한 홈페이지는 세계 대학 수천 개의 랭킹을 매년 발표하고 있는데 2007년 7월 세계 100대 대학 중 53개 대학이 미국에 있었다. 중국 대학 중 세계 100대 대학에 들어간 학교는 하나도 없다. 2012년 1월 발표된 자료는 세계100대 대학 중 59개 대학이 미국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동 자료는 세계 20대 명문 대학 중 18개 대학이 미국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국력이 앞으로도 오랜 기간 동안 세계 1위의 자리를 유지할 것이라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근거가 될 것이다.[29)]

미국이 21세기에도 세계 1위의 패권국으로 군림할 것을 말해주는 또 다른(필자는 이를 미·중 경쟁에서 가장 결정적인 요

인 중 하나로 본다) 지표는 인구통계학적(demographic) 자료다. 지구의 모든 선진국들이 겪고 있는 인구 감소 및 노령화 현상에서 그래도 가장 양호한 나라는 미국이다. 개방된 이민정책으로 수많은 우수한 젊은이를 끊임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미국은 노동인력의 지속적인 증가 비율이 선진국 중에서 가장 양호한 편이고 인구의 노령화 수준도 일본, 한국, 특히 중국에 비해 훨씬 양호하다.[30]

나. 중국 고도 경제 성장의 지속 가능성

요즈음 다수설은 마치 중국은 앞으로 별 문제가 없이 경제성장을 무한정 지속할 수 있는 나라처럼 묘사된다. 중국이 미국을 앞설 것이라는 유명한 책의 저자인 마틴 자크는 "중국이 과거 수 십년과 같은 성장을 앞으로도 지속 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논의를 이끌어가고 있다.[31] 그러나 이 세계 역사상 60년 이상 고도 경제성장(9~10%)을 지속한 나라는 없다.

중국이 지금과 같은 고속 성장을 지속하는 경우 2030년대에 미국과 경제 규모가 같아질 것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이미 중국의 성장률이 꺾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중국이 발표하는 경제 지표의 신뢰성을 의심하는 노벨수상 경제학자인 폴 쿠르그먼은 중국의 부동산 버블이 붕괴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다.[32] 쿠르그먼의 경고와 거의 같은 무렵 중국 청화대학의 경영학 교수인 패트릭 쇼반스 역시 중국의 부동산 버블이 이미 터진 것인지도 모른다고 경고하고 있다.[33]

중국이 궁극적으로 미국을 앞서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은 조지 프리드맨에 의해 가장 체계적으로 제시되었다. 프리드맨은 21세기 100년을 예측한 그의 저서 제5장 "CHINA 2020 PAPER TIGER"에서 중국은 부상하기는커녕 오히려 몰락할지도 모른다고 분석하고 있다.[34] 프리드맨은 미국은 2100년에도 역시 현재와 같은 세계 제1의 강대국으로 남는다고 주장하며 중국이 미국을 대치한다는 것은 전혀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고 단정한다. 프리드맨이 제시하는 "2020년의 중국은 종이호랑이"라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중국이 지난 30년 동안 급속한 경제 성장을 했다는 사실이 앞으로도 중국이 지속적으로 고속 경제 성장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2) 중국은 고속성장이 멈추게 되는 경우 정치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된다. 그렇게 될 경우 중국은 주요 강대국이 될 가능성은 고사하고, 지금과 같이 통일된 국가를 유지하기도 어렵다.

(3) 고속 경제성장이 멈추는 경우 사회 전체가 흔들거릴 허약한 구조다.

(4) 중국은 지정학적으로 보아 섬과 같은 나라다. 뻗어나가기 어려운 나라라는 의미다.

(5) 중국은 자금을 정치적으로 할당하고 경제 통계를 조작하는 나라다.

(6) 중국의 경제 성장이 중국에 이득이 되는가 여부도 문제다. 경제 성장이 중국 경제를 강화시키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경제가 어려우면 중국의 경제도 동시에 어렵게 되는 대단히 취약한 구조다.

(7) 중국의 분열적 요인은 심각하다. 예로써 상하이는 베이징과의 관계보다 로스앤젤레스와의 관계에 더 큰 신경을 쓰고 있다.

(8) 중국은 미국의 해군에 도전할 수 없다. 중국 해군은 현재 대만 해협을 건너기에도 역부족이다. 미국 해군은 언제라도 중국의 모든 상선을 격침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9) 경제의 고속성장이 멈출시 중국은 분열될 수도 있다.

(10) 중국이 세계 패권에 도전하기에는 국내적인 문제가 너무 산적해 있다.

필자는 중국이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 중 가장 결정적인 것은 인구통계학적 불안정이라고 본다.[35] 현재 중국의 출산율은 1.7(즉, 중국 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 출산하는 아동의 평균 숫자)인데 이는 중국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게 될 것임을 의미한다. 이 같은 출산율이 지속될 경우, 중국의 각 세대는 그 앞의 세대보다 인구 숫자가 약 20%씩 적어지게 된다. 1980년 당시 중국인들의 연령 중앙가(median)는 22세였는데 2005년 중국인들의 연령 중앙가는 32세, 현재와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30년 중국인 연령 중앙가는 41세가 된다.

즉 2030년 중국 인구의 절반은 42세 이상, 나머지 절반이 40세 이하라는 말이다. 중국의 인구 고령화를 마치 쓰나미와 같은 충격이 될 것이라고 비유하는 에버슈타트 박사는 1980년 당시 중국에는 65세 이상의 노인 1명당 일을 하는 국민이 12명이었지만 현재는 1:9 그리고 2030년에는 1:4로 그 비율이 변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물론 노령화 현상은 중국에만 고유한 것은 아니다. 많은 선진국들이 이 같은 과정을 겪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이미 노령 국가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일본경제가 중국에게 밀리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2005년 현재 일본인구 중 65세 이상 비율은 20.6%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중국이 일본을 앞섰다고 (2010년 전반기 중국 GDP가 일본을 앞섰다 한다) 우쭐대고 있지만 중국이 일본 수준으로 노령화 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2025년 흑룡강성 같은 지역은 인구 중 65세 이상 비율이 21%가 될 것이라고 예측되며 현재 세계최고 연령 중앙가가 일본의 43.2세인데 2025년 중국 31개 성 중 9곳이 현재 일본 보다 오히려 연령 평균이 더 높은 사회가 될 것이라고 예측된다. 그런데 중국의 노령화는 일본이나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할 때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측면에서 결정적으로 불리하다. 일본 등 선진국은 국가가 노령화되기 이전에 모두 부자가 된 나라들이다. 중국의 경우는 국가가 부자가 되기 이전에 노령화가 된다는 사실이 문제이며, 특히 중국 중에서도 경제가 낙후된 지역에서 노령화가 제일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거의 재앙 수준의 문제다. 에버슈타트 박사는 이를 중국 사회에서 이미 서서히 진행되고 있는 인간적인 비극(a slow motion humanitarian tragedy already underway)이라고 묘사한다.

중국의 인구통계가 말해주는 또 다른 비극, 혹은 재앙은 여자와 남자의 인구 비율이다. 인구 학자들은 남자와 여자의 비율이 107:100 이상 되는 것은 도저히 있으면 안 될 상황이라고 판단한다.

이미 고속 경제성장이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현상들이 노정되고 있는 중국이다. 중국 외곽의 이민족들이 독립을 추구

하고 있으며(티베트, 위글) 불만에 찬 중국 시민들의 폭동 수준의 시위는 2011년 현재 년 30만 건에 이른다.[36] 더구나 미국은 이미 중국의 도전에 대항하려는 듯 아시아에 미국의 정책 초점을 본격적으로 맞추기 시작하고 있다. 이제 본격적으로 미·중 경쟁이 시작되었고 앞에서 제시한 다양한 이유를 근거로 본 필자는 중국이 미국을 극복, 21세기 패권국으로 나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2. 21세기 세계 정치의 리더는 미국

투키디데스는 '급속히 증강하는 아테네의 국력 증가를 두고만 볼 수 없었던 스파르타의 두려움'으로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설명한다. 20세기 초반 독일의 급속한 국력 증강은 1~2차 세계대전의 원인이 되었고, 20세기 중반 소련의 급속한 힘의 증강은 미·소 냉전의 원인이었다. 인류가 절멸될지도 모른다는 절박한 공포감 때문에 미·소 패권 경쟁은 열전(熱戰, Hot War)으로 비화하지 않고 냉전(冷戰, Cold War)으로 끝날 수 있었다. 전쟁으로 인한 물리적 파괴는 없었지만, 소련은 전쟁 패배에 버금가는 국가 및 체제 붕괴의 쓴 맛을 보았다.

21세기 국제체제는 또 다시 강대국 두 나라가 패권 경쟁을 벌이는 모습을 노정하고 있다. 1978년 개혁·개방을 실시한 이래 연평균 9~10%의 경이적인 경제 성장을 지속한 중국은 2010년 일본을 앞질러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등극했고 화평굴기(和平崛起, 평화롭게 일어선다), 도광양회(韜光養晦, 빛을 감추고 어둠 속에서 힘을 기른다) 등 일종의 외교적 꼼수로써 강대국으로서의 부상을 숨기려 하고 있었다. 그러나 국제정치는 본질상 화평굴기, 도광양회가 불가능한 영역이다. 지켜야 할 것이 대폭 늘어났을 뿐 아니라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군사력, 특히 바다와 해로의 안보가 절대적으로 중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일본열도, 오키나와, 필리핀, 인도네시아를 연결하는 선을 그어놓고 이를 '제1 도련선'이라 명한 다음, 제1 도련선 서쪽의 바다인 동해, 황해, 동지나해, 남지나해 모두를 중국의 내해처럼 간주하는 '반 접근, 지역 거부'전략을 전개하기에 이르렀다.

미국은 중국의 이러한 전략을 A2/AD 전략이라고 부른다. Anti Access/Area Denial 이라는 중국의 전략은 해양 자유의 원칙을 신봉하는 해양대국 미국의 전략과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 그동안 '중국의 경제성장은 세계를 위해서 좋은 것', '미국과 중국은 경제적 상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긴장관계로 빠져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이상주의가 급격히 소멸하고 있다. 미국은 금년 1월5일 아시아를 중시(重視)하겠다는 새로운 국방전략 지침을 발표했다.

신 국방전략 발표에 앞서 클린턴 국무장관은 21세기의 지정학은 아시아에서 결정될 것이며 미국은 그 결정의 한복판에 있을 것을 천명한 바 있었다. 미국은 중국이 더 이상 커지기 전에 중국의 부상을 통제하려는 전략을 가동하고 있다. 역사상 나타난 패권전쟁의 전철을 되풀이 하지 않는 길은 사전에 대처하는 것이며 2011년 말부터 부쩍 동아시아를 강조

하기 시작한 미국의 외교 군사전략은 미국이 가능할 때 미리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려는 것이라고 보인다.

미국과 중국이 본격적으로 경쟁을 하고 있는 오늘날 세계 도처에서 미·중 패권에 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2011년 7월 캐나다에서 행해진 Munk Debate는 대단히 재미있는 시사점을 주는 것 같다. 논쟁의 주제는 21세기는 중국의 시대인가?(Does the 21st Century belongs to China?)였고, 저명한 학자들인 하버드대 역사학과 Niall Ferguson, 중국 칭화대의 David Li가 이 주제에 대해 그렇다고 대답하는 패널이었고, Kissinger 박사와 Time지의 Fareed Zakaria 박사가 '아니다'는 패널에 참석했다. 논쟁이 시작되기 전 이 주제에 관한 여론 조사는 찬성 39%, 반대 40%, 모름 21%였다. 논쟁이 끝난 후 행한 여론 조사 결과는 찬성 38%, 반대 62%로 바뀌었다. 체계적인 논쟁을 들은 일반인들은 모두 중국 부상론이 과장된 것임을 알게 된 것이다.[37]

Ⅳ. 한국의 선택

최근 대한민국 외교관들이 중국을 평할 때 '중국인들의 거만함(Chinese Arrogance)'이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하고 있다. 사실 중국 사람들이 대한민국은 물론 세계 여러 나라를 안하무인(眼下無人)식으로 대하는 태도를 보통 사람들도 느낄 수 있을 정도다. 중국의 정치가나 학자들은 마치 자신들이 세계의 패권을 차지한 나라의 학자들인 것처럼 거들먹거리기도 하고, 중국의 기업가들은 마치 자기들이 세계에서 제일 부자인 것처럼 행동한다. 경제력과 군사력이 막강해진 강대국의 행동은 어느 나라나 유사하다. 그중에서도 특히 중국의 국력 증강이 더욱 노골적이며 위협적으로 보이는 데는 몇 가지 특별한 이유가 있다.

첫째로, 중국은 지난 100년을 제외하면 1,000년 이상 세계 최고, 최강의 경제력 군사력을 보유했었던 나라였고, 아시아 세계의 패권을 유지하고 있었던 나라다. 즉 중국은 지배를 하던 입장의 나라였지 지배를 당하던 처지의 나라는 아니었다. 중국은 가운데서 빛나는(中華) 나라로서 당연히 세계를 지배해야 한다는 관점이 중국인들의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었는데 오늘 그런 현상이 다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부상이 중국의 행동을 더욱 건방지게 보이도록 만든 두 번째 이유는 중국의 국력증강이 너무 단 시간 만에 이루어졌다는 사실 때문이다. 자신의 행동을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국력이 빠르게 성장한 결과, 중국은 21세기 현대 세계에서 강대국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에 대해 배우고 연습하고 적응할 시간이 적었다. 마치 졸부들의 천박한 행태와 오늘 중국의 행태를 비유할 수 있을 것 같다.

세 번째로 중국 정치가들은 지금 매년 8% 성장을 유지해야만 겨우 국내안정을 도모 할 수 있는 절박한 처지에 놓여있다. 중국은 현재 1억2천만 이상의 농민들이 도시에 와서 뿌리를 내리지 못한 채 공장 노동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들이 사회 불안정 세력이 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해서라도 중국은 고도성장을 멈출 수 없는 상황인데 과연 지금과 같은 고도성장이 앞으로도 수십 년 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 국내적으로 초조하고 다급한 나라는 대외 정책에서도 조급성, 다급함이 반영된다. 중국은 남지나해의 모든 섬을 중국 령이라고 선포함으로써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갈등관계에 빠져 들어갔다. 중국과 대결을 해야 하는 동남아시아 제국들은 대부분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구상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에게는 대단히 불리한 국제환경이 될 것인데, 사실상 중국 스스로 그처럼 불리한 국제 환경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북한의 반인권적 행동에 대해서도 강대국다운 태도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최근 야기된 탈북자 북송 문제가 그러했고 4월13일 북한이 전 세계의 경고를 무시하고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에도 중국의 입장은 애매모호한 것이었다. 중국은 지정학적 사고에 얽매여 한반도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억지로 북한 편을 두둔하고 있으며 통일을 방해, 결국 대한민국의 대전략에 심각한 장애 요인이 되고 말았다.

중국은 오랫동안 주변의 나라 한국을 속방(屬邦)정도로 취급했다. 물론 중국은 한반도에 존재했던 국가들의 자주성을 일부 인정해 주기는 했는데 그것은 한반도에 있던 나라를 중국과 동격으로 취급해서가 아니었다. 중국은 상국(上國)이고 그 외 중국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중국의 하국(下國, 아래 나라)이었다. 하국들이 중국을 상국으로 인정하고 알아서 모실 때, 즉 조공-책봉(朝貢-册封)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비로소 중국과 주변 나라들 사이에는 질서와 평화가 가능했다.

조선이 상국으로서의 중국의 권위를 인정하고, 조선은 중국의 하국이라는 징표로써 사신을 정례적으로 중국 조정에 파견하고, 코가 땅에 닿을 정도로 머리 숙여 큰 절을 하고(叩頭, Kowtow), 가져온 귀한 공물을 중국 황제에게 바치는 예를 행하면 중국은 조선 왕의 정통성 혹은 부분적인 자율성을 인정해 주고, 아울러 조선이 공물로 바친 것 보다 더 융숭한 선물을 주어 돌려보냈다.

서양 사람들은 이 같은 관계를 정상적인 국제관계라고 보지 않는다. 동등한 정치 단위들의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중국 사람들의 마음 한구석에는 이 같은 전통적인 국제정치 사상이 아직도 남아 있다. 이 같은 전통적 관점에 더불어 중국은 한반도에 대해 특별한 전략적 의미를 부여하고 이에 입각한 외교정책을 실행한다. 그러나 이제 대한민국은 중국과 다시 과거와 같은 종속적인 국제관계를 맺을 수 없다. 천안함 사건 이후, 그리고 김정일 사망이후 중국이 보인 행태는 본질상 과거와 다를 바 없다.

중국은 '한반도의 안정'이 중국의 가장 큰 이익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중국이 말하는 한반도의 안정이란 북한이 붕괴되지 않는 것, 북한이 대한민국에 흡수 통일 당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천안함 사건을 도발한 북한에 대해 한국이 선택한 최저수준의 온건한 대책이었던 한·미 합동 훈련에 대해서도 중국은 격렬한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심지어 어떤 중국 외교관은 "미국이 없었다면 한국을 손 봤을 것"이라는 악담(惡談)도 했다. 동

해에서 훈련을 마친 미국 항모 조지 워싱턴호가 동지나해를 거쳐 베트남의 다낭항에 입항했을 때 중국은 베트남에게 "앞으로 후회하게 될 것"이라는 조폭수준의 막말도 했었다.

그래서 중국의 대북한 정책, 대한반도 정책은 우리의 대북 정책과 궁극적으로는 상치(相馳)된다. 우리는 북한을 변화시켜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국가로 만들고, 나아가 통일을 이룩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지만 중국은 어떤 형태로든지 북한이 중국에 크게 의존하는 나라로 남아 있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이 원하는 한반도는 지금과는 다른 '현상이 변경된 한반도'이지만 중국이 원하는 한반도는 지금과 같은 '현상을 유지하고 있는 한반도'인 것이다.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는 중국의 국력을 극도로 과대평가한 나머지 통일을 시도해도 안 되고, 북한 급변 사태가 도래할 시 북한의 질서를 유지하고, 평정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군이 북한에 진입하는 것도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같은 중국 공포증에서 탈피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국가 목표를 이룩하기 위해 보다 당당해져야 한다. 통일은 우리 민족 최대의 전략 목표다. 이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모든 장애를 극복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가는 길에 중국도 장애가 될지 모른다. 장애가 된다면 극복하면 되는 것이다.

우리의 선조들은 국가를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중국의 전신인 수나라, 당나라와의 대 전쟁도 불사했었다. 중국이 최근 막강해졌지만 대한민국 역시 수십 년 전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막강해졌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국가대전략에 동조하고 이를 지원하는 세계 최강 미국을 동맹국으로 두고 있다. 보다 적극적인 마음과 자세로 우리 앞에 닥칠 중국의 부상(中國의 浮上)이라는 국제정치의 거센 파도를 헤쳐나가야 한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은 한반도 주변에 형성되는 국제정치 구조 변화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에 대처해야 한다. 필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만약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패권을 차지하는데 성공한다면 그때도 우리가 한·미 동맹을 붙들고 있을 수는 없을 것이다. 역으로 미국이 건재한데 중국의 위세에 눌려 중국의 눈치를 보는 정책도 올바르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모택동의 한국전쟁 참전 과정을 연구한 한 역사학자가 강대국 국제정치에 늘 영향을 받아온 우리나라 사람들이 명심해야 할 글을 자신 연구의 서론에 기록해 둔 것을 보았다. 본 논문의 결론으로 삼아도 좋을 것 같아 인용한다. "일본 침략시대가 마감된 이래 한민족의 운명에 거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미국의 영향력이 옅어지면 또 다시 중국에 사대하는 시대로 되돌아가야 하는가? 주변 4대 강국의 어느 일방에도 휘둘리지 않는 강력한 국가로 거듭나야 하지 않겠는가!"[38] 외교

註

1) Robert Kagan, The Return of History and the End of Dreams (New York: Knopf, 2008).
2) Zbigniew Brezezinski, The Game Plan: How to Conduct US-Soviet Contest (Boston: The Atlantic Monthly Press, 1986) 제1장 The Imperial Collision
3) 예로써 프랑스의 Guy Sorman은 중국의 현실과 미래를 '거짓말'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을 정도다. Guy Sorman, The Empire of Lies : The Truth about China in the Twenty First Century (New York: Encounter Books, 2008)
4) 조선일보 2009.11.7. 중국 정부가 발표하는 통계가미국 일본 수준의 정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이 중국의 급속한 경제발전을 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는 없을 것이다.
5) Warren I. Cohen, America's Response to China: A History of Sino-American Relations (5th. ed.;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10),p. 278. Warren 교수는 부시 행정부의 대중관계를 schizophrenic relations (정신분열적 관계)라고 명하고 있다.
6) Edward Timperlake and William C Triplett,II. Year of the Rat: How Bill Clinton Compromised U.S. Security for Chinese Cash (Washington D.C.: The Regnery Press, 1998.
7) Foreign Policy 2011 November-December 호에 발표된 Hillary Clinton 국무장관의 글, 그리고 2012년 1월5일 발표된 미국 국방성의 신 국방전략보고서는 미국의 아시아 중시 정책 혹은 대중국 정책을 분명히 표현하고 있다. 오바마는 2007년, 중국은 적도 친구도 아니지만 '경쟁국'이라고 말한 바 있었다.
8) Henry Kissinger, On China (New York: The Penguin Press, 2011). 그러나 키신저 박사는 중국이 미국을 앞서서 패권국이 되지는 못할 것이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9) Zachary Karabell, Super Fusion: How China and America Became one Economy and Why the World's Prosperity Depends on It (New York: Simon and Schuster, 2009) 이 책의 한국어 번역본은 송연수(역) 슈퍼퓨전 (서울: 컬처 앤 스토리, 2010)
10) Edward S. Steinfeld, Playing Our Game: Why China's Rise Doesn't Threaten the Wes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11) 천즈우(陳志武) 박혜리 남영택 (역) 「중국식 모델은 없다」 (서울: 메디치 2011).
12) 류진쥔(劉軍洛) 황선영, 한수희(역) 「월스트리트의 반격」 (서울: 에쎄 2010).
13) Geoffrey Blainey, The Causes of War (2nd.ed.; New York: The Free Press,1973), chapter 2. Paradise is a Bazaar
14) 이 계열의 저술들은 Harold Hinton, China in World Politics, 김하룡 (역)「중공과 세계정치」 (서울: 어문각 1967); Richard C. Thornton, Odd Man Out: Truman, Stalin, Mao, and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New York: Brassey's, 2000). 등을 참조.
15) Alastair Ian Johnston, Cultural Realism: Strategic Culture and Grand Strategy in Chinese Histor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5).
16) Arthur Waldron, The Great Wall of China: From History to Myth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17) Chen Jian, Mao's China and the Cold War (Chapel Hill: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2001). 특히 4장 한국전쟁 부분 참조. 첸 지안이 먼저 간행한 China's Road to Korean War 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논리를 전개했다.
18) Ross Terrill, The New Chinese Empire: And What it Means for the United States (New York: Basic Books, 2003) 이 책의 한국어 번역본은 이춘근(역) 「새로운 제국 중국」(서울: 나남출판, 2005).
19) Richard Bernstein and Ross H. Munro, The Coming Conflict with China (New York: Knopf, 1997), Edward Timperlake and William C. Triplett II, Red Dragon Rising: Communist China's Military Threat to America (Washington D.C.: Regnery, 1999).
20) John J. Mearsheimer,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 이춘근(역)「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서울: 나남출판, 2004).

21) Daniel Burstein and Arne de Keizer, Big Dragon China's Future: What it means for Business, The Economy and he Global Order (New York: Simon and Schuster, 2000), p. 8.

22) Choon Kun Lee, War in the Confucian International Order, Ph.D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August 1988.

23) 사실 학자들 사이에 패권국이 과연 어떤 정도의 나라인가에 대한 operational definition은 존재하지 않는다. 학자들은 미국이 언제 패권국이었는가? 과연 미국이 패권국인 시절이 있기는 했는가? 등의 질문에 대해 통일된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일반인들이 흔히 인식하는 미국의 패권시대는 2차 대전 이후 냉전 시대인데 사실 미국이 패권국으로 인식되는 기간 중, 미국은 한국전쟁에서 비겼고, 월남전에서 패배했고, 자국군 장교 두 명이 도끼에 찍혀 죽었을 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냉전시대의 미국을 패권국이라고 보는 것 역시 자의적인 것이다. 소련이 몰락한 후 10년(1990-2000)동안 미국은 전혀 패권국처럼 행동하지 않았다. 2001 테러 공격을 당한 이후 미국을 패권국이라고 보는 사람은 많지 않다. 결국 패권국이라는 개념 역시 학자들의 자의적인 인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24) Zbigniew Brezezinski, The Choice 김명섭 (역)「제국의 선택: 지배인가 리더십인가」(서울: 황금가지, 2004).

25) Zbigniew Brezezinski, The Strategic Vision: America and the Crisis of Global Power (New York: Basic Books, 2012).

26) Henry A. Kissinger, Does America Need a Foreign Policy?: Toward a Diplomacy for the 21st Century (New York: Simon and Schuster, 2001).

27) Lester Thurow, Fortune Favors the Bold, 현대경제연구원 (역)「세계화 이후의 부의 지배」(서울: 청림출판, 2005), p.98

28) 미국의 국방 관련 연구개발비는 대략 년 평균 700억 달러에 이른다. 중국의 국방비는 중국정부의 발표와 달리 1000억불 이상일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중국이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국방비를 기준으로 할 경우 중국 국방비 총액은 미국 국방비중 연구개발비에도 못 미친다.

29) http://www.webometrics.info/graphics.html 2012.3.8. 검색

30) 미국을 제외한 다른 강대국은 모두 노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반면 미국은 일할 수 있는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현상을 보인다. 2003년 현재 미국인의 평균 연령은 35.5세로 유럽의 37.5세보다 2년이 적다. 현재의 추세라면 2050년 미국의 평균 연령은 36.2세가 되고 유럽은 무려 52.7세가 되리라 전망된다. 미국은 방대한 영토와 자원의 덕택으로 우수한 젊은 인력을 끊임없이 유인하는 Open System의 우월성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에는 년 100만의 우수 인재가 이민으로 유입된다. 2003.7.24 존 나이스 벳의 언급.

31) Martin Jacques, When China Rules the World (New York: Penguin Press HC, The; Second Edition, 2009).

32) Paul Krugman, "Will China Break?" The New York Times, December 18, 2011

33) Patrick Chovanec, "China's Real Estate Bubble May Have Just Popped" December 18, 2011 Foreign Affairs SNAPSHOT

34) George Friedman, The Next 100 Years: A Forecast for the 21st Century (New York: Doubleday, 2009), pp.88-100.

35) 중국의 인구 통계학적 문제점은 Gary J. Schmitt (편), The Rise of China: Essays on the Future Competition (New York: Encounter Books, 2009). 제7장. Nicholas Eberstadt, "Will China(Continue to) Rise?" pp. 131-154.에 잘 정리되어 있다.

36) 중국 정부는 그동안 8-9만 건이라고 주장하다가 2011년에는 년 18만 건 정도라고 수정 발표했다. 미국 측에서는 년 30만 건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37) The Munk Debates on China: Doesthe 21st Century Belong to China?

38) 서상문,「모택동과 6.25 전쟁: 파병 결정과 개입동기」(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9), 저자 서문 중에서.

중·미 관계의 변화와 한국외교에 대한 함의

이 정 남*

Ⅰ. 들어가며

1990년대 이래 중국의 급속한 부상과 함께 중국과 미국의 국제사회에서의 권력지위의 변화에 대한 관심이 급증되어 왔음.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미국의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국가들이 중국을 중심으로 한 경제적 상호의존구조를 형성하면서 안정적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해감으로써[1] 중국이 이 지역의 명실상부한 G2국가임을 보여줌. 이러한 변화는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중국이 국제사회에서의 지위가 제고되고 있음을 의미함.

그리하여 국제사회, 동아시아와 통일과 북핵, 북한문제 등이 쟁점이 되고 있는 한반도문제의 해결에서 중·미 관계는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되었음.

따라서 중·미 권력지위의 현황과 변화추세, G2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대외정책방향 등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전망하는 것에 기초하여, 한국외교의 방향을 전반적으로 재조망해 볼 필요성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음.

이를 위하여 이 글은 우선, 중국의 부상과 중·미 간의 국제사회에서의 권력지위에 대한 서방과 중국 내부의 다양한 시각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중·미 간의 경제와 군사적 요소에 기초하여 중·미 양국 국력의 객관적 현황과 변화추세를 살펴본다. 세 번째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새로이 변화되고 있는 국제질서에 대한 대응전략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한국의 대응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함.

Ⅱ. 중국의 부상과 중·미 간 권력지위에 다양한 시각

1990년대 이래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지위 및 초강대국 지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를 둘러싼 논쟁이 전개됨. 이러한 논쟁은 학자들 사이에서 현재에도 여전히 주요한 논쟁점으로 남아 있음.

*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교수, 중국연구센터장

1. 서구 학자들의 견해: 낙관론과 비관론이 공존

가. 낙관론: 미국의 쇄락과 함께 중국 문명의 재부상을 주장

- 니얼 퍼거슨: 21세기 중국은 슈퍼파워가 될 것. 경제사적 측면에서 슈퍼파워가 되기 위한 3가지 필수 조건인 저축, 젊은 인구, 경제성장 등 3요소에 기초해 볼 때, 미국은 1인당 5만 달러 가까운 빚을 지고 있고, 젊은층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으며, 경제성장률은 3% 수준이지만, 중국은 지난 10년간 성장률이 평균 10%를 넘기고 중산층 인구가 늘어나는 등 세 분야에서 모두 발전을 이루고 있음. 또한 미국의 힘은 너무 재래식 군사력에 의존하고 있으며, 미국은 사이버 전쟁에서 세계수준에 한참 뒤짐.[2)]

나. 비관론: 21세기는 여전히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질서가 될 것

- John G. Ikenberry: 중국의 부상으로 미국의 국제적 지위가 약화될 수도 있으나,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시스템은 21세기에도 지배적인 질서로 남을 수 있을 것임. 미국은 중국의 부상을 막을 수는 없지만, 중국의 국력이 현 국제질서 속에서 행사되도록 지원할 수 있음.[3)]
- Joseph S. Nye Jr.: 미국은 21세기 전반기에도 가장 강력한 국가로 남아 있을 것이며, 중국은 군사, 경제, 소프트파워 측면에서 미국을 따라 잡기에는 아직 멀었음. 1900년 독일의 산업수준이 이미 영국을 추월하였고, 충돌을 야기하는 대외지향적인 외교 군사정책을 적극 추진한 것과는 달리, 중국은 여전히 자국의 경제발전에 우선적으로 집중하고 있으며, 중국의 이른바 베이징 컨센서스 경제발전모델도 민주주의 국가에는 매력적이지 않음. 골드만삭스가 추론한 것처럼 2027년 중국의 GDP가 미국을 추월한다고 해도, 양국 경제는 규모만 대등할 뿐, 구성면에서는 동등하지 않을 것임. 중국은 여전히 농촌빈곤, 불평등심화, 한 자녀정책 실행으로 인한 인구 구성적 문제 등에 직면할 것. 19세기 말 미국이 평화롭게 영국을 추월하였듯이 모든 국가의 부상이 전쟁으로 가는 것은 아님. 과장된 두려움이 자기 충족적인 예언으로 치닫는 것을 막아야 함.[4)]
- J. Friedman: 미국은 21세기에도 패권을 유지할 것. 중국의 급성장은 애초에 출발선 자체가 너무 낮았기 때문에 급격한 성장이 가능했음. 이는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이미 거쳐간 과정임. 그리고 성장이 동북해안지역에서 국한되어 심각한 지역 편차를 나타냄. 중국의 군사력도 내부 단속을 위한 지상군만 양성했을 뿐, 세계 제패를 위한 필수적인 해군력은 턱없이 부족. 중국의 경제는 고수익의 양질의 성장모델이 아니라 공산품을 박리다매하는 저수익 성장모델임. 미국만한 규모에서 3% 성장이 경제규모가 미국보다 작은 중국의 10% 성장보다 더 의미가 있음.[5)]

2. 중국 학자들의 견해

금융위기 이후 중·미 관계에 대한 중국학계의 시각은 크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음.

가. 단기적으로 미국의 세계 제1의 초강대국 지위 즉 1초 다강구조가 유지될 것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국 단극적인 패권질서가 유지될 것. 미국의 금융위기는 일시적인 것으로 미국은 이를 조만간 회복하여 그 패권적인 지위를 유지할 것. 금융위기가 미국의 패권에 쇠퇴를 가져온 것은 사실이지만, 근본적인 쇠퇴는 아니며 미국 패권적인 지위는 변함이 없음.[6] 따라서 단기적으로 세계 제1의 초강대국 지위 즉 1초 다강 구조는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을 것. 또한 오바마가 G20을 추진하는 것은 미국이 세계 영도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의 세계 영도권의 지렛대를 G8에서 G20으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것임.[7]

나. 다극화구조로 전환되기 시작

중국 학계의 다수의 시각으로 국제질서가 1초 다강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는 아니지만, 이미 다극화구조로 전환되기 시작함. 이라크전쟁과 국제금융위기, 그리고 기타 신흥국가의 부상, 글로벌화 등의 영향으로 미국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하락하고 권력의 중심이 다원화되어 미국이 독자적으로 모든 문제를 관할하기 어렵게 됨.[8] 오바마가 몸을 낮추고 다자주의에 의존하기 시작한 것은 이런 추세를 반영하는 것.[9] 그리고 G20을 현재의 국제질서에서 세력전이의 집중적 표현이고, 국제체제가 다극화를 향한 발전의 새로운 진전으로 간주.[10] 그러나 중국의 부상으로 다극화 추세가 강화되고 있지만, 1초 다강 구조를 변화시킬 정도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11] 비록 글로벌 위기 후 미국의 초강대국의 지위가 약간 내려가고, 중국 다강 중의 지위는 제고되었지만, 일초 다강의 국제구조는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고 봄.[12]

다. 1초 다강에서 다강 1초로 전환

미국 1초가 약세추세를 보이고, 다강이 일초보다 상대적으로 강한 추세를 보인다는 점에서 현재의 국제질서는 다강 1초 구조라는 것.[13] 그리고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가 국제질서 전환의 전환점 및 분수령이라고 주장. 냉전 종식 후 단극과 다극 두 개의 역량 간의 투쟁이 있어 왔지만, 금융위기 이후 이 투쟁은 일단락됨. 그 결과 미국의 단극 패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세계는 국제구조의 다극화추세가 더욱 더 명확화 되는 시기로 진입하여, 1초 다강에서 다강 1초로 전환되었다는 것.[14]

라. 세계의 다극화 추세가 멈추고, G2화 구조로 전환되고 있음

1970년대 이래 중국의 대외전략 주요 목표는 다극화, 특히 5극론. 그러나 2011년의 국제정세는 다극화의 역사가 중단되기 시작하였고, 다극화는 이미 구시대적 개념이 되었음. 일본, EU, 러시아 등의 역량이 중등 강국수준으로 하강함. 미국은 비록 종합국력과 국제적 영

향력이 하강하였지만, 유일한 초강대국의 지위를 상당한 시간 동안 유지할 것. 중국은 미국과 비교하면 차이가 크고 미래의 상당기간 동안 종합국력에서 미국과 나란히 하기 어렵지만, 여타 국가들에 비하여 가장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앞으로 10년 동안 중국은 매년 8%의 경제 성장률을 유지할 기회와 능력이 있으며, 유럽과 일본과 경제 총량의 차이를 확대하고, 미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따라 잡을 것임. 대개 2020년에 중국의 경제 총량은 미국을 초월할 것이며, 중국이 세계 일등대국이 될 것. 따라서 비록 중국이 G2라는 말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객관적으로 국제질서는 확실히 G2방향으로 조정되고 있음. 미래 국제정치는 중·미 간의 경쟁과 협력관계에 달려있음.[15)]

오늘날 중·미 관계는 사실상의 G2구조임. 중국의 실제 실력은 미국에 미치지 못하지만, 미국과 서방은 중국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화함. 이것은 주요하게 금융위기가 조성한 것. 중·미 양국 관계는 일반적인 쌍무 관계가 아니라, 가장 큰 강대국 간의 관계임. 그리고 과거 미·소 관계처럼 국제관계의 구조를 결정함. 중·미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쌍무관계 뿐만 아니라 모든 국제관계가 영향을 받음.[16)]

마. 평가

대다수 중국학자들은 중국의 부상, 미국의 지위의 상대적 쇠퇴로 1초 다강구조에서 1초인 미국의 지위가 약화되어, 1초인 미국이 다강들, 특히 다강 중의 1위를 점하고 있는 중국과 협력을 하지 않고서는 전 지구적인 차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데 동의함. 이 점은 중국은 비록 개도국이고 중·미 간 권력지위의 차가 존재하지만, 미국과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쌍무관계로 두 나라의 협력 없이는 아·태 지역은 물론 세계 평화도 담보하기 어렵다는 시진핑과 후진타오의 시각과도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음.[17)]

Ⅲ. 중·미 간 권력지위에 대한 객관적 비교

1. 경제력 비교

가. 중국이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하면서 국제사회에서의 정치·경제적 영향력이 확대

경제규모의 확대로 세계의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증가되고, 외환 보유고의 증가로 세계의 중국에 대한 투자 의존도가 증가하였으며, G20, IMF 등 국제기구에서의 역할 증대로 세계의 규칙 제정자로 부상하였음.

나. 중국의 경제적 지위 현황

(1) 경제규모: 중국은 2010년 일본을 누르고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부상.

(2) 교역규모: 2009년부터 세계 2위의 교역규모를 유지, 전문가들은 늦어도 2012년까지 미국을 초월할 것으로 예측.

(3) 외환 보유고: 세계 1위, 10년 기준 중국의 외환 보유고가 2조 8,437억

불에 달하며, 중국은 2006년 이후 전 세계 외환 보유고 1위를 유지.

(4) 수출총량: 세계 1위, 2011년 12월7일 중국의 대외무역 백서를 최초로 발간. 세계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4.3%에서 10.45로 증가하였음. 세계최대 수출국이면서 제2위 수입국임.

(5) 제조업 생산가치: 세계 1위.

다. 경제성장률을 통해서 본 중·미 간 경제력 비교

(1) 경제성장: 연 9.5%의 성장률(1980~2011)

〈표1〉 미국과 중국의 경제규모 비교(단위: 1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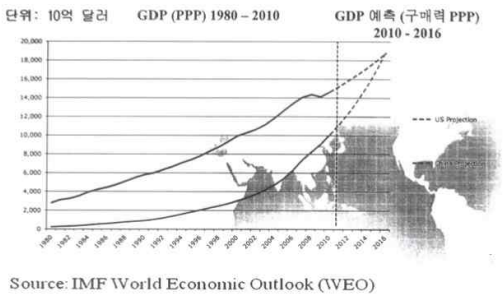
연도	미국	중국	중미차액	중국/미국 %
1990	58,031	3,903	54,128	6.7
2000	98,170	11,985	86,185	12.2
2001	101,280	13,248	88,032	13.1
2002	104,696	14,538	90,158	13.9
2003	109,608	16,410	93,198	15.0
2004	116,859	19,316	97,543	16.5
2005	124,219	22,358	101,861	18.0
2006	131,784	26,578	105,206	20.2
2007	138,076	33,825	104,251	24.5
2008	142,646	44,016	98,630	30.9
2009	138,600	(약)47,000	–	33.9
2010	145,265	58,782	86,483	40.47

(2) 경제전망(Keidel): 2020-30년 미국 추월

〈표2〉 미국과 중국의 경제성장 예측(2008년 6월 연구보고서)

	실질성장률 (연 %)		국내총생산(GDP) (trillion 2005 dollars)			1인당 국내총생산(GDP) (thousand 2005 dollars)		
연도	미국	중국	미국	중국 (X-rate$)	중국 (ppp $)	미국	중국 (X-rate$)	중국 (ppp $)
2005	3.0	9.6	12	2	5	41	1.7	4.1
2010	2	9.5	14	4	8	43	2.9	6.1
2020	**3**	**8.5**	**18**	**10**	**18**	52	6.9	12.7
2030	3	7.5	24	22	35	64	15	24
2040	3	6.5	33	45	63	78	30	42
2050	3	5.5	44	82	104	95	53	67
2060	3	4.3	59	131	152	116	83	96
2070	3	3	80	178	199	142	109	123
2080	3	3	107	244	262	174	146	159
2090	3	3	144	335	348	214	197	208
2100	3	3	194	466	466	262	271	271

(3) 〈그림1〉 경제전망B(IMF/2011년 3월): 2016년 미국 추월



Source: IMF World Economic Outlook (WEO)

〈그림1〉 경제전망B(IMF/2011년 3월)

〈표3〉 중국의 국방예산 현황(2001~2015년) (단위: 10억 달러. 2005년 가격기준)

01 년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5
39.5	33.1 (16.2)	36.6 (8.5)	40.3 (10.8)	44.3 (12.5)	51.9 (14.7)	58.3 (17.8)	84.9 (14.7)	97.6 (14.9)	104.9 (7.5)	118.4 (12.7)	131.7 (11.2)	238 (-)

출처: 2008년까지는 스톡홀롬국제평화연구소(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 SIPRI) Ependiture Database 참조, 2009-12년까지 액수는 중국 전인대에서 발표한 전연대비 증가율에 기초하여 환산한 것임. 2015년은 'IHS 제인스'는 보고서 추정치임. ( ) 안은 전년 대비 국방예산 증가율(%).

〈표4〉 미국의 국방예산 전망(2010~2017년) (단위: 10억 달러)

	01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기본예산	297	528	528	531	525	534	546	556	567
OCO	13	163	159	115	88				
합계	310	691	687	646	614				

출처: US DoD(2012). OCO: Overseas Contingency Operations. 신성호(2012년) 발표문에서 재인용.

-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통하여 빠르면 2016년(ppp기준) 혹은 2020년(GDP기준) 경에 경제규모에서 미국을 초월하여 세계 최대 경제대국이 될 것으로 예상.

2. 군사력비교

가. 국방비 증가추세

- 지난 23년간 중국의 국방예산은 연 평균 10% 이상 증가해 왔으며, 2012년 2월초 군사정보 분석기관인 'IHS 제인스'는 보고서를 통해 중국 국방예산이 지난해 1198억 달러에서 2015년 그 2배인 2382억 달러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함. 이는 2012~2015년까지 연평균 18.75% 증가함을 의미. 이는 미국을 제외한 NATO 8개 군사대국의 국방비를 합친 것보다 많은 액수.
- 이에 반해 향후 10년간 10퍼센트 국방비 감축을 발표한 미국의 국방비는 2012년 7,056억 불에서 2015년 5,725억 불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
- 중국은 경제 성장률에 비례해 국방비도 늘리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중국의 군사비 증가율은 GDP증가율의 2배 이상이다. 중국은 지난 23년 동안 1989년을 빼고는 두 자릿수로 늘림.

나. 군의 현대화의 추진

- 한편 중국의 군사력은 양적인 측면에서 뿐 아니라 질적으로나 성능 면에서 새로운 발전을 하고 있음.
- 지난 2009년에 실시한 건국 60주년 기념 열병식과 해군 관함식 등을 통해서 중국이 개발 보유하고 있는 신형 미사일과 잠수함 등을 공개함으로써 미국 등 서방국가들에게 중국의 군사력 발전을 과시. 또한 중국은 최첨단 전투

기인 젠-20(J-20), 대항모 미사일 둥펑-21개발과 항공모함의 시험 항해 등을 통해 군사력 증강과 현대화 노력을 전개하고 있음.[18]〈그림 2〉

다. 그러나 군사력 증강과 현대화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미국의 군사력에 비해 20~30년 열세를 나타내고 있음

라. 중국의 국가이익과 국방정책:

(1) 국내경제발전 중심의 전략목표

- 중국은 2002년 16차 당대회에서 2000~2020년 까지를 전면적 소강사회를 건설하고, 강대국 부상을 위한 '전략적 기회의 시기'로 언급: 장쩌민은 또한 2021년~2050년 사이에 중등 선진국 수준 도달이라는 목표를 수립.
- 따라서 국내 경제발전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두고 조화세계 건설과 화평발전에 매진할 것임. 동시에 중국이 지정하고 있는 핵심이익의 보호를 위해서는 군사행동을 불사하는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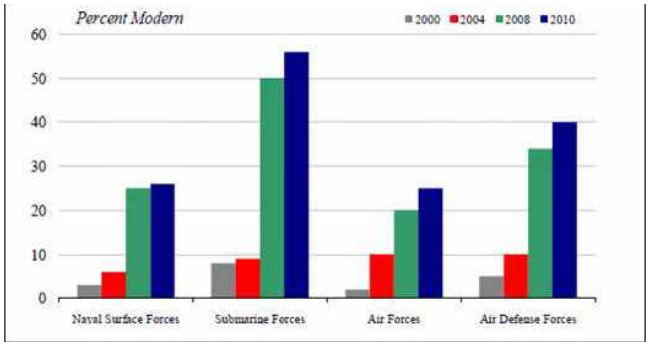
(2) 적극 방어에 기초한 안보목표:

- 중국은 2011년 3월에 발표한 '2010 중국의 국방백서(China's National Defense in 2010)'에서 중국의 국가방위를 위하여 ① 국가주권과 국가안보 그리고 국가발전 이익의 수호, ② 사회조화와 안정 유지, ③ 군사력의 현대화 촉진, ④ 세계 평화와 안정유지 등 4가지 목표와 임무를 공식적으로 천명함.[19]
- 이러한 중국의 안보 목표는 2002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중국의 적극방어(active defense)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됨. 즉, 중국의 안보전략은 기본적으로 국가안보를 유지하기 위하여 군사력을 증강 및 현대화하고, 이러한 힘을 바탕으로 세계 무대에서 국가이익을 수호하겠다는 구상임.[20]

(3) 국가 핵심이익에 강경한 태도:

- 또한 2011년 9월 화평발전보고서(中国的和平发展白皮书)에서 공식적으로는 처음 6가지 핵심이익: ① 국가주권 ② 국가안전 ③ 영토완정(完整) ④ 국가통일

〈그림 2〉 중국군 주요 전력의 현대화 현황(2000~2010)



출처: U.S. DoD (2011), p. 43, 신성호(2012년) 발표문에서 재인용.

⑤ 중국의 헌법을 확립하는 국가정치제도와 사회대국의 안정 ⑥ 경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기초 보장 등을 제기하면서 중국이 반드시 지키고자하는 핵심이익을 분명히 함.[21)]

3. 평가

경제력에서는 빠른 속도로 미국을 따라 잡고 있지만 군사력에서는 여전히 20~30년의 격차가 존재함. 따라서 중·미 관계는 미국의 종합국력의 국력우위에 기초한 G2관계로 정의할 수 있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중국이 아시아 각국의 경제 허브역할을 하고 있고, 아시아지역에서 미국과 경쟁가능한 군사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중국의 의지에 비추어 볼 때, 아시아지역에서 중·미 간 경쟁은 훨씬 치열하다고 볼 수 있음.

Ⅳ. 중·미 권력지위의 변화와 중국의 대응전략

1. 중·미 권력 지위의 변화와 평화적 부상전략

금융위기와 함께 국제체제전환이 시작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 담론과 규칙제정권, 중국적인 가치와 이념의 보편화를 통한 평화적인 세력전이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음.

중국학계는 중국이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것은 불가피하며, 다만 평화적인 방식으로 부상하여 강대국 간의 전쟁으로 가지 않을 것임을 강조. 중국의 정치경제적 부상은 전쟁이라는 방식을 거치지 않고, 중국의 가치나 규범 등의 영역에서 소프트 벨런싱을 통하여 부상을 추구하고자 할 것을 강조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규칙과 규범의 제정권의 장악과 중국적 가치의 보편화 등 통하여 소프트파워를 제고함으로써, 중국의 부상은 전쟁이 수반되지 않은 소프트한 부상이 될 것임을 강조함.[22)]

현재 미국의 패권이 국부적 단계적으로 추락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과학기술 및 교육체계, 세계적 화폐, 기타국가의 가치관을 교화시키지 않으면 국제체제의 세력 조정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함.[23)] 그리고 중국이 지니고 있는 제1의 외환보유국지위, 제1의 수출입국가 지위, 제2의 경제대국 등을 바탕으로 소프트파워를 강화하고 국제사회의 담론 주도권을 제고하도록 해야 함을 강조함.[24)]

또한 국제질서의 전환을 추진하는 데 있어 중국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함. 이를 위해 중국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첫째, 새로운 국제질서가 전환되는 과정에서 중국은 국제질서를 주도적으로 구성하는 구성자가 되어, 국제사회 담론권 및 결정권을 강화하고, 규범과 가치체계를 제시하고 지지를 확보하는 소프트파워를 중시해야 함. 둘째, 국제질서의 평형자가 되어,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의 균형, 개도국과 선진국의 균형을 추구해야 함. 셋째, 중

국은 국제적인 지위를 제고하기 위하여 대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대내적인 문제도 잘 처리해야 함.[25]

2. 권력교체기 중국의 대외정책 방향: 두 가지 시각이 대립

평화적인 부상을 위한 단기적인 대외정책의 방향을 둘러싸고 두 가지 시각이 대립.

가. 하나는 중국정부의 공식적인 입장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원장인 왕지쓰와 다이빙궈(戴秉国) 외교담당 국무위원 등으로 대표되는 개발도상국 정체성을 표방하면서 강대국을 지향해 가는 대외정책을 취하고자 하는 입장임

- 중국내에서는 2010년 3월 천안함 사건 이후 이른바 핵심이익을 둘러싼 대외정책의 방향을 둘러싸고 한 차례의 논쟁이 본격화되었음.[26] 이러한 상황에서 다이빙궈는 12월 외교부 홈페이지를 통해 중국이 기존의 평화발전노선을 견지할 것임을 대내외에 천명하면서, 핵심이익 확대를 주장하는 내부세력과 공세적(assertive)인 외교를 우려하는 외부의 논란을 불식시키고자 함. 그는 중국의 핵심이익은 국가체제, 안보, 영토보전과 통일, 경제발전임을 지적하면서, 중국은 아직 세계와 조화를 통하여 평화적 발전을 추구해야 하는 개도국임으로 기존의 평화발전노선을 견지해야 한다고 지적함.[27]
- 이러한 주장은 국제문제에서 저자세를 유지하면서 소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으로 특징되는 덩샤오핑시기의 도광양회정책으로 선회한 듯이 보일 수 있으나, 이는 도광양회(韜光養晦)외교와는 차이가 있음을 강조. 왕지쓰(戴秉国)는 덩샤오핑(鄧小平)이 만든 도광양회외교는 국력이 상승한 현재의 시기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며, 안보문제 등의 해결에서 지나치게 유약한 대응이라고 비판하면서,[28] 중국은 경제발전과 비전통안보를 전통적인 군사적 및 경제적 이익과 결합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다자외교, 내수위주의 경제정책, 가치와 문화영역에서의 소프트파워외교정책의 추진 등을 통해 강대국화를 위한 기반을 닦는 방향으로 외교정책의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함.[29]
-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보면, 현재 중국의 대외정책은 사회주의 개도국이라는 정체성을 표방하면서도, 동시에 강대국을 지향해가는 정책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나. 다른 한편, 중국이 부상함에 따라 미국과의 경쟁은 불가피하며, 중국은 자신이 부상하는 권력임을 인정하고 그 지위에 걸맞는 책임을 져야한다는 관점.[30]

- 이 시각에 따르면, 중국의 올림픽개최 및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중·미 관계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쌍무적관계임.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도광양회정책을 고집하는 것은 미국 및 주변국의 의혹과 불신을 이끌어낼 수 있으며, 이는 중국의 국력에도 맞지 않는 것임. 즉 오늘날 중국과 미국 사이의 모순 및 중국과 주변 국가와의 마찰은

중국이 견지하고 있는 도광양회 정책으로 인한 것. 이 정책을 계속 견지하면 다른 국가들로부터 의심과 불신임을 더욱 더 강화시킬 것. 현재 중국과 주변국가들 사이의 분열과 불일치는 주요하게 중국이 그들을 위한 안전보장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 도광양회 정책은 중국으로 하여금 저자세를 유지하고 주변국가에 안정보장을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음. 중국이 주변국가에 안전보장을 제공할 정도로 강해졌을 때, 주변국가에 안전보장을 제공하지 않으면, 중국의 국방건설의 의도를 의심할 것임. 또한 도광양회정책을 지속하는 것은 중국이 현재의 국력에도 맞지 않음. 중국의 외교정책은 경제건설 중심으로, 경제 건설을 위한 평화적 환경을 제공하고, 최종 목적은 경제적인 부를 증강하는 것임. 중국의 경제적인 능력이 오늘날의 수준에 도달한 지금 여전히 경제적 부의 추구를 국가 최고 목표로 삼는 것은 중국의 국가 이익에도 맞지 않는 것임. 국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국가이익의 우선순위가 바뀌었음. 경제적인 이익은 중국의 국가이익의 최우선 순위에 놓으면 안됨.[31]

- 특히 이 시각은 국제무대에서 중국의 적극적인 개입과 강대국으로서 책임감 있는 역할이 중국의 소프트파워를 제고시킬 것이라고 주장함. 중국은 미국과 국력의 차이가 감소하고 있지만 국제적인 호소력에서는 미국과의 차이가 감소하지 않고 있음. 따라서 중국의 대외정책은 주요하게 국제질서의 변화 속에서 중국의 국제적인 호소력을 제고시키는 것이 핵심이 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종합국력의 2위인 대국의 지위에 걸맞는 책임을 다해야 하고, 국제금융조직(IMF), 세계은행(IBRD) 등에 기금비율을 증액해야 하고, 국제적인 충돌 및 각종 현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야 하고, 금융위기통제, 기후변화, 유엔개혁 등의 글로벌 문제, 아시아지역문제 등에 대하여 주도적으로 의견을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함.[32]

다. 현재 중국정부는 전자의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G2 시대에 새로운 지도자로 등장한 시진핑 지도부는 향상된 국제적 지위에 대한 자신감에 기초하여 보다 공세적인 대외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G2시대가 등장하고 있지만, 중국과 미국의 관계는 장기적으로 평화와 협력이냐, 합리적인 경쟁이냐, 충돌모델이냐 등 현재 불확실성이 존재함.

3. 동아시아에서의 G2: 미국의 동아시아로의 '회귀'에 대한 중국의 대응

가. 중국의 세계 강대국화의 제일보는 아·태 강대국이 되는 것으로 사고

미국의 아시아로의 재회귀는 아·태지역의 긴장을 유발할 것. 아·태가 세계 지정학적 정치 중심으로 부상하는 것은 중국에 적극적인 의의가 있음. 중국이 세계 강대국이 되려면 우선 아·태 강대국이 되어야 하기 때문. 세계를 주도하려면 우선 아·태의 지정학적 정치의 주도권을 장악해야 함.[33]

나.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의 원인과 수단에 대한 중국의 인식

- 미국의 아시아로의 재회귀는 (1) 목전의 미국의 국내경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아·태 시장을 찾을 필요성이 다급해지고, (2) 세계의 중심이 동아시아로 이동하는 것에 맞추어 주의력을 중동으로부터 아·태로 전환시키는 것이며, (3)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여, 중국의 아·태 네트워크를 조직적으로 저지하는 방법을 통하여 미국의 아·태 주도권을 지키려는 것.[34]
- 아·태 회귀를 위하여 미국은 (1) 중국과 주변국가와의 모순을 이용. 중국의 부상을 우려하는 주변국가의 심리와 동 지역 역사 유산인 영토 및 영해 주권 분쟁을 이용하여, 중국이 주변국가와 갈등관계에 빠져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2) 군사, 특히 해군력의 우세를 발휘하여 남중국해의 문제를 놓지 말고, (3) 아·태 경제협력을 추구하여, TPP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방법을 이용.[35]

다. 중국의 대응: 주변외교와 다자영역에서의 적극적인 행보

- 중국의 아·태 정책은 두 가지를 따라야 함.
  (1) 중국에 대한 주변국의 의심해소 및 신뢰 증가: 중국이 평화와 안정, 번영발전, 호혜협력의 아시아를 원한다는 점과 평화적 방법으로 영토 및 영해 분쟁을 해결하려고 한다는 점을 주변국에게 확실히 인식시키기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음.
  (2) 지역 문제 해결의 주동성과 창조성을 제고: 역량과 위상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은 아시아 대국으로서 아시아 문제와 관련하여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발휘해야 하며, 이는 중국의 국가이익 수호와 책임감있는 대국으로서의 국제적 이미지 제고에도 유리.[36]

- 장기적인 주변전략을 수립하여 주동적으로 주변을 꾸려가야 한다.
  (1) 2015년까지: '안정'을 추구하는 데 '중점'을 두고 동시에 '권력'을 '유지'하는 것을 고려해, 주변의 종합적인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이 기간 동안 자신의 실력을 키우고, 주변국가에 모범을 보여서 중국의 주변국에 대한 흡인력과 응집력을 증강시키고, 존경받는 주변의 주요 강대국이 되어야 함.
  (2) 중기목표: 2020년까지: '권력', '유지'에 주력하고 동시에 '안정'을 고려해야함. 국내의 더욱 높은 층차의 전면적인 소강사회 건설을 위한 조건의 확보하고, 역사적으로 존재해 온 분쟁을 해결하고, 책임지고 환영받는 주변 주요 강대국이 되어야 함.
  (3) 장기목표: 2050년까지: '권력'을 지키는 데 주력하고, 주변을 진일보하게 경영하여 중화 민족의 위대한 부흥과 중국의 완전한 부상을 위한 기초가 되도록 해야 함.[37]

라. 중·미 간의 아시아지역에 대한 관심의 집중과 안보정세의 불안정성 강화

- 미국의 이라크 철군은 미국의 안보 전략 중심이 중동에서 아시아 태평양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 미국은 중국과 크고 작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인도, 일본, 한국, 베트남 등과의 협력을 통해 미국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 있는 바, 중국은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군사력을 강화하고, 북한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며, 외교 관계에 있어서 러시아와의 협력강화 및 원양 해군활동을 확대해야 함. 중·미의 안보 중점이 타이완문제에서 서태평양 해양문제 및 한반도로 전이될 경우 아시아 안보형세는 더욱 복잡해질 것임. 중·미 간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경우 지역안보체제 설립은 더욱 어렵게 될 것임.[38]

마. 아시아 강대국으로부터 세계 강대국으로 부상한다는 사고하에, 중국은 미국의 동아시아로의 회귀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대응을 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단기적으로 동아시아지역에서 중·미 관계는 팽팽한 긴장관계를 기초로 하면서 표면적으로 협력을 천명하는 형태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Ⅴ. G2시대의 등장과 한국외교에 대한 함의

가. 상술한 바와 같이 비록 중국과 미국 간에 종합국력의 격차가 존재하지만, 중국과 미국관계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쌍무관계 즉 G2관계를 형성함

- 더 나아가 중국은 경제적·군사적인 능력을 지속적으로 제고시킴과 아울러서, 국제사회에서의 규칙과 규범의 제정권의 장악과 중국적 가치의 보편화 등을 통하여 소프트파워를 제고함으로써, 전쟁이 수반되지 않은 소프트한 부상을 통해 세계 최강대국이 되고자 하는 의지는 나타내고 있음.
- 단기적인 대외정책에서는 사회주의 개도국으로서 국내 경제발전에 주력하면서 강대국화를 위한 조건을 확보하고자 하는 다소 수동적인 대외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국력에 걸맞는 권리와 책임을 다하는 공세적인 대외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임.
- 특히 2010년부터 본격화된 미국의 동아시아로의 회귀에 대해,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고자 주변국을 이용한 미국의 포위전략이라고 비판하면서 적극적인 대응태세를 보이면서 중·미 간 긴장관계가 조성되고 있음.

나. 중·미 패권경쟁의 한가운데 놓인 한반도

- 중·미 관계의 향방이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미래의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임. 중·미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면 될수록 한국은 미국과 중국 중 어느 한편을 선택할 것을 강요받고, 중·미 관계가 동반자로 밀착되면 될수록 미·중은 한반도와 심지어 한국까지도 양자관계의 부차적인 논제로 취급할 위험성이 있음.
- 동시에 중·미의 패권경쟁이 가속화된다면 미국에게 한반도와 한·미 동맹

의 전략적 중요성이 더욱 증가할 것임. 중국에게도 한반도는 대만해협, 남지나해와 더불어 중국의 핵심안보이익으로 부상함. 이는 곧 북한의 전략적 중요성이 증가함을 의미하며, 한반도의 통일과 안보구상(security architecture)이 첨예한 안보현안으로 인식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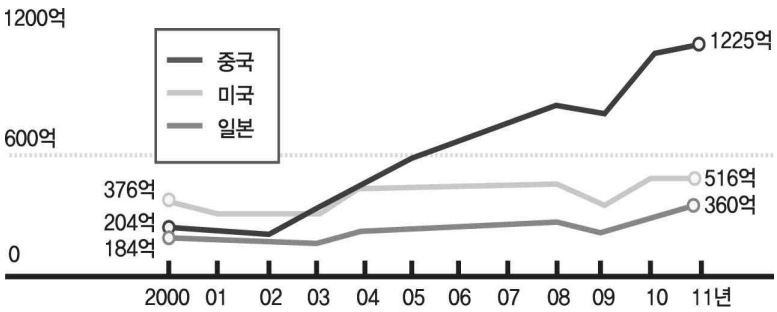
- 문제는 앞으로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상대적 쇠퇴가 지속된다면 한국은 점점 더 중국으로부터 한·미 동맹에서 멀어지라는 압박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 특히 한국에게 있어서 중국과의 무역량은 미국과 일본을 합친 것 보다 많은 규모를 유지하고 있으며, 중국에 대하여 약 21.5%의 경제 의존율을 보이는 상황에서(〈그림3〉 참조), 중국의 이러한 압박은 심각한 압력요인이 될 것.

다. 선택의 갈림길에 선 한국

(1) 중국과 미국의 양자 사이에서 일부 서방학자들의 주장대로 한국의 미래는 결국은 중국의 영향력권에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가?

- 로버트 캐플란은 통일 한국에서는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할 명분이 사라지기 때문에 미국의 영향력은 급속히 축소되고, 대신 중국에 대한 한국의 정치경제적 의존도는 더 심화될 것으로 봄.[39]
- 데이비드 강 서던 캘리포니아대 교수도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에 새로운 위계질서가 창출될 것이며,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이 지난 30년간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룬 중국에 적응하면서 대중 경제의존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중국 중심 지역질서 등장은 필연적이고, 한국 역시 그 질서 안에 편입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
- 니얼 퍼거슨 역시 한국의 대중 무역이 대미 무역보다 커진 상황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줄어든 틈을 중국이 차지하게 될 것. 그리하여 향후 미국과 중국이 대립할 때, 한국은 미국 혹은 중국을 택해야 하는 양자택일의 곤란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고 지적.[40]
- 최근 브레진스키가 그의 저서 「America and the Crisis of Global Power」에서 지적했듯 한국의 멀지않은 미래에 중국의 지역적 패권을 받아들여 중국에 점점 기대는 방안이나, 중국이 한반도

〈그림3〉 한국의 대중국, 미국, 일보 무역 규모(단위: 달러, 2011년은 11월까지)



자료: 한국무역협회

통일에 결정적 역할을 함에 따라 “중국이 지원하는 통일과 한·미 동맹 축소를 거래”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음을 지적.

(2) 니얼 퍼거슨 교수의 주장대로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균형자적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아미타지의 주장대로 미국과 일본과 협력을 강화하여 중국을 견제해야 할 것인가?[41]

라. 한반도의 통일과 전략적인 핵심이익을 지키기 위해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1) 한국의 대응1:

- 중·미 관계의 안정적 관리에 기여: 한반도가 미·중 간 마찰과 대립의 소지가 되는 것 방지: 중·미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상황을 줄여야 한다.
- 한·중 관계와 한·미 관계를 비제로섬적인 관계로 만들어야 한다. 한·미 동맹을 유지함과 동시에 중국과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가 실질적인 내용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남북관계의 강화를 통하여, 중·미의 남북한과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상쇄시켜야 한다.
- 동아시아지역에서 3자형태의 소다자주의 협의체를 활성화하여 동아시아안보협력 구도가 정착하는데 촉매제 역할을 하도록 하여, 장기적으로는 동아시아의 평화와 협력을 보장할 수 있는 다자협력체를 건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한국의 대응2: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을 전후로 중국이 제1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이후, 한국의 핵심이익을 지키고 통일 등 전략적인 문제를 선택해야 할 시기가 도래할 수 있음.
- 이런 상황에서 단계적인 선택론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음. 우선, 부상한 중국이 보편적인 가치를 수호하고, 평화유지와 책임을 다하는 강대국이 될 것이라는 국제사회로부터 충분한 신뢰를 얻기 전까지, 그리고 통일로 가기 전까지, 한·미 동맹을 강화시켜 불확실성을 지닌 중국을 견제하고 북한의 위협을 완화하는 중요한 지렛대로 삼을 필요가 있음. 이 경우에도 한국은 중국과 경제, 과학기술, 사회문화 분야에서 다소 독자적으로 상호이익추구와 동반자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둘째, 부상한 중국이 국제사회에 충분한 신뢰를 주거나, 통일을 위해 중국을 설득해야 할 때, 미국과 중국에 대하여 균형을 취하면서 중국으로부터 통일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내야 한다. 외교

註

1) 김성한,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아태정책: 아시아로의 귀환?” 『국제관계연구』(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2011년 가을(제16권, 제2호), p. 105.
2) “퍼거슨, “한국 미중서 균형을”…프리드먼 “한미동맹” 강화해야,”『조선일보』2012년 2월 13일.
3) John G. Ikenberry, “The Rise of China and the Future of the West,” *Foreign Affairs*, Jan./Feb. (2008), Vol.87, Issue 1.
4) Joseph S. Nye Jr., “China’s Rise Doesn’t Mean War,” *Foreign Policy*, Jan./Feb.(2011), Issue 184.
5) “퍼거슨, “한국 미중서 균형을”…프리드먼 “한미동맹 강화해야”『조선일보』2012/2/13.
6) 尚鸿, “金融危机对美国霸权地位的冲击”, 『现代国际关系』 2009年 第4期, pp.32-33; 朱锋, “金融危机与当前国际秩序的演变 ”, 『现代国际关系 』 2009年 第4期, pp.24-26.
7) 林利民, “G20崛起是国际体系转型的起点-仅仅是起点”, 『现代国际关系』 2009年 第11期, pp.36-37.
8) 郭宇立 · 林芯竹 · 楚树龙, “美国, 中国的发展变化与世界格局”, 『现代国际关系』 2009年 第8期, pp.37-40.
9) 宫力, “国际金融危机与国际秩序的变革”, 『现代国际关系』2009年 第4期, pp.23-24.
10) 崔立如, “G20崛起与国际大变局”, 『现代国际关系』 2009年第11期, pp.1-3.
11) 칭화대 국제관계학원의 옌쉐통원장에 따르면, 국가간 권력지위에서 중국은 미국 다음으로 2위를 차지. 그러나 중국은 미국의 슈퍼파워(super power)지위에 비교하여 주요권력(major power)에 포함됨. 냉전시기 초강대국인 소련과 미국과의 권력차이와 달리, 중국과 미국과의 권력의 차이는 초강대국(super power)과 주요권력(major power) 사이의 차이임. 2015년 중국의 권력지위는 반초강대국(semi-super power)이 될 것이라고 전망. Yan Xuetong, “The Rise of China and its Power Status,” *The Chinese Journal of International Politics*, vol.1, 2006, pp. 5-33.
12) 门洪华, “世界转型与中国的战略取向”, 『现代国际关系』 2009年第11期, pp.35-36;蔡拓, “中国在国际秩序转型中要有所作为”, 现代国际关系』 2009年第11期, pp, 30-32; 彭光谦, “全球金融危机对国际格局的影响”, 现代国际关系』 2009年 第4期, pp.26-27; 秦亚青, “国际体系转型以及中国战略机遇i期的延续”, 『现代国际关系』 2009年 第4期, pp. 35-37; 赵晓春, “国际金融危机与国际体系的变迁”, 『现代国际关系』2009年 第4期, pp.21-23; 刘江永, “发展中国家兴起改变了时代与世界格局”, 『现代国际关系』 2009年 第11期, p.23; 金灿荣, “国际金融危机的全球地缘政治影响”, 现代国际关系』2009年 第4期, pp.15-17.
13) 袁鹏, “国际体系变迁与中国的战略选择”, 『现代国际关系』 2009年 第11期, p.41; 袁鹏, “国际体系转型与中国的战略选择”, 『现代国际关系』 2009年 第4期, pp.39-40; 李兴, “国际秩序新变局与中国对策的思考”, 『现代国际关系』 2009年 第11期, pp.29-30.
14) 黄莹, ““金融危机周年座谈会”纪要”, 2009年 第11期, p.64.
15) 林利民, “2011年国际战略形势评析”, 『环球军事』 2011年 第12期(2011-12-21).
16) 郑永年, “中美两国形成事实上的g2格局”, 『党政干部参考』 2011年 3期, 37-39.
17) “시진핑 “미국-중국은 태평양을 사이에 둔 양안 대국”, 『중앙일보』 2012/2/15.
18) 현대화(modernization)의 의미로 해군 함정의 경우 최소 2개 전장에서 다중 미션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잠수함은 대함미사일(anti-cruise missile)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 공군 전력 중에서는 구체적으로 4세대 전투기(Su-27, Su-30, F-10)나 이와 유사한 성능을 보유한 (FB-7) 등을, 미사일 전력 중에서는 러시아제 신형 장거리 미사일 (SA-10, SA-20)이나 중국이 자체 개발한 미사일 (HQ-9) 중 일부를 지칭한다. 신성호, “미국의 아시아 귀환과 독붕아 정세”, 제 17차 일민외교안보포럼 발표문 (2012년 2.17), p.6.
19) Information Office of the State Council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China’s National Defense in 2010 (Beijing: Information Office of

the State Council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11).

20) Information Office of the State Council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China's National Defense in 2002 (Beijing: Information Office of the State Council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03).

21) 國務院新聞辦公室, 中國的和平發展 白皮書 (北京: 國務院新聞辦公室, 2011), p. 6.

22) Zhu Feng, "China's rise will be peaceful," edited by Robert S.Ross and Zhu Feng, China's Ascent: power, security, and the future of international politics, Cornell University Press, 2008, pp.34-94.

23) 劉鳴, "以世界体系理論与全球化理論解讀國際体系轉型", 『現代國際關系』 2009年 第1期, pp.48-55.

24) 何蘭, "國際局勢變化与中國話語權的提升", 現代國際關系』 2009年 第11期, pp.32-34.

25) 蔡拓(2009), pp.30-32.

26) Michael D. Swaine, "China's Assertive Behavior Part One: On "Core Interests", China Leadership Monitor No,34, 2011, pp. 1-11.

27) 戴秉國, "堅持走和平發展道路", http://www.fmprc.gov.cn/chn/gxh/tyb/zyxw/t774662.htm(2010/12/06발표;검색일 2010-12-08).

28) Wang Jisi, "China's Search for a Grand Strategy: A Rising Great Power Finds Its Way," *Foreign Affairs* March/April(2011), p.73.

29) Wang Jisi,(2001), pp. 74-77.

30) XUETONG, "How China Can Defeat America," NewYork Times Nov. 20, 2011;吳心伯, "奧巴馬亞太戰略算盤", 『東方朝報』 2011年11月22日.

31) 范慶華, "中美關系:如何才能健康發展-訪淸華大學当代國際關系研究院院長閻學通 ", 『世界知識』 2011年 5期 25-26.

32) 孫學蜂, 『中國崛起困境:理論思考与戰略選擇』 (北京:社會科學文選出版社, 2011), pp. 120-129 ;閻學通, 吳文兵, 『中國崛起靠什么』 (長沙: 湖南人民出版社, 2010), pp. 15-17.

33) 林利民(2011).

34) 陳向陽, "中國周邊环境新變化的戰略思考", 『亞非縱橫』 2012年 第1期.

35) 吳心伯(2011); 陳向陽(2012).

36) 吳心伯(2011).

37) 陳向陽(2012).

38) 王緝緦, "中美關系新趨勢及其對東北亞安全的影響", 『中國外交』 2011年 9月.

39) Robert D. Kaplan, "The Geography of Chinese Power," *Foreign Affairs*, May/June 2010, vol.89 Issue 3, pp.22-41.

40) "한중수교 20주년, 중국을 다시 본다〈1〉 다가온 중 패권시대.. 한국의 운명은" 『조선일보』 2011/12/31.

41) "한중수교 20주년, 중국을 다시 본다〈1〉 다가온 중 패권시대.. 한국의 운명은" 『조선일보』 2011/12/31.

참고문헌

- 김성한,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아태정책: 아시아로의 귀환?" 『국제관계연구』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2011년 가을(제16권, 제2호).
- 신성호, "미국의 아시아 귀환과 동북아 정세", 제17차 일민외교안보포럼 발표문 (2012년 2.17).
- 시진핑 "미국-중국은 태평양을 사이에 둔 양안 대국", 『중앙일보』 2012/2/15.
- "한중수교 20주년, 중국을 다시 본다〈1〉 다가온 중 패권시대.. 한국의 운명은" 『조선일보』 2011/12/31.
- "퍼거슨, "한국 미중서 균형을"…프리드먼 "한미동맹" 강화해야," 『조선일보』 2012년 2월13일.
- 尚鸿, "金融危机对美国霸权地位的冲击", 『現代国际关系』 2009年 第4期.
- 朱锋, "金融危机与当前国际秩序的演变", 『現代国际关系』 2009年 第4期.
- 林利民, "G20崛起是国际体系转型的起点-仅仅是起点", 『現代国际关系』 2009年 第11期.
- 郭宇立 · 林芯竹 · 楚树龙, "美国, 中国的发展变化与世界格局", 『現代国际关系』 2009年 第8期.
- 宫力, "国际金融危机与国际秩序的变革", 『現代国际关系』 2009年 第4期.

- 崔立如, “G20崛起与国际大变局”, 『现代国际关系』 2009年第11期.
- 门洪华, “世界转型与中国的战略取向”, 『现代国际关系』2009年第11期.
- 蔡拓, “中国在国际秩序转型中要有所作为”, 现代国际关系』2009年 第11期.
- 彭光谦, “全球金融危机对国际格局的影响”, 现代国际关系』2009年 第4期.
- 秦亚青, “国际体系转型以及中国战略机遇i期的延续”, 『现代国际关系』2009年 第4期.
- 赵晓春, “国际金融危机与国际体系的变迁”, 『现代国际关系』2009年 第4期.
- 刘江永, “发展中国家兴起改变了时代与世界格局”, 『现代国际关系』2009年 第11期.
- 金灿荣, “国际金融危机的全球地缘政治影响”, 现代国际关系』2009年 第4期.
- 袁鹏, “国际体系变迁与中国的战略选择”, 『现代国际关系』2009年 第11期.
- 袁鹏, “国际体系转型与中国的战略选择”, 『现代国际关系』2009年 第4期.
- 李兴, “国际秩序新变局与中国对策的思考”, 『现代国际关系』2009年 第11期.
- 黄莹, “"金融危机周年座谈会"纪要“, 2009年 第11期.
- 林利民, “2011年国际战略形势评析”, 『环球军事』 2011年 第12期(2011-12-21).
- 郑永年, “中美两国形成事实上的g2格局”, 『党政干部参考』2011年 3期.
- 国务院新闻办公室, 中国的和平发展 白皮书 (北京: 国务院新闻办公室, 2011).
- 刘鸣, “以世界体系理论与全球化理论解读国际体系转型”, 『现代国际关系』2009年 第1期.
- 何兰, “国际局势变化与中国话语权的提升”, 现代国际关系』2009年 第11期.
- 戴秉国, “坚持走和平发展道路”, http://www.fmprc.gov.cn/chn/gxh/tyb/zyxw/t774662.htm(2010/12/06 발표; 검색일 2010-12-08)
- 吴心伯, “奥巴马亚太战略算盘”, 『东方朝报』 2011年 11月22日.
- 范庆华, “中美关系:如何才能健康发展-访清华大学当代国际关系研究院院长阎学通”, 『世界知识』 2011年 5期.
- 孙学蜂, 『中国崛起困境:理论思考与战略选择』 (北京:社会科学文选出版社, 2011).
- 阎学通, 吴文兵, 『中国崛起靠什么』 (长沙: 湖南人民出版社, 2010).
- 陈向阳, “中国周边环境新变化的战略思考”, 『亚非纵横』2012年 第1期.
- 王缉缨, “中美关系新趋势及其对东北亚安全的影响”, 『中国外交』2011年 9月.
- *Information Office of the State Council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China's National "Defense in 2010* (Beijing: Information Office of the State Council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11).
- *Information Office of the State Council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China's National Defense in 2002* (Beijing: Information Office of the State Council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03).
- John G. Ikenberry, “The Rise of China and the Future of the West,” *Foreign Affairs,* Jan./Feb.(2008), Vol.87, Issue 1.
- Joseph S. Nye Jr., “China's Rise Doesn't Mean War”, *Foreign Policy*, Jan./Feb.(2011), Issue 184.
- Michael D. Swaine, “China's Assertive Behavior Part One; On “Core Interests”, *China Leadership Monitor No.34, 2011.*
- Robert D. Kaplan, “The Geography of Chinese Power,” *Foreign Affairs,* May/June 2010, vol.89 Issue 3.
- Wang Jisi, “China's Search for a Grand Strategy: A Rising Great Power Finds Its Way,” *Foreign Affairs* March/April(2011).
- Yan Xuetong, “The Rise of China and its Power Status,” *The Chinese Journal of International Politics*, vol.1, 2006.
- YAN XUETONG, “How China Can Defeat America,” *NewYork Times* Nov. 20, 2011.Zhu
- Feng, “China's rise will be peaceful,” edited by Robert S.Ross and Zhu Feng, *China's Ascent: power, security, and the future of international politics*, Cornell University Press, 2008.

한국외교협회 대표단 방일 결과

(5.24~5.27)

서 대 원*

김용규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한국외교협회 대표단(금정호 부회장, 박수길 전 주 유엔 대사, 서대원 전 국정원 1차장, 유석렬 정책위원장)은 일본외교협회(가스미가세키가이, 霞関会) 아사카이 카즈오(朝海和夫) 회장 초청으로 5.24~5.27간 일본을 방문하여 사이토 츠요시(斎藤勁) 관방부장관, 사사에 겐이치로(佐々江賢一郎) 외무성 사무차관과 면담하고 한·일 협회 간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Ⅰ. 주요 내용

1. 아사카이 가스미가세키가이 이사장 면담

● 아사카이 이사장은 한국대표단의 일본 방문을 환영하고 한·일 양국협회 간의 협력관계 발전에 기쁨을 표하고 상호 적극 노력하자는 요지의 발언을 함.

● 김용규 회장은 일측의 환대와 성공적인 방일을 위한 완벽한 준비에 감사의 뜻을 표하고 한·일·중 3국 외교협회 간 순차 회의를 주최할 것을 제의함. 일측의 동의가 있으면 중국측과 구체적인 절차를 협의해 나가겠다는 요지 발언을 하고 이 제안은 중국측이 먼저 제의하였다는점도 언급하였음(추기 : 동 제의는 사사에 사무차관 만찬시에도 거론하고 사사에 차관의 협조를 요청하였음).

2. 사이토 관방부장관 면담

가. 양국관계

● 사이토 부장관은 한·일 간에는 기나긴 역사 속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한·일 정상이 셔틀외교를 통해 솔직한 의견교환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양국관계가 발전되었다고 하면서, 그간의 선배들의 노력에 대해 존경과 사의를 표함.

---

* 전 국정원 1차장

● 김용규 회장은 작년 3·11 동일본대지진에 대한 위로와 조의를 표하고, 최근 세계에서 가장 높은 스카이트리가 동경에서 개장한 것을 축하하면서, 이는 일본이 그간 침체기를 벗어나 다시 일어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함. 과거 본인의 동경 근무시절과 사뭇 달라진 양국 간 활발해진 정상간 셔틀외교, 문화인적교류를 보면서 양국관계가 비약적으로 발전한 것을 실감하고 있다고 함.
● 사이토 부장관은 3·11 대지진 당시 한국측의 대대적인 지원에 대해 사의를 표하고, 최근 개막된 세계여수박람회의 성공을 기원함.

나. 지역정세 및 북한 문제

● 사이토 부장관은 5.13~5.14 북경에서 열린 한·일·중 정상회의에도 노다 총리와 동행하였다고 하면서, 회의 직후 발표된 공동성명에 북한문제가 포함되지 못한 것은 유감이지만, 3국 정상이 동 문제에 대해 솔직히 의견교환을 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함.
  - 북한 문제 관련 공동성명 포함 여부에 대해 언론이 이런 저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북한의 새로운 체제 이행과 한국 및 중국의 지도자 교체 등 현재 동북아 정세를 감안할 때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고 첨언함.
● 이어, 사이토 부장관은 4.30 워싱턴에서 개최된 일·미 정상회담에도 노다 총리와 동행하였다면서, 금번 방미는 노다 총리 취임 후 최초의 방미로써, 일미 정상이 미사일 발사 대응을 포함한 북한 문제, 동북아시아 및 아시아의 평화와 발전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한 의미있는 회담이었다고 평가함.

다. 한·일·중 FTA

● 사이토 부장관은 한·일·중 경제가 아시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그 가운데 3국간 FTA 추진이라는 큰 흐름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동 문제에 대해서도 서로 기탄없는 의견교환을 하면서 미래를 개척해야 한다고 함.

라. 문화인적 교류

● 사이토 부장관은 아시아에서 중국의 부상에 대하여 큰 관심을 보이면서 한·일 양국이 아시아에서의 중추적인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 김용규 회장은 한류와 일류의 쌍방향의 활발한 문화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이러한 국민간 교류가 양국 간 진실한 관계에 이르는 지름길이라고 함.
● 사이토 부장관은 특히 문화교류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최근 개시된 Asia Campus 사업 등 교육 분야 교류에 대해서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함.

3. 한·일 공동 세미나(기조연설)

가. 야부나카 미토지(藪中三十二) 전 외무성 사무차관(동아시아 정세와 일본외교)

● 1970년대 오일쇼크 이래 지난 40여 년간 G7국가가 경제 등 여러면에서 세계질서를 구축해 왔으나, 최근 유로위기,

재정적자 등 세계위기에 대처하지 못하고 있으며, 중국, 인도, 브라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터키 등 신흥개발국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음.

- G20이 새로운 질서의 해답이 될 수도 있겠지만, 회원국 수가 너무 많고 다양한 이념을 갖고 있어 협조가 잘 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음.
- 2009년 오바마 대통령 방중 시, 미국은 G2를 염두에 두고 재정적자 등 국제문제에 있어서 중국의 책임감 있는 역할을 기대하였으 나, 중국은 저축을 하지 않는 미국을 비난하는 등 비협조적인 자세를 보여 실망하게 되었음.

● 기술적 강점을 갖고 있는 한국과 일본이 협력하면 세계를 변화 시킬 수 있는 바,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1998년 김대중 대통령 방일 당시 발표된 공동성명이 여전히 양국 관계의 토대가 될 수 있다고 보는바, (1) 과거사에 대한 완전한 사죄 (2) 국교정상화 이후 양국 간 협력 및 일측의 협조에 대한 인정과 평가 (3) 미래를 향한 협력이 양국 관계의 토대라고 할 수 있음.
- 중남미 신흥경제국 시장에서 한국과 일본이 협력하여 디지털 분야 등에서 기술표준을 만들면 사실상 세계표준이 될 수 있을 것임.

● 하토야마 정권 당시 일 · 미 동맹이 불안정해진 측면이 있었으나 센카쿠 근해 선박 충돌 사건을 계기로 일본 내에서 일 · 미 동맹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으며, 미국으로서도 중국의 비협조적 태도에 실망한 결과 일본의 중요성을 재발견하게 되었음.

- 특히, 최근 2~3년 내 중국의 해양진출에 대해 주시할 필요가 있는 바, 2010년 미 · 중 경제안보대회에서 미국측의 항행의 자유와 중국 측의 남중국해에 대한 핵심적 이익 주장이 충돌하여 양국 관계가 큰 손상을 입었음.
- 최근 도쿄도의 센카쿠열도 매입 추진은 불필요한 외교문제를 야기하여 결과적으로 미국 신문에 분쟁지역이라는 인상을 가져 왔다는 면에서 부적절하였다고 봄.
- 2008년 6월 일측이 주장하는 중간선에 기초한 일 · 중 천연가스 공동개발 합의가 있었으나, 그간 오키나와 해구까지 대륙붕의 자연적 연장을 주장해 왔던 중국이 국내적 비판으로 인해 관련 조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아직 개시하지 못하고 있음.

● 부상하는 중국에 대한 대응 관련 (1) 협력 (2) 상호신뢰 (3) 일방 주의 방지라는 3원칙에 따라 대응하여야 할 것인 바, 한 · 중 · 일 협력을 통해 상호신뢰를 구축하고, 한국, 미국, 일본, 호주가 협력하여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하며, 인도네시아, 베트남, 미얀마 등 ASEAN 국가와 협력해야 할 것임.

나. 박수길 전 주 유엔대사(North Korea and the Region: Prospects for the Kim Jung Un Regime*)

- 북한은 해방 이후 가짜 공산주의와 유사종교 체제를 유지해온 바, 북한의 새로운 지도자인 김정은도 장거리미사일 발사 시도 등 기존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음.
  - 향후 북한은 기존체제를 유지하면서 북한 주민을 빈곤에 계속 시달리게 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체제를 바꾸어 번영에 동참할 것인지 선택해야 할 것인 바, 우리의 과제는 주변국과 평화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이익이 된다는 점을 깨닫도록 도와주는 것임.
- 북한이 기존 체제를 변경하지 않을 것인 바, 그 이유는 아래 세 가지로 생각됨.
  - (1) 김정은은 세속국가의 리더이자 주체라는 종교의 대사제로서 기존 체제 비판은 곧 이단으로써 진압대상이 되며, (2) 북한의 이데올로기는 부패한 남한과 다르다는 것에서 비롯되는 바, 김정은이 한국과 같은 발전방향으로 전환한다면 이단으로 받아들여져 그의 기반이 흔들리게 될 것이며, (3) 북한은 국제사회, 특히 미국이 북한의 체제 및 리더십 전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바, 핵무기와 미사일을 그 해결책으로 보는 것임.
- 또한, 세계화와 정보화시대에 북한은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울 것인 바, 2만3천여 명의 탈북자가 북한을 떠나 목숨을 걸고 한국으로 향하고, 북한 내에서도 비공식시장이 점차 형성되고 있음.
- 지난 4월 빅터 차 교수는 온라인에 게재한 글을 통해 중국은 북한이 이데올로기 공유나 혈맹이기 때문이 아니라, 미국에 대한 buffer로서 북한의 역할, 국경에서의 탈북자 쇄도 방지 등 자신의 국익에 따라 북한의 후견인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고 한 바, 중국과 북한은 불안정한 편의상의 결혼(marriage of convenience)으로서 완전히 안정된 관계는 아님.
- 미국은 2.29 미·북 합의 당시 식량 지원을 약속하였으나, 지난 4월 북한 미사일 발사로 이러한 지원을 취소한 바, 오바마 정권은 협박 → 협상 → 식량 지원 → 또 다른 협박 등 북한과의 오랜 악순환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였음.
- 북한은 개혁 아니면 붕괴를 선택해야 하는 바, 언젠가는 개혁을 통해 국제사회에 편입되어 구소련, 구동독처럼 'the former North Korea'로 역사에 남게 될 것임.

Ⅱ. 방일 소감

- 일본은 중국의 급부상과 일본의 상대적 약화를 크게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감지되었으며 초조해하는 분위기가 역력하였음.
  - 사이토 관방장관도 중국의 부상과 관련하여 한·일 양국이 보다 더 협

* 편집자 주) 본 책 pp. 126~132 참조

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 사사에 사무차관도 한국인이 중국에 대하여 어느 정도 호의적인지에 대하여 큰 관심을 보였으며 참석했던 오쿠라 전 주한 대사는 일본인들의 대다수가 중국에 대하여 그다지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하였음.

● 이번 한 · 일 교류에서 양국 간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 발전을 위해 현역 못지않은 열정을 가지고 기여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었는 바, 한국 외교협회로서는 앞으로 한 · 일 양국협회 간의 교류뿐 아니라 한 · 중 · 일 3국 간의 미래지향적 협력관계 설정이라는 보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때가 된 것으로 보였는 바, 이러한 교류 사업을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외교

North Korea and the Region**
- Prospects for the Kim Jong Un Regime -

Park Soo-gil*

Before I begin my formal remarks today, I want to give special thanks to Ambassador Kazuo Asakai, a friend of long standing with whom I have worked at several different times during our careers in diplomacy. It is a great pleasure to see you again, and I know that the Japan Foreign Service Association is in very capable hands under his leadership.

I recall with admiration the difficult negotiations in which he and I were involved over the demarcation of the continental shelf between our nations. While those talks involved many sensitive points, Ambassador Kazuo's warm personality and conciliatory attitude made the problems seem easier to solve than they actually were. In fact, I occasionally wonder if his charm led my delegation to give away a little more than we should have…

Dear colleagues, friends, ladies and gentlemen:

In March, we observed the first anniversary of the terrible disaster here in Japan — the so-called "triple disaster" of an earthquake, tsunami and damage to the Fukushima nuclear power plants. Individually, any of those problems would have tested the courage and resilience of a nation; combined, they were problems of a degree that is seldom seen in this day and age.

You understand better than I do, of course, the effect that these events have had on your government, your people and your nation. I would like to mention a few thoughts, prompted by my reading and conversations, that

* 유엔협회세계연맹 회장, 전 주 유엔대표부 대사

** 본고는 5.25 일본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한·일 공동세미나 기조연설 전문임.

seem to me to be the most important and longest lasting effects.

First, I think, is the example of a calm, self-disciplined and social-minded Japanese population that reacted to the disasters. Like flowers pushing up through the rubble, heroes emerged from the destruction. The 50 workers at the Fukushima complex who stayed at their posts, working furiously to prevent a meltdown while the entire region was being evacuated, are some of them. The story of 25-year-old Endo Miki, who stayed at her post broadcasting calm warnings of the impending tsunami even as the killer wave approached to snatch away her life, is one that will bring tears to the eyes of even a cynic.

The second point, however, is not so inspiring. The leadership demonstrated by the Japanese government and the Tokyo Electric Power Company in responding to the disaster called into question the quality of their contingency plans. It is dangerous for an outsider to second-guess these things, but it does seem to me that the Japanese people responded much more effectively than did the leadership.

It is certain, though, that the Japanese people's response demonstrated yet another aspect of your nation's soft power in international relations. Regardless of the short-term effects of the disaster, the courage and discipline of your people is very much admired abroad, just as your generous provision of aid to developing nations and your peace-loving approach to international relations are other admired elements of that soft power.

In a sense, the very recent opening of the Tokyo Skytree is another manifestation of that soft power. It is a sign of optimism and a forward-looking attitude in Japan, and it is also significant that the world's tallest tower shrugged off the earthquake of March 2011 with no damage. I am sure that the tower will become a noted tourist destination and proud symbol of Japanese progress.

I would like to turn now to what has been going on to the west of Japan, where another series of dramatic events has been playing out over the past few months. Unfortunately, the outlook for the Korean Peninsula looks less optimistic five months after North Korea's Kim Jong Un took power than it did immediately after his father's death. What does the transition in Pyongyang mean for North Korea and its neighbors?

I visited North Korea in 1993 when I was my nation's representative to the United Nations in Geneva; I recall clearly how shocked I was when I first stepped off the airplane then again while driving into Pyongyang.

I could have easily believed that I had been transported back in time, and that the standard of living I was seeing was not that of 1993 but of 1945, when Korea was liberated. Many friends who have visited North Korea have told me that little has changed in the two decades since my trip.

But there is one huge difference, not visible to the eyes of visitors or ordinary North Koreans: the arsenal of nuclear weapons and missiles that North Korea possesses. Those weapons, coupled with the North's belligerence, are a serious danger to its neighbors, including Japan.

The two Koreas present a breathtaking contrast to the rest of the world. The governing systems are entirely different, the composition of the leadership class is entirely different, and the results of those differences are plain to see, whether in the streets of the respective capitals or in the remote rural areas. The differences in the economic status of the 22 Arab states is largely explained by the presence or lack of oil reserves. But for the Koreas, the two nations' positions in the world economy have been determined by their political systems and leadership. In short, South Korea adopted a good system and over a period of decades polished and refined it; North Korea has stuck with its pseudo-Marxist, quasi-religious system ever since liberation.

What has followed from the North's choice has been terrible for both Koreas. As one of my countrymen put it, to South Koreans, North Korea is a nemesis that refuses to leave it peacefully alone. It is the proverbial "water demon" who lets his victim swim toward the shore and just when he is about to reach safety, drags him down. North Korea is a stalker-extortionist. It extracts concessions from its neighbors by demonstrating how dangerous and unpredictable it can be.

And for the time being, I see little prospect that things will change in North Korea. The new leadership has already disappointed us; it has misfastened the first button of its shirt, and unless they go back and start over again, the shirt will never be fastened correctly. You have to get the basics right. In this case, that "first button" was the attempt to launch a long-range missile; it was a "Business as Usual" sign in their window that dashed the hopes of the global community that the succession might be an opportunity to begin to solve the problems it has created. Regardless of whether Kim Jong Un is a clueless figurehead or a powerful young leader, he has shown no early signs of charting a new

course.

I hope the window of opportunity for changes has not been entirely closed yet. When North Korea's leaders reflect on the 17 years of Kim Jong Il's leadership, it should be clear to them that the only real change in the nation's fortunes was in its firepower. South Korea is an industrial powerhouse: its smart phones and refrigerators work, but North Korean long-range missiles do not. As the economic gap with the rest of the region widens, the ash heap of history looms nearer and nearer for Pyongyang. Can the new leadership set the stage for a revival? The question is important for all of us.

To me, the choice North Korea faces is simple and stark: It can continue on the same track and keep 25 million people in abject poverty and slavery while lavishing huge sums on arms for the sole purpose of preserving its system. Or it can decide that the first button is indeed in the wrong hole and start over again, changing its system so its people can share in the region's prosperity. Ignoring others and endangering the peace with weapons of mass destruction is not the way to international respect. It is self-destruction.

Our obligation is to help enlighten them, to the extent we can, as to the benefits of peaceful relations with their neighbors. Upon reflection, they surely must understand that they are not poor because of outside sanctions. They are poor because of their own problems and because of their duplicity, as became clear in the 1990s when secret nuclear weapons programs put a stop to a multi-billion dollar aid project to provide desperately needed electrical power.

There are many examples of successful transitions from despotism to democracy, some peaceful and some not. Burma is the most recent example of a peaceful transition that holds great promise in attracting the investment the country needs. But North Korea sticks with a broken system.

We have to ask why North Korea does not act in its own self-interest. I believe there are several reasons, all connected to its theocratic system and dynastic succession. Although European kingdoms in the Middle Ages acknowledged a higher, divine power, in North Korea the dynasty and the system are themselves the highest power and are looked on as divine.

North Koreans refer to the "Kim Il Sung nation" and to "Kim Jong Il Chosun." Kim Jong Un is a secular leader, but he is also the head of a national religion — a *juche* high priest. You have seen the lightning

and thunder that issues from North Korea when its "supreme authority" is criticized; such criticism is heresy, and heresy must be stamped out. Attacking the supreme authority is intolerable, and the masses must be mobilized swiftly to condemn any slurs with a frenzy of religious support.

Although we do not know what goes on behind the scenes, the apparent ease with which Kim Jong Un assumed the leadership mantle should not be a surprise. Leadership struggles have to be hidden behind extreme secrecy, both from the outside world and from the common people. A son of Kim Jong Il and a grandson of Kim Il Sung *must* be thenational leader; he is the high priest by divine right and bloodline. He would be denying his legitimacy if he were to change course, even though logic says he should shake off history's dead weight and do what the times demand, not simply pose as the reincarnation of his grandfather.

In addition to being quasi-religious, the North Korean ideology and its legitimating principle is that it is different from "corrupt" South Korea. So any course correction to move toward the South Korean development pattern would be heretical; Kim Jong Un's pedestal would start to sway. His legitimacy is based on the theory and charisma of Kim Il Sung, even down to such details as his pudgy build, his facial features and the way he walks and talks.

National megalomania and a persecution complex run deep in North Korea. The leaders believe that the world, and the United States in particular, is focused only on overthrowing its regime and leadership and is constantly hatching conspiracies to advance that cause. The North's answer is nuclear weapons and missiles.

This thinking manifests itself in several ways. North Korea hides its weaknesses and presents a strong, tough image to the world; it lavishes money on arms to reinforce that strong image, no matter how much its people suffer; and it values the threats it issues because it believes that not to threaten is a sign of weakness.

So after all that, why so I see at least a spark of optimism? Part may be just hope, rational or not, but part of it is based on my belief that the North Korean regime is not invulnerable to shocks, no matter how effective its secret police are in stamping out dissent. I believe that further shocks are inevitable, given the effects of globalization and the penetrating power of information technology, but the quasi-religious

indoctrination of the populace will not lead immediately to regime collapse and anarchy. It is during those times of increased stress but not yet open revolt that change and opening are most possible, when the leadership is hungry for survival but is facing the abyss. The 23,000 North Koreans who have escaped their homeland and made the perilous journey to Seoul are one sign of a wider discontent in the North that is effectively suppressed but still there.

And perhaps it's not even necessary for things to go that far. Already, the central distribution system of daily essentials has broken down in most parts of the country, and an informal market system has emerged to replace it. The leaders are wary of those markets, of course, and there have been periodic crackdowns on them. But they survive, and the leaders are just as afraid of destroying them as they are of letting them continue.

In other words, if any one of North Korea's self-imposed limitations is overcome — less religion and more practicality; less confrontation with the South and more reconciliation; less persecution complex and more focus on economic advancement; or less "military first" and more spending on domestic needs — there is a chance for a thaw in relations with the rest of the world.

China will be a key to any thaw, but the relationship between China and North Korea is complex and sensitive. In an article published online last month, the American scholar Victor Cha explained why China is unable to bring North Korea to its senses. He says, and I agree, that China is cornered. It is the guardian of a headstrong, irresponsible child. I am sure you have smiled, as I have occasionally, at editorial cartoons portraying China as an embarrassed father while Kim Jong Il, as his child with toy missiles sticking out of his pockets, kicks his father's shins or lies on the ground throwing a temper tantrum.

As Cha notes, it is not paternal love or shared ideology that keeps China from cracking down; it is China's calculation of its national interests. It wants a buffer between itself and the dynamic, democratic and U.S.-aligned southern half of Korea. It wants controls on cross-border migration to keep destitute North Koreans in their own territory and, if the North Korean regime should totter, prevent a flood of refugees into China.

A recent news story in Seoul quoted Kim Jong Il as saying in his will that China has been the source of most problems Korea faced throughout history. Because it is also the closest

nation geographically, he continued, Chinese attempts to exploit North Korea must be countered.

This all suggests that the China–North Korea relationship is a practical accommodation in North Korea's eyes as well as in China's. It is not a blood relationship; it is a marriage of convenience. China, for North Korea, is a nation that demands Pyongyang's eternal vigilance.

Right now, these tensions in the Beijing–Pyongyang relationship appear balanced, but the balance is clearly not stable. A noted Chinese scholar recently wrote a paper that called Korean reunification under South Korea inevitable, and discussed how best China should respond to safeguard its security interests as that unification happens.

That brings me to my last point, the icy relation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From the U.S. point of view, the February 29 agreement to give food aid in return for a moratorium on missile launches was quickly undermined by the North's announcement of its so-called satellite launch attempt. Washington withdrew its aid offer, and President Obama reaffirmed the U.S. stance that it would not tolerate the continuation of the old cycle of threats, negotiations, aid offers and more threats.

Dealing with North Korea is a long, slow process and the stakes are high. But I believe that patience will be rewarded; at some point, it will be clear to Pyongyang that it must unbutton its misfastened shirt, start over again, and join the modern world. When that will happen is anyone's guess, but the only choices are reform or collapse. With reform, North Korea can take its place in the modern world; without it, the world will someday use the term "the former North Korea" as it now talks about "the former Soviet Union" or "the former East Germany."

Thank you very much.

회원칼럼 도비라 자리

時局隨想 – 어떤 憂慮

윤 하 정*

최근, 국내 정치, 경제, 사회문제 등이 산적해 있으나, 무엇보다도 불온(不穩)하게 동요를 거듭하는 한국의 안전을 생각할 때, 적지 않은 우려를 품게 된다. 특히 당면한 한국 안보상의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근본문제에 대하여 적지 않은 불안을 느끼게 됨은, 늙은 필자만의 부질없는 기우(杞憂)에 불과한 것인가, 혼자 중얼거려 본다.

북한정권의 본질에 대한 인식 불감증

북한은 엄연히 대한민국의 일부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곳에 별도로 수립된 정권의 본질과 정체에 대한 국민의 인식은 놀라울 정도로 애매하다. 한편, 제2차 대전 후 열망하던 광복과 자주독립정부 수립 후 70년 가까운 오늘에 이르기까지 적지않은 일부 국민들이 아직도 우리나라 정부의 '정통성(legitimacy)'에 대하여 시비(是非)하며, 부정적 입장까지 제기하고 있는 것은 아마도 오늘날 세계에서 보기 드문 이례적인 일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국가에 대한 기본적 의심은, 한국내 모든 분야에 걸친 분열과 정부에 대한 불신을 매우 심각하게 일으키고 있다. 특히 정치, 경제, 언론, 법조 등 각계의 분열과 혼란은 더욱 우려할 정도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대한민국의 태생과 그 존재를 의심하고 부정하는 것은, 주로 북한정권이 선전·선동하는 시대착오적인 소위 '주체사상', '민족 해방'과 '남한 혁명' 등의 주장과 북한 측의 기록에만 의존하여 엉뚱한 논리를 전개하는 내외학자, 언론 등의 영향을 받은 일부 젊은층과 좌익정치권의 인사들, 소위 한국내 '종북세력'들에 의한 조작이다. 이는 북한정권의 '헌법'의 상위에 있는 '북한노동당 규약'의 서문에 명시된 '북한기지의 남한 해방'이란 그들 정권의 기본 목표와 직결되는 전술의 일환인 것이다.

* 전 외무부 차관

일부 유력한 좌익 외국학자까지도, 북한정권의 주체는 일본의 한국병합이래 김일성이란 인물(널리 알려진 진정한 독립투사의 이름을 사칭)의 주도 하에, 백년 가까이 중국, 만주 등지에서부터 끊임없이 한국독립을 위하여 투쟁하여 온 무장세력이라 하고, 따라서 1945년 해방된 한국에 대한 정당한 통치권은 당연히 그들에 귀속되는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사실은, 인민군 창군기념일로 지정한 1932년 4월을 전후한 그때부터 김일성에 의한 항일무장투쟁이 시작되었다고 하더라도 한국임시정부 관할하의 한국독립군은 1920년 만주 봉오동 및 청산리 등 양 전투에서 본 바와 같이 이미 그 보다 훨씬 이전부터 일본군에 대하여 무장투쟁을 맹렬히 전개하였던 것이다. 또한 기록으로도 분명한 바와 같이 1948년 9월9일 사이비 김일성이 선언한 소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1945년 일본항복 후 북한에 진주한 구 소련 점령군에 의하여 설치된 소위 '조선임시인민위원회'를 이어받은 소련의 괴뢰기구에 불과한 것이다.

그들은 심지어 1948년에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의 정통성까지 부인하면서, 정부수립에 주도적 역할을 한 임시정부 요인들과 이승만 초대대통령 등 민주세력을 미국의 비밀기관 앞잡이 또는 친일 분자들이었다고 폄하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야말로 개인숭배와 봉건적 권력세습, 인권탄압, 무력도발, 불법적인 핵무장, 테러행위, 선군주의 등 갖은 악랄한 정책을 감행하면서, 심지어 몇 백만에 이르는 주민들을 기아의 사지에 몰아넣는 악명높은 세계적 문제 정권이 아닌가. 이에 반해 대한민국은 독립이래 UN을 비롯, 모든 국가, 국제사회로부터 승인받고 발전하여 온 떳떳한 민주주의의 나라이다.

이러한 어마어마한 역사적인 왜곡과 기만이 어찌하여 21세기 오늘날까지 아직 시정되지 않고, 오히려 순진한 일부 학생과 젊은이들을 현혹시키고 국민들 간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시키고 있는가. 독립 후 앞만 보고 국가 건설에 매진하여 오던 한국국민들에게 어찌하여 이러한 믿기 어려운 현상이 초래된 것인지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돌이켜 볼 때, 그간 한국 역대정부가 학생 등 젊은 층에 대한 현대사, 국가관 등에 대한 올바른 교육을 소홀히 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자국 역사를 경시하고, 올바르게 가르치지 않는 국가와 민족에게는 그 장래가 없다는 선현들의 명언이 실감난다.

오늘날, 반한 · 반미운동을 주도하고 확산시키고 있는 것은 주로 '종북세력'이다. 이들은 국내 어디에서나 활동하고 있으며, 활발하다. 이들은 최근 공공연히 정계에도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 세력은 주로 1970~1980년대, 시대착오적인 맑시즘(Marxism)과 '주체사상'의 훈련과 교육을 통해 세뇌된 대학캠퍼스내 의식화된 좌익 사도(使徒)들 집단이다. 그 젊은 학생들이 교조적인 의식화 교육을 받고 있을 때, 특히 대학의 교수, 학자, 문교당국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지적으로, 또 이념적으로 방황하며 제도권에 대한 반발과 항거를 거듭하는 학생 청년층에 대한 올바른 교육과 선도를 소홀히 하고 그

들의 과격한 행동을 진압하고 무마하는 데만 급급했던 정부 및 교육당국의 책임이 크다고 본다.

물론 장기간의 남북분열과 치열한 민족상잔의 전쟁 기간 중 남북 쌍방의 수많은 주민과 그 자손간에 쌓인 심각한 적의와 한(恨)은 간단히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국민의 힘과 저력을 볼 때, 능히 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불행히도 북한은 대한민국을 거부하고 파괴하려는 존재이나 대한민국은 어떤 면에서 보더라도 북한에 우월한 정통적인 본체이다. 정부와 국민은 너무나 태평무사하고 안이하였다. 온 한국국민은 남·북한 정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특히 정부의 지각있는 대책이 시급히 요청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자칫하면 대한민국은 북한 정권의 기만적인 명분과 정략에 휘말릴 위험이 상존한다.

한 · 미 동맹에 대한 시비: 한 · 미 연합사령부 해체 문제

국가의 동맹 선택 여부로 그 흥망이 갈리는 것은 세력균형의 입장에서 본 현대 국제정치의 현실이다.

일본은 19세기 후반부터 개국과 동시에 그의 해군력을 위시하여 군사력을 현대화 하고, 확충하여 오던 중 특히 영국과 특별한 친교관계를 맺으면서, 도움을 받아, 우선 청·일 전쟁(1894~1895)에서 승리를 거두었고 1902년에는 영국과 동맹을 체결하였으며 종래는 한국을 합병하기에 이르렀다. 영국은 그후로부터 일본의 실질적인 힘이 되어 일본은 러시아와의 전쟁(1904~1905)에서의 승리와 함께 한반도에서의 러시아제국 세력의 남침을 저지하여, 한국을 비롯한 동북아지역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확보하였다.

이어서 1차 세계대전에서도 동맹국 영국과 함께 참전하여 전승국(戰勝國)의 일원으로서 극동지역에서 막대한 국익을 신장시키고, 워싱톤회의 열강체제(1920년대 초)까지 세계3대강국의 하나로 부상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일본은 1930년초의 세계 파시즘(fascism) 주축국들과의 제휴와 동맹관계로 전환하였다. 이리하여 동맹관계로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된 결과, 새 동맹국들과 함께 패배하고, 비극적인 침몰을 하게 되었음은 주지의 역사적 사실이다.

한국은 독립이후 미국 등 서방국가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오면서 그들의 지지와 지원하에 신생국가의 지위 확립과 발전을 기하고, 이어서 구 소련, 중국 등 공산침략세력의 지원을 입은 김일성의 남침공격으로 한국전쟁을 겪었으나, UN을 포함한 서방국가들의 군사·정치적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적을 격퇴할 수 있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전쟁 정전후의 공산군 재침에 대비하여 정전의 조건으로 공산군의 재침에 대한 안전보장을 미국에 적극 요구하였다. 그 결과가 한·미 간 방위협력조약의 체결이며 전국민이 이를 환영하였다. 이리하여 성립된 한·미 군사동맹은 그간 60여 년간 한반도에 안전보장과 안정 유지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이다. 당시 불리하고 긴급했던 정전 상태에서 비교적 단시일의

외교교섭을 통해 미국은 한국제안에 응하고, 합의함으로써 한·미 동맹의 발판이 마련되었다. 실로 위기일발의 현명한 선택이었다.

1990년 후반에 들어 한국에 처음 좌익정권이 생긴 것을 계기로 한·미 동맹관계에 약간의 부조화와 간격이 보이기 시작하였다. 즉, 극동지역에서중국군사력의 현저한 부상과 그 확장추세와 더불어 한국의 지정학적 특수여건과 전략적 변화의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런 정세 하에서 당시 한국정부는 느슨한 국내 공안정책과 함께 북한정권에 대한 과도한 유화(宥和)정책과, 급격한 대중국 외교적 접근을 시도했다. 이러한 한국정부의 태도는 다분히 한·미 동맹정신과 현실을 경시하는 배반적 요소마저 느끼게 하는 것이며, 동맹관계를 훼손하는 매우 위험한 것이었다고 생각되었다.

좌익대통령 2대에 걸친 대북 접근에 불안을 느낀 국민은 다음의 2008년 대선에서는 압도적 표차로 보수정권을 복귀시켰다. 그러나 새 보수정권 집권 초기에는 좌파 정부 10년간 좌익적인 안목에 길들여진 일부 지각없는 국민들에 의한 주야를 가리지 않은 맹목적 반미 군중시위를 겪어야 했다.

생각건대, 미국 등 서방 연합이 파견한 다국적군이, 월남, 이라크, 파키스탄 등 현지에서 군사적 성공을 거두면서도 치안, 기타의 정치적 면에서 실패하여 고전 후 퇴장을 면치 못하는 것은 무능과 부패한 현지 정권의 취약한 통치력에 더하여, 단결과 의지력이 약한 국민의 분열에 기인하는 것이라 풀이된다. 이에 대해 한국전쟁에 있어서의 미국과 UN군의 성공은 한국정부와 국민의 확고한 보국의지와 능력에 더하여, 파견된 UN군과의 유기적 협조와 효과적 지지가 있었기 때문으로 평가된다. 한·미 동맹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것은 주한미군과 한국정부 및 국민간의 상호신뢰와 동맹의 공동목표를 향한 일치된 단결과 협력이라 할 것이다.

여기서 현재 문제되고 있는 것이, 좌파정권이 제기하였던 전시작전지휘권 이양이란 난제(難題)이다. 다행히도, 현 정권 출범 후 한·미 간의 재협의를 통하여 한국정부의 요구대로 동 작전권의 이양시기가 2012년에서 2015년까지 연기되었으나, 그 이후에는 어찌되는 것인가? 우선 연기 조치는 현명한 결정이었으나, 아직 국민은 그 장래가 불안하기만 하다.

다국적군이란, 그 작전지휘 계통이 일원적으로 통합되어야 함이 원칙이며, 또한 관례이다. NATO 동맹군도 미국 장성 총사령관의 일원적 작전지휘권 하에 편성되어 있음은 모두 아는 바이다. 이는 작전에서 연합군 전체의 군사력을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가장 중추가 되는 방도이며 요건이다. 이에 따라 동맹 각국이 그 작전지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연합군 사령관에 임시 이양하여 위임하는 것은 결코 주권국가의 군 통수권을 전면 이양하는 것이 아니다.

한국전쟁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국군작전 지휘권을 미국에 임시 이양한 것도 이러한 당시 상황에서의 절대적인 필요성 때문이었다. 이러한 정신이 한·미 동맹군의 바탕이 되는 것이다. 현재의 한·미연합군 사령부는 이러한 한·미 동맹

군의 작전 기능상의 실체이며 그에 따른 필수적인 결과물이라고 할 것이다. 전시작전지휘권 환수란 명목하에 한·미 연합사령부를 해체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한·미 동맹군의 합동작전 기능을 분할시킬 것이며, 이는 그 군사작전력을 결정적으로 약화시키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결정이 한·미 동맹의 약화 또는 분열을 초래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이다. 이러한 중대 문제를 어찌하여 국민과의 협의없이 미국에 제의한 것인지, 또 다른 의문이 남는다.

만약 전 좌파정권이 소위 '민족 자주' 또는 대북, 대중 유화정책의 일환으로 한국의 안보를 담보로 하여 이러한 제의를 하였다면, 이는 중대한 오판이 될 것이며 조속한 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독립, 자주 등에 대한 강한 의지는 민족주의적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가 간다. 그러나 20세기에 접어들어 퇴색되어 가고있는 민족주의의 의미를 신중히 재음미 할 필요가 있다. 국력 등의 역학관계, 지정학적 고려 등을 경시하고, 맹목적인 대등(對等)한 국가관계에만 큰 초점을 두고 현대 국제사회 질서에 대응한다면, 가장 중요한 안보상의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한국 좌파정권과 당시 미국 백악관 사이에 생겼던 마찰로 인해 한·미 관계는 소원했었다. 다행하게도 미국 오바마 정부 수립 이래 한·미 양국 수뇌 간의 새로운 친교관계가 형성되어 한·미 동맹의 존재감이 현저히 증가되었다. 최근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태평양지역 안전보장의 '요체(要諦)-linchpin'라고 칭하며, 종래보다 더욱 밀도있는 표현을 사용하였고, 양국은 최근, 종래의 연례 한·미 간 국방각료회의(MSC)와는 별도로 '2+2'라는 특별한 외무·국방장관 간의 안보회의를 가졌다.

북한의 서해 도발과 중국의 남중국해 협 등에서의 도서영유권과 해저 석유자원 점유권을 위요한 군사적 시위 등을 배경으로 최근 한·미 양국은 대규모 합동군사연습을 실시하였다. 이는 미·소 간 냉전 종료 후 특히 동북아지역에서 새로 시작되었다고 보여지는 '파워게임' 즉, 최근 군사력 강화와 함께 해양진출과 그 영역확장을 기도하는 중국을 견제하고, 비대칭 무기를 개발하고 선군정치를 외치며 서해 NLL침범, 연평도 포격, 천안함 격침 등 일련의 군사도발을 감행해 오던 북한의 적대적 행동에 대비하는 한·미 동맹의 힘의 시범으로써 당연한 일로 여겨진다.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는 약점을 보여서는 아니 된다. 약자는 힘을 과시하려는 패권주의자의 희생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 국제정치상의 진실인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취지는 한때 미국의 국무·국방정책 고위담당자였던 'R. 아미테지', 'J.S. 나이' 씨와 미국 아세아문제 전문가들에 의한 최근의 공동보고서도 분명하게 적시하고 있다.

과거 반세기 이상 그랬듯이 현재도 한반도는 북한이 던지는 불씨에 의한 방화로 언제든지 전쟁터로 변해버릴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위험사태 방지를 위하여 핵의 우산망과 함께 한·미 연합 방위벽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한국 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는 국방예산삭감, 주한미군 전면 철수, 한·미 동맹 반대

등을 주장하는 좌익세력과 무조건 평화론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현상은 경계할 일이다.

한국의 완전통일 전에 한국이 택할 수 있는 방향은 대략 다음 세 가지 중의 하나로 여겨진다. 즉, '한·미 동맹 견지 및 강화', '유럽의 프랑스 등 일부 국가들이 추구하는 자주 독립노선', '21세기에 대국화의 길을 걷고 있는 중국의 영향권으로의 편입' 등이 그것이다. 이중 한국의 유일한 현실적 선택은 한·미 동맹 밖에 없다고 본다.

UN을 통한 집단안보 원칙 테두리에서 한국의 안보 유지를 꾀한다는 것은 UN 가맹국 수가 과다하고 안전보장이사회의 5대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 때문에 그 주요한 결정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현실에 비추어 이러한 집단안전보장 체제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이는 결국 현명한 선택이 아니다. 현재 극동의 세력균형 구도 속에서 한·미 군사동맹은 미·일 동맹과 더불어 그 테두리 속에 박혀있는 '요석'과 같은 존재이며, 한국은 여기서 떨어져서는 아니 될 일이다.

한·미 동맹은 당연히 대중국, 대일본 외교 및 안보전략 문제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현재로서는 한·중·일 간의 3국 협력체제 구축이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시간을 두고 현재의 극동지역 세력균형을 도모하면서 이 지역 3국 간의 이해관계 조율을 기함으로써 한·중·일 3국 협력체제를 추진할 여지는 있다고 생각된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다가올 중국의 개방과 민주화 등의 변화를 보면서 점진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이다. 미국과 동맹 관계에 있는 일본과도 가능한 군사적 연계의 길을 트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한·일 양국은 긴 장래의 역사를 내다보면서 불편했던 과거사 문제를 지혜롭게 극복하고 실제적이고 건설적인 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의 일·중과의 안보협력관계 개선은 시차성(時差性)을 두고 이루어지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특히 경계를 요하는 것은 조급한 기대와 움직임 속에서 한·미 동맹관계에 긴장과 동요를 줄 수 있는 일은 피해야 할 것이다.

1980년대 미·소 양진영 간의 냉전체제가 종식되어 가던 무렵, 유럽에는 핵억제력 및 재래식 무기 체계를 포함하여 거의 완전한 군사적 균형상태가 성립되었다. 이러한 정세를 감안하여 중립국 핀란드의 키코넨 대통령의 이니시어티브로 유럽 국가 간의 협력과 안전보장을 위한 헬싱키 회의가 소집되어, 27개 동서유럽 각국 대표가 회합하여 현재의 유럽 협력안전보장체제에 관한 합의(Helsinki Process)가 이루어졌던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대 국제정치에서도 세력균형만이 안정과 평화를 실현시킬 수 있는 절대적 전제임을 보여준 것이다.

남북 연합체 제의

'6·15 공동선언'은 좋게 말하여 한국 민족의 '자주'와 '평화적 통일'의 의지와 염원에서 나왔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북한정권 특유의 사술(詐術)

과 순수한 한국 국민의 통일 열망과 그 이미지를 교묘히 결합시켜 합의를 이끌고 이용하려는 술수가 엿보인다. 특히, 동 선언 제2항에 교묘히 표현된 '남북연합국가제' 제의에 여실히 나타나 있다고 본다.

일찍이 김일성은 소위 '고려민주연방공화국'론을 주창하고 1980년 10월의 '조선노동당' 대회에서 이것을 '국론'으로 결정하였으며, 현재 이것은 절대 불가침의 '유훈'으로 되었다. 김일성은 연합국가를 수립함으로써 한·미 동맹과 한국 내 미군주둔의 명분을 없애고, 한국에서의 미군 전면 철수를 추구하려는 것이었다.

문제는 이 연합국가론이 이제 한국 국민들 사이에서 '평화적 통일의 길'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전파시켰으며 이 평화통일이라는 주소(呪詛)가 한국 대중을 심각히 마비시키고 있다. 이상한 것은 이 문제에 대하여 당초 비판적이었던 언론이 대부분은 현재 이 '공동선언'에 대하여 거의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태다.

만의 하나, 이러한 연방제가 한반도에 생겨난다면 우선, 한·미 동맹하의 미군 철수는 시간문제일 뿐 아니라, 그 결과 이 지역 세력균형에 있어 중대한 지각변동이 올 것이 확실히 예상된다. 그렇게 될 경우 닥칠 한국자체의 파멸적인 경제상황까지를 생각할 때 연방화는 엄청난 재앙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닌가 두렵다.

총선과 대선이 있는 2012년은 대한민국 국민이 나라의 안전과 장래를 위한 중대한 역사적 선택을 해야하는 해가 되었다. 우리 국민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할 뿐이다.

‘조선’의 몰락에 대한 반성
- 새로운 전략적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하여 -

공 로 명*

Ⅰ. G2 시대에 서서

근래 중국은 G2의 경제력을 배경으로 유인 우주선의 독킹에 성공하는가 하면, 남중국해에서는 힘의 전개로 아세안 몇 개 국가와 불편한 관계에 있고, 기존의 만리장성을 ‘역대 만리장성’이라 부르며 그 길이를 세 배로 늘려 발표하는 등 다양한 국면에서 그 존재감을 떨치고 있다. 융성일로의 중국과 평화우호관계를 유지하며 공생공영 하는 것이 우리 외교의 제1의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중국인들은 강력한 힘이 일어나면 그 힘과 균형을 맞추는 길을 합종책(合從策)이라고 말해왔다. 날로 거대해지는 중국의 영향력에서 미들파워 한국이 자주자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국 일본 등 우방국과의 합종책으로 압도적인 중국의 영향력을 헷지(hedge) 하는 도리 밖에 없을 것이다.

한때 소원해졌던 동맹국 미국과의 관계는 지난 4년의 노력으로 수복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동맹에 버금가는 일본과의 관계는 신각수 주일대사의 말을 빌린다면 정냉민열(政冷民熱)의 관계에 있다고 한다. 민열(民熱)은 일본의 한류 붐으로 대표되는 민간차원의 교류와 경제협력 관계를 말한다. 지난 5월 베이징에서 있었던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노다 수상과의 개별 정상회담을 갖느냐 마느냐를 갖고 한·일 양국 실무진들이 고심했다는 얘기는 이러한 상황을 대변한다.

이러한 한·일 관계의 정냉(政冷)현상은 군대 위안부 문제, 독도 문제, 강제징용에 대한 보상 문제 등 부(負)의 역사적 유산 문제에 기인한다. 금년은 1965년 한·일 수교로부터 반세기를 넘기고도 2년이 되는데 불구하고 아직도 이러한 부의 유산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설상가상으로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작년 8월 군대위안부의 대일 배상 청구권과 관련하여 정부가 구체적인 해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위헌이 된다고 판시했

* 전 외무부 장관

고, 지난 5월에는 대법원이 일제 강제 징용자들의 개인청구권 문제와 관련, 일본 민간기업들은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다. 이 두 문제는 일본정부 입장이 우리와는 정반대이기 때문에 문제의 해결을 보지 못한 채 양국관계에만 커다란 상처(damage)를 안길 것이 우려된다.

Ⅱ. 20-50 클럽의 일원이 되어

지난 5월28일 우리나라 인구가 5000만 명을 넘어서는 것을 계기로 한국은 이른바 20-50 클럽에 가입했다고 보도됐다.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에 인구 5000만 명을 넘는 클럽에 7번째로 입회했다는 것이다.

이 지구 상에 20-50 클럽의 나라가 일본(1987), 미국(1988), 프랑스, 이탈리아(1990), 독일(1991), 영국(1996)뿐이었는데 우리가 일곱 번째 나라가 되었다는 것은 자랑스러운 성취이다. 1961년 근대화의 길에 올라 51년 만에 달성한 금자탑이며, 자긍심을 가질 만한 성취이다. 우리는 새롭게 성취한 민족적 자긍심에서 지난 100년간의 한·일 관계에 대해서도 우리의 역사인식을 새롭게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 번 패자가 되었다하여 영원히 패자의 눈에서 일본을 볼 필요는 없다.

지금부터 150년 전 왜 한 나라는 이 지역에서 신흥근대국가로 흥륭(興隆)의 길을 걸었고, 다른 한 나라는 열강들이 이 지역의 골칫거리로 보고, 종국에 피식민지배의 나락으로 떨어졌는지 우리들의 진솔한 성찰을 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우리의 무지와 과오를 눈감고 민족주의 사관에서 그 시대의 지배논리였던 약육강식의 제국주의의 비윤리성만 탓할 수는 없다.

우리의 민족감정이 일본제국주의의 비도덕성을 용납할 수 없는 것과 같이 그 당시의 우리역사에 대한 가감 없는 반성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이 시점에 우리가 지난 100년을 돌아보고 앞으로 100년을 성찰하는 의의가 있을 것이다.

Ⅲ. 시오노 나나미와의 대화에서

「로마인의 이야기」의 저자로 우리나라에도 많은 독자를 가진 시오노 나나미(鹽野七生)여사를 나는 1999년 정태익 주 이탈리아대사의 주선으로 로마에서 만나 장시간 담소할 기회를 가졌다. 내가 그에게 첫 마디로 "1000년 로마 멸망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라고 물었을 때 그녀는 서슴지 않고 그것은 "로마 지배층의 내부 분열이었다"고 답한 것이 인상에 남는다.

우리역사에서도 북방의 강국이었던 고구려가 연개소문의 아들 남생 형제들의 불화와 당파의 분열이 화가 되어 쉽게 멸망했던 고사(古事)가 있으며, 가깝게는 구한말의 대원군과 명성황후 간의 내분이 조선의 사양화(斜陽化)에 불을 질렀다고 하겠다.

한 나라의 국모가 외국인 무장폭도에 의해 무참히 참살 된 것에 비분강개하나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 외국인 폭도들에

호위되어 시해된 국모의 시아버지인 대원군이 궁전 안에 와있던 사실을 아는지 궁금하다.

Ⅳ. 조선지배층의 시대 변화에 대한 무감각

서세동점(西勢東漸)의 상징적 사건인 아편전쟁(1840~1842)에서 청(淸)의 패전은 즉시 일본에 전하여져, 일본인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일찍 난학(蘭學)을 통해 유럽사정에 접해오던 일본은 중국본토보다 빨리 아편전쟁의 국제적 의미를 이해하고 위기감을 가졌다고 한다.

이에 비하여 조선의 조야(朝野)에서는 이렇다 할 경각심마저 보인바 없다고 이선근 박사는 「한국사 최근세 편(진단학회 헌종 6년 화환동지사 관련)」에서 말하고 있다.

임칙서(林則徐)의 참모였던 위원(魏源)은 임칙서가 수집했던 미국, 영국 등에 관한 정보를 토대로 「해국도지(海國圖志)」를 기술하였는데 이 책은 동아시아 최초의 본격적인 서양 소개서라고 한다. 이 책에서 "오랑캐의 기술을 스승삼아 그것으로 오랑캐를 제압한다(師夷長技以制夷)"라는 유명한 구절이 유래됐는데, 이 책은 일찍 일본에 들어와 선각자들 사이에서 널리 읽혀졌다고 한다. 그들 가운데에는 요시다 쇼인(吉田松陰), 개명사상가 사쿠마 쇼잔(佐久間象山), 국방문제의 선각자 와타나베 가잔(渡辺華山), 미토 번주(水戸藩主) '도쿠가와 나리아키(德川斉昭)' 등의 이름이 있다.

나의 좁은 견문으로는 이 책을 이 시기의 조선조의 지배층이 읽고 위기의식을 가졌다는 이야기는 아직 못 들었다. 아편전쟁으로부터 40년 후인 고종 17년(1880) 제2차 수신사로 도일했던 김홍집이 갖고 왔던 '조선책략'을 조정에 제출하였을 때 조정내부에서 연미(聯美)책은 야소천주학(耶蘇天主學)을 들여오는 것이 된다하여 반대론이 제기되고 유림(儒林)에 의한 만인소(萬人疏) 등의 반대 운동이 격심하여 김홍집이 실각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만 있을 뿐이다.

Ⅴ. 양요(洋擾)를 맞는 한 · 일 양국의 차이

1853년과 1854년 2회에 걸쳐 일본을 방문한 매슈 페리 제독의 미 극동함대의 '구로부네(黑船)' 위용에 눌려 도쿠가와 막부(德川幕府)는 미국과 화친조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이 조약체결에서 교토(京都) 천황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것을 구실로 하여 토막(討幕)의 기치를 올린 죠슈(長州) · 사츠마한(薩摩藩)의 근황양이(勤皇攘夷) 운동은 종내 전쟁으로 비화하여 막부제도는 1867년 종식을 고하고 명치(明治)정부가 출범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근황양이(勤皇攘夷)를 내세웠던 죠슈한(長州藩)과 사츠마한(薩摩藩)은 각각 영 · 불 · 화 · 미(英 · 佛 · 和 · 美) 4개국 함대(17척)에 의한 시모노세키 전쟁(下関戰爭: 1863년 및 1864년)과 사츠에이전쟁(薩英戰爭: 1863년 7척의 영국함대 참전)을 겪으며, 이 전쟁에서 이들 두 번

(藩)은 양이(攘夷)의 실행이 불가능함을 깨닫고 명치(明治)정부 수립과 동시에 대외정책을 180도 전환하여 개국으로 치달았을 뿐만 아니라 신정부 내각의 반수 이상의 대신들이 외국유람단을 구성하여 2년에 걸친 구미시찰로 떠났던 것이다.

그러나 조선의 경우, 천주교도 학살의 책임을 묻기 위하여 1860년(병인양요) 강화도에 내침한 프랑스 함대(4척)와 제네럴 셔먼호의 전말을 묻기 위하여 1871년(신미양요) 내침한 미국 함대(5척)는, 이렇다 할 목적을 달성하는 일없이 스스로 물러가, 외계지식에 어둡던 대원군은 척화비(斥和碑)를 전국에 세우고 그의 쇄국양이정책을 더욱 고집하는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우리의 개국은 일본보다 14년이나 늦춰졌다.

Ⅵ. 정한론 대두와 대일 수교의 막후 비화

260년 일본을 통치해오던 도쿠가와 막부가 정권을 교토의 천황에 반환한 '왕정복고(王政復古)'가 1867년 이루어지자 일본은 이러한 정변을 조선에 알리기 위하여 1869년 12월 사절을 보냈다. 그러나 조선은 그 사절의 접견을 허락하지 않고, 일본측 국서의 개수만을 요구하는 대응을 보였다. 일본측 서계에 '我邦皇朝聯綿', '奉勅', '朝廷' 등의 문구가 있어 불손할 뿐더러 종래 조선이 정해주었던 도장이 아닌 다른 도장을 사용하였다는 이유에서였다.

일본측은 1870년 재차 내부(來釜)하여 교섭을 시도 하였으나 조선은 동래부사 명의로 이를 거부하고 만다. 일본은 그 후에도 여러 번 사절을 파송하였으나 계속 거절하므로 드디어 일본정부 내에서는 무력으로 해결하자는 정한론(征韓論)이 대두한다.

일본의 신정부 수립을 통고하는 국서 접수여부로 전후 7년을 끄는 가운데 일본 내에서는 정한론파와 그 반대파 간에 1877년 내전(西南戰爭)이 일어났고, 한국에서는 1873년 최익현의 대원군을 탄핵하는 상소가 도화선이 되어 종래에 대원군이 실각하고 고종의 친정체제가 들어서면서 대일정책에 변화가 온다.

그러나 대일외교를 맡아왔던 대원군의 수하들이 물러가는 과정에서 역사 드라마 같은 사건이 일어난다. 이것은 부산훈도(釜山訓導) 안동준(安東晙)에 대하여 효수형(梟首刑)이라는 극형이 내려지는데 그 이유는 세자순종(純宗)의 책봉에 대한 청조(淸朝)의 승인을 얻기 위한 명성황후 일파의 비밀교섭의 진상을 정면에서 공격한 까닭이라고 한다. 즉 명성황후측은 부산주재 일본관헌을 통해 일본과의 국교회복을 조건으로 일본의 주 북경공사가 북경정부 요로를 움직여 순종의 책봉을 조기에 매듭짓기 위하여 교섭했다는 것이었다.

조선정부의 속셈을 안 일본은 그들이 1853년 '구로부네(黑船)' 소동으로 당했던 것과 동일한 수법으로 포함외교(gunboat diplomacy)를 위하여 1876년 군함 7척을 동원하여 조선에 개국을 강요하여 '조일수호조규' 즉 '병자수호조약'을 체결하게 된다.

농부는 씨를 뿌린 만큼 거둔다는 말이

있듯이 외세에 둔감했고 구습에 젖어있던 우리의 선인들은 그 대가를 자주권의 상실로 치르게 된 것이다.

Ⅶ. 사죄와 반성의 의의

한 · 일 간에는 '역사의 화해'라는 말이 자주 언급 된다. 양국의 역사인식의 차이에서 빚어지는 교과서 문제, 독도의 영유권 문제 등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으며 식민지배에 대한 한국국민의 상흔이 일본 측의 반성과 사과로 지워지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일본의 반성과 사과를 수용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이다.

일본의 반성과 사과는 1951년 제1차 한 · 일회담 예비회의에서부터 시작된다. 이 회담에서 한국의 양유찬 수석대표가 일본에 대한 구원(舊怨)을 잊고 양국은 화해하자고 했을 때 일본측 교체수석 대표는 무엇을 화해한다는 것이냐(What are the hatchet to bury?)고 되물었다고 당시 회담에 참석했던 유진오 박사는 메모에 남기고 있다.

이러한 일본이 "과거의 국책의 잘못을 뉘우치고 침략과 식민통치로 아시아 인민에게 다대한 고통과 피해를 끼친 것을 반성하고 사죄"하는 무라야마 총리담화가 나오기까지는 41년의 성상을 필요로 하였다.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의 방일시 발표된 김 대통령과 오부치 수상 간의 공동선언에서는 일본 측의 "진지한 반성과 심심한 사과"를 하고 한국은 이를 "평가하고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할 것"을 다짐하였던 것이다.

필자가 주일대사로 재임하던 1995년 무라야마 담화가 나올 때 일본 내에서는 1945년 '종전'으로부터 50년을 맞이하여 일본의 최고 통치기관인 국회결의를 통하여 과거를 총괄하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일본 국회 특히 참의원의 보수 세력의 저항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총리담화로 낙착된 경위가 있다.

지금도 일본의 과거 식민통치와 침략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일본 국회결의로 한다거나 또는 천황의 방한을 통한 반성과 사과가 아이디어차원에서 논의 되고 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참다운 양국의 역사적 화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해자였던 일본은 역사에 겸허하고 피해자인 한국은 관용을 보여야 한다고 한다.

일본 측에서는 과거에 대한 반성과 사과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겠으나 역사는 잊혀지지 않는다는 것을 유념하여 겸허할 필요가 있고, 피해자인 한국은 진솔한 역사에 대한 성찰을 통해 스스로의 허물을 시인하는 데에서 역사에 대한 관용이 살아난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Ⅷ. 전략적 협력 관계 구축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미국과 나란히 G2시대를 맞는 중국의 급부상에 따라 한국은 과거 어느 때보다 더욱 절실하게 중국과의 관계 관리에 힘써야 한다. 13억 인구에 세계 제2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하는 중국의 막강한 영향력을 가려 나가고

국익을 보전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동맹국을 필요로 한다. 19세기 조선은 국익 보호를 위하여 의존할 수 있었던 동맹국이 없었기에 일본 제국주의의 독아(毒牙)에 희생되고 말았다.

중국의 급부상이 중국인들의 자존심과 애국심에 화학작용을 일으켜 이것이 대외적인 압력으로 전개되는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중국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할 싱가포르의 리콴유(李光耀) 전 수상은, 중국의 평화적 굴기를 믿는가라는 질문에, 대약진, 문화혁명, 4인방 등의 기복을 겪고 개방에 이른 중국의 기성세대가 '평화'를 원하는 심정은 이해되나, 중국 정부가 그러한 과거를 겪지 않은 젊은 세대에게 중국인의 자존심과 애국심을 가르치고(inculate), 그러한 것이 2005년의 반일 데모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대외적인 폭발력을 가져 오는데 에는 문제가 있다고 우려한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타임지(誌), 2005년 12월12일자〉

앞으로의 100년 초강대국으로 발돋움하는 중국과 선린협력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한국은 한 · 미 동맹을 더욱 강화해가면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동맹에 버금가는 우호협력관계에 있는 일본의 전략적 유용성을 정당히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전략적 인식이 한국인의 국민적 컨센서스로 성립될 때 비로소 한 · 일 간의 민족적 화해가 가능해지고, 전략적협력 관계가 발전할 것이다. 그러한 국민적 컨센서스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의 역사 인식, 특히 19세기 조선의 몰락에는 우리 스스로의 허물이 있었다는 인식이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외교

중남미 소고

조 환 복*

과거 중남미라고 하면 주기적인 외채 위기와 고율의 인플레, 불안한 정치와 함께 광적인 축구 열풍, 고대문명, 각종 축제와 카니발 등 낭만적인 이미지도 있다. 그리고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경제개발 여건도 양호한데 비해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지 않으며 치안이 안 좋고 빈부격차가 심한 지역이라는 인상이 강하다. 또한 우리와의 경제적 교류보다는 전통적인 이민 대상지역으로 더 알려져 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아 중남미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인상을 갖고 있는 것은 1990년대 이후 중남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의미 있는 변화와 발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중남미에는 거의 모든 나라가 그 어느 때 보다도 경제체질은 강화되고 국내 정치는 크게 안정되었다. 비록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빛이 가려 제대로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하나 많은 전문가들은 2010년대가 중남미의 시대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중남미의 변화와 우리의 인식 간에 괴리가 있는 것은 우리가 중남미를 잘 모르고 큰 관심이 없는 것에도 기인하지만 우리의 인식 기준 자체가 서구 중심주의적인 시각에 치우쳐 있기 때문이다.

중남미 정의

중남미라고 하면 미주대륙에서 미국과 캐나다로 구성된 북미 2개국을 제외한 지역을 일반적으로 의미한다. 그러나 미주대륙에는 상당수 카리브해 연안 국가가 있으므로 '중남미 및 카리브 지역'이라는 표현이 정확하다. 실제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는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지역'으로 표기하고 있다.

중남미라고 하면 거의 모든 국가가 스페인어를 할 것으로 생각되나 실제로 중남미(카리브지역 포함) 국가 33개 중 스페인어 사용국은 18개, 영어는 12개, 포르투갈어와 불어, 화란어가 각 1개 씩일 정도로 다양하다. 그리고 우리는 라틴아메

* 전 주 멕시코 대사

리카와 중남미를 동일시 하고 있으나 전자는 라틴어에 기반을 둔 언어학적 분류인데 반해 후자는 지리적 개념이므로 반드시 동일하지는 않다.

한국과 일본에서는 '중남미'라고 통칭하나 중국은 '라틴미주'라고 부른다. 멕시코의 경우 라틴아메리카 국가이나 지리적으로는 중남미가 아닌 북미에 속한다.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개국 간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라고 한다.

주한 멕시코 대사가 우리 외교부에서 멕시코를 담당하는 부서 명칭이 '중미 카리브과'로 되어 있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를 '멕시코와 중미 카리브과'로 정정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였다.

중남미 국가들은 유사한가?

라틴아메리카(본고에서는 카리브 지역을 제외한 중남미지역을 의미함)라는 명칭은 지리적 영역 못지않게 동질성 있는 문화적,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라틴아메리카는 별칭 '이베로아메리카'라고도 불릴 만큼 스페인 문화의 압도적인 영향으로 브라질을 제외한 거의 모든 나라가 스페인어를 사용하고 대부분의 주민이 가톨릭교를 신봉하며 풍속·습관 등에서도 유사점이 많다. 중남미 사회는 광범위한 인종적 혼혈로 형성된 혼혈족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일상생활에서는 원주민적, 흑인적 요소가 아직도 여전히 남아 있다. 또한 식민시대와 독립투쟁의 과정을 거쳐 독립국이 되었으나 식민지배의 유산으로 중산층의 발달이 미약하고 빈부의 격차가 심한 편이다. 많은 국가가 쿠데타와 군사독재라는 정치적 수난의 시기를 거쳐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을 동시에 걷고 있다.

이러한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중남미 국가들을 전체적으로 동일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은 큰 착오이다. 우선 중미국가와 남미국가는 라틴아메리카 국가라는 정체성 이면에 상호 실질 협력 교류는 생각보다 크지 않다.

중미와 남미를 대표하는 대국인 멕시코와 브라질 간 2010년도 쌍방교역 규모(81억 불)가 멕시코에 진출한 삼성전자와 LG전자의 해외 수출 총액(87억 불)보다도 적은 수준이다. 또한 중미와 남미 지역 국가들도 역사적 문화적 배경에 따라 여러 개의 소그룹으로 각각 나눌 수 있다.

중미지역의 경우 멕시코는 별도로 하고, 과거 중미합중국에서 분리된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경제적 수준과 민도가 높은 코스타리카, 콜롬비아에서 분리된 파나마 등으로 소분류 할 수 있다.

남미지역은 브라질과 석유가 풍부한 베네수엘라, ANDEAN 공동시장 국가인 페루, 콜롬비아, 볼리비아, 에콰도르, 그리고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칠레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국가군 간에는 식민과 독립, 그 이후 국가발전 과정이 상이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 현지 문화에도 차이가 있다. 우리 기업이 중남미 지역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중남미 전체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함께 진출 대상 국가의 역사적·

문화적 면면을 세밀히 연구 할 필요가 있다. 마치 중국이 중국어를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하나의 커다란 대륙이지만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하기 위하여는 각 지역 또는 각 성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성 있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논리와 일맥상통한다.

중남미의 변화

과거 중남미의 정치 상황은 1973년 칠레 피노체의 유혈 쿠데타가 상징 하듯이 많은 국가에서 군사독재가 있었으며 중남미를 자국의 앞마당으로 간주한 미국이 여러 나라의 내정에 개입하는 등 불안한 정세를 보였다.

볼리비아의 경우 한동안 독립의 햇수보다 군사 쿠데타가 발생한 숫자가 더 많았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 중남미에는 쿠바 등 극히 일부의 국가를 제외하고는 투명성 있는 선거를 통해 평화적으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는 등 민주주의가 착실히 발전하고 있다.

베네수엘라 우고 차베스 대통령의 돌출적인 언사와 행동으로 인해 중남미 민주주의의 수준을 평가 절하하려는 경향이 없지는 않지만 차베스 대통령 자신도 적법한 민주절차에 따라 대통령이 되었다.

오히려 2002년 차베스 대통령을 축출하기 위한 쿠데타가 불과 사흘 만에 민중의 힘으로 실패하고, 페루의 철권 통치자인 후지모리가 민심이반으로 일본으로 망명하고, 멕시코에서 71년간 집권한 독재정당이 무너지고, 27년 만에 칠레에 사회주의 정부가 수립되는 의미있는 변화가 현재 중남미의 민주주의 수준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2009년 온두라스에서 셀라야 대통령을 몰아 낸 사실상 군사 쿠데타에 대해 중남미 거의 모든 국가가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신임 정부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중남미에서 다시는 역사에 역행하는 군사 쿠데타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지역 차원의 정치적 결의라고 볼 수 있다.

경제적으로도 지난 20년간 중남미에는 조용한 그러나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 지역별, 국별 성장세에는 차이가 있으나 중남미 전체로 보면 1990년대 5.3%, 2000년대 6.2%의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였다. 동아시아에 비하면 낮지만 미국이나 유럽에 비하면 크게 높은 수준이다. GDP 대비 외채 비율도 2002년에서 2011년 사이에 절반 이하로 크게 줄어 만성적인 외채 위기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도 이룩한 꾸준한 경제성장 덕분에 빈곤층의 비율은 1990년 48%에서 2011년 30%로 낮아지는 등 약 3천만 명이 절대 빈곤층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대표 선수는 단연 브라질이다. 브라질은 BRICs 국가 중에서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을 함께 실현하고 있다. 강대국으로서 일찌감치 핵무기를 포기하고 주변국과 아무런 영토분쟁도 없으며 인종 간 화합과 청정에너지 사용은 세계적인 모범국이다. 브라질 사례는 서구 지역의 경제 악화, 걸프만 지역의 끊임없는 종교분쟁, 중국 등 많은 아시아 국가에서의 권위주의 등과 크게 대비된다.

또한 브라질의 정치적 · 경제적 성공은

여타 인접 국가의 모델이 되고 있다. 이제 중남미는 정치안정과 경제발전을 바탕으로 과거 '잊혀진 대륙'에서 '주시받는 대륙'로 바뀌고 있다. 어느 학자는 "중남미가 더 이상 지는 게임을 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서구중심주의적인 사고

우리는 세상사를 우리 고유의 시각이 아닌 서구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세계화 시대에서 우리의 경제 수준이나 민주주의가 더욱 발전할수록 오히려 강화되어 가는 인상이다. 이러한 시각에는 서구적인 것이 세계적이고 합리적이며 서구가 정한 기준은 보편적이고 타당하다는 보이지 않는 믿음이 있다.

서구중심주의적인 프리즘을 통해 우리는 자연스럽게 미국과 유럽의 제도와 문화는 본받을 만하며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는 생각도 하게 된다. 그러한 시각에서 바라보는 중남미의 실상은 크게 왜곡되어 질 수밖에 없다.

콜럼버스가 미주대륙을 '발견'했다고 한다. 콜럼버스가 엘도라도를 찾기 위해 대서양을 건너 서인도 제도의 한 섬에 도착한 날이 1492년 10월12일 이다. 그러나 본격적인 대륙 정복은 1520년대 들어 시차를 두고 중남미 대륙 전체에서 진행되었다.

유럽이 미지의 대륙을 '발견'하였을 당시 소위 '발견 당한' 대륙에는 약 7천8백만 명의 원주민이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1523년 에르난 코르테스 정복군에 의해 멸망한 아즈텍 제국의 인구만 해도 2천만이었다고 한다. 게다가 코르테스를 따라온 한 기록관은 당시 아즈텍의 수도인 테노치틀란에 입성하면서 자기 눈앞에 펼쳐지는 문화에 대해 "듣지도 보지도 상상도 못하였다"고 기술하였다.

'발견'이라는 용어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수천 년 간 높은 문화수준을 유지하며 살아온 지역을 마치 무주공산인양 먼저 찾았으니 내 것이라는 오만이 가득 들어 있다.

스페인에서는 콜럼버스가 데려 온 원주민을 종교적으로 인간인지 동물인지를 결정키 위한 논란이 있었다고 한다. 1992년 콜럼버스의 미주대륙 발견 500주년을 맞이하여 중남미 국가들은 '발견'이라는 표현에 이의를 제기하고 '발견(Discovery)'이 아닌 '만남(Encounter)'이라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중남미에서는 미국의 콜럼버스 데이(10월 두 번째 월요일)를 유럽과 미주 대륙의 첫 만남이란 뜻에서 '인종의 날'로 정하여 기념하여 왔으나 2002년 10월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이 날을 '인디안 저항의 날'로 바꾸는 등 재평가 바람도 불고 있다. 그의 미주 대륙 발견으로 인해 원주민들이 대량학살 등 참상을 당했던 만큼 콜럼버스를 기릴 이유가 없다는 논리이다.

할리우드 영화를 통한 왜곡

역사를 가진 민족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선조들이 겪은 역경을 어느 정도 미화하여 후손에 본보기로 보여주기를 원한다. 이 때 영화는 역사를 재해석하거나 왜곡하는데 아주 편리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또한 애국주의나 민족주의에 편승하여 사건을 재구성하고 국민 정서와 여론을 호도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영화가 존 웨인이 감독한 '알라모'이다. 1821년 독립을 실현한 멕시코는 당시 자국령이었던 텍사스를 개척하기 위해 미국 사람들의 이민을 받는다. 1830년대 초에는 약 26,000명에 달하는 미국인이 텍사스로 이주하였으며 모든 새 정착민은 가톨릭으로 개종하고 이름도 스페인어 식으로 개명하여야 했다.

지금의 미국, 멕시코 간 관계와는 완전히 반대의 상황이었다. 그러나 텍사스에 이주한 미국인들은 멕시코가 정치적으로 혼란해진 틈을 타서 무력을 동원하여 멕시코군 요새를 파괴하고 독립을 꾀한다. 미국 정부의 보이지 않는 지원이 있었음은 물론이다. 위기에 직면한 멕시코 정부는 산타안나 장군이 이끄는 정부군을 급파하여 반란을 진압코자 하였다.

그 과정에서 산타안나 장군은 반란 세력의 주력인 샘 휴스톤 장군의 부대를 추격하지 않고 불과 민병대 규모가 200명도 되지 않는 알라모를 포위하여 시간을 소모한 전략적 실수를 범한다. 그리고 십 여일에 걸친 전투에서 알라모의 민병대는 섬멸된다. 그 이후 멕시코군은 산하신토 전투에서 텍사스 민병대에 패배하고 산타안나 장군은 포로가 된다. 그 여파로 멕시코는 텍사스의 독립을 약속하고 산타안나 장군은 석방된다.

1836년 독립을 성취한 텍사스는 미국에 합병코자 하였으나 당시 남북전쟁의 조짐 등으로 보류되었다가 1845년에 정식으로 미국에 합류하게 된다. 텍사스의 독립 과정을 멕시코 입장에서 비유적으로 설명하면 "별로 활용되지 않는 땅을 개발키 위해 이주민을 받아들였더니 이들이 주인을 배반하고 무력을 행사하여 땅을 빼앗은 것"이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텍사스 혁명이라고 언급하는데 멕시코가 보면 이들 민병대는 외국인 반란군이고 알라모 전투는 주권적 차원에서 정부군이 반란군을 소탕하기 위한 정당한 진압 작전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영화 '알라모'에는 이러한 역사적 배경에 대하여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알라모 요새의 전투로 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185명의 민병 수비대 전원이 장렬히 전사하며 끝이 난다.

알라모 소재는 미국에서 수차례 영화화 되었고 이와 관련된 출판물만도 150여 종이나 된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영화를 보면서 역사적 맥락에 대한 이해는 전혀 없이 미국의 용감한 전사들이 탐욕스럽고 무능한 멕시코군에 결사적으로 항전하며 절대적인 병력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영웅적으로 요새를 방어하다가 장렬히 산화하였구나 하는 인식을 갖게 된다. 그리고 멕시코의 폭정에 대항해 정의롭게 죽어가는 영웅들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텍사스 민병대는 정서상으로 우리 편이 되고 멕시코 정부군에 대하여는 공연히 불편한 마음을 갖게 된다.

조롱 받는 판초빌라

미국의 할리우드 영화에 등장하는 멕시코나 멕시코인은 대부분 부정적으로 묘사된다. 특히 서부 영화에 등장하는 멕시코 인물들은 우스꽝스럽고 무능한데다가 게으르고 종종 포악하게 묘사된다. 대표적인 모습은 “창이 커다란 모자를 쓰고 콧수염이 난 험악한 얼굴에다가 허리에는 기다란 탄창을 차고 한결같이 똥배가 튀어나온 형상”이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판초 빌라이다. 미국 영화에서 판초 빌라와 같은 불량배는 선량한 미국 시민을 괴롭히고 죽이는 만행을 벌리다가 결국 우리의 주인공인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정의의 총에 맞아 죽어 가는 산적으로 자주 묘사된다. 그러나 판초 빌라는 미국 영화 내용과는 달리 멕시코에서는 에밀리오 사파타와 함께 일반 국민으로부터 추앙받는 멕시코 혁명의 양대 풍운아이다.

2010년도에 멕시코 독립 200주년 및 혁명 100주년을 맞아 멕시코 길거리는 두 혁명가의 사진으로 도배가 될 정도였다. 멕시코 하원 의사당 본 회의실에는 멕시코 영웅들의 이름이 새겨진 4개의 커다란 기둥이 있다. 판초 빌라의 이름이 그곳에 당당히 자리 잡고 있다.

1916년 3월 판초 빌라는 미국 국경을 넘어 뉴멕시코주 콜럼버스시를 급습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부하 90명을 잃고 18명의 미국인을 죽이게 된다. 미국을 공격한 이유는 멕시코내 정부군과의 전투에서 자신의 군대에 쓸모없는 무기를 팔았던 미국인 무기 거래상에 대한 복수를 하기 위해서였고 한다. 미국은 판초 빌라를 붙잡기 위해 일만 명 규모의 추적대를 멕시코에 파병하나 실패한다.

멕시코 사람들에 의하면 미국과 멕시코 간 수백 년에 걸친 역사에서 항상 미국이 가해자였던 반면 유일하게 미국 국경을 넘어 미국인을 단 한번이라도 괴롭힌 멕시코인이 판초 빌라였다고 한다.

소작농에서 산적을 거쳐 혁명가가 된 판초 빌라를 멕시코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항상 미국에 대해 피해의식을 갖다가 그를 통해 어느 정도 대리만족을 느끼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중남미에 대한 이해

우리는 중남미를 멀고도 다른 나라로 생각한다.

중남미는 사실 지리적으로 멀고 스페인어와 포르투갈어라는 우리에게는 다소 생소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유럽도 멀기는 마찬가지이나 웬만한 도시에는 서울에서 직항편이 있는데다가 대륙이 가로 모양으로 되어 있어 북극을 지나면서 서쪽 끝 포르투갈을 가던지 동쪽 끝 터키를 가던지 간에 시간상 큰 차이가 없다.

반면, 중남미는 브라질(상파울로)을 제외하고는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어느 국가에도 직항편이 없어 실제 거리보다 심리적으로 더 멀게 느껴진다. 더욱이 중남미가 유럽과는 달리 대륙의 모양이 세로로 길게 되어 있어 우리가 가장 먼저 만나는 북쪽의 멕시코로부터 남쪽의 아르헨티나까지 가려면 또 다른 10시간이 소요된다.

한편 우리는 미국 북쪽의 캐나다에 대하여는 미국 정도의 거리감을 갖고 있는데 반해 미국 바로 남쪽에 있는 멕시코에 대한 심리적 거리는 지리적 거리 이상으로 훨씬 멀다. 다행히 최근 한국과 멕시코 간 논의되고 있는 직항편이 실현되면 양국 간, 그리고 한국과 중남미 간 시간적, 심리적 거리는 크게 단축될 것이다.

반면 중남미가 크게 변화하고 발전하는데 비해 우리의 인식은 오래전 상태에 그쳐있다. 중남미의 대국인 멕시코에 대한 편견도 상당하니 그 이하의 국가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도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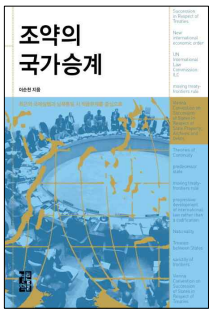
우리가 중남미 지역을 연구하거나 직접 여행을 하며 느끼는 소감보다는 할리우드 영화에 나오는 왜곡된 모습, 미국 내 한국 식당에서 어렵게 일하는 히스패닉, 최근 들어 마약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엽기적인 사건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부정적인 인상을 갖는다. 물론 이러한 일들이 부분적으로는 사실이더라도 이것이 멕시코나 중남미를 대표하는 현상들은 분명 아니다. 그러다 보니 세계 4대 문명 못지않은 유구한 문명을 보유한 문화국가라는 정체성, 오랜 정치적·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며 이룩한 경제개발과 정치발전, 한국의 파트너로서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엄청난 잠재력과 협력 의지 등에 대한 인식이 총체적으로 부족하다.

21세기는 아시아 태평양의 시대라고 한다. 그러나 미주대륙에서 중남미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전략은 북미지역에 비하면 크게 못 미친다. 우리와 중남미와의 협력관계 역시 과거에 비해 많이 발전하였다고는 하나 중국과 일본에 비교하면 크게 미흡하다.

우리와 중남미는 오랜 문명을 보유한 국가이자 식민과 독립, 내란과 군사 독재 극복이라는 근대화 과정에서 많은 공통의 역사를 갖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공통의 경험을 바탕으로 중남미의 역사, 변화하는 현재, 그리고 양 지역이 갖고 있는 잠재력과 앞으로의 협력 전망에 대해 서구적인 시각이 아닌 우리의 관점에서 제대로 이해하며 호혜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외교

회원신간 도비라 자리

■ 조약의 국가승계



(이순천 저, 열린책들, 355쪽)

외교안보연구원장을 역임한 이순천 박사가 최근 「조약의 국가승계」라는 국제법에 관한 전문서적을 저술, 발간하였다.

이 책은 저자가 개정판 서문에서 밝히고 있듯이 1997년에 발간한 「조약에 대한 국가승계」를 수정 보완한 개정판이며 필자는 저자의 고려대학교에서 받은 박사학위의 논문도 같은 제목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어서 저자가 국가승계문제를 오래 동안 연구하여 이 분야에서 어느 누구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책의 내용은 책의 본문(29쪽)에서 설명하였듯이 어느 국가의 영토에 대한 주권 변동이 발생하여 승계국이 선임국의 지위를 승계하였을 경우 승계국은 선임국이 체결한 조약상의 권리, 의무에 기속될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이 책은 국가승계와 국제기구의 회원국지위 승계 등 국가승계이론이 적용될 여러 가지 경우의 이론과 국제사회에서의 국가승계 상황발생의 실례를 설명하고 이에 관련된 일반국제법의 법원이 되는 1978년 '조약에 대한 국가승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Vienna Convention on Succession of States in respect of Treaties)'의 내용과 국가관행 및 관습법을 설명하였으며, 한반도에서 대한제국이 체결한 다자조약의 효력문제와 남북한의 통일시 남북한이 체결한 조약에 대한 국가승계이론이 어떻게 적용되어야할 것인가를 다루었다.

저자는 이 책에서 1990년대 이후 국가승계가 일어난 독일의 통일, 소련의 붕괴와 러시아 및 CIS국가탄생, 발트 3국 독립, 유고슬라비아의 분열, 체코슬로바키아의 분열 등의 경우에 나타난 조약에 대한 국가승계문제를 설명하고 조약에 대한 국가승계와 관련된 두 개의 국제사법재판소(ICJ)의 판결인 1993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가 신 유고연방을 상대로 제기한 보스니아에서의 '제노사이드 예방 및 처벌에 관한 협약의 적용에 관한 사건'과 1997년 슬로바키아와 헝가리 간의 '가브치코보-니기마로스 사건'을 소개하고 있다.

저자는 또한 1997년 영국이 홍콩을 중국에 반환하는 영국-중국 간 공동선언의 법적성격을 속지적 성격의 조약으로써 '객관적 영토체제'를 설립하는 조약임을 설명하고 1991년 독일의 통일은 분단국의 통일이므로 1978년 비엔나 협약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조약법상의 '사정변경의 원칙'과 '조약국경이동의 원칙' 및 조약의 승계에 관한 관습법 규칙이 적용되는 것으로써 1990년 남예멘과 북예멘이 예멘 공화국으로 통합된 것은 국가결합으로써 1978년 비엔나 조약이 적용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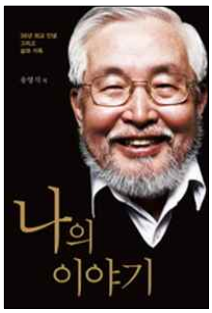
는 것과 차이가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동 저서 152쪽).

저자는 1986년 우리정부가 대한제국이 체결한 3개의 다자조약이 대한민국에 계속 효력이 있다고 선언한 것이나 기타 대한제국이 체결한 다자조약의 수탁국이 그 다자조약에 대한 승계국을 대한민국으로 간주하는 행위 등으로 보아 대한민국이 대한제국을 승계하여 대한제국과 대한민국의 법적 동일성과 계속성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으며(동 저서 244쪽 내지 248쪽) 1965년 '한 · 일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에서 1910년 8월22일 및 그 이전에 한국과 일본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은 이미 무효(already null and void)라고 규정한 것의 해석과 관련하여 "일본은 1948년 8월15일자로 무효가 되었다고 보나 우리나라는 조약체결당시부터 원천무효라고 보고 있다(동 저서 249쪽 내지 250쪽)"고 소개하고 "1948년 12월12일자 유엔총회결의 195(Ⅲ)에 의해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합법정부'로서 승인된 것은 '한국이라는 국가가 존재했다(A State of Korea existed)'라는 사실을 유엔이 집단적으로 결정 또는 승인한 사례로 간주 된다"고 하고 "따라서 대한제국은 국가로서 소멸한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계속 존속하여 왔으나, 그 행위능력이 제한되고 영토와 주민에 대한 실질적 통치권이 일본에 의해 불법적으로 대리 행사되어 왔을 뿐이며 대한민국은 1945년 일본으로부터 분리 독립된 신생독립국이 아니라 일본에 의해 제한되어 있던 주권을 회복한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동 저서 250쪽).

저자는 한반도 통일문제와 관련하여 남북한이 종래 주장해온 통일방안에 비추어 볼 때 "남북한의 통일정책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 질 경우 남북한은 우선 '국가연합(Confederated State 또는 Confederation)'의 형태로 통일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여 '과도적 체제'로서의 국가연합을 상정하고 있으며(동 저서 277쪽), 남북한이 국가연합을 형성할 경우의 조약에 대한 국가승계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국가연합의 단계를 지나 통일국가를 형성할 경우 한국주도에 의한 통일과 하였을 경우의 조약에 대한 국가승계가 어떻게 이루어 질 것인지를 설명하였다(동 저서 276쪽 내지 282쪽).

이 책은 국제정세의 변동으로 국가승계가 이루어지는 다양한 사례를 분석하고 그 각각의 경우에 1978년 조약에 대한 국가승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의 해석을 중심으로 승계국가의 조약에 대한 권리의무의 승계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국제법학도는 물론, 국제정치학도 및 한반도 문제 연구자 등이 모두 필독하여야 할 책이라고 생각한다. (황용식 전 외교통상부 조약국장) 외교

■ 나의 이야기 – 38년 외교 인생 그리고 삶과 가족



(송영식 저, 엔북, 655쪽)

송영식 대사가 최근 「나의 이야기」라는 제목과 '38년 외교 인생 그리고 삶과 가족'이라는 부제로 회고록을 발간하였다. 저자는 1940년 3월15일 경기도 포천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4학년까지 다닌 후 서울로 이사하여 경기 중·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에서 수학하였다.

저자는 1965년 9월에 외교부에 입부하여 2003년 6월 퇴직할 때까지 3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본부 근무 시에는 대통령 비서실 파견(2회), 재외공관담당관, 법무담당관, 안보과장, 북미과장, 미주국 심의관, 국제기구조약국장, 정무차관보, 한반도 4자회담 수석대표 등 요직을 역임하였고, 재외공관 근무 시에는 주 베트남 3등서기관, 주 미국 1등서기관, 주 미얀마 참사관, 주 국제연합 참사관, 주 호주 공사 등으로 주요 공관에서 근무하였으며, 공관장으로는 주 트리니다드 토바고 대사, 주 네덜란드 대사 및 주 호주 대사를 역임하였다.

저자는 1995년 1월, 2002월드컵유치위원회 사무총장으로 발령받아 월드컵 유치에 기여하였으며, 외교부에서 은퇴한 후에는 2003년 8월부터 2011년 3월까지 대한축구협회 부회장, 2006년 5월부터 1년간 2011대구세계육상대회 유치위원회 사무총장, 그리고 2010년 1월부터 1년간 2022월드컵유치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는 등 우리나라의 스포츠 외교를 위하여 많은 활약을 하였다.

저자는 2007년 6월부터 새누리당 국책자문위원으로 재직 중이며, 2009년 2월부터 1년간 정몽준 의원이 설립한 재단법인 아산정책연구원 원장으로 재직하였다. 현재 선친의 유언에 따라 2003년 7월에 설립된 송복은장학재단의 상근이사로 재직하면서 매년 40여 명의 고등학교와 대학교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제공하여 우리나라의 발전에 기여할 훌륭한 인재들을 양성하는 일에 전념하고 있다.

저자는 자신이 재능은 출중하지 못했으나 근면하고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좋은 분들과 좋은 인연을 맺어 정무차관보까지 승진한 38년간의 공직 생활을 성공적으로 자평하고 싶다고 전제하고, 부끄럽지만 자랑할 만한 일로 첫째, 월드컵 유치위 사무총장으로 2002년 월드컵 유치에 기여한 공으로 훈장을 받은 것, 둘째, 1983년 대전엑스포의 최대 다수국가 유치 공로로 훈장을 받은 것, 셋째,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4자회담 수석대표를 역임한 것, 넷째, 주 네덜란드 대사 재임시 화학무기금지기구 총회 의장을 역임한 것을 들고, 퇴임시 정부로부터 받은 공로훈장을 포함해 모두 3개의 훈장을 받는 영예를 누렸다고 술회하고 있다.

반면에 저자는 세 번의 위기를 겪었다고 하는데 첫째, 1983년 미얀마 아웅산

폭파사건 때 공무원직은 물론 생명까지 잃을 뻔한 것, 둘째, 주 네덜란드 대사 근무 시 음해진정사건으로 대사직을 잃을 뻔한 것, 셋째, 1995년 주 트리니다드토바고 대사 근무 시 후두암으로 목소리를 잃을 뻔한 것이라고 한다.

저자의 회고록 중에서 상기 미얀마 아웅산 폭파사건, 두 개의 훈장을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준 주 트리니다드토바고 대사 근무, 2002년 월드컵유치위 사무총장 근무, 한반도 4자회담 수석대표 활동 및 주 네덜란드 대사 근무 시 화학무기금지기구 총회 의장 수행에 관한 내용은 요지 다음과 같다.

저자는 주 미얀마 참사관으로 발령받아 1983년 3월28일 양곤에 도착하였는데 도착한지 54일째 되던 5월21일 이계철 대사로부터 전두환 대통령의 미얀마 방문 계획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 미얀마와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이 10월9일부터 11일까지 미얀마를 방문하기로 결정되었는데 미얀마 정부의 폐쇄성과 복잡한 절차로 인해 방문 준비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한다. 10월8일 대통령 일행을 태운 전용기가 예정대로 도착하였으며, 환영행사도 차질 없이 진행되었다고 한다.

운명의 10월9일 저자는 이범석 외무장관을 수행하고 아웅산묘소로 가서 이 장관을 단상으로 안내하고 계단 밑으로 내려가서 대통령이 도착하기를 기다렸는데 잠시 후 차량기를 게양한 대사차가 도착하고 함병춘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 대사가 차에서 내려서 저자가 계단 밑까지 안내했는데 저자가 서있던 자리는 우리 각료들이 도열한 단상으로부터 약 15m 밖에 안 되는 가까운 거리였다고 한다.

함 실장이 단상에 오른 후 진혼곡 나팔소리가 들렸고 곧 이어 예포소리와 같은 폭음과 함께 저자가 순간적인 열기를 얼굴에 느꼈으며, 소리가 난 쪽을 돌아보니 시커먼 연기와 폭삭 내려앉은 묘소 지붕이 눈에 들어왔고, 그 쪽으로 달려가니 무너진 서까래와 나무기둥 밑에 두세 사람이 깔려있었는데 온통 새까만 먼지로 뒤덮혀 있어 얼굴을 알아볼 수 없었다고 한다. 그날 전두환 대통령을 수행할 미얀마 외무장관이 영빈관에 늦게 오는 바람에 대통령의 출발이 늦어졌으며, 그 덕분에 대통령은 참사를 면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때부터 11월4일 주 미얀마 북한대사관이 추방 조치를 받을 때까지 26일 동안 지옥 같은 생활이 이어졌으며, 저자에게는 일생을 통틀어 가장 힘들고 고생스러운 기간이었다고 한다.

사건 다음날인 10월10일 새벽 국립의료원장 일행이 도착하여 부상자 11명을 데리고 귀국하였고, 당일 오후 이원경 특사 일행이 도착하여 10월11일 미얀마 대통령과 외무장관을 면담하고 16구의 시신을 수습하여 귀국하였다고 한다. 응급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은 필리핀 소재 미 공군기지 병원으로 후송되었는데 그중 1명은 사망하였다고 한다. 10월11일 새벽 박세직 안기부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진상조사반이 도착하였고, 당일 자정에 미얀마 외무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미얀마 정부 조위사절단이 서울로 떠났다고 한다.

미얀마 정부는 모든 접촉을 정규 외교

경로인 대사대리를 통한다는 입장을 고수하였으며, 미얀마 정부의 고집스러운 입장 때문에 고생도 많았지만 그런 만큼 사태수습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어서 저자가 어느 정도 마음의 짐을 덜게 되었다고 한다.

시한폭탄을 설치하고 폭파시킨 북한 공작원 3명 중 1명은 사살되었고 2명이 체포되었는데 2명 중 1명은 묵비권을 행사하였고 다른 1명이 서울에서 왔다고 주장하였으나 우리 수사당국이 범인이 말한 이름, 나이 및 학력을 조사하고 그 범인이 서울에서 간 것이 아님을 확인하여 저자가 범인의 진술이 허위임을 미얀마 외무부에 문서로 통보하였다고 한다.

11월4일 미얀마 외무차관이 저자를 불러 조사결과와 대북 응징조치를 통보하였는데 동 차관은 엄숙한 얼굴로 "이번 사건을 철저히 수사한 결과 범인들은 북한 정부의 지령에 따라 행동한 북한인이라는 완전한 증거를 발견했다"고 말하고, 미얀마 정부는 11월4일 오후 1시 현재로 첫째, 북한대사관 폐쇄, 둘째, 북한과 외교관계 단절, 셋째, 북한 정부의 승인 취소(Derecognize)를 결정하였음을 밝혔다고 한다. 한편, 북한대사관 공관원과 가족 전원에게는 48시간 이내 출국명령이 떨어졌다고 한다.

미얀마 정부는 범인 2명을 재판하기 위해 특별재판소를 설치하였고 1984년 2월 사형이 확정되었는데 시종일관 묵비권을 행사한 1명에게는 곧 바로 교수형이 집행되었으나 범행을 자백한 1명은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다가 2008년 5월 교도소에서 사망하였다고 한다. 저자는 미얀마가 북한에게는 서남아 외교의 거점으로 20여 년간 남다른 친분을 유지한 나라인데 그 나라의 성역에서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른 것을 보면 북한이 친구의 우정이나 신뢰도 저버리면서 상상 밖의 일을 저지를 수 있는 악랄한 집단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아웅산 폭파사건에 관해 현지 공관 근무자가 쓴 기록은 저자의 회고록이 유일하다고 한다.

저자는 미얀마 폭파사건이, 비록 사건을 마무리할 때까지 버티기는 했지만, 감당하기 벅찬 시련이어서 오직 쉬고 싶은 생각 밖에 없었으며, 11월4일 미얀마 정부 조치를 통보받은 후 서울에 전보로 사표를 제출하고 1984년 2월 미얀마를 떠났으나 사표는 수리되지 않았으며, 귀국 후 몇 개월 동안 보직을 받지 못하고 직제에도 없는 심의관, 부실장 등 유야무야한 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저자는 1992년 4월 중학교에 다닐 때부터 꿈꾸어온 대사가 되어 주 트리니다드토바고 대사로 부임하였는데 내부적으로 저자를 마지막 대사로 하여 공관을 폐쇄하는 결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임명장을 받고서야 알게 되어 놀라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의기소침해서 임지에 도착했다고 한다. 그러나 저자는 '내일 공관이 폐쇄되더라도 나는 오늘 일을 하겠다'는 각오로 주재국과 아름다운 카리브해에 산재한 7개의 겸임국을 오가며 열심히 외교활동을 벌인 결과 관할국 8개국과 조그만 섬나라인 몬세라트까지 9개국이 1993년 대전엑스포에 참가하도록 유치하는데 성공하여 정부로부터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고 한다.

축구장에 한 번도 가본 일이 없는 저

자가 주재국 대사 중 유일하게 현지 맥주 회사가 주최한 축구행사 초청에 응하여 트리니다드토바고 축구협회 회장이고 북·중·미 축구협회 회장이며 FIFA 부회장인 잭 워너(Jack Warner)를 만나 우호적인 대화를 갖고 축구와 인연을 맺게 되었는데 이것은 불가의 인연이 있었다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고 한다. 저자는 어려서부터 집안 어른들을 따라 절에 다니며 자연스럽게 불교신자가 되었다고 한다. 저자는 그 후 워너 회장을 관저 만찬에 초대하고 골프도 같이 치고 축구회관 개관식에 컴퓨터도 기증하고 워너 회장의 서울 방문 문제를 협의하면서 더욱 가까워졌다고 한다.

1994년 10월 본부로부터 정몽준 대한축구협회 회장의 방문 일정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이미 공관을 폐쇄하기로 결정되어 관저 임차계약을 정리하고 공관장 차량도 매각처분한 상태였다고 한다. 정 회장이 10월28일 도착하여 29일 주재국 대통령과 워너 회장을 만나고 30일 귀국하기 직전에 저자가 정 회장에게 우리 공관이 곧 폐쇄될 예정이며 정 회장이 탄 차량도 이미 팔린 것을 며칠 빌려와 탄 것이라고 말하자 정 회장이 심각한 표정을 지으면서 귀국하는 대로 외무장관과 협의할테니 주재국에 대한 폐쇄 통보를 2주만 연기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 2주가 지난 11월14일 본부로부터 통보를 11월 말까지 보류하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11월 말이 되자 다시 통보 시기를 1996년 8월까지 연기한다는 지시로 바뀌었는데 아마도 월드컵 유치 여부가 결정되는 시점을 고려한 것 같았다고 한다. 그때 저자는 기사회생이라는 말의 참 뜻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고 하며, 이렇게 극적으로 살아난 우리 대사관은 20년 가까운 오늘날까지 그대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저자는 그 후에도 워너 회장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꾸준히 노력하여 그가 좋아하는 인삼차를 계속해서 보내주고 축구협회에 대형버스를 지원하였는데 이렇게 맺어진 축구와의 인연이 저자를 2002년월드컵유치위원회 사무총장으로 연결시켜 주었으며, 이는 우리 인생의 의외성과 새옹지마와 같은 부침을 잘 나타내는 이야기라고 술회하고 있다. 저자는 1995년 1월부터 1996년 6월까지 18개월간 월드컵유치위 사무총장으로 근무하였다고 한다.

FIFA는 1996년 5월31일 집행위를 열고 6월1일 한·일 양국의 최종 프레젠테이션을 청취한 후에 투표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5월31일 열린 집행위에서 한국의 단독 개최로 기울 것 같은 분위기에 위기감을 느낀 일본이 타협안인 공동개최에 전격 합의함으로써 한·일 공동개최가 결정되었다고 한다. 유치위 일행은 개선장군처럼 당당하게 김포공항에 도착하였으며 저자는 청와대 만찬 시 리시빙 라인에서 김영삼 대통령으로부터 “수고했다. 다른 곳으로 가도록 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국가원수로부터 직접 언질을 받은 것은 일생일대의 영광이 아닐 수 없었다고 술회하고 있다.

저자는 1996년 7월부터 1998년 5월까지 약 1년 10개월간 정무차관보로 근무하였는데 담당 업무 중 4자회담이 가장 중요했다고 한다. 김영삼 대통령과 클린턴 미 대통령은 1996년 4월16일 개최된

제주도 정상회담에서 남북한과 미국 및 중국이 참석하는 4자회담의 개최를 제의했고, 저자는 북한의 요청으로 1997년 3월 15일, 4월16일 및 6월30일에 뉴욕에서 개최된 세 차례의 한·미 공동설명회에 한국 수석대표로 참석하였는데 결국 북한이 4자회담 개최에 동의하여 8월5일에 중국을 포함하는 4자회담 예비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한다.

1997년 8월5일, 9월18일 및 11월21일 세 차례에 걸쳐서 개최된 4자회담 예비회담에서는 한국이 제안한 '한반도 평화구축과 긴장완화를 위한 제반 문제'라는 단일 의제에 동의하고 1997년 12월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4자회담 본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1997년 12월 9일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1차 본회담에는 이시영 대사가 수석대표로 참석하였고, 1998년 3월16일 개최된 제2차 본회담에는 저자가 참석하였는데 저자는 1998년 5월8일 주 네덜란드 대사로 부임하게 되어 저자의 임무는 일단락되었다고 한다. 저자는 4자회담 예비회담과 본회담 수석대표로 참석한 것은 "외교관 생활 중 가장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경험이 아닐 수 없다"고 술회하고 있다.

저자가 떠난 후 1999년 8월5일까지 네 차례나 본 회담이 더 개최되었고 우여곡절 끝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한반도 긴장완화를 논의하기 위한 2개의 분과위 구성에 합의하였으나 이러한 절차상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계속해서 미·북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철수를 의제로 논의하자고 주장하여 실질적인 진전을 보지 못한 채 회담이 표류하다 결국 용도폐기의 운명을 맞이했으며 이것이 4자회담의 최종 결과라고 한다.

저자는 주 네덜란드 대사로 1998년 5월부터 2000년 8월까지 약 2년4개월 근무했는데 1998년 11월16일부터 20일까지 헤이그 소재 화학무기금지기구(OPCW) 제3차 총회 의장직을 수행하였으며, 임기는 제4차 총회가 개최되는 1999년 6월까지였다고 한다. 저자가 총회 의장직 수행 시 한국은 총회 의장국 자격으로 북한의 가입 촉구 결의안을 제안했는데 이 제안은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으며, 총회 의장 재임 중인 1999년 4월26일부터 29일까지 개최된 제15차 집행이사국 회의에서는, 보안 관계로 상세히 밝힐 수는 없으나, 우리나라의 이해가 걸린 안건을 일체의 토론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는 성과를 거두어 장관으로부터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는 축전을 받았다고 한다.

저자는 본 회고록에서 38년에 걸친 외교부 근무 시의 업적과 소감, 은퇴 후의 생활 및 가족 이야기에 관하여 유려한 문체로 진솔하게 술회하고 있는 바, 본서는 저자와 동 시대에 외교부에서 근무한 동료들에게는 옛날을 회상하게 할 것이며, 현직 외교부 직원들이나 외교관을 지망하는 학생들 및 외교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각계의 독자들에게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창일 전 주 그리스 대사) 외교

■ 『외교』 제102호 편집은 김용규 협회장, 이원영 편집위원장, 문병록, 사부성, 유석렬, 이서항, 이선진, 황용식 편집위원과 당연직 위원으로 이상현 외교통상부 정책기획관 및 고재남 외교안보연구원 유럽·아프리카연구부장 등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계간 외교 2012년 제102호

발 행 2012년 7월 1일
발행인 김 용 규
편집인 이 원 영
빌행소 (사)한국외교협회
인쇄소 (주)마스타상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580
Tel. 02-585-6475(편집실) Fax. 02-585-6204
E-mail : editorial@kcfr.or.kr http://www.kcfr.or.kr